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국 가 보 훈 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2026. 8.

정 무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3
Ⅲ. 결산개요 및 검토보고: <붙 임> 참조 ····· 6
Ⅳ. 대체토론 요지 ····· 7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8
Ⅵ. 심사결과 ····· 10
Ⅶ. 소수의견 요지 ····· 11
Ⅷ. 시정요구사항 ····· 12

【붙임 1】 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 13
【붙임 2】 2025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 129

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8.

정무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가보훈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입·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세출

○ 기　　금

- 보훈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세출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4. 금융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기　　금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5월 29일

2. 회부일자 : 2026년 7월 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심의)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6.)

(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심의)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6.)
  (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심의)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6.)
  (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라. 금융위원회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심의)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6.)

(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8.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심의・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6. 8. 26.)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

Ⅲ. 결산개요 및 검토보고 요지: <붙 임> 참조

【붙임 2】 2025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구현우, 류승우)

Ⅳ. 대체토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없　음)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없　음)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없　음)

4. 금융위원회 소관

(없　음)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없　음)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없　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에 대하여 5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17건의 제도개선 등 총 32건의 시정요구 및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하여 5건의 시정, 4건의 주의, 9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중복 1건)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3건의 시정, 5건의 주의, 10건의 제도개선 등 총 17건의 시정요구(중복 1건)를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4. 금융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등에 대하여 1건의 시정, 5건의 주의, 19건의 제도개선 등 총 24건의 시정요구(중복 1건) 및 7건의 부대의견을 첨

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1건의 시정, 8건의 주의, 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6건의 시정요구(중복 1건) 및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3건의 주의, 17건의 제도개선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 및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Ⅵ.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4. 금융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Ⅶ.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붙임 1】 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붙임 1】

2025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2026. 8.

1.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26건(결산 · 예비비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가보훈부	-	-	5	10	17	-	3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포함)	-	-	5	4	9	1	17
공정거래위원회	-	-	3	5	10	1	17
금융위원회	-	-	1	5	19	1	24
국민권익위원회	-	-	1	8	8	1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3	17	-	20
합계	-	-	15	35	80	4	126

※ 부대의견 18건(국가보훈부 7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건, 금융위원회 7건, 국민권익위원회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 첨부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가보훈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상용임금 근로자 인력·예산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등 26개 사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2160-441) 등 2개 사업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집행지침에는 매년 2월까지 사업별·직종별 정·현원 및 예산 현황 등을 반영한 기관별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정원(2,308명) 대비 현원(1,806명)은 502명 부족하고,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정원(2,332명) 대비 현원(1,722명) 610명이 부족한데,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용임금 예산을 주로 보수(110-01목) 또는 일용임금(110-04목)으로 조정하고 있어, 인건비 전반의 운영 계획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상용임금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과 상용임금 근로자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제도개편 미반영 등 주먹구구식 추계로 인한 생활조정수당 대규모 초과 집행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활조정수당(1133-302)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3년 중상이자에서 2024년 65세 이상 노인, 2025년 전체 보훈대상자로 단계적 폐지하였지만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생계지원금의 경우 과거 증감률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편성인원(3,535명) 대비 실제 지급인원(8,629명)이 2.4배에 이르는 추계 오류를 범하였음. ○ 생활조정수당 역시 자연 증가 추세를 누락하여 4,000명 이상의 지급인원 오차를 유발하여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타 세부사업에서 169억 5,000만 원을 내역변경 충당하였음. ○ 법정 의무지출 사업의 제도개편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실 추계로 대규모 내역변경을 초래하고, 국회의 사전 예산 심의 기능을 훼손한 것은 심각한 행정 미숙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특성과 제도 변화를 반영한 정밀 추계 모델을 구축하여 연례적인 대규모 초과 집행과 변칙 내역변경을 근절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지연 방지를 위하여 고엽제환자검진 실적 개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엽제수당(1133-304), 고엽제환자검진(1143-368)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로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에서 검진 실적이 부진하면서 고엽제수당 지급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되어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하였던 인원에 미치지 못해 집행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등록신청자에 대한 검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검진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사망일시금 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전용·내역변경 주의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망일시금(1137-308)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4년 연속 당초 편성된 본예산이 연중에 바닥나 매년 하반기에 예산 소진 시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전용하거나 내역 변경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 추계가 가능한 데이터임에도 구조적으로 과소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사망자 수 추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매년 본예산을 구조적으로 과소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연말 전용·내역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행정소송 처리 결과를 보면 2025년의 경우 보훈부의 패소 확정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하였고, 패소율은 3.3%p 증가하여 전년보다 증가한 패소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법원의 법해석 및 판단과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경우 불필요한 법률쟁송과 국가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주요 쟁점으로 반복되는 법원의 판결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심의에 참고하는 등 심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저조 및 취약계층 대리발급 현황 관리 전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등록관리(1143-328)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IC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이 2025년 12월말 기준 전체 교체 대상자(약 66만 명) 대비 48%에 불과하여 발급률이 저조한 상황이고,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를 위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리발급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미발급자의 사유를 분석하고, ‘거동 불편자 대리발급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며,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업 지연 지자체에 대한 “3년간 지방보훈회관 건립 국비 신청 제한(지방보훈회관건립사업지침 제10조의2)” 을 페널티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지방보훈회관은 통상 한 지자체에 하나 건립 시 수십 년간 새로 지을 일이 없는 시설이므로 해당 규정은 페널티로서 실효성이 전혀 없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업 지연을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연례적 공사 지연 및 이월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보훈회관 건립(1238-32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지자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포기 및 이월 문제가 매년 반복 지적되어 왔음에도 순창군, 이천시, 진안군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착공 및 준공 일정이 9~10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수억 원대의 국비가 이월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실효성 없는 지침을 핑계로 지자체의 공사 지연과 예산 이월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교통시설이용 지원 사업의 예산 확보 및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은 법적 의무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이라는 기획예산처의 입장 등을 이유로 예산 확보 및 미지급금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기획예산처와 즉각 협의하여 2026년 발생한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 문제 개선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위탁병원 진료(2150-366)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는 진료인원과 단가의 과소 추계 등으로 예산 부족과 이·전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1,138억 1,8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이를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하였음. ○ 전년도 진료비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2026년에도 진료비 부족 및 미지급 사태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제대군인 진료비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연례적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제 진료비 소요에 비해 예산이 과소편성되어 이·전용 및 내역 변경을 통한 부족분 충당이 반복되고 있음. - 2025년에는 예산현액의 63.9%인 41억 9,000만원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 등으로 충당하여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실제 진료인원과 진료단가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사업 예산전용 제한 취지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3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사업 목적을 명확히 지정하여 증액한 신규 시설투자 사업임에도, 2025년 예산의 93.3%을 성격이 전혀 다른 경상경비인 ‘제대군인 진료비’로 전용하였는 바, 이는 국회 예산 심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국가재정법」 상 예산 전용 제한 취지에도 저촉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회가 목적을 지정하여 증액한 시설사업 예산의 타 사업 경상경비 전용 행위를 중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2025년 예산의 93.3%인 41억 9,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준공 시점도 2027년 3월에서 2028년 6월로 연기되는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였음. -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5년 12월 말 보조금 3억원을 교부하여 전액 이월되는 등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독립의 전당 조성 사업 계획의 면밀한 점검 및 향후 예산 편성시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충시설건립 (3146-405)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의 전당 사업은 인허가 요건이 까다로워 계획대로 실시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예산을 관행대로 편성했다는 면에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해당함. - 당초 2023년 12월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실시설계는 2025년 9월에서야 완료되었고,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던 공사계약 체결 절차 또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면서 공사비와 감리비를 집행할 수 없었음. - 국가보훈부는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준공 목표는 2025년 12월에서 2027년 9월로 늦춰졌으나 이또한 재차 밀릴 우려가 있고, 2025년 예산 이월액을 선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되면 2026년 예산은 공정률에 따라 이월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공사예산 편성 시 착공 선행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3147-413)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내역사업(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집행함. - 2025년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80주년기념사업에서 4억원을 전용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광복회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광복 80주년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념연도로 예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 집행임 ○ 별도 공모절차 없이 ‘광복회’를 동 사업의 단일보조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부적정함. - 사업내용이 광복회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다수의 민간단체가 통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유형이라는 점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모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다른 사업예산의 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향후 반복되는 10주기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요건을 해석하는 것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신규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3248-34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참전유공자 역사찾기 사업”은 위탁 집필 예정이었던 무공수훈자 공훈록에 대해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일반참전자와 동일하게 자체 서술로 변경함에 따라 위탁 집필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정으로 계획 수립 시 이미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조사 및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이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국립묘지 외 묘소 관리 사업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3248-41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은 계획 측면에서 괴산, 이천, 제주호국원의 개원을 고려하지 못한 과다추계한 문제점이 있으며, 집행 측면에서 수혜대상자인 유족 등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서 2023년부터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지원 대상 인원을 재산정하여 과다 추계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서울현충원 추경 시설보수비의 인건비 이용·불용 등 예산 변칙 집행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서울현충원(3250-35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보수비는 시급성을 이유로 제2회 추경에서 12억 5,000만 원을 증액받았으나, 실제 공사에는 3억 7,000만 원만 집행하고 예산의 37.4%에 달하는 4억 6,700만 원을 타 사업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용하였으며, 4억 1,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향후 통상적인 시설보수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추경 예산의 목적 외 이용 및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확보 및 지급대상자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4160-39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전직지원금은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2025년 본예산 73억 8,200만원이 8월에 소진되어 다른 사업에서 본예산의 85%인 62억 7,5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하였음. -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이·전용이 발생함. -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4년과 동일하게 산정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예산 조기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전용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단가와 기간의 현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4160-39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구직급여 대비 지급단가 및 기간이 불리하여 제대군인 예우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 2025년 지급단가는 구직급여 상한액의 중기복무자 29.3%, 장기복무자 40.9%에 불과함. - 지급기간도 최장 6개월로 210~240일까지 지급되는 구직급여에 비해 불리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월 지급단가를 법정 한도인 구직급여 월 상한액의 50%까지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정부주관 참전기념행사 내실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참전기념행사(4161-420)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행사 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함. - 국가보훈부 직접 주관 기념행사 집행 내역에 따르면 대행사에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최고 한도로 보장해 줌으로써 행정 수수료로 예산이 과다하게 소모됨. - 2025년 외주 대행사에 지급된 일반관리비(8%)와 이윤(대행료 10%)이 총집행액의 18%에 달하고 있음. ○ 양질의 콘텐츠 부실을 지적받은 참석자 만족도 조사 - 사업 참석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의 건의사항 분석 결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홍보’, ‘참석 기회 확대‘ 등이 지적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행사 대행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원가검증을 통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참석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사의 내실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용·전용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인건비(7102-101), 지방보훈청인건비(7102-103)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2024년과 2025년 다른 세부사업 예산 총 72억 6,500만 7천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이용, 전용하였음. ○ 충당액은 2024년 27억 3,092만 6천원에서 2025년 45억 3,408만 1천원으로 66.0%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0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함. ○ 참전유공자 제복,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국립묘지 운영, 공사비, 독립운동 사료수집비 등 보훈사업 예산까지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특히 2025년 추경에서 증액된 12개 국립묘지 세부사업에서 연말에 다시 19억 4,831만원을 감액해 인건비를 충당하였음. ○ 과원 운영과 직급별 편성인원, 실지급인원 간 차이, 초과근무 증가 등이 반복됐음에도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직급별 현원과 초과근무 실적 등을 반영해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보훈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용, 전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보훈급여 과오급금 전액 환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보훈부정보화사업(정보화) (7169-501)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5년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 9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39일동안 마비됨. - 시스템이 마비된 후 국가보훈부는 자체 대체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고 10월 1일 ‘수기 민원사무 처리 가이드북’과 ‘보훈급여 수기 처리 및 비상대응 지침’을 내려보냄. -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한 달동안 일선 공무원들이 15,686건의 민원을 수기처리했고, 이 때 대법원 및 행안부 정보 연계가 누락된 상태에서 급여 과오급금이 120건, 약 9,780만원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이후 수기처리 과정에서 지급된 급여 과오급금을 전액 환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장기간의 행정 마비와 수기처리 사태 예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보훈부정보화사업(정보화) (7169-501)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 39일간 마비되었으나 2024년과 2025년 국가보훈부 정보시스템 자체 백업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0원이었음. - 매년 수십억원의 정보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의 백업과 이중화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장기간의 행정 마비와 수기 처리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국가보훈부정보화사업 성과평가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보훈부정보화사업(정보화) (7169-5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국가보훈부는 성과지표 측정대상인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시스템을 매일 사용하는 실제 현장 사용자를 배제하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 사업부서 및 정보화담당관 소속 내부 담당 직원 12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자체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실제 현장 사용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표본 추출 및 외부평가방식을 도입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 개선 필요 등**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2259-390∽392)	주의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대출채권 잔액 증가와 금리 변동 등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변경 이후에도 2025년 말 기준 75억 1,8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음. - 동일한 사유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는 것임. -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될 경우 국가 대부사업에 대한 민간은행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이차보전금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미지급금 발생을 방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88골프장 매각·존치 및 증설 타당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골프장 위탁운영(2362-434), 골프장 시설투자(2362-43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88골프장은 2025년 내장객이 전년 대비 1.5% 감소하고 순이익도 11.6% 감소하는 등 운영실적이 악화되었으며, 자기자본이익률도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국가보훈부는 내장객 수와 자기자본이익률 등 주요 성과지표를 폐지하여 성과관리의 적정성이 미흡함. ○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의 88골프장 존치 및 9홀 증설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장래 토지가격 상승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거나 사업비·운영비·수요·영업손실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분석의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의 성과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매각·존치 및 증설 여부를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재향군인회 국토대장정 사업에 높은 보조율 적용 경위 조사 및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참전기념사업지원(4163-439)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제15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91%에 달하여 통상 민간경상보조 국고 보조율인 70~80%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음. - 타 민간 보조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특혜성 보조금 교부이자 보조금 관리 기본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재향군인회 국토대장정 사업에 91%의 보조율이 적용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민간보조사업 최소자부담률 기준 마련 및 보조금 심의 및 정산 검증 체계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보훈기금 - 참전기념사업지원(4163-439)	시정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보조사업 자부담 검증 및 사후 관리·감독 부실 - 국가보훈부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승인 과정에서 91%라는 과도한 보조율이 타당한지, 단체의 자부담 능력이 적정하게 검증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최소 자부담률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 교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심의 및 정산검증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기금의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 세입 일반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실질 세입은 1,037억 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입이 925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 의존도는 89.2%에 달함. - 환수한 친일재산의 매각이 느려지면서 현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원이 부족한 상황임.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도 보훈기금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기부성금’을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모금 방법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모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기금에만 기부금 유치 제도를 마련한 것이 기금간 불균형과 그로 인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도입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자립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환수된 친일 재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 토지매각대(72-72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친일재산 매각 실적은 2023년부터는 현저히 줄어들어, 2023년 8억원, 2024년 23억원, 2025년 11억원 등 매각실적이 매우 부진함. - 총 1,600필지의 친일 귀속 재산 중 779필지가 이미 매각되고 잔여 재산은 821필지이나, 법령상 매각 제한 사유가 있는 매각제한 재산을 제외한 매각 가능재산은 255필지로, 공시가는 84억원임. ○ 국가보훈부는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매각 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환수된 친일재산 매각을 위한 자체적 노력과 함께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매각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기금의 재원구조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순국선열 · 애국지사사업기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3141-401)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2025년도 생활지원금 지급액 988억 1,0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925억 8,3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93.7%를 차지하는 등 지급 소요의 대부분을 기금 자체 재원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음.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자체 수입원인 광복회관 임대사업 순수익은 2025년 9억 2,700만원, 친일귀속재산 매각액은 11억원에 불과함. -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매년 생활지원금 지급 소요가 9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 여력이 부족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특성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에 의존함.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생활지원금 지급인원 증가를 반영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며, 친일귀속재산 매각 협의와 신규 수입원 발굴 등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위원 참석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td><td rowspan="3">제도 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9회, 10회 개최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은 평균 9.3명(84.8%), 9.1명(82.7%)가 참석한 반면, 정부위원은 평균 1명(25%)이 참석하는 등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며, 이는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2023~2025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정부위원</th><th colspan="2">민간위원</th></tr><tr><th>연평균 참석인원</th><th>연평균 참석률</th><th>연평균 참석인원</th><th>연평균 참석률</th></tr><tr><td>2023년</td><td>2.3</td><td>(58.3%)</td><td>8.7</td><td>(78.8%)</td></tr><tr><td>2024년</td><td>1</td><td>(25.0%)</td><td>9.3</td><td>(84.8%)</td></tr><tr><td>2025년</td><td>1</td><td>(25.0%)</td><td>9.1</td><td>(82.7%)</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내 정부위원의 참석률 향상 및 의결사항 이행현황을 정기관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상황 지속
점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td></tr>
<tr><td>지적사항</td><td>○ 규제혁신추진단은 존속기한(3년) 만료로 2025년 7월 31일 폐지되었는데, 2026년 6월 기준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을 2025년과 비교해 보면, 2022년도 발굴 과제의 이행률은 64.7%에서 전혀 변동이 없고, 2023년도 발굴 과제도 8.1%p 상승에 그치고 있음.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
(단위: 건)
<table>
<tr><th rowspan="2">연도</th><th rowspan="2">발굴
덩어리 규제</th><th colspan="3">세부 개선과제(2026.6.기준)</th><th>2025년
이행률</th><th>2026년 6월기준
이행률</th></tr>
<tr><th>합계</th><th>이행 완료</th><th>미이행</th></tr>
<tr><td>2022</td><td>2</td><td>34</td><td>22</td><td>12</td><td>64.7%</td><td>64.7%</td></tr>
<tr><td>2023</td><td>17</td><td>98</td><td>74</td><td>24</td><td>67.4%</td><td>75.5%</td></tr>
<tr><td>2024</td><td>13</td><td>267</td><td>180</td><td>87</td><td>35.6%</td><td>67.4%</td></tr>
<tr><td>2025</td><td>9</td><td>35</td><td>25</td><td>10</td><td>-</td><td>71.4%</td></tr>
<tr><td>합계</td><td>41</td><td>434</td><td>301</td><td>133</td><td>45.7%</td><td>69.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덩어리규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이행을 적극 독려하는 등 조직 존폐와 관계없이 사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한시조직 폐지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주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의 2025년 7월 존속기한 만료는 예산안 편성 당시 명백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퇴거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비(6,000만원)를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책연구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한시조직 운영 시에 해당 조직 폐지를 위한 소요 예산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		
4	**연구용역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은 연도 말에 무리하게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사할 때에는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연도 말에 무리한 일정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해당 결과보고서를 곧바로 검수해 완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부패예방추진단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7036-311)	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회 결산심사에서 5차례에 걸쳐 부패예방추진단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춘 정식 직제 편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정식 직제 편성 없이 훈령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24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설치근거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간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이 정식 직제 등 법적근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이용 활성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시스템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24년 489만명에서 2025년 221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온라인 심층상담도 2024년 6,258건에서 2025년 2,198건으로 64.9% 감소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이용실적 회복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사업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의 이용실적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 강화와 상담서비스 개선 등 플랫폼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년정책 정보와 연계 서비스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플랫폼 간 자동 정보연계 서비스 구축을 위해 2025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하였으나, 2026년 7월 말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자치단체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들이 소속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2026년 7월 말 기준, 7개(서울・부산・인천・충남・전북・제주・전남광주통합) 광역지자체만 연계 완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내 청년정책 정보와의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세목조정 부적정 및 사업 성과 저조</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운영(7036-315)</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td></tr>
<tr><td>지적사항</td><td>○ 광복 80년 기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민참여 기념사업 및 홍보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해 일반수용비(210-01) 및 관리용역비(210-15) 등의 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하여, 일괄하여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집행함.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날짜</th><th>~에서</th><th>금액</th><th>~으로</th><th>세목조정 사유</th></tr>
<tr><td>2025.1.21.</td><td>210-15</td><td>100</td><td>210-14</td><td>· 위원회 출범 지연으로 인해 '25년도에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기로 계획 변경</td></tr>
<tr><td>2025.1.21.</td><td>210-01</td><td>719</td><td>210-14</td><td>·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국민참여 기념사업과 홍보를 위해 용역 수행으로 추진키로 변경</td></tr>
<tr><td>2025.7.17.</td><td>210-07</td><td>50</td><td>210-14</td><td>· 출범식 기획과 위촉식 장소 대여 등 원활한 행사 진행 등을 위해 임차료를 용역비로 변경하여 행사 대행 용역으로 추진</td></tr>
<tr><td>202511.14.</td><td>210-14</td><td>28</td><td>210-01</td><td>· 디자인 고도화 사업을 광복 80년 기념 굿즈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추진키로 하여 용역비를 수용비로 변경</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무분별한 세목조정 및 용역 일괄 전환 관행을 개선하고, 위원회 늑장 출범 및 사전 기획 부실로 인한 대규모 불용 방지 대책 마련 및 일회성·외주 대행 위주 홍보 집행을 지양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전용을 통한 사업 신설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7036-317)	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 비계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은 금지되는데,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동산감독추진단 운영” 사업 신설을 위해 다른 세부사업에서 5,800만원을 전용함. 동 추진단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900호)을 근거로 설치(활동기간: 2025.11.3. - 2026.11.2.)됨.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예산 전용을 통해 사업을 신설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신규 행정조직 및 추진단 설치 운영을 위한 전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0</td><td rowspan="3">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의
확대 집행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납세자 권리보호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감액(1억원 → 7,500만원)하고, ‘국회 심사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은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에서 7,343만원,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에서 1,248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동 기념사업에 총 8,591만원을 집행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확대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td></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제고
노력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조세심판원(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정처리기한(90일)을 준수한 사건의 비율이 2023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총 처리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평균 사건처리일수가 매년 길어지고 있음.

<조세심판 처리기간>
(단위: 건, %, 일)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90일 이내</th><th colspan="2">91~180일</th><th colspan="2">180일 초과</th><th rowspan="2">총 건수</th><th rowspan="2">평균
처리일수</th></tr>
<tr><th>건수</th><th>비율</th><th>건수</th><th>비율</th><th>건수</th><th>비율</th></tr>
<tr><td>2022</td><td>656</td><td>5.6</td><td>5,156</td><td>44.6</td><td>5,753</td><td>49.7</td><td>11,565</td><td>234</td></tr>
<tr><td>2023</td><td>8,244</td><td>50.0</td><td>2,857</td><td>17.3</td><td>5,384</td><td>32.7</td><td>16,485</td><td>172</td></tr>
<tr><td>2024</td><td>3,596</td><td>35.4</td><td>2,818</td><td>27.7</td><td>3,764</td><td>37.0</td><td>10,178</td><td>185</td></tr>
<tr><td>2025</td><td>1,024</td><td>12.8</td><td>3,027</td><td>37.9</td><td>3,945</td><td>49.3</td><td>7,996</td><td>22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무조정실 및 조세심판원은 실무조사인력 등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건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여 법정기한 준수율을 제고할 것</td></tr>
</tabl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징계처분 관련
인사보수 운영
기준의 합리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경제・인문사회
연구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부 연구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일정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지급이 가능한 기관>
<table><tr><th>기관명</th><th>지급 수준</th></tr><tr><td>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td><td>보수의 3분의 1 지급</td></tr><tr><td>한국교육과정평가원</td><td>보수의 2분의 1 지급</td></tr></tabl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무조정실은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수와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조속히 정비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적사항	○ 산업연구원(2.85%), 에너지경제연구원(2.89%), 한국개발연구원(3.85%), 한국노동연구원(2.84%), 한국여성정책연구원(1.46%), 한국행정연구원(2.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3.51%) 7개 기관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2024 회계연도(6,347만원)보다 약 34% 증가한 8,515만원에 달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연평균 의무고용률은 충족하였으나, 일부 월에서 미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년 연장관련 출연연구기관 자율성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R&D)(1531-301)	제도개선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적사항	○ 고령자고용법을 적용을 받는 출연연구기관들이 동 기관들의 표준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사규정으로 인해 노·사간 60세 이상으로 하는 정년연장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사규정」은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들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요건 명확화 및 과거 수요예측 사업의 배상 리스크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교통연구원(R&D)(1542-301)	시정, 주의	한국교통연구원
		지적사항	○ 연구개발적립금은 연구 재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성된 재원이나, 이를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임. * 연구개발적립금: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에 대해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자체연구사업, 연구지원·인프라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의 사업에 사용함. * 용인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과도한 수요예측을 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2025. 7. 16.), 한국교통연구원은 용인시에 42억 9,36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한국교통연구원은 과거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예측도 담당한 바 있으며,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약 15% 수준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을 손해배상금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번 배상금 지급이 기존 연구개발 재투자 계획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시정) ○ 한국교통연구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과거 수요예측을 담당한 다른 사업에 대한 배상 리스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주의)		

다. 공정거래위원회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과징금·과태료 및 가산금 수납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가산금(58-581)</td><td rowspan="3">시정,
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수납률)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임의체납액의 경우 전년보다 증가하였음에도 별도의 정리 실적은 없음.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추이>
(단위: %)
<table><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과태료</td><td>67.5</td><td>52.9</td><td>53.7</td><td>45.3</td><td>61.0</td></tr><tr><td>과징금</td><td>59.8</td><td>55.7</td><td>65.9</td><td>23.1</td><td>45.9</td></tr><tr><td>가산금</td><td>1.9</td><td>6.1</td><td>3.2</td><td>2.7</td><td>0.7</td></tr></table>
❍ 고액·장기 체납에 대하여 국세 체납에 준하는 특별한 징수방안이 부족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납실적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액과 수납액 간 괴리를 줄이고, 임의체납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불납결손 처리기준에 따라 정리할 것(시정)
❍ 가산금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수납액은 회계상 결손처리를 검토하는 한편, 고액·장기체납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간접적인 제재 강화방안을 도입 검토할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재무제표 오류 시정 및 회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태료(56-563), 과징금(56-565), 가산금(58-581)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손액은 대부분 연초(전기 말) 미수채권에서 발생하므로 ‘연초 미수채권 잔액’을 분모로 하여 회수율과 대손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도 말 미수채권 잔액’으로 총수납액을 나누어 대손상각비(비배분비용) 570억원이 과대계상되고, 대손충당금 환입 343억이 과소 계상되어 최종적으로는 순자산이 913억 과소계상되는 중대한 재무제표 오류를 초래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을 즉각 정비하고 향후 결산 검증 절차를 철저히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리니언시 제도 개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징금(56-565)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기존 5년이던 감면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 내 다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진신고를 줄이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태적 조치만으로 고질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품 가격(예: 제지가격)이 상승할 때 하도급 업체(예: 인쇄업체) 들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는 문제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자진신고 유인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이나 EU처럼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업분할이나 지분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 도입을 검토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수입 일부를 활용하여 ‘담합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 ‘담합 피해 입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반복적인 이월 발생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사업(1231-310)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본 사업은 단기간 수행되는 과제임에도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2024년에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연구과제 추가 발굴과 경쟁입찰·계약소요 등을 이유로 정책연구비를 이월하여 2025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0만원이 포함된 3억 1,700만원이었고, 2025년에는 4,900만원을 2026년으로 이월함. ○ 다음 해에 완료될 것이 명백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말에 예산을 전용하고, 이를 이월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단년도 회계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말에 무리한 신규과제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CP 등급 조정
활성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대외활동 강화 (1231-3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CP등급을 하락 조정한 사례한 발견되지 아니하여 CP 등급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CP 등급평가 신청기관>
<table><tr><th>연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합계</th></tr><tr><td>신청기업(개)</td><td>10</td><td>16</td><td>28</td><td>58</td><td>78</td><td>190</td></tr></table>
<CP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의 법령 위반 사례>
<table><tr><th>등급평가 연도</th><th>기업명</th><th>평가등급</th><th>위반행위</th><th>행정처분</th></tr><tr><td rowspan="2">2022</td><td rowspan="2">㈜포스코케미칼</td><td rowspan="2">A</td><td>거래상 지위남용</td><td>시정명령</td></tr><tr><td>부당한 경영간섭</td><td>과징금·시정명령</td></tr><tr><td></td><td>유비벨록스㈜</td><td>A</td><td>부당한 공동행위</td><td>과징금·시정명령</td></tr><tr><td>2023</td><td>한화시스템㈜</td><td>AA</td><td>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td><td>시정명령</td></tr><tr><td rowspan="3">2024</td><td>㈜포스코이앤씨</td><td>AAA</td><td>기업결합 신고규정위반</td><td>과태료</td></tr><tr><td>한화시스템㈜</td><td>AA</td><td>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td><td>과태료</td></tr><tr><td>디엘이앤씨㈜</td><td>AA</td><td>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td><td>과태료</td></tr><tr><td rowspan="3">2025</td><td>네이버</td><td>AA</td><td>허위과장표시광고</td><td>시정명령</td></tr><tr><td>㈜아모레퍼시픽</td><td>A</td><td>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td><td>과태료</td></tr><tr><td>씨제이대한통운㈜</td><td>A</td><td>부당한 자금지원</td><td>과징금·시정명령</td></tr></table>
* 등급하향의 근거는 2025년에 신설</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이 확정된 중대한 법 위반 및 반복 위반 정보를 CP 등급조정 검토 절차에 신속히 연계하고, 등급조정의 요건·시점·절차와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신고포상금 제도의 집행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함(2025년 18억 300만원 불용).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건, 천원)
<table>
<tr><th>구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지급건수</td><td>31</td><td>43</td><td>67</td><td>37</td><td>34</td></tr>
<tr><td>지급액</td><td>2,353,500</td><td>3,157,982</td><td>3,361,515</td><td>1,414,595</td><td>1,347,069</td></tr>
<tr><td>예산액</td><td>2,130,000</td><td>3,130,000</td><td>3,350,000</td><td>3,000,000</td><td>3,150,000</td></tr>
</table>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2026. 6. 18. 시행).</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개선이 실제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고가 저조한 원인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홍보수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매체·수단·시기 등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에 따라 대형 사건 발생 시 예상되는 포상금 지급 소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간 인식 차이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계약에 미반영된 사유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가 큼.
- 원사업자는 합의(예정)이 65.4%였으나, 수급사업자는 제도 이해부족이 40.6%로 가장 높았음.
* 제도 인지율 역시 수급사업자의 '전혀 모름' 비율이 35.4%로 원사업자(19.2%)에 비해 크게 높음.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계약서 미반영 사유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단위: 개사, %)
<table>
<tr><th>구분</th><th>해당항목
응답수</th><th>합의
(예정)</th><th>소액</th><th>단기</th><th>이해
부족</th><th>원사업자
소기업</th><th>기타</th></tr>
<tr><td>원사업자</td><td>2,456
(100.0)</td><td>1,607
(65.4)</td><td>798
(32.5)</td><td>597
(24.3)</td><td>303
(12.3)</td><td>57
(2.3)</td><td>178
(7.3)</td></tr>
<tr><td>수급
사업자</td><td>35,499
(100.0)</td><td>9,791
(27.6)</td><td>5,853
(16.5)</td><td>4,720
(13.3)</td><td>14,396
(40.6)</td><td>1,432
(4.0)</td><td>3,493
(9.8)</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컨설팅 및 익명신고를 확대하는 등 연동제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반영 합의 강요·분할계약 등 원사업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법상 금지행위로 명시하며, 관련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직권조사 및 제재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사업 종료 후
취득자산의 귀속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사업을 수행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사업비로 취득한 노트북에 대해 계약 종료 후에도 자체 자산으로 계속 보유·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의 귀속 주체를 확인하거나 계약 종료에 따른 인계·반납 또는 계속 사용 승인 여부 등에 대해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최근 4년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도</th><th>계약 방식</th><th>계약자</th><th>계약금액</th><th>노트북 취득 여부</th></tr>
<tr><td>2022</td><td>수의계약</td><td>한국공정거래조정원</td><td>58</td><td>O</td></tr>
<tr><td>2023</td><td>수의계약</td><td>한국공정거래조정원</td><td>59</td><td>X</td></tr>
<tr><td>2024</td><td>경쟁입찰</td><td>한국생산성본부</td><td>50</td><td>X</td></tr>
<tr><td>2025</td><td>경쟁입찰</td><td>한국공정거래조정원</td><td>56</td><td>O</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관리책임·사용기간·처분절차를 사업지침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정기적인 자산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서면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가맹점·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대리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이 각각 38.8%, 37.7%, 35.6%로 저조함.
<가맹·유통·대리점 실태조사 대상 및 응답 업체 현황>
<table><tr><th colspan="2">연 도</th><th>대상업체 수</th><th>응답업체 수</th></tr><tr><td rowspan="2">가맹</td><td>가맹본부</td><td>200개</td><td>200개(100.0%)</td></tr><tr><td>가맹점</td><td>12,000개</td><td>4,661개(38.8%)</td></tr><tr><td>유통</td><td>납품업체</td><td>7,600개</td><td>2,868개(37.7%)</td></tr><tr><td rowspan="2">대리점</td><td>본사</td><td>510개</td><td>510개(100.0%)</td></tr><tr><td>대리점</td><td>50,000개</td><td>17,823개(35.6%)</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에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전 기술 · 보안 검토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사업은 민간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ISP에 따라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고, 추가 예산(1억 2,300만원)이 소요되어 전용을 통해 충당함에 따라 다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재정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 착수 전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구축이 지연됨. - 계약기간: 2025. 6. 25. ~ 2026. 1. 22. → 2025. 6. 25. ~ 2026. 9. 3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 11. 에 발의 되어 2026. 8. 20.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준비하여, 구축 단계에서의 계획변경과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1</td><td rowspan="3">상담수당
지급방식 개선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공정거래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2025회계연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비(7억 3,000만원) 및 예산 전용(5,000만원) 등을 통하여 부족한 상담수당 재원을 확보하였음에도, 2024회계연도 상담수당 부족분(1억 7,200만원)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했던 영향으로 연말 상담수당 일부(6,500만원)를 다시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2024~2025년 소비자단체 상담위탁수당 부족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당해연도
지급소요
(A)</th><th>예산액
(B)</th><th>당해연도
부족분
(=C=A-B)</th><th>전년도
부족분(D)</th><th>부족분
계(=C+D)</th><th>부족분 충당 내역</th></tr>
<tr><td>2024</td><td>2,272</td><td>2,100</td><td>172</td><td>-</td><td>172</td><td>2025년 예산(172)</td></tr>
<tr><td>2025</td><td>2,813</td><td>2,000</td><td>813</td><td>172</td><td>985</td><td>2026년 예산(65)
예비비(730)
전용(50)
교육 취소 등(40)</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수당 지급방식을 상담건수 기준이 아닌 상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고려하는 등 동일·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2027년 예산안 심사 대비 및 국회 협의를 진행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연말 인건비 잔액의 과도한 사후 전용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주의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급여(12. 15.) 및 임금인상분(12. 30.)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를 우선 집행한 후 12월 31일에 인건비 비목간 총 4건, 7억 9,800만원을 사후 전용하였음. - 인건비 집행과정에서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일정 수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요인인 만큼,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연말에 대규모 사후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적인 예산관리를 저해함.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월별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적기에 전용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연말에 과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기관 고유기능과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주의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 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법인 「소비자기본법」*상의 업무 범위와 관련성이 낮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한국소비자원은 민간협업을 통해 홍콩(Cosmoprof Hong Kong 2025)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 참가 16개사, 해외판로 개척 비용지원 20개사 및 연계 홍보지원 1개사 등 총 37개사를 지원하였음. * 「소비자기본법」33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업무를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안전 확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자정책 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재설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적사항	○ 2023~2025년 연도별 피해구제·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평균 처리기간은 증가 추세, 30일 이내 처리*율은 감소 추세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함. - 피해구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7.2일 → 19.9일 → 21.9일로 매년 증가하였고, 30일 이내 처리율은 91.3% → 83.0% → 78.8%로 매년 감소하였음. - 분쟁조정 사건 또한 평균 처리기간은 85일 → 91일 → 132일로 매년 증가하였고, 30일 이내 처리율은 21.3% → 22.8% → 15.7%로 2024년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5년 크게 감소하였음.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연장 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기획예산처 등 인력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분쟁조정 전담 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대규모 집단 분쟁 접수 시 AI 분류 및 신청 서류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정기한 준수율을 정상화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전용 승인 후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2),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5),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6),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7),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9),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1),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4),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행정소송수행(7031-301)	주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회계연도에 419건에 걸쳐 총 약 1억 4,000만원의 여비를 전용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先)집행함. - 특히, UNCTAD 파견자의 귀 · 부임 관련 예산은 공사비 전용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당초 확보된 예산의 2배를 전용을 통해 집행하고, 해당 전용은 선(先)집행 후에 승인을 받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이 방만하게 이루어짐.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해당 비목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잦은 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무단 선집행은 엄중히 근절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내용	○ 지난 4년간 동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예산을 충당하였고, 동 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불용이 발생함(최근 3년간 매년 1억원 이상 불용) * 연도별 불용액: 2022년(6,000만원), 2023년(1억 600만원), 2024년(2억 1,500만원), 2025년(1억 1,800만원)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의 불용액 및 전용 등 예산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은 감액하고, 지역사무소 예산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정책 홍보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정거래지원(7031-300)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사항	○ ‘인플루언서 제작’ 사업의 경우 4,840만원을 집행(예산: 4,000만원)하였고, 유튜브 콘텐츠 212건, ‘공정한 패밀리G’ 드라마 등을 제작하였으나, 실제 조회수는 대부분 100~1,000회 사이에 그치는 등 그 성과가 미비함.		
		시정요구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라. 금융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금융중심지지원 센터의 업무 재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1431-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당초 설치 목적과는 관련성이 낮은 일반 국제협력 및 행사 개최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있음. - 실집행률 : 2023년 62.4%, 2024년 86.5%, 2025년 57.8% - 사업 실적이 해외 IR,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등 금융감독원 주최 행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자문 및 컨설팅, 투자 유치 등의 실적 및 통계는 확인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허가·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등
부실률 관리
필요 등</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햇살론15)(1831-88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의 2025년 순대위변제율은 28.8%로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22년 공급분의 경우 보증공급액(1,002억원) 중 533억원이 대위변제되어 순부실률이 48.9%에 달함.
-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적용 비중도 전체 이용자의 16.7%에 불과하여 부실률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됨.
❍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취약계층의 상환여건 악화에 따라 순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동일한 정부 출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보증공급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연도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상품 순대위변제율 >
(단위: %)
<table>
<tr><th>구분</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04</th></tr>
<tr><td>햇살론15</td><td>14.0</td><td>15.5</td><td>21.3</td><td>25.5</td><td>26.8</td><td>28.4</td></tr>
<tr><td>최저신용자특례보증</td><td>-</td><td>0.01</td><td>14.5</td><td>26.8</td><td>28.8</td><td>32.5</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기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및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및 회수율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6년부터 통합 운영되는 햇살론 특례보증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 차주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및 조기경보 체계 수립, ② 상환율 개선 실적 점검, ③ 순대위변제율 추이를 예상 사업손실률 산정에 반영하되 목표 보증공급 규모 축소 방지, ④ 구상채권 회수와 연계한 채무자 재기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사업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관련 사업잔액 환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시정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2023년 이후 가입 목표를 과다 산정함에 따라, 매년 실집행 실적에 비해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과도하게 교부되었으며, 이미 종료된 청년희망적금 관련 금액도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 유보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사업 잔액을 즉시 환수할 것		
4	**청년자산형성 관련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에 출시되어 2032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는 등 정권마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을 새로 출시하면서 혼란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청년자산형성에 관하여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일관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출연금의
과도한 유보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td></tr>
<tr><td>지적사항</td><td>❍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2023년 이후 가입 목표를 과다 산정함에 따라, 매년 실집행 실적에 비해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과도하게 교부되었음.

< 연도별 청년도약계좌 가입 목표 및 실적>
(단위: 만명)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목표 누적 가입인원</th><th colspan="2">실적</th></tr>
<tr><th>신규가입</th><th>가입유지</th></tr>
<tr><td>2023년</td><td>306</td><td>51</td><td>47</td></tr>
<tr><td>2024년</td><td>250</td><td>106</td><td>134</td></tr>
<tr><td>2025년</td><td>230</td><td>98</td><td>205</td></tr>
</table>
- 집행잔액 약 2,544억원이 이월되고, 청년도약계좌 환수액 및 이자수입액 1,140억원도 진흥원에 유보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기여금 지원 출연금 집행잔액, 청년도약계좌 환수액 및 이자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집행잔액</th><th>환수액</th><th>이자수입액</th></tr>
<tr><td>2023년</td><td>300,815</td><td>1,557</td><td>6,298</td></tr>
<tr><td>2024년</td><td>319,479</td><td>24,153</td><td>13,237</td></tr>
<tr><td>2025년</td><td>254,372</td><td>54,152</td><td>14,639</td></tr>
<tr><td>합 계</td><td>-</td><td>79,862</td><td>34,17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는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경우, 가입실적 등에 기반한 실제 기여금 지급 소요를 산출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교부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은 불용처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유보금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재원은 조기에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청년자산형성 사업 실질적인 성과평가체계 정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주거 마련, 창업 등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실제 자산형성 사업이 청년 자립에 기여했는지를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할 것		
7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1년 만에 과다 불용에서 재원이 부족해지는 등 수요 추계의 정합성이 미흡함 - 2024년에는 예산 12억 5,500만원 중 6억 2,800만원만 집행(집행률 50%)하여 6억 2,700만원을 불용함에 따라, 국회는 ‘예산 편성 시 내역사업별 수요의 면밀한 추계’를 촉구하였음. - 2025년에는 본예산(12억 500만원)이 부족하여 추경(3억 5,400만원) 및 전용(2억 9,000만원)을 통해 6억 4,400만원을 추가 투입하였으나, 그럼에도 미지급금 4억 4,500만원이 발생하여 2026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연중 재원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과 타 사업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추이와 실적을 반영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수요를 면밀히 추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실적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4억 4,500만원의 미지급금(2026년 지급)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에도 지원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예산의 조기 소진 및 미지급금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9	**지역활성화투자 펀드의 과도한 유보금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과다한 자금이 산업은행에 유보되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 2026년 7월 기준 산업은행에 출자된 2,500억원 중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에 출자된 자금은 298억원에 불과하며, 2,202억원은 산업은행의 재정모펀드 계정에 유보되어 있음. *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유보금 및 산업은행 미출자금을 모두 합하면 총 6,606억원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 추진 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자펀드 결성 및 프로젝트의 투자 일정에 따라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교부하고 모펀드 유보금을 다음 연도 출자금 예산 규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과도한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10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조속한 투자 집행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2414-32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2026년 8월 기준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자펀드 조성액 1,340억원 중 투자실적은 80억원(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실적이 부진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조속한 자펀드 결성 완료와 적기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수요를 발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반도체생태계펀드의 투자 실적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2414-32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반도체 분야 펀드 조성 사업이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조성 사업으로 통합되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라 투자 현황 관리에 공백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제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결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원전 관련 펀드의 조속한 투자 집행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2414-32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2026년 8월 기준 원전산업성장펀드의 자펀드 조성액 1,141억원 중 투자실적은 215억원(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실적이 부진함. -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1호 자펀드가 2025년 12월에 선정됨. * 당초 계획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원전 관련 펀드의 조속한 자펀드 결성 완료와 적기 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수요를 발굴할 것 ○ 금융위원회는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을 신속 집행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원전 관련 펀드의 유사·중복 사전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2414-32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자력산업협회를 통하여 원전 관련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사업과 SMR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유사·중복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펀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원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14	**원전 관련 펀드의 투자 실적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2414-32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라 자펀드 투자기간인 2031년까지 투자 현황 관리에 공백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제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결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2414-322)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지적사항	○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려는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민간에서도 저리 차입이 가능한 대기업 또는 우량기업에 저리대출 승인이 집중되었음. - 8개 대기업에 대하여 전체 대출 승인액(7조 6,402억원) 중 5조 2,330억원(68.5%)이 집중 - 최우량(AAA) 등급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3조 6,000억원(47.1%)에 달하며, 우량(AA) 등급 대기업을 포함하면 5조 330억원(65.9%)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전략산업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율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재산조사 강화 및 사해행위 제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적사항	○ 새출발기금은 재산의 도피·은닉 등 사해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새출발기금과 재약정이 가능해, 사해행위를 억제할 실질적 제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재산조사를 강화하고, 사해행위자에 대한 재약정 요건 강화 등 실효성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17	**재정부담 점검 및 사후 관리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새출발기금은 재정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채 발행을 통해 채권매입 재원을 충당하는 구조로, 지원대상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임. 동 사업은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이후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간접피해자 등으로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 4월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간접피해자의 비율이 45.1%에 달함. 한편,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이후 그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국가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채무조정 수혜자의 재연체율 및 경제활동 복귀 여부 등 장기 성과를 종합적으로 사후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사업 종료 이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투자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2432-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td></tr>
<tr><td>지적사항</td><td>○ 2026년 6월 기준, 제4호~제6호 블라인드펀드의 투자가능액은 총 1조 4,916억원이고, 프로젝트펀드의 투자가능액(모펀드잔여재원의 2배 추정) 8,440억원까지 더하면 총 2조 3,356억원에 달함.

<펀드 결성 및 집행 현황>
(2026. 6. 기준, 단위: 억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결성현황</th><th rowspan="2">투자액</th><th rowspan="2">미투자
잔액</th></tr>
<tr><th>모펀드</th><th>민간</th><th>합계</th></tr>
<tr><td rowspan="4">블라인드
펀드</td><td>제4호(2023)</td><td>2,800</td><td>3,476</td><td>6,276</td><td>3,374</td><td>2,902</td></tr>
<tr><td>제5호(2024)</td><td>3,350</td><td>6,972</td><td>10,322</td><td>4,918</td><td>5,404</td></tr>
<tr><td>제6호(2025)</td><td>3,000</td><td>3,660</td><td>6,660</td><td>50</td><td>6,610</td></tr>
<tr><td>합 계</td><td>9,150</td><td>14,108</td><td>23,258</td><td>8,342</td><td>14,916</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모펀드
잔여재원</th><th colspan="3">결성현황</th><th rowspan="2">투자액</th></tr>
<tr><th>모펀드</th><th>민간</th><th>합계</th></tr>
<tr><td rowspan="4">프로젝트
펀드</td><td>제4호(2023)</td><td>570</td><td>1,630</td><td>3,203.9</td><td>4,833.9</td><td>4,833.9</td></tr>
<tr><td>제5호(2024)</td><td>1,650</td><td>-</td><td>-</td><td>-</td><td>-</td></tr>
<tr><td>제6호(2025)</td><td>2,000</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td><td>4,220</td><td>1,630</td><td>3,203.9</td><td>4,833.9</td><td>4,833.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호~제6호펀드의 투자집행률을 제고하고, 다른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매력도 증진 노력을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채권 매입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2432-305)	주의,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새도약기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16.4조원 규모의 채권 일괄 매입을 추진한 것임에도 공공기관 보유 채권 외에는 적기 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 2025년 중에 매입한 채권이 7조 7,220억원으로 당초 추산한 전체 대상채권 16조 4,00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중 공공기관 보유 채권이 5조 5,485억원으로 72.1%를 차지함. - 특히 대부업권은 매입대상 4조 8,584억원 중 7,394억원(15.2%)만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대부업권 채무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함. - 매입대상 채권 전체를 일괄 매입대상으로 설정하여 출자금 4,00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2025년 말까지 실사용 재원은 2,321억원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당초 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금융위원회는 목표한 채권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부업, 상호금융, 저축은행들과의 협약 조속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채무자 재기 지원 및 재기 성과 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2432-305)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금융위원회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단순한 채무소각이 아니라 경제적 재기 지원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채권 매입 및 소각에만 편중됨. - '재기'의 개념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정책효과를 검증할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근로능력, 재기지원 수요 등을 확인하여 개인별 재기계획을 수립하고, 채무조정 완료 후 취업상태, 소득변화, 재연체 여부, 금융생활 정상화 등 재기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21	**잔여재원 활용계획 제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2432-305)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평균 채권매입가율이 당초 예상한 5.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잔여재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잔여재원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근거 규정 마련 후 예산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2432-305)	주의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2025년 추경안 심사 시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법 개정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2025년 10월 3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2026년 5월 법률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개시 시점이 당초 2025년 11월에서 2026년 8월로 약 9개월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소요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주의할 것		
23	보유자산 매각 노력 및 잔여재산 처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재고자산매각대(73-731)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지적사항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므로, 보유 자산을 매각해 기금 청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화생명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의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출자금융회사 주식의 매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청산 일정(2027년)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매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물 귀속 등 대체방안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과도한 계획변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총괄	제도개선	금융위원회
		지적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과도한 이월·불용액 및 계획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 ‘주신보IT운영’, ‘기금관리비’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7,100만원이 이월되고, 7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구상권관리’, ‘보증료환급’ 등 3개 세부사업에서 총 64억 600만원이 계획변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금융위원회는 향후 과도한 이월·불용액 및 계획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마. 국민권익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공공기관 부패 ·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시정,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보상금 상환액의 법정기한을 넘긴 임의미납액이 2025년 1억 9,900만원에 달함. 기관별 명단을 분석한 결과 법정기한 위반 사례가 354건으로 확인되며, 이중 68건은 6개월 이상, 20건은 12개월 이상 지연된 이후에야 완납됨 - 권익위는 협조공문 발송, 독촉공문, 현지점검의 동일 유형의 조치만 반복 중임 - 서울 도봉구, 충청북도, 괴산군은 현지점검까지 실시했음에도 2026년 6월말 기준 미납상태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시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내부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 확대 및 다수 기관 참여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국민이 단일 창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 6월부터 개통하였으나,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참여기관 현황을 보면 미참여기관은 28개로 참여율이 76.3%에 그치고 있어 행정심판 제도의 완전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미참여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향후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법적·제도적 여건과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유재산 및 무형자산의 결산 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2025년 6월 개통하여 실제 사용 중인 원스톱 행정심판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대장 등재 시점(10월)에 지연 인식함으로써 4개월분 감가상각비 10억 원을 누락하고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회계 오류를 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국유재산 및 무형자산 결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연간 수급계획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적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132-32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430-01목)는 연간 물품수급계획 및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며,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용 PC와 컬러 프린터 등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행태를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소진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는 등 예산집행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향후 자산취득비는 반드시 연초에 수립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익신고자 포상금 삭감·전용을 통한 국민소통시스템 유지보수비 목적 외 사용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32-32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예산을 사전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펑크가 나자,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삭감하여 국민소통시스템 관리용역비로 끌어다 쓰는 심각한 목적 외 예산 사용을 자행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정보화 시스템 용역비로 부당 전용하고 세목 간 임의 충당을 남발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소요액을 정밀하게 산출하며, 완료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즉각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부패 · 고충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저조 등 장기 미이행 과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패 · 고충제도개선(1134-340)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2026년 7월 기준 권고 후 조치기한이 3년 이상 도과한 미이행 과제가 31건에 달하는 등 장기 미이행 과제가 고질적으로 누적되고 있고, 권고 사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피권고기관이 수용의사를 밝히나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이행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관행이 반복됨 ○ 또한, 매년 이행컨설팅과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행정력을 투입함에도 법령 개정이나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고충 난제 과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 미이행으로 남는 현상이 지속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 사전 단계에서 피권고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입법 · 예산 실무협의를 강화하여 이행 가능성을 철저히 사전 검증하고, 3년 이상 장기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미이행 내역의 정기적 대외 공개 등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이행 강제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의 경쟁 활성화 및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은 매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효한 응찰이 매년 1~2개 수준에 그치고 최근 동일 컨소시엄이 반복적으로 선정되어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등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변경 절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청렴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에 당초 49,61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육 인원이 증가했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의 약 38%인 1,900만원을 증액 집행함 - 해당 계약은 ‘확정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사후정산 조건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가를 지급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근거 없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의 집행률은 33.9%에 불과한데, 종결사유를 살펴보면 182건(특정인 반복 신청 제외) 중 24건은 법률관계 미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신고자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법률관계 확정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익신고 보상금 예산액: 1,117,800천원 / 지급액: 379,386천원 / 집행잔액: 738,414천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수입 회복 등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자체 규정 반영 및 통지 이행 여부를 별도로 점검·관리하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 제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통지 절차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보호신청의 종결·취하 사유 분석 및 보호조치 사후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은 2023년 296건에서 2025년 1,025건으로 3.5배 급증하였으나, 2025년 처리사건 중 인용은 63건(7.5%)에 그친 반면 종결·취하는 687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수 사건이 실질적인 판단에 이르기 전에 종료되고 있음 - 또한, 보호조치 결정 이후 일부 사건이 미이행 상태이고 2025년 보호조치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납액은 0원으로 집계되어 이행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와 강제수단이 무력화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신청의 종결·취하 사유를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호조치 미이행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공익신고자 인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법률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모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인정 제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정확성 및 사후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1136-369)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수사의뢰 12건 중 기소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10건이 불기소로 종결되는 등(1건 수사중)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의뢰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사의뢰 사건 중 실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7건으로, 수사의뢰 이후 징계 등 후속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채용비리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사·관리체계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1136-369)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2025년에는 신고사건 147건을 접수하고 174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출장은 7건 실시되어 2023년과 2024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여비 예산액 47.6%를 타 세부사업 충당 재원으로 사용함 *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국내출장 건수: 2023년 27건, 2024년 38건, 2025년 7건 - 비대면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권익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의 이첩·송부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첩·송부 건 처리기간: 2023년 42일 → 2024년 72일 → 2025년 111일 - 신고사건의 처리 지연은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인력의 적정한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1136-369)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예산 1억원 중 2,0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조정하고도 1,900만원을 불용하여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2%에 그치는 등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2019년 182건에서 2025년 34건으로 감소하고 실제 출장실적도 예산 편성 시 예상한 월 35건에 비해 월평균 14건에 그치는 등 업무량에 비해 사업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신고·조사 및 출장실적을 반영하여 사업규모와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행정심판 재결기간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심판 운영(1137-370)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행정심판의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평균 재결기간도 길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의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시급함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유형별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표준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간과 장기계류 사유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 조사 인력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행정심판 절차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심판 운영(1137-370)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 사건관계인에게 송달되는 문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없어 제3자의 심판 청구 · 참가 시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이 사인 간에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타 법률에 이미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참고하여, 행정심판 절차상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개선 전에는 청구서 · 참가신청서 송달 시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불필요한 예산 전용 근절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예산 편성 이후 출연사업을 직접수행 사업으로 임의 전환하면서 31억 6,7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3억 7,2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35억 3,9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을 전용한 것은 국회의 사전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근절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ISMS-P*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인증 취소 사례도 전무함. - 2025년 12월 기준 263개 인증기관 중 27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33건의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음.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 * 오히려 인증기관의 경우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활용되고 있음. ○ 현행 인증제도는 신청기관이 심사기관에게 심사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현행 인증은 기관의 전체 업무가 아닌 신청기관이 설정한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 핵심 개인정보 시스템이 인증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인증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일반 국민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처분 이력을 인증 평가 및 과징금 감경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ISMS-P 사후관리를 개선하고 인증심사기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의 범위가 실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 범위 설정 기준을 구체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사각지대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도로교통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이 인증 의무화* 대상과 ‘집중관리시스템’**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의 공백이 존재함. * 보호위원회는 2027년 1단계 인증 의무화 대상 81개 시스템을 지정하여 2026년 하반기 고시 계획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지정·관리 중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 대상 또는 집중관리시스템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전수 파악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가 기관 자체 평가와 서면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또는 시정명령 이력이 있는 기관이 같은 평가연도에 S·A등급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사고 후 대응조치에 따라 감점이 최대 50%까지 완화될 수 있는 현행 평가체계 하에서는 대규모·반복 유출 기관도 우수등급 진입이 가능 ○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위험도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체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관과 집중관리시스템 대상 기관을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차등화된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유출 규모 및 반복성, 처분의 중대성 등이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의 성과 제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 ○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와 주요 지표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전체 평균 점수 : (2024) 77.6 → (2025) 76.5 - 특히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 지표는 5점 만점에 2.26점에 그쳤음 ○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나, 90개 참여기관 중 43개 기관(47.8%)은 컨설팅 이후에도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과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이 형식적인 실적 관리가 아닌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아동 · 청소년 지우개 서비스 사업 규모 · 대상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내역사업 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은 2023년 사업 도입 당시 계획(연 2만 880건 처리) 대비 사업 실적(2025년 1만 701건)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실적에 해당하는 접근배제 실적 또한 감소**하고 있음. * 주체로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의 접근배제(삭제 및 검색 제한)를 대행 및 지원하는 사업 ** 접근배제 완료 건수 : (2024) 4,231건 → (2025) 1,699건 ○ 직접 권리행사가 가능한 성인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접근배제를 대행 및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동 사업의 신청 자격 : 30세 미만 ** 20~29세 신청 처리 건수 : 2025년 2,899건(27.1%)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신청 수요 및 국가의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대상을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셰어런팅*, 사이버폭력 등 제3자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직접 삭제할 권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을 통한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의 글·사진·영상 등을 게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 도입 당시 향후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제시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 게시물 중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통 및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과 플랫폼 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에 대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1031-304)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과의 계약이 하반기로 지연되면서 기술개발 자문,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계약 : 8월 중 수행기관 계약 체결 - 자문 : 전체 114건 중 81건(71.1%)이 12월에 집중 -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 기업 선정 통보가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완료 - 판로개척 지원 : 12월에 2회의 소규모 단발성 세미나 개최 ○ 사업 종료 직전인 12월에 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한 ‘특화 프로그램’(특허평가보고서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의 경우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잔여 예산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비의 기본경비성 경비 집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031-305)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2024년 설치 이후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AI 서비스 구독, 국제회의 운영계획서 인쇄, 국외출장 차량 임차, 워크샵 등에 집행된 사례가 발견됨. * (2024년) 3회, (2025년) 2회, (2026년 7월) 0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예산을 위원회 운영과 관련성이 낮은 기본경비성 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	**GPA 서울총회 행사 경비 분산 집행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031-305)	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GPA 서울총회 행사 관련 사전 홍보, 초청장·운영계획서 인쇄, 기조연설자 간담회 통역, 부대행사 비용 등 1,780만원을 이·전용 없이 위원회 기본경비, 조직혁신지원 등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행사대행용역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당초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LED 영상, 카메라 및 부대사무실 임차 등이 신규로 집행된 반면, 계획되어 있었던 리플렛 제작 및 해외보도 경비는 전액 미집행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이·전용 없이 다른 세부사업을 통하여 행사 경비를 임의로 증액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주요 집행항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결합 실적이 일부 기관에 편중되고 있음. - 현재까지 지정이 취소된 결합전문기관은 총 7개로, 이 중 4개 기관은 지정취소 요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고, 3개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로 지정이 취소되었음.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수: ('20년) 5개 → ('21년) 19개 → ('22년) 22개 → ('23년) 23개 → ('24년) 21개 → ('25년) 19개 → ('26년 6월) 18개 ※ 2021년부터 2026년 5월말까지 총 160건의 결합 실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상위 3개 기관의 결합 실적이 총 92건으로 전체의 57.5%에 해당하는 반면, 결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6개이고, 누적 실적이 1~2건에 불과한 기관이 7개로, 상당수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수의 감소와 기관별 결합 실적 편중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요기관과 결합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사업 일정 관리 및 실수요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마이데이터 10대 중점분야 확산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플랫폼 연계 및 선도서비스 실증 사업의 추진 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교부된 마이데이터 사업비 중 전년도 집행잔액 및 유보재원이 과다함에도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집중 교부하여 집행 비효율을 유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비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정 관리와 실수요 검증을 철저히 할 것		
13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자체 서비스 발굴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1032-304)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은 2026년 6월 기준 전체 200개 서비스 중 개보위 소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기반 서비스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3개는 타 부처 서비스를 연계한 것임. - 별도 예산으로 추진한 선도서비스 9개 중 실제 플랫폼 반영도 7개에 그쳤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자체 서비스와 선도서비스 발굴·확산을 확대하고, 지원과제가 실제 플랫폼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1032-304)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이용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개통 초기의 관심이 지속적인 이용 기반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2025년 말 기준 회원가입자가 1,935명에 불과해 약 198억원※의 구축·운영 예산 대비 실질적인 활용 성과가 미흡함. ※ 구축·운영 예산: 2024년 75억 4,600만원, 2025년 60억 4,500만원, 2026년 61억 7,6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송요구 실행 건수, 이용자 재방문율 등 플랫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		
15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접수 체계 효율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관련 신고·접수 체계가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음에 따라 신고·접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상 침해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접수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법령 상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에도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전담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접수·분류·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을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개인정보 유출사고 처리기간 단축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분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신고와 처분 건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미처리 사건이 누적되고 있음. - 신고건수 : (2021) 163건 → (2025) 447건 (2.7배 증가) - 처분건수 : (2024) 337건 → (2025) 227건 ○ 조사조정국 조직과 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2020년 11월～2026년 4월) 일반 유출·침해신고 사건 기준으로 신고부터 처분까지 평균 소요일은 490.6일에 달하며, 과징금 부과까지는 520.2일에 달함 - 연도별 평균 소요일은 2021년 349.3일에서 2025년 505.3일로 증가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증가 추이에 대응하여 유출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리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장기계류 사건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개인정보 유출 반복사고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 유출 반복사고 기관 47개(총 128건) 중 21개 기관은 과징금 부과 이력이 부재하며, 반복사고임에도 이전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진 사례도 37건에 달하는 등 반복 위반 여부가 처분의 양정 단계에서 가중 요소로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사고 기관을 별도로 식별·관리하고, 반복 위반 여부가 처분의 양정 단계에서 실질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분 기준 및 체계를 정비할 것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협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주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국회예산정책처가 사고 유형, 조사 착수 및 처분 일시 등 사건별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 일자와 처분 결과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국회 결산심사가 저해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회 결산심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개인정보 조사통합시스템의 활용 체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 내 조사 착수·진행 상황 및 결과, 과징금 납부 관리, 시정명령 이행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등 조사의 단계별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의 입력이 누락되고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고조사 전 과정의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입력 항목의 충실성, 단계별 이력관리 여부, 통계·분석 기능의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20	개인정보 조사통합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반영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제도개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지적사항	○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이 복구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정보통합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였는데,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해당 기간 동안 처리된 사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이 2026년 6월까지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장애나 업무 공백 발생 시에도 자료가 적시에 복구·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가. 국가보훈부

없음.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배정 시 적정규모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7036-316)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예비비 배정과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예측가능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나, 자문위 구성 및 실무원 채용 지연, 온라인 회의 전환 등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사유로 배정된 예비비를 불용한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불용액(1억 2,600만원): 국내여비 5,000만원, 특근매식비 2,700만원, 상용임금 2,100만원 등 이월액(6,200만원): 일반연구비 4,300만원, 정책연구비 1,800만원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신규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하는 경우, 재원 규모 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로 반영하고, 예비비 집행 과정상의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연구용역 자체 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7036-316)	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일반연구비 8,600만원을 집행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다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검토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해당 연구용역의 발주 목적, 조사 결과의 보고·검토 및 정책 반영과정 등을 자체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필요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라. 금융위원회

없음.

마. 국민권익위원회

없음.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없음.

4. 부대의견

가.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률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실적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부는 진료비, 전직지원금, 이차보전금 등 실제 지급소요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처 차원의 일관된 추계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지급소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

○ 국가보훈부는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미지급금을 부처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미지급금 발생 규모, 정산계획 및 미지급에 따른 이자 부담 처리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시설·건립사업의 예산 편성 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설계 등 착공 전 사전절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는 보조금을 실집행기관에 교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반복하여 발생하는 교통시설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선(先) 확보하도록 한다.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활동기한 종료 후 임시조직을 존속·연장할 경우에는 훈령 개정만으로 반복 연장되어 온 다른 임시조직의 전례를 따르지 말고 연장의 사유·기한을 명시하여 국회에 사전보고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대위변제율 축소 및 회수율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수행 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내함으로써 정책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에서의 전환 및 연계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의 가입기간 연장 또는 가입대상 확대 등 청년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 금융위원회는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의 탈락요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등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 금융위원회는 민간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창업가 대출 지원 참여 방안을 검토한다.

○ 금융위원회는 반도체 관련 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전략산업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등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상환액을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컨설팅의 운영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붙임 2】

2025회계연도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6. 8.

【 국가보훈부 소관 】

Ⅰ. 총괄

1. 세입: 연례적 세입예산 수납 부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 국가보훈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토지대여료·건물대여료·기타 재산수입·과태료·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 잡수입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세입예산액은 98억 6,100만원으로 이 중 87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억 5,800만원을 수납하고, 39억 4,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1,3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6,608	2,981	3,316	312	34.5	45.1
과태료	88	36	36	-	-	40.9	100.0
징계부과금	-	5	-	5	-	-	-
변상금	23	23	23	-	-	99.4	100.0
위약금	28	591	-	591	-	0.3	0.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	-	-	-	-	-
건물대여료	94	313	284	29	-	302.1	90.8
기타관유물대여료	-	1	1	-	-	-	100.0
토지대여료	65	69	66	3	-	101.4	95.5
기타재산이자수입	511	824	818	5	1	160.1	99.3
면허료및수수료	3	2	2	-	-	78.5	100.0
기타잡수입	362	246	246	-	-	67.9	99.9
계	9,861	8,718	4,458	3,948	313	45.2	51.1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최근 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2025년도 세입 수납액은 44억 5,800만원으로 예산액 98억 6,100만원 대비 수납률이 45.2%에 그쳤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도 수납률이 각각 55.9%, 45.6%, 67.7%, 36.5%, 61.3에 불과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예산 대비 수납률(B/A)	세입예산 오차 (B-A)
2020년	8,277	4,626	55.9	△3,651
2021년	8,820	4,019	45.6	△4,801
2022년	9,198	6,227	67.7	△2,971
2023년	9,573	3,498	36.5	△6,075
2024년	9,851	6,040	61.3	△3,811
2025년	9,861	4,458	45.2	△5,403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해마다 약 30억원에서 60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약 54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 세입예산은 각 세입항목 수납액의 예상치로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수납실적 즉 결산액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세입 결산 및 예산안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결산액과 다음연도 예산안 규모의 차이가 36억원~63억원(58.2%~181.9%)에 달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결산 및 예산안 비교 >

(단위: 백만원, %)

전년도 결산(A)		다음연도 예산안(B)		증감	
				(B-A)	(B-A)/A
2019년	3,041	2021년	8,820	5,779	190.0
2020년	4,626	2022년	9,198	4,572	98.8
2021년	4,019	2023년	9,573	5,554	138.2
2022년	6,227	2024년	9,851	3,624	58.2
2023년	3,498	2025년	9,861	6,363	181.8
2024년	6,040	2026년	9,846	3,806	63.0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결산액과 예산안 간 괴리는 결산 실적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수납액이 한번도 63억원을 초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79억 4,800만원부터 매년 증액되고 있음.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8,277	8,820	9,198	9,573	9,851	9,861	9,846
전년대비 증감률	+4.1	+6.6	+4.3	+4.1	+2.9	+0.1	△0.2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세출: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상용임금 근로자인력 · 예산 관리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상용임금(110-03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로, 기본경비나 주요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음[1].

□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에 총 28개의 세부사업에서 617억 1,000만원의 상용임금을 편성하였고, 11억 9,500만원을 이·전용 등을 통해 감액한 후 예산현액 605억 1,500만원 중 576억 5,600만원(95.3%)을 집행하고 28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상용임금(110-03)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훈심사위원회운영	397	397	-	△77	320	310	-	10	394
등록관리	180	180	-	△24	156	151	-	5	197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45	45	-	△3	41	41	-	-	49
취업지원	1,366	1,366	-	-	1,366	1,366	-	-	1,496

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대전현충원묘역사업부가내관	2,148	2,148	-	△98	2,050	2,024	-	26	2,338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226	1,226	-	-	1,226	1,178	-	48	1,351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1,054	1,054	-	△74	980	973	-	7	1,16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189	189	-	-	189	177	-	13	206
국립서울현충원	3,304	3,304	-	△98	3,207	3,190	-	17	3,618
국립대전현충원	3,989	3,989	-	△57	3,932	3,909	-	23	4,403
국립4.19묘지	293	293	-	△10	283	277	-	6	321
국립3.15묘지	258	258	-	-	258	258	-	0	284
국립5.18묘지	725	725	-	△33	693	685	-	8	803
국립영천호국원	1,840	1,840	-	245	2,085	1,834	-	252	1,987
국립임실호국원	1,897	1,897	-	△20	1,877	1,645	-	232	2,070
국립이천호국원	1,658	1,658	-	△340	1,318	1,253	-	65	1,728
국립산청호국원	1,520	1,520	-	△60	1,460	1,446	-	14	1,683
국립신암선열공원	249	249	-	-	249	236	-	13	275
국립괴산호국원	1,558	1,558	-	49	1,607	1,599	-	7	1,724
국립제주호국원	1,601	1,601	-	△316	1,285	1,251	-	35	1,775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4,192	4,192	-	-	4,192	4,180	-	12	4,596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55	55	-	5	59	59	-	0	61
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174	174	-	△13	162	160	-	2	189
사회복무요원운용	706	706	-	△137	568	558	-	10	706
보훈정책홍보	71	71	-	5	76	76	-	0	78
이동보훈팀운영	1,151	1,151	-	-	1,151	1,074	-	77	1,295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29,252	29,252	-	-	29,252	27,289	-	1,963	28,920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614	614	-	△142	472	461	-	11	671
합 계	**61,710**	**61,710**	**-**	**△1,195**	**60,515**	**57,656**	**-**	**2,858**	**64,38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상용임금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까지 기관별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용임금 집행계획’에는 사업별, 직종별 정·현원 및 예산 현황 등을 반영한 정원계획(기간제, 무기계약직 구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용임금 집행계획은 연초에 사업별·직종별 정·현원과 소요예산을 사전에 점검하여 인건비 부족을 방지하고, 채용 수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별로 편성된 상용임금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매년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상용임금을 집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용임금이 편성된 세부사업의 상용임금 근로자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정원(2,308명) 대비 현원(1,806명)은 502명 부족하고,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정원(2,332명) 대비 현원(1,722명) 610명이 부족한데,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별 상용임금 근로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2024년말 기준		2025년말 기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보훈심사위원회운영	8	7	8	7
등록관리	5	5	5	4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1	1	1	1
취업지원	38	38	38	3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8	58	58	54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31	30	31	30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23	23	23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6	5	6	6
국립서울현충원	95	86	95	89
국립대전현충원	114	109	114	109
국립4.19묘지	9	9	9	9
국립3.15묘지	8	8	8	8
국립5.18묘지	23	23	23	22
국립영천호국원	48	47	48	45
국립임실호국원	48	45	48	43
국립이천호국원	29	29	41	39
국립산청호국원	44	39	44	39
국립신암선열공원	7	7	7	7
국립괴산호국원	44	44	44	44
국립제주호국원	44	38	44	34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07	107	107	107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1	1	1	1
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5	5	5	5
사회복무요원운용	37	32	49	39
보훈정책홍보	2	2	2	2
이동보훈팀운영	37	35	37	35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1,421	958	1,421	867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15	15	15	15
합 계	**2,308**	**1,806**	**2,332**	**1,722**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2025년 사업별 상용임금 예산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보수(110-01목) 또는 일용임금(110-04목)으로의 예산 조정으로, 상용임금을 포함한 인건비[2] 운영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5년 상용임금 예산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 등 조정				금액
	~에서		~으로		
내역변경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358]국립영천호국원	상용임금	245
내역변경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363]국립괴산호국원	상용임금	49
내역변경	[431]사회복무요원운용	상용임금	[433]보훈정책홍보	상용임금	5
이용	[327]보훈심사위원회운영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77
이용	[328]등록관리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24
이용	[315]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3
이용	[410]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70
이용	[346]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34
이용	[346]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40
이용	[351]국립서울현충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76
이용	[353]국립대전현충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27
이용	[354]국립4.19묘지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10
이용	[356]국립5.18묘지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5
이용	[360]국립이천호국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340
이용	[361]국립산청호국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60
이용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20
전용	[200]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200]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1
전용	[431]사회복무요원운용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132
전용	[200]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12
세목변경	[353]국립대전현충원	상용임금	[353]국립대전현충원	일용임금	30
세목변경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367]국립제주호국원	일용임금	1

2) 인건비는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연가보상비(110-05목)으로 구분됨.

구분	전용 등 조정				금액
	~에서		~으로		
세목변경	[410]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상용임금	[410]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일용임금	28
세목변경	[359]국립임실호국원	상용임금	[359]국립임실호국원	일용임금	20
세목변경	[356]국립5.18묘지	상용임금	[356]국립5.18묘지	일용임금	28
세목변경	[351]국립서울현충원	상용임금	[351]국립서울현충원	일용임금	22
전용	[395]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일반수용비	[395]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상용임금	5
기금계획변경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상용임금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일용임금	124
기금계획변경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상용임금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고용부담금	18

(자료: 국가보훈부)

○ 상용임금 집행계획은 채용 계획 변경, 결원 발생, 예산 조정 사유 등을 당초 계획과 비교·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되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집행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향후, 국가보훈부는 상용임금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과 상용임금 근로자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보훈기금: 88골프장 지속 운영 결정에 따른 안정적인 기금수입 기반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전입금·국민성금 등을 재원으로 1981년 「보훈기금법」(舊 원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보훈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보훈기금의 수입은 88골프장 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복권기금 전입금, 예탁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4가지 계정(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나누어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5년 보훈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수입	**합계**	**432,198**	**419,008**	**564,847**	**325,626**	**305,256**
	자체수입	75,715	76,992	78,902	69,886	63,890
	정부내부수입	261,357	229,814	209,075	177,563	144,510
	여유자금회수	95,126	112,202	276,870	78,177	96,856
지출	**합계**	**432,198**	**419,008**	**564,847**	**325,626**	**305,256**
	사업비	139,339	127,450	129,173	128,728	122,834
	기금운영비	765	795	827	767	786
	정부내부지출	180,937	180,803	150,588	120,575	90,486
	여유자금운용	111,158	109,960	284,259	75,556	91,149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최근 5년간 보훈기금의 자체수입 및 사업비 예·결산 현황[3]을 살펴보면, 매년 기금 수입 수납률이 저조한데, 88골프장 매각 결정이 철회되지 않아 예산액에 매각대금이 포함된 것에 기인함[4].

○ 88골프장은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015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88골프장 매각 방침을 재확인하였으며 공식적인 매각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최근 5년 보훈기금 자체수입 및 사업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자체수입			사업비·기금운영비		
	예산액	결산액	수납률	예산액	결산액	집행률
2021년	202,427	75,715	37.4	145,857	140,104	96.1
2022년	211,290	76,992	36.4	125,411	128,244	102.3
2023년	189,947	78,902	41.5	132,538	130,000	98.1
2024년	193,414	69,886	36.1	125,726	129,495	103.0
2025년	196,930	63,890	32.4	116,864	123,620	105.8

(자료: 국가보훈부)

3) 수입은 기금 자체수입, 지출은 기금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이며, 정부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회수·운용 제외
4) 88골프장 매각대금은 '21년 1,227억, '22년 1,320억, '23년 1,180억, '24년 1,227억, '25년 1,320억 계상

□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기금 수입 항목에 88골프장 매각대금을 계상하고 지출 항목에 골프장 운영비 및 시설투자 예산 편성을 반복하여 국회 예·결산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2025년「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5]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골프장 운영편익(30년 운영 수익 및 자산가치 증가)이 매각편익(매각대금 및 30년간 매각대금 운용수익) 보다 최대 3,658억원 높게 판단된 바 있음.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88골프장 매각 철회[6]를 보고하였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88골프장 매각 여부 관련 연구용역 결과>

구분	운영편익		매각편익	비고
	매각가 기준	국유재산 기준		
예상 매각대금	-	-	452,085 (35,619)*	88골프장 5년 평균 매출액 및 최근 매각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자본환원율 평균 적용
매각대금 운용수익	-	-	315,652	최근 5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2.66%) 적용
30년 후 토지가치	750,659	559,924	-	매각가(4,148억) 및 국유재산(3,094억) 토지가격 기준
30년 골프장 운영이익	382,887	382,887	-	최근 10년 88골프장 평균 운영이익(127.6억) 적용
계	**1,133,546**	**942,811**	**767,737**	**운영편익 3,658억원~1,751억원 ↑**

* 골프장 외 부지(46,547㎡, 59필지) 매각대금

(자료: 국가보훈부)

5) 수행기간: '25.7.25.~'25.11.21.(4개월)

6) '26.8.5. 대통령 보고

□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는 장기간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과 골프장 운영이익을 최근 10년 88골프장 평균 운영이익인 127.6억을 전제로 산출되었으나, 최근 영업실적은 내장객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소 악화되고 있으며,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5년 당기순이익은 111.2억으로, 내장객 수는 2022년 18.7만명에서 2025년 16.5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율도 2022년 42%에서 2025년 34%로 하락하였음.

○ 2025년 88골프장 입장료 수입(228억 200만원)과 88골프장 입장료 외 수입(95억 6,600만원)은 총 323억 6,800만원으로, 보훈기금 자체수입(638억 8,600만원)의 50.7%를 차지하는 핵심 자체수입원임.

<88골프장 최근 5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내장인원(명)	영업수익			
		총 수입	총 비용	총 이익	이익율(%)
2021년	184,380	32,418	19,748	12,670	39
2022년	187,005	33,853	19,740	14,113	42
2023년	179,976	33,739	19,736	14,003	42
2024년	167,923	33,269	20,686	12,582	38
2025년	165,391	33,092	21,971	11,121	34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 증가, 젊은 층 골프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내장객 수가 감소하였다는 입장이며, 특히 2025년에는 고객용 골프카 배터리 교체주기에 따른 교체, 고객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배상금 등의 특이소요로 비용이 증가하여 순이익이 감소한 것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매각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바, 향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시설투자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7][8].

<최근 10년간 골프장 시설투자 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이월액	자체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6년	928	-	-	928	650	278
2017년	1,625	-	-	1,625	1,493	132
2018년	1,340	-	-	1,340	1,102	238
2019년	1,184	-	-	1,184	1,122	62
2020년	1,521	-	-	1,521	1,294	227
2021년	1,122	-	-	1,122	1,064	58
2022년	2,580	-	-	2,580	2,379	201
2023년	5,327	-	398	5,725	5,530	195
2024년	3,197	-	180	3,377	3,365	12
2025년	4,077	-	300	4,377	4,377	0.2

(자료: 국가보훈부)

7) 기획예산처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보훈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기 전,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8)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인근 골프장인 뉴서울CC(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시설투자는 2025년 60억 3,000만원, 2024년은 55억 1,200만원 규모임.

<최근 3년 시설투자 내역>

구 분	내역	금액
2023년	사무실 이전	1,621
	코스 내 조명시설 교체(2차)	1,426
	오수처리장 침지형 분리막 교체	108
	보일러 및 온수탱크 교체	282
	코스 주관로 교체(1차)	990
	코스 내 안전가드레일 설치	385
	코스관리 장비 13종	635
	골프카, 작업차량, 오토바이	83
	소 계	**5,530**
2024년	남자락카 리모델링	1,723
	카트고 화재 방재보완 시스템 구축	179
	급탕용 히트펌프 교체	17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	85
	코스 주관로 교체(2차)	1,138
	상습결빙지역 발열 콘크리트포장	48
	실외연습장 진행관리실 설치	18
	소 계	**3,365**
2025년	전력설비 증설 공사	2,851
	코스 주관로 교체(3차)	1,226
	소계	**4,077**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시설투자, 경영 효율화 및 중장기 경영 계획 마련 등을 통하여 보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Ⅱ. 일반회계

[세입]

1. 건물대여료[9]: 수납액 증가를 반영한 세입 증액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건물대여료”는 국가보훈부 소유 구내식당과 매점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건물대여료 수입으로, 2025년 세입예산액9,400만원보다 많은 3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억 8,400만원을 수납(수납률 302.3%)하고, 나머지 2,900만원은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건물대여료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건물대여료	94	94	-	94	313	284	29	-	98

주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함에 따라 수납액이 ‘-’ 로 표기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연도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3,700만원, 2024년 4,100만원, 2025년 2억 8,400만원, 2026년 6월 기준 8,400만원으로

9)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또한 2023년 4,900만원, 2024년 9,800만원, 2025년 3억 1,300만원, 2026년 6월 기준 1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3	94	49	37	39.5	76.2	12	-
2024	94	78	41	43.6	52.6	37	-
2025	94	313	284	302.3	90.7	29	-
2026.6	98	154	84	85.7	54.5	70	-

(자료: 국가보훈부)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보다 건물 내에 임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료 또한 현실화하여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예를 들면, 서울현충원의 경우 꽃집 임대를 2024년부터 시작하였고, 임대료는 2024년 1,100만원에서 2025년 6,3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5년 기준으로 서울·대전현충원, 영천·임실·괴산호국원, 임시정부기념관 등에서 건물대여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건물대여료 상세 수납 내역>

(단위: 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대전현충원	1,760	1,760	-
영천호국원	1,188	1,188	-
임실호국원	1,050	1,050	-
괴산호국원	1,535	1,535	-
임시정부기념관	3,807	1,027	2,780
서울현충원	20,878	20,878	-
합계	30,218	27,438	2,78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최근 건물대여료 상승 추세 및 수납액 증가 규모를 감안하여 건물대여료 수입계상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10]: 보훈특별고용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5년 세입예산액은 8,800만원으로 이 중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5년도 과태료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	88	88	-	88	36	36	-	-	11

주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함에 따라 수납액이 ‘-’ 로 표기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5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4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해도 존재함.

10) 세부사업: 과태료(56-563)

○ 과태료의 최근 10년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6,7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22년 7,400만원으로, 2023년에는 8,8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다가, 2026년 예산은 수납저조를 고려하여 1,100만원으로 감액됨.

<최근 10년간 과태료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태료 예산 (A)	과태료 전체 수납액(B)	수납률 (B/A)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그 외 과태료
2015년	24	33	137.5	33	0
2016년	24	113	470.8	113	0
2017년	25	59	236.0	59	0
2018년	49	30	61.2	30	0
2019년	67	95	141.8	95	0
2020년	67	3	4.5	3	0
2021년	67	-	-	0	0
2022년	74	14	18.9	10	4
2023년	88	18	20.5	0	18
2024년	88	-	-	0	0
2025년	88	36	40.9	15	21
2026.6	11				

자료: 국가보훈부

□ 그간 과태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의 경우 2019년까지는 매년 6,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사실상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보훈특별고용은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임.[11)]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취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취업지원 실시기관[12]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보훈특별고용 업무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

구 분		독 립 유공자	국 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 대 군 인*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자녀	사망자 자녀	○	전몰·순직 군경자녀	×	×	사망·행불자 자녀	사망·행불자 자녀	×
	상이자 자녀		상이 6급 이상 자녀		장애 중등도 이상의 자녀	장해 11등급 이상의 자녀	상이 6급 이상의 자녀	
손자녀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만 해당,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적용되나, 가점은 미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실태 등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3)]

또한,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게 보훈특별고용을 명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4)]

---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5개년 의무고용 이행현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이행률은 60% 초반에 그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민간기업 및 사립학교 또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의무고용 이행 현황>

(단위: %)

연 도	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2020	42.0	63.9	81.4	29.8	36.8
2021	41.4	64.9	80.2	29.2	36.2
2022	36.6	63.7	77.5	24.6	33.2
2023	36.2	62.5	77.3	24.0	31.8
2024	35.1	59.8	76.7	22.9	30.9
2025	34.3	61.4	76.4	22.0	29.4
2026.6	34.2	61.8	76.8	21.7	29.6

(자료: 국가보훈부)

<기관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

('26.6.30. 기준, 단위:명, %)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기관·업체 수	15,930	578	2,361	11,721	1,270
의무고용 산출인원	224,198	8,723	43,851	166,306	5,318
실제 고용인원	76,717	5,388	33,675	36,080	1,574
의무고용 이행률	34.2	61.8	76.8	21.7	29.6

* '국가기관등'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보훈특별고용 대상이 많은 우정직렬(집배, 계리직 등)의 비율이 높아, 우정직렬 제외 시 의무고용 이행률은 국가기관 전체는 89.1% 수준, 중앙행정기관은 116% 수준임.

(자료: 국가보훈부)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 채용환경 변화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체 등과 사전 채용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최근 10년간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6.6						
2025	15	15	100.0			
2024	-	-	-	-	-	-
2023	-	-	-	-	-	-
2022	10	10	100.0	-	-	-
2021	-	-	-	-	-	-
2020	-	-	-	-	-	-
2019	95	95	100.0	-	-	-
2018	40	30	75.0	-	-	10
2017	70	55	78.6	-	-	15
2016	115	110	95.7	-	-	5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 징수 건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최근 5년간 취업지원 유형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취업지원 유형별 취업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채용시험 가점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2022	7,203	1,381	5,526	296
2023	7,094	1,004	5,912	178
2024	7,284	1,056	6,056	172
2025	8,325	976	7,178	171
2026.7.	7,771	756	6,887	12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훈특별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기타경상이전수입[15]: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5년에는 예산액 86억 5,200만원 중 66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9억 8,100만원을 수납(수납률 45.1%)하였음.

<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 이전수입	8,652	8,652	-	8,652	6,608	2,981	3,316	311	8,652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일반회계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해마다 수납액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2024년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도 수납률이 45.1%에 그침.

15)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0~2025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7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하였음. 2025년 수납률은 전년(예산액 기준 52.4%, 징수결정액 기준 55.1%)보다 저조하였음.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A)	7,622	7,851	8,155	8,400	8,652	8,652
징수결정액(B)	7,859	9,760	11,065	7,131	8,233	6,608
수납액(C)	4,231	3,454	5,430	2,111	4,537	2,981
수납률(C/A)	55.5	44.0	66.6	25.1	52.4	34.5
수납률(C/B)	53.8	35.4	49.1	29.6	55.1	45.1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B)	불납결손액(D)	불납결손율(D/B)	미수납액(E)
2025	보훈급여금 과오불	4,136	887	21.4	311	7.5	2,938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1,494	1,441	96.5	-	-	53
	교육비지원과오불	118	116	98.3	-	-	1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346	165	47.4	-	-	182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15	373	72.4	-	-	142
	계	6,608	2,981	45.1	311	4.7	3,316
2024	보훈급여금 과오불	4,100	949	23.1	141	3.4	3,009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963	2,910	98.2	0	-	53
	교육비지원과오불	76	73	95.7	0	-	3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542	206	37.9	0	-	336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51	399	72.4	0	-	152
	계	8,233	4,537	55.1	141	1.7	3,554

연도	구분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B)	불납결손액(D)	불납결손율(D/B)	미수납액(E)
2023	보훈급여금 과오불	4,700	1,167	24.8	207	4.4	3,326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925	875	94.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33	127	95.5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729	206	28.3	0	-	523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644	446	69.3	0	-	198
	계	7,131	2,821	39.6	207	2.9	4,102
2022	보훈급여금 과오불	5,854	1,381	23.6	139	2.4	4,334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93	3,443	98.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00	94	94.0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915	214	23.4	0	-	70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702	297	42.3	17	2.4	388
	계	11,065	5,430	49.1	156	1.4	5,479
2021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20.2	189	3.2	4,50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106	1,661	78.9	0	-	445
	교육비지원과오불	153	134	87.6	0	-	19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83	206	19.0	0	-	877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39	267	49.5	4	4	268
	계	9,760	3,454	35.4	194	2.0	6,112

(자료: 국가보훈부)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수납률이 21.4%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29억 3,787만원에 달하며, 수납률이 두 번째로 저조한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납률 47.4%, 미수납액은 1억 8,182만원에 달함.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3,893	729	760	2,772	361	19.5
2019년	3,506	874	1,031	2,249	226	29.4
2020년	3,048	632	626	2,392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2025년	4,136	1,049	887	2,938	311	21.4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및 이자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958	500	-	958	-	-
2019년	1,011	54	38	973	-	3.8
2020년	1,031	58	-	1,031	-	-
2021년	1,083	52	206	877	-	19.0
2022년	915	384	214	701	-	23.4
2023년	723	22	206	517		28.3
2024년	543	26	206	336	-	37.9
2025년	346	11	165	182	-	47.4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임의체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국가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한 장기체납액이 상당한 비중(30.3%)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체납된 채권은 불납결손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세입 누락으로 인한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16)]

<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임의체납액 체납기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체납기간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미만	계
금액	268	27	46	73	125	306	845
비중	31.7	3.2	5.4	8.6	14.8	36.2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회에서 최근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편성근거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17)] 국가보훈부는 매년 '전년 대비 3% 증액 또는 전년과 동일'을 편성근거로 제출하고 있음.

- 수납액이 가장 많은 2022년에도 금액은 54억 3,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예산액은 2019년 73억 1,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16)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7) 2022~2024년 정무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

2024년에는 86억 5,200만원에 이르렀고, 2025년과 2026년 예산액은 2024년과 동일함.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A)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8,652
징수결정액(B)	6,046	7,859	9,760	11,065	7,131	8,233	6,608
수납액(C)	2,509	4,231	3,454	5,430	2,111	4,537	2,981
수납률(C/A)	34.3	55.5	44.0	66.6	25.1	52.4	33.4
수납률(C/B)	41.5	53.8	35.4	49.1	29.6	55.1	43.8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체납 감소를 통한 수납실적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생활조정수당[18]: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추계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17억 400만원 중 1,015억 5,8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고, 1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내역사업 “생활조정수당”과 내역사업 “생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913억 4,000만원 중 91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80세 이상인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3억 5,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18)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 2025회계연도 생활조정수당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생활조정수당	84,754	-	16,950	101,704	101,558	-	146	120,134
- 생활조정수당	80,512	-	10,837	91,340	91,203	-	146	80,513
- 생계지원금	4,242	-	6,113	10,355	10,355	-	-	39,621

(자료: 국가보훈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사업 개요 〉

<table>
<tr><th>구분</th><th>대상</th><th colspan="2">요건</th><th>지원금액</th></tr>
<tr><td>생활조정수당</td><td>·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td><td rowspan="2">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td><td>-</td><td><table><tr><th>구분</th><th>기준 중위소득</th><th>월 지급액 (천원)</th></tr><tr><td rowspan="3">3인 가구 이하</td><td>50% 이하</td><td>242</td></tr><tr><td>40%이하</td><td>277</td></tr><tr><td>32%이하</td><td>311</td></tr><tr><td rowspan="3">4인 가구 이상</td><td>50% 이하</td><td>300</td></tr><tr><td>40%이하</td><td>336</td></tr><tr><td>32%이하</td><td>370</td></tr></table></td></tr>
<tr><td>생계지원금</td><td>·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td><td>80세 이상</td><td>매월 100천원</td></tr>
</table>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세부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의 2025년도 집행액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약 20% 초과한 1,015억 5,800만원으로, 이로 인하여 동 세부사업은 169억 5,000만원을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내역변경받게 되었음.

○ 내역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은 편성된 예산의 약 13.3%인 106억 9,100만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인 61억 1,300만원(약 144.1% 초과)을 초과 집행하였음.

< 2025년 생활조정수당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차이 (A-B)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비고
생활조정수당	84,754	101,558	△16,804	119.8	타 세부사업(고엽제수당)으로부터 169억 5,000만원 내역변경
- 생활조정수당	80,512	91,203	△10,691	113.3	
- 생계지원금	4,242	10,355	△6,113	244.1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대규모의 초과 집행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실제 지급인원이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추계된 인원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임.

추계인원을 넘어서는 지급인원의 증가가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편성 당시 수행하였던 인원 추계 방식 자체의 오류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2025년 추계인원 및 지급인원 〉

(단위: 명)

구분	추계인원 (A)	지급인원 (B)	차이 (A-B)
생활조정수당	22,356	26,394	△4,038
생계지원금	3,535	8,629	△5,094

(자료: 국가보훈부)

○ 생활조정수당 등 제도는 지급대상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2023년 이전에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요건 외에 '지급대상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2023년 중상이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을 면제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이를 전체 보훈대상자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완전폐지하였음.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제도 변화 〉

구분	대 상		
	2023년	2024년	2025년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중상이자 등	65세 이상 노인	전체 보훈대상자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지급인원 증가분을 편성인원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원을 추계하거나, 제도 변화에 따른 인원 증가분은 반영하면서 제도 변화 외 증가하고 있던 지급인원의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계하는 등 편성인원 추계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역사업 “생계지원금”의 경우 2023년 실제 지급인원에 2023년 지급인원 증감률을 적용하여 2025년도 편성인원을 추계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증가 인원을 총 4,237명으로 추계하였고, 이를 각각 해당연도인 2023년·2024년 편성인원에 반영하였음.

그러나, 정작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제도 변화에 따른 증가 인원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방식인 2023년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추계함으로써 결국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지급인원 증가분이 2025년도 예산 편성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23년에는 중상이자 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되었지만,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의 대다수가 비상이자인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19]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고, 따라서 2023년 실제 지급인원 변동은 미미하였음.

- 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던 2024년에는 지급요건이 “80세 이상”인 생계지원금은 모든 지급

19) 2024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중 약 91%(6,244명), 2025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중 약 87.6%(7,562명)가 참전유공자임.

대상자가 해당 제도 변화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급인원 증가분은 2024년에 집중하여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었음.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2025년 편성인원 추계 시 '22~'23년 증감률을 반영하는 추계방식을 사용함으로써 2024년 변동 부분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되었음.

〈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증가 추계 〉

연도	폐지 대상	추계인원
2023년	중상이자 등	1,042명
2024년	65세 이상 노인	3,195명
2025년	전체 보훈대상자	-
합계		4,237명

(자료: 국가보훈부)

〈 생계지원금 편성인원 추계 방식 〉

구분	편성인원	추계 방식	지급인원	
				전년 대비
2023년	6,770명	'22년 편성인원(5,728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1,042명)**	3,505명	+15
2024년	9,965명	'23년 편성인원(6,770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3,195명)**	6,863명	+3,358
2025년	3,535명	'22~'23년 증감률(0.4%) 반영 (**'23년 지급인원 3,505명**×1.004×1.004)	8,629명	+1,766

(자료: 국가보훈부)

○ 이로 인하여 2025년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은 지급인원이 편성인원의 2배를 넘게 되었고, 예산액의 약 144%를 초과 집행하게 되었음.

□ 다음으로, ‘생활조정수당’ 내역사업의 경우 2025년 편성인원을 2024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2025년 지급인원 증가분을 더하여 추계하였음.

부양의무자 요건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23년부터의 추계까지 고려하여 보면, 결국 2025년 편성인원은 2021년 실제 지급인원에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증가 인원(2023년~2025년)을 모두 더한 값으로, 이는 제도 변화 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인원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증가를 총 10,299명으로 추계하였고, 각 해당 연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각 해당연도의 편성인원 추계 시 별도 가산하는 방식으로 편성인원에 반영하였음.

〈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증가 추계 〉

연도	폐지 대상	추계 인원
2023년	중상이자 등	2,538명
2024년	65세 이상 노인	6,945명
2025년	전체 보훈대상자	816명
합계		10,299명

(자료: 국가보훈부)

〈 생활조정수당 편성인원 추계 방식 〉

구분	편성인원	추계 방식	지급인원	
				전년 대비
2023년	14,595명	'21년 지급인원(12,057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2,538명)**	14,957명	+1,162
2024년	21,540명	'23년 편성인원(14,595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6,945명)**	21,099명	+6,142
2025년	22,356명	'24년 편성인원(21,540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816명)** = '21년 지급인원(12,057명) +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인원(10,299명)**	26,394명	+5,29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 이전에도 매년 실제 지급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어야 하지만, 2021년 지급인원에 제도 변화에 따른 증가분만을 가산함으로써 2021년 이후부터 증가한 제도 변화 외의 증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음.

〈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변화 〉

(단위: 명)

구분	'18	'19	'20	'21	'22
지급인원	8,478	9,097	10,217	12,057	13,795
(전년대비)	+741	+619	+1,120	+1,840	+1,738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세부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은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유형 및 특성, 지급인원 변동 추세, 관련 제도 신설 등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 내역사업의 2025년도 편성인원을 추계함으로써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의 초과 집행을 유발하였음.

□ 생활조정수당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잘못된 추계로 과소편성하게 된다면 결국 그 부족분을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이·전용 등 하여 집행하거나 예비비를 통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상 비효율을 야기하게 되고, 예산 편성·심의 측면에서는 편성 당시 지출구조를 왜곡하여 배분 효율성 달성을 어렵게 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지급인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추계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고엽제수당, 고엽제환자검진[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지연 방지를 위하여 고엽제환자검진 실적 개선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고엽제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162억 6,700만원 중 176억 5,000만원을 전용하고, 1조 5,102억 4,8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4%)하였으며, 1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고엽제환자검진”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등 인정 여부 판정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6억 6,700만원 중 5억원을 전용하고, 21억 6,700만원을 집행(집행률 81.3%)하였음.

〈 2025회계연도 고엽제수당,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고엽제수당	316,267	-	△17,650	298,617	298,441	-	176	321,824
고엽제환자검진	2,667	-	△500	2,167	2,167	-	-	2,412

(자료: 국가보훈부)

20) 세부사업: 고엽제수당(1133-304), 고엽제환자검진(1143-368)

2) 검토의견

□ “고엽제수당” 사업의 2025년도 결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5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하였던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근 6개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집행잔액(178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 또한 동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수당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A-B)		
						이·전용등	불용액
2020	300,801	285,067	285,067	94.8	15,734	△15,734	-
2021	305,634	289,761	289,038	94.6	16,596	△15,873	723
2022	298,384	298,384	296,231	99.3	2,153	-	2,153
2023	310,694	305,721	304,727	98.1	5,967	△4,973	994
2024	309,760	309,760	307,480	99.3	2,280	-	2,280
2025	316,267	298,617	298,441	**94.4**	**17,826**	**△17,650**	**176**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고엽제수당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

(단위: 명)

구분		편성인원	지급인원	인원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도	7,655	7436	**219**
	중등도	7018	6761	**257**
	경도	17108	16594	**514**
	합계	31,781	30,791	**990**
고엽제2세 환자	고도	11	11	-
	중등도	58	54	4
	경도	148	140	8
	합계	217	2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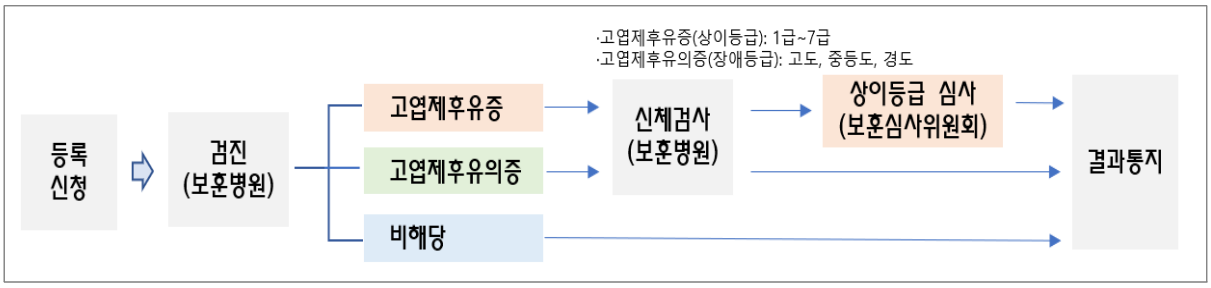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부)

□ 고엽제수당 지급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2024년부터 이어져 온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고엽제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고, ②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경도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함.

○ 따라서, 등록신청자에 대한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검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록신청자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및 수당 지급도 지연될 수 밖에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로 인하여 검진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였음.

○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검진 실적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정밀검진 및 입원 검진 등 고가의 검사 시행은 여전히 부진하였으며, 검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전년 대비 9일 증가한 57일로, 이는 보훈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검진이 축소되었던 2020년보다 긴 소요기간이라는 점에서 검진 절차 지연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수당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A-B)		
						이·전용등	불용액
2020	2,993	2,281	2,254	75.3	739	△712	27
2021	2,993	2,993	2,389	79.8	604	-	604
2022	2,993	2,993	2,297	76.7	696	-	696
2023	2,667	2,867	2,867		△200	200	-
2024	2,667	2,667	1,978	**74.2**	**689**	-	689
2025	2,667	2,167	2,167	**81.3**	**500**	△500	-

(자료: 국가보훈부)

〈 고엽제환자검진 인원당 검진단가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검진단가(원)	92,318	98,447	99,000	102,351	102,271	**67,092**	**74,654**

(자료: 국가보훈부)

〈 단일 질환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검진 소요기간*	39.8일	54.2일	42.3일	43.6일	43.1일	48일	**57일**
		(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				(전공의 부족)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

(자료: 국가보훈부)

□ 이로 인하여 새롭게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도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 등록 인원도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전체 수당 지급대상 인원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 등록 인원[21]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고도	282	226	213	236	199	127
중등도	618	559	555	538	500	467
경도	841	770	667	797	838	665
계	1,741	1,555	1,435	1,571	1,537	**1,259**

(자료: 국가보훈부)

21) 등록인원 중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급미달자는 제외한 수치임.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수당 지급 인원 변동 〉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계	36,439	△816	35,763	△676	35,093	△670	34,285	△808	33,067	△1,218	31,151	△2,276
고도	10,317	△679	9,831	△486	9,442	△389	8,991	△451	8,401	△590	7,436	△965
중등도	6,063	222	6,351	288	6,646	295	6,798	152	6,854	56	6,761	△93
경도	20,059	△359	19,581	△478	19,005	△576	18,496	△509	17,812	△684	16,954	△1,218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검진 지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지연은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늦추게 된다는 점에서 검진 실적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지원, 생계지원금 등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늦추게 되어,[22] 그 지연된 기간만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검진 실적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 생계지원금,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해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등록 신청자에 대한 검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검진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보훈심사위원회운영[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등록요건 충족 및 상이의 정도 등을 판단하고,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통하여 심사지원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16억 3,100만원 중 1억 100만원을 이·전용 등하고, 15억 2,600만원을 집행(집행률 93.6%)하였으며,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보훈심사위원회운영	1,631	18	△101	1,548	1,526	-	22	1,598

(자료: 국가보훈부)

23) 세부사업: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2) 검토의견

□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관계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

○ 국가보훈관계법률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신청자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구분 판정하려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등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24)]

○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이 행하는 등록결정, 상이등급 판정 등의 행정처분은 그 실체적 내용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임.

□ 그런데, 최근 국가보훈부의 행정소송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가 패소하는 사건의 수 및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의 경우 패소 확정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49건, 패소율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11.9%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12. (생 략)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행정소송 처리 결과 〉

(단위 : 건, %)

구 분		계	판 결			취하등	패소율
			소계	패소	승소		
2021	요건확인	253	166	20	146	87	7.9
	상이등급 등	168	104	11	93	64	6.5
	계	421	270	**31**	239	151	**7.4**
2022	요건확인	245	171	11	160	74	4.5
	상이등급 등	183	128	19	109	55	10.4
	계	428	299	**30**	269	129	**7.0**
2023	요건확인	238	194	15	179	44	6.3
	상이등급 등	181	123	19	104	58	10.5
	계	419	317	**34**	283	102	**8.1**
2024	요건확인	247	213	12	201	34	4.9
	상이등급 등	147	110	22	88	37	15.0
	계	394	323	**34**	289	71	**8.6**
2025	요건확인	255	219	23	196	36	9.0
	상이등급 등	156	128	26	102	28	16.7
	계	411	347	**49**	298	64	**11.9**

(자료: 국가보훈부)

〈 전년 대비 2025년 행정소송 패소사건 현황 〉

(단위 : 건, %, %p)

구 분	패소사건 수			패소율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감
		증가 건수	증가율		
요건확인	23	+11	**91.7**	9.0	**+4.1**
상이등급 등	26	+4	**18.2**	16.7	**+1.7**
계	49	+15	**44.1**	11.9	**+3.3**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2026년 행정소송 처리 결과를 보면, 2026년 5월 말 기준 패소율은 2025년보다 증가한 14.5%로, 이러한 패소사건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6년 행정소송 처리 결과 (2026. 5.말 기준) **〉**

(단위 : 건, %, %p)

구 분	계	판 결			취하등	패소율	
		소계	패소	승소			전년 대비
요건확인	86	69	10	59	17	**11.6**	**+2.6**
상이등급 등	52	40	10	30	12	**19.2**	**+2.5**
계	138	109	20	89	29	**14.5**	**+2.6**

(자료: 국가보훈부)

□ 행정소송 패소사건 증가는, 국가재정 측면에서 불필요한 패소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기간 소요되는 쟁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받았어야 할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오랫동안 지연당한 당사자를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가보훈부는 패소사건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6,300만원 증가한 3억 200만원을 패소비용으로 지급하였음.

〈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패소 관련 지급 비용 등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급 건수	31	30	34	34	**49**
지급비용	260	261	220	239	**302**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2025년도 패소 확정 사건[25] 기준 소송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약 35% 사건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패소 사건 소송 소요 기간 〉

소요 기간*	1년 이상 ~ 2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하	3년 이상 ~ 4년이하	4년 이상 ~ 5년 이하
건 수	19건	12건	9건	8건
전체 사건 대비	39.6%	25%	18.75%	16.66%

* 처분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부)

□ 물론,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심사, 상이등급 구분 심사, 보상심사 등과 관련하여 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26] 국가보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공자 등록 등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일부 심사 건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은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법원의 법해석 및 판단과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경우 불필요한 법률쟁송이 증가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부담 증가와 보훈대상자의 권익 저해를 유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25)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송에 대한 사건 1건을 제외한 48건에 대한 수치임.
26) 보훈심사위원회가 2025년 처리한 요건심사는 6,903건, 상이등급구분 심사는 12,369건, 보상심사는 746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반복되는 법원의 판결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심의에 참고하는 등 심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교통시설이용지원[27]: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의 미지급금 반복 발생 문제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교통시설이용지원”은 애국지사와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2억 6,200만원 중 112억 5,800만원(100.0%)이 집행되고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10,729	533	-	11,262	11,258	-	4	21,776
- 민영버스	8,484	8,484	533	-	9,017	9,003	-	4	19,531
- 고속철도	2,163	2,163	-	-	2,163	2,163	-	-	2,163
- 내항여객선	82	82	-	-	82	92	-	-	82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민영버스 이용지원’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와 시외·고속버스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2억 6,200만원 중 112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7) 세부사업: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2) 검토의견

(1)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의 미지급금 반복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2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28]’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2023년부터는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가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용실적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지원 금액 중 일부를 버스연합회에 정액으로 보조하던 방식에서 버스 이용금액 전액을 교통복지카드 주관사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 그런데 사업 집행절차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버스 이용지원 예산[29]은 정액으로 보조하던 2022년의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옴에 따라 미지급금이 누적되면서 다음연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민영버스 이용지원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484	8,484 (전년 동)	8,484 (전년 동)	8,484 (전년 동)

(자료: 국가보훈부)

28)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는 신분 확인 후 버스를 이용했고,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된 지역에서도 서로 호환이 안돼 카드를 발급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음.

29) 신용카드사와 정산하는 ‘시내버스 이용지원’ 예산과 버스연합회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예산임.

○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한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30]’에게 대납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2025년 지급 대상액227억 9,300만원(2023년, 2024년 미지급금 99억 2,600만원 + 2025년 발생 128억 6,700만원) 중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금액은 71억 9,000만원에 불과하여 누적된 미지급금 156억 300만원은 다음 연도 이후로 지급이 미루어짐.

<연도별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당해연도 발생 지급의무	당해연도 보조금	당해연도 미지급금	누적 미지급금
2023년	11,154	7,137	4,017	4,017
2024년	13,088	7,179	5,909	9,926
2025년	12,867	7,190	5,677	15,603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전년도 미지급금을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1]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함.

또한, 미지급금이 누적될 경우 대규모 재정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등 재정운용상 부담을 초래하게 됨.

---

30) 2025년 기준 사업 수행자는 신한카드(주)임.

3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실제로,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 편성 시 2023년과 2024년의 누적 미지급금인 99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2025년 예산 대비 110억 4,700만원(153.4%)을 증액 편성한 바 있음.

<민영버스 이용지원 예산 산출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산출근거
시내버스	7,200	**18,247**	· 시내버스 미정산액 9,926백만원 ('23년 4,017백만원, '24년 5,909백만원) · 코로나 이후 운임실적 회복 등 반영 8,321백만원
시외·고속버스	1,284	1,284	· '23년 추계액 1,222백만원 + 요금인상 5% 반영
합 계	**8,484**	**19,531**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2026년 예산에 2023년 및 2024년 미지급금 정산분만 반영되어 있어, 2025년에 발생한 미지급금인 56억 7,700만원은 2026년 지급분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산하였고, 그 결과, 2026년 2월 기준 예산액의 96.3%인 175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누적 미지급금 및 2월까지의 지급금을 정산하였음.

○ 그동안의 집행 규모를 고려하면 2026년에도 미지급금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가보훈부는 연말까지 약 9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상이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교통권 보장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임에도 ‘교통복지카드 사업수행자’의 대납액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바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실적에 기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경영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시외 · 고속버스 이용지원 사후정산 방식으로 개선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2년까지 전국버스연합회와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하여 할인이용 계약을 체결,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는 신용카드사에 전액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시외·고속버스는 현재까지 추계로 산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시내버스 이용 지원 절차(신용카드사 정산)>

이용지원 협정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지급	⇒	보조금 정산
시내버스 운임 정산 협약 체결		**신용카드사 (교통복지카드 버스이용금액 청구)**		국가보훈부 (본부)		신용카드사

<시외 · 고속버스 이용 지원 절차(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산)>

이용지원 협정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지급	⇒	보조금 정산
시외·고속버스 운임 정산 협약 체결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계약금액 청구)**		국가보훈부 (본부)		전국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는 비대면 승차권 발권 확대 및 무인 터미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시외·고속버스 무인발매기 및 할인 발권 전산 연계시스템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표소에서 국가보훈등록증 확인 후 감면 혜택 적용을 받았으나, 매표소와 무인발매기에서 보훈번호 입력으로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받게 되었고, 이용 실적도 전산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그런데 전산을 통해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정산 방식을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정산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정액 지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체 283개 터미널 중 245개 터미널은 전산망 연동으로 집계가 되나, 제3자 전산망[32]을 사용하는 38개 터미널[33]은 집계가 불가하기 때문임.

<무인발매기 할인 발권 시스템 개발 전·후 비교>

구 분	시스템 개발 전	시스템 개발 후
할인 발권	· 매표창구 직원이 신분증 확인 후 할인율 수기 선택	· 무인발매기 및 매표창구에서 보훈번호 입력으로 이용자 할인 대상 여부 및 할인율 확인
이용자 및 실적 집계	· 단순 할인발권으로 실제 이용자 및 실적 집계 불가	· 티머니·이동의즐거움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 이용자 실적 집계 가능 · 다만, 제3자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 집계 불가

32) 국가보훈부가 연계한 전산망은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2개 전산망으로, 그 외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은 집계가 불가함.

33) 제3자 전산망 사용 터미널 현황(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자료)

구 분	터미널 명	개 수
특·광역시	인천 강화	1
경기	연천 전곡	1
강원	영월 상동, 평창 장평	2
충남	천안 성환	1
전북	고창 대산, 익산 금마, 임실 강진·관촌, 완주 고산·대둔산	6
경북	포항 기계·죽장, 안동 풍산·길안, 구미 해평·장천·도개·고아, 영천 신녕·고경·북안, 상주 화령, 의성 금성·안계·가음, 울진 삼근, 청송 부동·현동·부남·화목·월정·동곡, 청도 대천·운문사·청도,	25
경남	진주 반성, 산청 덕산	2
계		**38**

구 분	시스템 개발 전	시스템 개발 후
정산 방식	· 계약에 의한 정액 지급	· 모든 터미널이 티머니·이동의 즐거움 전산망을 사용하게 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

(자료: 국가보훈부)

□ 무인발매기 및 현장 발권 전산 연계사업은 2025년 상반기 개발 완료되어 7월부터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245개 터미널의 하반기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 지원액은 총 4억 1,500만원으로 집계됨.

○ 245개 터미널의 6개월 실적으로 단순 계산하여 전체 283개 터미널의 연간 이용액을 추정하면 약 9억 5,900만원 수준으로, 이는 현재 계약 금액인 12억 8,400만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외 · 고속버스 이용 지원 현황(2025년 7~12월)>

(단위: 회, 천원)

구 분	시외버스		고속버스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7월	10,868	49,915	2,679	16,627	13,547	66,542
8월	11,053	50,713	2,719	16,985	13,772	67,698
9월	11,575	52,683	2,853	17,474	14,428	70,158
10월	11,013	50,457	2,317	15,815	13,330	66,272
11월	12,259	55,450	3,004	19,042	15,263	74,491
12월	11,319	52,112	2,878	17,963	14,197	70,075
계	**68,087**	**311,330**	**16,450**	**103,906**	**84,537**	**415,236**

* 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의 할인이용 내역은 미포함(38개소)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19년 117,716명→'25년 110,558명)에 있고, 전국버스연합회 측의 최근 감면 추계액 현황을 보아도 8억 5,000만원~6,00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인원 및 감면 추계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상인원*	시내버스 추계액	시외·고속버스 추계액**
2019년	117,716	18,262	1,336
2020년	116,931	13,360	722
2021년	115,789	14,354	663
2022년	114,398	13,440	705
2023년	**112,066**	**11,154(실집행액)**	**852 / 1,222(계약액)**
2024년	**110,604**	**13,088(실집행액)**	**861 / 1,284(계약액)**
2025년	**110,558**	**12,867(실집행액)**	**869 / 1,284(계약액)**

* 전년 12월말 기준
** 추계액에는 제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 실적 미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 물론, 245개 터미널의 6개월 이용 실적으로 전체 283개 터미널의 연간 실적을 추정하는 것은 엄밀한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버스업계가 손실을 감수하며 상이유공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무인발매기 및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대부분의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원 대상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 이용실적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고속철도의 2025년 보조율이 31.5%에 불과(감면액 68억 7,700만원, 보조액 21억 6,300만원)하다는 점에서, 수송시설 간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이용실적 집계가 가능한 245개 터미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적 기반 정산을 도입하는 방안, 제3자 전산망 사용 38개 터미널과 전산연계 방안, 신용카드 기반 정산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4].

34)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버스연합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교통복지카드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내버스 요금 정산 방식과 달라 별도 정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5. 보훈병원 진료[35] 및 위탁병원 진료[36]: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 문제 개선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421억 3,8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 “위탁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위탁진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36억 8,6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훈병원진료 및 위탁병원진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훈병원진료	392,296	442,138	-	-	442,138	442,138	-	-	450,483
- 보훈병원진료비	385,278	435,120	-	-	435,120	435,120	-	-	441,576
위탁병원진료	249,113	283,686	-	-	283,686	283,686	-	-	269,486
- 위탁병원진료비	246,715	281,288	-	-	281,288	281,288	-	-	267,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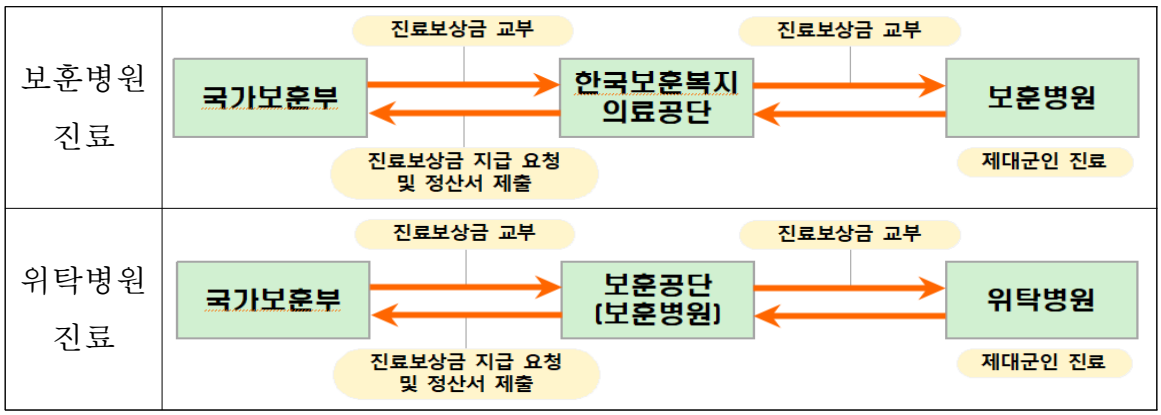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부)

35) 세부사업: 보훈병원 진료(2150-365)
36)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 내역사업인 ‘보훈병원진료비’ 및 ‘위탁병원진료비’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351억 2,000만원, 2,812억 8,800만원이 각각 전액 집행되었음.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진료비를 사후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진료비 정산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해서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 사업 수행체계>



2) 검토의견

□ 보훈의료 제공기관으로는 6개 보훈병원(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이 운영되고 있고,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전국 1,011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음.

○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적 희생이 있는 본인에게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비 진료 대상자'와, 비상이 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는 '감면 진료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체계>

구분		의료기관	감면율
상이유공자 본인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100% *일정 등급 이하: 상이처 외 진료 시 90%
비상이 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90%
	재일학도의용군인		보훈병원 100%, 위탁병원 60%
	무공수훈자		보훈병원·위탁병원 60%
	보국수훈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4·19혁명공로자·특수임무공로자	보훈병원	보훈병원 60%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보훈병원	보훈병원 50%
	창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명 *독립유공자: 배우자, (손)자녀 등 유가족 전체	보훈병원	보훈병원 60% *기타5·18희생자 유가족 30%
	75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60%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병원 진료비와 위탁병원 진료비는 매년 예산액 대비 지급 필요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합리적·효율적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 5년간 예산 편성·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보훈병원진료 사업과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고, '21년 250억 3,400만원 → '23년 473억 3,100만원 → '24년 921억 3,100만원으로 이·전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 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B)	예비비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본예산	추경(A)				
21년	보훈병원진료	385,503	385,503	9,508	-	395,011	395,011
	위탁병원진료	234,985	234,985	15,526	-	250,511	250,511
22년	보훈병원진료	385,475	385,475	△1,408	-	384,067	383,634
	위탁병원진료	252,556	252,556	-	-	252,556	249,484
23년	보훈병원진료	389,923	389,923	39,385	-	429,308	429,261
	위탁병원진료	267,441	267,441	7,946	-	275,387	275,385
24년	보훈병원진료	392,031	392,031	55,312	5,596*	452,939	452,939
	위탁병원진료	256,315	256,315	36,819	-	293,134	293,129
25년	보훈병원진료	392,296	442,138	-	-	442,138	442,138
	위탁병원진료	249,113	283,686	-	-	283,686	283,686

* 2024년에는 보훈병원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비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편성됨.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에는 보훈병원 진료비, 위탁병원 진료비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각각 12.9%, 14.0%씩 증액하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음.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비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제2회 추경 (B)		
보훈병원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385,278	435,120	49,842	12.9
위탁병원진료	위탁병원 진료비	246,715	281,288	34,573	14.0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충당 없이 예산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진료비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진료비는 예산보다 1,138억 1,800만원(보훈병원 진료비 760억 8,900만원, 위탁병원 진료비 377억 2,900만원)이 더 소요되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액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유예하였기 때문임.

〈2025년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비 미지급금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급필요액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미지급금
보훈병원진료	511,209	435,120	-	435,120	435,120	76,089
위탁병원진료	319,017	281,288	-	281,288	281,288	37,729

(자료: 국가보훈부)

□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조정이 반복되고 2025년에는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전용 규모보다 큰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

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를 과소 추계하였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2025년 예산 및 추경 편성시 보훈병원의 국비진료는 인원 2,344,883명과 단가 136,713원, 감면진료는 인원 1,336,985명과 단가 83,109원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국비진료(2,573,889명, 138,039원), 감면진료(1,454,575명, 106,637원) 모두 편성 기준을 상회하였음. 위탁병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원과 단가를 과소 추계하여 실제 지원 금액과 편차가 발생하였음.

<2025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편성·집행 비교>

구분		예산		추경		실제 지원	
		금액 (백만원)	내용	금액 (백만원)	내용	금액 (백만원)	내용
보훈병원 진료비	국비	283,564	2,074,149명 ×136,713원	320,576	2,344,883명 ×136,713원	355,298	2,573,889명 ×138,039원
	감면	98,286	1,182,621명 ×83,109원	111,115	1,336,985명 ×83,109원	155,112	1,454,575명 ×106,637원
위탁병원 진료비	국비	225,596	2,856,629명 ×78,973원	256,306	3,245,489명 ×78,973원	259,539	3,077,848명 ×84,325원
	감면	28,367	1,098,595명 ×25,822원	32,230	1,248,160명 ×25,822원	54,068	1,713,502명 ×31,554원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재원이 부족하여 이·전용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미지급금 1,138억 1,800만원은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연내 발생한 집행 수요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7]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이 다시 다음연도의 진료비 부족을 초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용 등 예산 조정을 거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안정적인 의료지원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둘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상황[38]에서, 보훈공단 자체 운영자금으로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국가보훈부가 차년도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은 보훈공단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실제 보훈공단은 2025년 연말 인건비 및 연차수당 지급 등을 위해 6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26년 국가보훈부의 미지급 진료비 정산 이후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대규모 미지급금이 공단의 단기 자금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39].

---

3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근 5년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	359,753	363,331	323,357	321,100	440,936
부채	88,981	88,449	129,350	207,664	351,076
부채비율 (부채/자본)	33%	32%	67%	183%	391%
영업이익	△86,336	△117,674	△76,383	△85,870	△46,044
당기순이익	△10,990	△41,973	△50,877	△47,172	△22,570

(자료: 국가보훈부)

39) 차입으로 인해 4,400만원의 이자비용도 발생하였음.

○ 셋째, 법정 의무지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예산조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국회 결산심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받아 왔는데, 2025년에는 예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미지급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의 의료지원 책임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향후,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6. 위탁병원 진료[40]: 위탁진료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의 실질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방식 정비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위탁진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36억 8,6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병원 진료	249,113	283,686	-	-	283,686	283,686	-	-	269,486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	-	2,383	2,383	-	-	2,383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위탁진료관리비’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 소속 위탁병원관리단이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 심사·분석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3억 8,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40)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2)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1] 등에서 국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986년부터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후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급증에 따른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11년 위탁병원 관리 전담조직 사업비(일반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보훈공단에 위탁진료관리를 위탁하는 위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전담조직인 '위탁병원관리단'이 출범하였음.

○ 위탁병원관리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1조[42]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28조[43]에 따라 위탁병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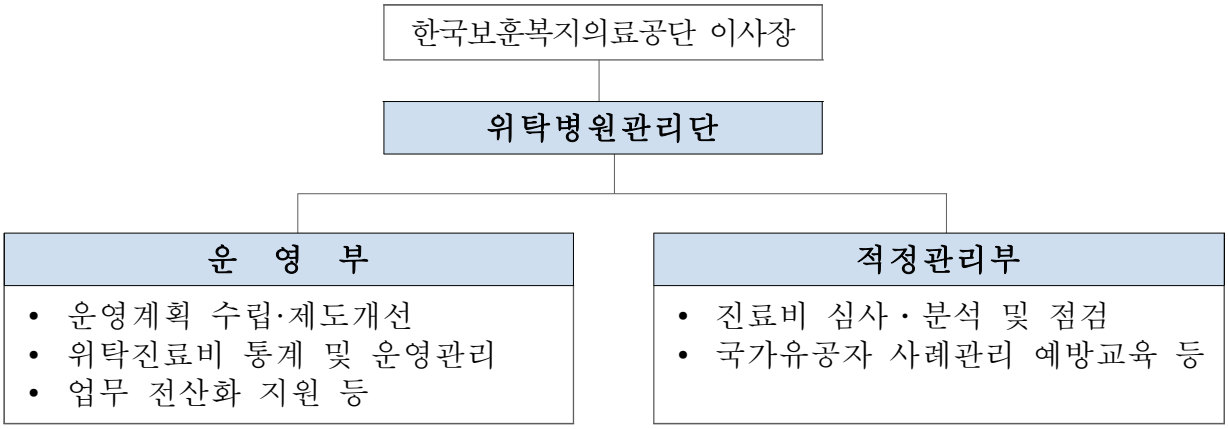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42)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1조(위탁병원의 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진료가 적정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병원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
4.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5. 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병원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정관」 제28조(소속기구)** ① 공단의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하에 보훈 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가료대상자의 거주 분포 등을 감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보훈병원 건립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고, 보훈대상자 및 위탁병원의 적정 진료를 위해 위탁병원관리단을 둘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약정 체결 이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

<위탁병원관리단 조직도 및 인력현황>



구분	직종	인원(30명)	비고
일반행정	사무, 기능, 기술직	6명	단장 1, 부장 2 , 과장 1, 사원 2
심사업무	간호직	13명	과장 1, 사원 12
건강관리	사회복지직	11명	사원 11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실질적으로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하여 보훈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기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의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민간위탁사업비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병원 관리 사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한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전문적인 일상 업무의 대행으로 보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업의 법적 성격과 예산 집행의 정합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 용역계약이 계약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정부 위탁사업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행정사무의 수행이라는 공적 기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44].

○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45]는 동법 제6조제11호[46]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하나로 위탁병원

44)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p.4

4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③ (생 략)

관리 업무를 예시하는 등 위탁병원 관리업무를 보훈공단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으로 전제하고 있음. 또한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위탁병원의 적정성 평가, 사례관리 및 현지 확인 등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위탁진료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되는 행정관리업무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용역 수행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

○ 다음으로, 위탁병원관리단은 전국 위탁병원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면서 적정성 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해지를 건의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47].

이는 과업 수행 후 결과물을 제공받는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달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위탁진료 관리 기능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국가보훈부는 공단과 '용역계약'이 아닌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 위탁진료관리 위탁약정서'에서도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4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여 보훈공단의 사무편람 작성, 국가보훈부의 지휘·감독 및 연례적 감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49].

---

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47) 보훈공단 위탁병원관리단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참조

48) **「국가유공자 위탁진료관리 위탁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예우법 제41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전상군경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위탁병원의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보훈공단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은 동 업무를 보훈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는 위탁병원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체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동 규정은 보훈공단이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직접적인 사무 위탁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훈령)은 보훈공단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진료내역 심사·분석,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9) **「국가유공자 위탁진료관리 위탁약정서」 제6조(업무수행)** ④ 보훈공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휘·감독) ① 국가보훈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보훈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위탁병원관리단의 업무〉

1. 위탁병원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 4.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5. 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병원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률에 명확히 마련[50]하고, 실제 사업 운영방식과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집행방식을 정비하여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산 집행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0) <유사 사업 위탁 규정 사례>

의료급여법	**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2.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지원단 설치)** 지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7. 보철구 지급[51]: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하거나, 보철용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0억 2,600만원 중 58억 9,400만원(97.8%)이 집행되고 1억 3,2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철구 지급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철구 지급	6,026	6,026	-	-	6,026	5,894	-	132	6,026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845	5,845	-	-	5,845	5,845	-	-	5,845
- 보철구담당자 교육	6	6	-	-	6	6	-	-	6
-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175	175	-	-	175	43	-	132	175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편성·집행중이며, 1인당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51) 세부사업: 보철구지급(2150-371)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 신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 ·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등도, 고도)
내용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경우 제외
지원장비	·핸드 컨트롤러, 오토박스, 휠체어 슬로프 등

(자료: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개조 주요 장비〉

구 분	내 용
좌측 엑셀 페달	· 지체장애 중 우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왼발로 엑셀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하는 개조용품
핸드 컨트롤러	· 지체장애 중 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손으로 차량의 엑셀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보조장치
오토박스	· 접이식 수동·전동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설치된 박스에 수납하도록 하는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휠체어 슬로프	·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저상화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기기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23년 집행률 24.8%에 이어 2024년에도 집행률이 38.9%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2025년 집행률도 24.6%로 저조한 실정임.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에 사업 안내 협조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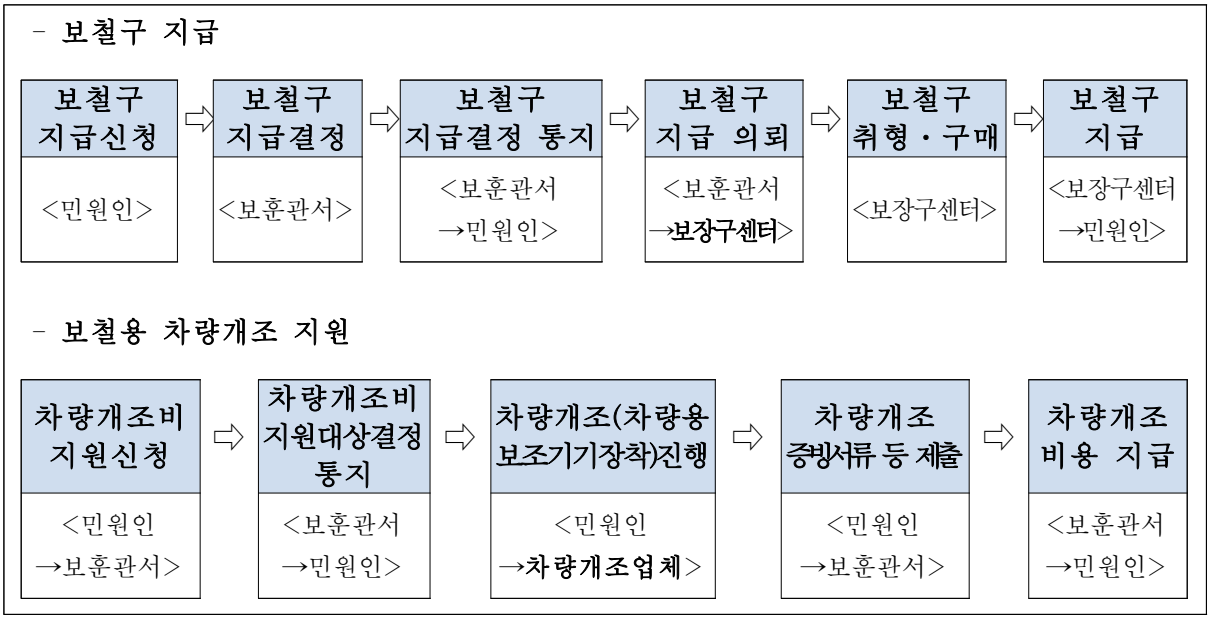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3년	250	62	24.8
2024년	175	68	38.9
2025년	175	43	24.6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은 보장구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보철구와 달리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직접 민간 차량개조 업체를 선택해 개조를 진행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이 유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차량개조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없이 집행률 제고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사업별 집행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유공자가 직접 민간 차량개조 업체를 선택하여 개조를 진행함에 따라, 동일한 개조 내역임에도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바, '핸드 컨트롤러'의 경우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의 편차가 419만원(6.2배), '좌측 엑셀 페달'은 86만원(3.5배)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동일한 개조 내역별 가격 편차 현황>

(단위: 만원)

개조 내용	최대 가격	최소 가격	가격 편차
좌측 엑셀 페달	121	35	86
핸드 컨트롤러	499	80	419
오토박스	855	759	96
휠체어 슬로프	1,450	1,400	50

(자료: 국가보훈부)

□ 동일 개조 내역이라도 업체, 구동 방식, 제조국 등의 차이로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업체별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제품의 사양·기능의 차이라면 상이등급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내용 확인 없이 1,500만원 한도 내에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임.

○ 본인부담금 없이 한도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되는 구조인만큼 과다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동일한 개조 내역에 6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6년 예산심사 당시 그동안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한 보철용 차량 개조 품목의 업체 지정 또는 가격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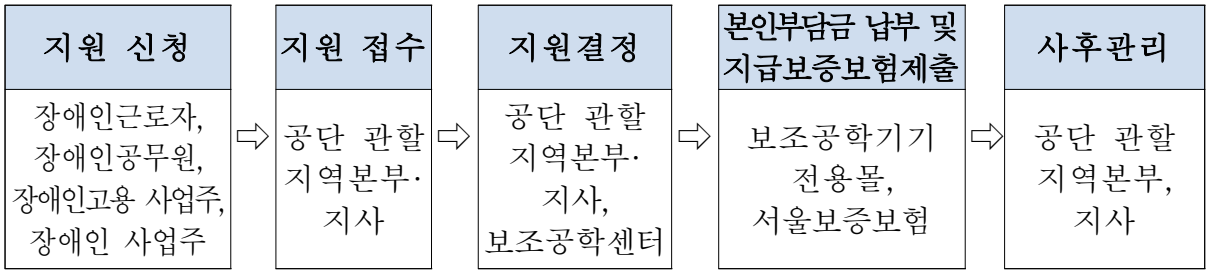
□ 유사 사업인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52]'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지원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먼저, 보조공학기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제품과 판매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가격 협상 절차를 거쳐 단가가 확정되면 지원제품으로 등록함.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제24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장애인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평가를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맞는 지원 제품을 결정하며, 지원 결정금액의 최대 10%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단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 집행 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8.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53]: 사업관리 철저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대구보훈병원 건물의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서관동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4,490	4,490	-	△4,190	300	300	-	-	6,221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대구보훈병원의 개원 후 30년 경과에 따른 건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총사업비 46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서관동을 철거한 후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07개 병상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비와 자기부담금 비율은 70:30임.

53) 세부사업: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개원 후 30년 경과로 건물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現 서관동 철거 후 증축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07개 병상 * 면적 8,823㎡↑(2,180㎡→11,003㎡), 병상 19개↑(88개→107개)
사업기간	· 2023년~2027년 → 2023년~2028년
총사업비	· 460억 7,000만원(국비 70%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 44억 9,000만원은 1차년도 공사비 소요액이 편성된 것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억원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액의 93.3%인 41억 9,000만원을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사업으로 2025년 연말에 전용하였는바,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6.7%에 불과함.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2156-393)	320-07	4,190	제대군인 의료지원 (2150-450)	310-04	제대군인 의료지원 부족분 충당

(자료: 국가보훈부)

○ 예산액의 대부분이 전용된 사유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당초 2024년 설계를 마치고 2025년 3월 공사 계약 및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설계 지연으로 2025년 10월 설계가 완료되었음. 이에 따라 공사 계약은 2026년에 이루어졌고,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연말에 제대군인 의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전용하게 된 것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추진 일정	지연 사유
▸사업계획 수립	2023년 3월	2023년 3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설계 공모 등	2023년 4월 ~10월	2023년 7월 ~10월	
▸설계 실시	2023년 11월 **~2024년 12월**	2023년 11월 **~2025년 10월**	- 계획설계: 층별 부서 배치 확정 등 지연 - 중간설계: 공사비 조정, 조달청 적정성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 - 실시설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추가실시, 설계기간 조정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체결	2025년 1월 ~2025년 3월	2026년 1월 ~2026년 4월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계약 및 입찰 검토
▸공사 실시	2025년 4월 ~2027년 3월	2026년 5월 ~2028년 6월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보훈부가 설계 지연 사유로 들고 있는 ‘층별 부서 배치 확정 지연’, ‘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지연’,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실시’ 등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검증·조정되었어야 하나, 사전 준비 부족과 공정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대구보훈병원 재건축 사업의 준공 시점이 2027년 3월에서 2028년 6월로 연기되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 개선이 늦어지게 되었고 예산도 대부분 전용 집행되어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

○ 둘째,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상황과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연말에 보조금 잔액 3억원을 전액 교부하여 보조사업자의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54]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55]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

---

5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5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5년 12월 27일에 사실상 보조금의 이월을 전제하고 교부하였는데, 이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야 한다.

9. 현충시설건립[56]: 사업관리 철저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 사업은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4억 1,700만원 중 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41억 3,200만원 중 9,900만원을 집행(집행률 1.1%)하고 40억 3,200만원을 이월함.

〈 2025년도 현충시설건립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 건립	4,756	4,756	100	△439	4,417	384	4,032	1	5,909
독립의 전당 건립	4,032	4,032	100	-	4,132	99	4,032	1	4,259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56) 세부사업: 현충시설건립(3146-405)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완공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음.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407번지)
○ 사업기간 : 2022~2027년(6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333㎡
○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학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3,348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373	4,146	45	4,032	99	4,259	384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예산 40억 3,200만원은 공사비 34억 400백만원, 감리비 6억 2,8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도 독립의 전당 내역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독립의 전당 건립 : 40억 3,200만원 - (공사비) 1년차 공사비 34억 400만원 -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1년차 감리비 6억 2,8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41억 3,200만원 중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9,900만원만 집행(집행률 2.4%)하였으며, 2026년은 7월 기준 예산현액 82억 9,100만원 중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3억 8,400만원을 집행(집행률 4.6%)하였음.

○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9,90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본예산 40억 3,200만원은 전액 이월함.

○ 2026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4,000만원 및 본예산 4,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5)	4,032	100	-	4,132	99	4,032	1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0	-	20	20	-	-
- 실시설계비(420-02)	-	58	-	58	57	-	1
- 공사비(420-03)	3,404	-	-	3,404	-	3,404	-
- 감리비(420-04)	628	-	-	628	-	628	-
- 시설부대비(420-05)	-	22	-	22	22	-	-

(자료: 국가보훈부)

<2026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6.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6)	4,259	4,032	-	8,291	384		
- 공사비(420-03)	3,723	3,404	-	7,127	340		
- 감리비(420-04)	484	628	-	1,112	27		
- 시설부대비(420-05)	52	-	-	52	17		

(자료: 국가보훈부)

<2022~2026년도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1.1
2025	4,032	100	-	4,132	99	4,032	1	2.4
2026	4,259	4,032	-	8,291	384			4.6

1) 2026년도의 경우 6.30일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 서울시와의 사업부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실시계획인가 의견 조회 기간 등이 소요되어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2023년 8월),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2024~2025년)에 결쳐 편성하였음.

2024년 11월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당초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2024년 내에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밝힌 바와 달리 서울시와 사업부지 교환 관련 협의(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는 2025년 3월까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음.

당초 2023년 12월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실시설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9월에서야 완료되었고,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던 공사계약 체결 절차 또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면서 공사비와 감리비를 집행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3개년(2025년~2027년)에 걸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국가보훈부의 완공예정시점까지 연도별 예산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공사비	3,404	3,723	3,723
감리비	628	484	484
시설부대비	-	52	53
소 계	4,032	4,259	4,26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7월 기준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착수하고 있지 못함.

○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본공사 착공을 통해 2027년 9월까지 준공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에도 수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국가보훈부가 밝힌 일정을 전혀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준공 시기가 2028년 이후로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 예산 이월액을 선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되면 2026년 예산은 공정률에 따라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독립의 전당 공정 과정별 계획 및 현황 >

구분	계획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일정 지연 사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2.6.	2022.6.	-
공공건축 심의	2022.9.	2022.8.	-
설계용역 계약	2022.12.	2022.12.	-
계획설계 완료	2022.3.	2023.4.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2023.6.	2023.6. 2024.9	'23.6 최초 허가를 받았으나 공원조성 계획 심의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24.9 재허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23.10.	2024.8.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심의 의견(공원과의 조화, 경관 보존 등) 보완에 따른 심의기간 소요
실시설계 완료	2023.12.	2025.9.	부지 교환(보훈부-서울시) 서울시의회 의결,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의견(서대문구) 보완기간 소요
공사 계약 체결	2024.3.	2025.12.	선행절차 지연에 따른 순연 및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심의 기간 소요 * '26.6월 현재 해체공사 중
착공	2024 상반기	2026.6.	
준공(예정)	2025.12.	2027.9.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 및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최초 계획 수립	11,900	226	494	4,526	6,654	-	-
계획 변경	13,348	226	491	80	4,032	4,259	4,260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 대비 공사비를 축소하여 반영할 것을 규정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편성이었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도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지연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 지적한 바 있음.[57]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사전 사업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독립의전당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에 따른 적정 공사비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57) 정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p.126

10. 현충시설관리[58]: 집행 부진 추세를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관리·운영사업”은 현충시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현충시설 등 실태조사,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국가보훈광장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7억 1,500만원으로 이 중 6억 9,200만원(96.5%)이 집행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용역비 낙찰차액 등 포함)

○ 동 내역사업에는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 지원’ 내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억 9,800만원으로 이 중 1억 6,900만원(85.3%)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2,900만원은 현충시설 관리 운영 비용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도 현충시설관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관리	6,944	6,944	737	△2	7,679	5,573	2,067	39	10,839
현충시설 관리·운영	717	717	-	△2	715	692 [692]	-	23	917
현충시설 지킴이운영	198	198	-	-	198	198 [198]	-	-	198

(자료: 국가보훈부)

58) 세부사업: 현충시설관리(3146-406)

2) 검토의견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사업은 소규모 현충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인근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등을 현충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현충시설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현충시설 지킴이가 월 1회 이상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관리상태 확인, 참배안내 및 청소 등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안내판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대상 시설은 ① 소유·관리자가 기념사업회·문중·개인 등인 소규모 시설, ② 외진 곳 소재, 언론 등에서 관리 부실 등으로 지적된 시설, ③ 기타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보훈관서장이 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이며, 회당 5만원, 연간 12회까지로 시설당 연 6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함.

□ 동 사업의 실적 및 예산액·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지급 실적 및 집행액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대상 시설의 경우 2021년 400개소에서 2022년·2023년 287개소, 2024년 286개소, 2025년 281개소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집행액 또한 2021년 2억 4,000만원에서 2022년·2023년 1억 7,220만원, 2024년 1억 7,160만원, 2025년 1억 6,86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 대상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전까지는 지역별 안배, 선정기준 등 세부 지침이 없어 현충시설 대

비 지킴이 선정 비율에 불균형[59]이 나타났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보훈관서별 선정비율을 18% 이내로 선정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균형있는 사업개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60].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비 지급 실적(최근 5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시설 수(개소)	월 수당
2021년	240,000	240,000	400	50
2022년	240,000	172,200	287	50
2023년	240,000	172,200	287	50
2024년	240,000	171,600	286	50
2025년	198,000	168,600	281	50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매년 관리 취약 현충시설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동 내내역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안에 지원 현충시설 330개소를 전제로 2025년도와 동일한 규모를 편성하였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내내역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에 따른 적정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59) 지방 보훈관서별 현충시설 대비 지킴이 선정 비율 불균형(최소1.4%~ 최대41%)이 발생한 바 있음.

60) 국가보훈부는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추가 대상 시설 발굴에 일부 한계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은 관리 취약시설을 추가로 발굴하여 330개소에 정상적으로 예산(198백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11. 보훈기념행사[61]: 연례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기념행사” 사업은 정부기념행사, 국경일행사 지원,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지원 및 순직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39억 5,400만원 중 39억 4,700만원(99.8%)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행사”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11개 정부기념식 추진을 통해 국가기념일에 담긴 정신을 국민에 알리고 계승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억 6,700만원 중 29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보훈기념행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기념행사	3,954	3,954	-	-	3,954	3,947	-	7	4,254
정부기념일행사	2,967	2,967	-	81 △81	2,967	2,964 [2,964]	-	3	3,067

자료: 국가보훈부

61) 세부사업: 보훈기념행사(3147-411)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2022년 이·전용 등 18회, 2023년 이·전용 등 21회, 2024년 이·전용 등 15회 등 연례적으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에서 잦은 이·전용 등을 하고 있음.

또한,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또는 임차료)로 세목조정을 했음에도 다시 일반용역비(또는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세목조정을 하는 등 비계획적인 세목조정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2025년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이전용 등 감액(A)			이전용 등 증액(B)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1.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000	예산의 효율적 집행
5.2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6.2.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0	
6.24.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9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90	
11.2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7,4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7,400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2,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0	
12.1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8,23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8,230**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54,94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4,948**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8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3,800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이전용 등 감액(A)			이전용 등 증액(B)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1.2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000	예산의 효율적 집행
1.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6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60,000	
4.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5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5,000	
5.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27,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000	
5.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200	
6.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0	
6.1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63,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3,000	
8.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8.1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5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50,000	
8.2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16,10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16,108	
10.4.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7,66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7,660	
12.1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2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	
12.1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2,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0	
12.2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3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03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941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941	
12.23.	내역변경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일반수용비(210-01)	△70,03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70,039	
12.23.	전용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국외여비 (220-02)	△27,374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374	
12.23.	전용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국내여비 (220-01)	△15,453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5,453	
12.26	전용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국내여비 (220-01)	△3,26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269	
12.26	전용	보훈문화콘텐츠제작 및지원	일반용역비 (210-14)	△99,7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99,700	
12.26.	내역변경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69,23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9,239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비계획적인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충당한 것은 그 규모가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과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동일한 행사 내에서도 연도별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념식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매뉴얼이 부재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1~2025년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행사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28민주운동 기념식	51,660	28,372	23,655	39,923	2.500
3·8민주의거 기념식	15.880	32,025	14,450	30,726	2.400
3·15의거 기념식	14,956	56,134	40,164	48,666	2.800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87,625	68,022	45,690	62,378	9.200
4·19혁명 기념식	31,286	29,434	41,250	30,230	51.626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	-	-	171,472	1,200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46,148	125,925	123,700	102,210	57,138
현충일 추념식	25,816	89,995	80,508	104,150	133,200
6·10만세운동 기념식	23,479	27,200	43,784	43,522	9,500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29,750	4,032	5,398	31,300	12,965
순국선열의날 기념식	65,747	3,847	15,258	43,123	56,35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사전에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다한 비목간 세목조정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2. 호국보훈의달행사[62]: 적정 비목 편성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호국보훈의달행사” 사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의식을 전 국민에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1억 2,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호국보훈의달행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호국보훈의달행사	1,130	1,130	-	△7	1,123	1,123	-	-	1,008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홍보,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소속기관 행사, 보훈의 상징 달기, 기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등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는 일반용역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내역사업별로 일반수용비를 일반용

62) 세부사업: 호국보훈의달행사(3147-412)

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해옴에 따라, 2023년에는 ‘호국보훈의 달 홍보’ 내역사업에 일반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금액은 2025년 및 2026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 홍보” 내역사업을 제외한 다른 내역사업은 일반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및 “소속기관 행사” 내역사업의 경우 매년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반해, “보훈의 상징 달기” 및 “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등” 내역사업은 2023년까지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세목조정 없이 일반수용비로만 집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일반용역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호국보훈의 달 홍보	-	-	-	99	150	140	150	152	150	150	150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	-	21	-	31	-	30	-	30	-	30	-
소속기관 행사	-	65	-	45	-	36	-	41	-	41	-
보훈의 상징 달기	-	-	-	15	-	22	-	-	-	-	-
기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	4	-	9	-	9	-	-	-	-	-
소 계	-	90	-	199	150	237	150	223	150	221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4년간 내역사업별 일반수용비 · 일반용역비의 예산액 ·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본예산	예산현액	본예산	예산현액	본예산	예산현액	본예산	예산현액	
호국보훈의 달 홍보	일반수용비	288	189	145	155	145	127	145	145	145
	일반용역비	-	99	150	140	150	168	150	150	150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	일반수용비	49	18	49	19	49	19	49	19	49
	일반용역비	-	31	-	30	-	30	-	30	-
소속기관 행사	일반수용비	666	621	666	629	635	594	542	501	486
	일반용역비	-	45	-	36	-	41	-	41	-
보훈의 상징 달기	일반수용비	107	92	107	85	102	102	87	87	75
	일반용역비	-	15	-	22	-	-	-	-	-
기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72	63	72	63	65	65	47	47	47
	일반용역비	-	9	-	9	-	-	-	-	-
계	일반수용비	1,182	983	1,039	951	996	907	870	799	802
	일반용역비	-	199	150	237	150	239	150	221	150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별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내역사업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및 위로 격려 행사” 대행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행사“ 내역사업은 일부 지방청이 일반용역비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일반용역비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소속기관 행사 내역 사업에 일반용역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매년 세목조정

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보임.

또한, 지방청 또는 지청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행사를 다른 목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일반용역비의 집행이 예상되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내역사업의 경우 일반용역비를 적정 수준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기관 행사“ 내역사업은 전국 지방청 및 지청에 집행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세목조정이 행해지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

13.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63]: 신규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한 전문사료 발굴분석단을 운영하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미등록 참전유공자 등을 발굴·등록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7억 9,500만원 중 1억원을 이용하고, 16억 2,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0.3%)하였으며, 7,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	1,795	-	△100	1,695	1,621	-	74	2,615

(자료: 국가보훈부)

63) 세부사업: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3248-345)

2) 검토의견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의 내내역사업인 “참전유공자 역사찾기”[64]는 공훈전자사료관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역사찾기’ 메뉴를 추가하고 해당 시스템에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개인별 공훈록을 게시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으로, 2024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에는 공훈전자사료관 시스템 내에 6·25참전유공자의 공훈록을 게시하고 관련 훈장·유품 등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에는 구축된 시스템에 탑재할 공훈록을 자체 서술 또는 위탁 집필하려는 계획이었음.

○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액 1억원을, 2025년에는 공훈록 위탁 집필을 위한 예산액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편성된 예산액 1억원 중 9,450만 원을 집행하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25년에는 공훈록 집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전액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용하였음.

〈 참전유공자 역사 찾기 사업계획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계획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24	시스템 구축	100	94.5	94.5	5.5 불용
2025	공훈록 집필	100	-	0	타 세부사업 이용

(자료: 국가보훈부)

64) 세부사업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의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의 내내역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은 공훈록 수록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 기존에 국가보훈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인 2025년부터 해당 시스템에 탑재할 공훈록을 작성할 계획이었고, 공훈록 작성 대상 52만여 명 중 약 47만 6천여 명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몰자 공훈록을 연계 표출하거나 기발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훈록을 자체 서술하고, 무공수훈자 4만 4천여 명에 대한 공훈록은 전문업체에 위탁 집필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위탁 집필 예정이었던 무공수훈자 공훈록의 경우, 공적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일반참전자와 동일하게 자체 서술로 변경함에 따라 위탁 집필 예산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음.

〈 2025년 참전유공자 공훈록 작성 방식 계획 〉

구분	인원	공훈록 작성 방식
전몰군경	10.6만명	군사편찬연구소의 전몰자 공훈록 연계 표출
전공상군경, 일반참전자	37만명	통합보훈시스템, 병적DB시스템 등 기발굴 데이터 활용 자체 서술
무공수훈자	4.4만명	전문업체 위탁 집필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무공수훈자에 대한 공적 정보 부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정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이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65]: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실태조사, 국가유공자 등 장례 지원,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지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4억 8,400만원 중 2억 6,800만원을 이·전용 등하고, 58억 4,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0.2%)하였으며, 3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는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급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액 17억 9,500만원 중 7,000만원을 이·전용 등하고, 14억 4,600만원을 집행(집행률 80.5%)하였으며, 2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	6,484	-	△268	6,216	5,847	-	369	6,554
-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1,795	-	△70	1,725	1,446	-	279	2,028

(자료: 국가보훈부)

65)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3248-415)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에 대하여 묘비 제작비, 묘지의 사용료·관리비, 안장시설 사용료·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지원 금액	기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정산 – (묘) 묘비제작비, 묘지 사용료 관리비 등 – (봉안장, 봉안담, 자연장 등) 사용료, 관리비, 표지석 설치비, 유골함 구입비 등
■ 지원 절차 및 방법	유족 신청(묘비 설치 또는 시설 안장 후 5년 이내) → 관할 보훈관서 지급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22년까지는 국립묘지 외의 묘에 안장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묘비 제작비(비석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방향[66]과 장묘문화 흐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3년 동 사업의 지급대상 인원을 국립묘지 외 안장자 수의 5개년('17년~'21년) 평균 인원인 645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

〈 국립묘지 외 안장인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5개년 평균
사 망(A)	7,836	7,595	7,157	5,629	5,495	6,742
국립묘지 안장(B)	7,262	6,862	6,302	5,085	4,977	6,097
국립묘지 외 안장(A-B)	574	733	855	544	518	**64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 2023년부터 계획보다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였고, 2025년은 이러한 집행 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축소시켰음에도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	67	62	92.5
2022	67	52	77.6
2023	**645**	**214**	**33.2**
2024	**675**	**418**	**61.9**
2025	**498**	**313**	**62.8**
2026 (6월 말 기준)	**390**	**128.5**	**32.9**

(자료: 국가보훈부)

□ 이는,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던 2023년 당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을 과다하게 예측하였고, 사업집행 측면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사업계획 측면에서, 동 사업은 지원 예상 인원인 국립묘지 외 안장 인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사망 인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원을 차감한 인원'으로 계산하였음.

그러나, 추계에 사용된 기간에는 국립이천호국원과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안장이 실시되지 않았고(국립괴산호국원의 경우 2018년까지 미안장)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2021년 개원)하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 인원이 과소 측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과다 추계되었던 것으로 보임.

- 실제 동 사업의 지원인원은 매년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다 추계는 집행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계획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 계획인원 및 지원인원 〉

(단위: 명, %)

연도	계획인원	지원인원	편성인원 대비 지원인원
2021	167	158	94.6
2022	167	130	77.8
2023	645	324	50.2
2024	675	489	72.4
2025	498	325	65.2
2026 (6월 말 기준)	390	142	36.4

(자료: 국가보훈부)

○ 사업집행 측면에서, 동 사업은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인원이 모두 지원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수혜 대상자인 유족 등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이 2023년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는 유족 등이 동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동 지원사업 외에도 보훈대상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는 사업[67]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업 집행 과정에서 동 지원사업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안내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하여, 지원 대상 인원을 재산정하여 과다 추계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7) * 영구용 태극기 증정 사업: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입관 후 사용할 영구용 태극기를 장례 시 직접 전달하는 사업(2025년도 예산 216백만원)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사업: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빈소 내에 설치할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직접 전달하는 사업(2025년도 예산 75백만원)

15.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68]: 편성목적 및 비목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은 국립묘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현충선양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국립묘지 관리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3억 7,500만원 중 33억 1,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8.2%)하고,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선양”은 국립묘지에서 다양한 현충선양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8,900만원 중 6억 8,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4%)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937	2,638	△200	3,375	3,315	-	60	1,286
- 국립묘지선양	889	-	△200	689	685	-	4	950
- 국립묘지관리	48	2,638	-	2,686	2,630	-	56	336

(자료: 국가보훈부)

68) 세부사업: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3250-352)

2) 검토의견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의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선양”의 2025년 예산 편성 근거를 살펴보면, 동 내역사업은 롤콜 및 나라사랑 사진전, 국립묘지 묘전 태극기 구매, 국립묘지 호국음악회 등 각 국립묘지에서 실시하는 현충선양활동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국립묘지 선양 사업의 2025년 예산 편성 근거 〉

사업	편성 근거
롤콜 및 나라사랑 사진전 등	・안장자 롤콜 및 부대행사 : 220백만원 (11개소×20백만원) ・나라사랑 사진전 : 80백만원(11개소×7.3백만원)
국립묘지 묘전태극기	・국립묘지 묘전태극기 구매 : 159백만원
국립묘지 호국음악회 등	・국립묘지 보훈음악회 등 공연 : 330백만원(11개소×30백만원)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11개소×9.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각 국립묘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각 세부사업에서 집행되었어야 할 운영・관리적 성격의 지출을 동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가 일부 확인됨.

〈 국립묘지 선양 사업 중 국립묘지 운영·관리 성격 지출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집행 내용	집행액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 지반조사 비용	2,200
국립영천호국원	묘역확충공사 준공식 행사 용역	20,000
	추석 명절 일용인부 용역대금	2,156
국립이천호국원	묘역확충공사 준공식 행사용역 대금	20,000
계		44,356

(자료: 국가보훈부)

○ 묘역 지반조사 비용, 일용인부 용역 대금 등은 선양 활동보다 국립묘지 운영·관리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립묘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각 세부사업[69]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어야 함.

○ 또한, 국립묘지 묘역 확충공사 사업 예산은 각 국립묘지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공사 준공식의 경우 묘역확충사업의 건설비 중 시설부대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묘역확충공사 준공식 행사용역 대금은 각 국립묘지의 세부사업 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임.

- 국립묘지 확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곳에서 실시된 묘역 확충 관련 준공식 중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의 경우에는 해당 국립묘지의 세부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음.

---

69) 국립서울현충원(3250-351), 국립4·19묘지(3250-354), 국립5·18묘지(3250-356), 국립영천호국원(3250-358),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 한편, 국립이천호국원의 경우 묘역 확충공사 준공식과 관련하여, 동 내역사업에서 2,000만원을 집행하고, 세부사업 국립이천호국원(3250-360)에서 3,500만원을 별도로 집행하여,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국립이천호국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과 혼용하여 집행하였음.

○ 그럼에도 각 국립묘지는 동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용 등 별도의 집행상 조치없이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음.

□ 또한, 동 내역사업은 편성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비일관적인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집행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내역사업에서 지출된 국립묘지 노무 관련 자문에 대한 자문료의 경우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전문가 자문료)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고, 호국원 준공식 행사 관련 계약의 경우, 행사용역을 대행시키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용역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음.

- 특히 위 사례들은 동 내역사업 내에서도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역사업 내에서조차 일관된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무 자문료 및 호국원 준공식 행사 관련 지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비목	집행액	비고
노무 자문료 지급(1분기)	일반수용비	3,300	노무법인 △△
노무 자문료 지급(2분기)	일반수용비	3,300	
노무 자문료 지급(3분기)	일반용역비	3,300	
노무 자문료 지급(4분기)	일반용역비	3,300	
국립영천호국원 준공식 행사용역	일반용역비	20,000	■■■■
국립이천호국원 준공식 행사용역 대금	일반수용비	20,000	주식회사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국립묘지선양” 사업의 경우 “국립묘지관리” 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편성된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동일한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6. 국립이천호국원[70]: 이장 대기인원 해소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이천호국원”은 국립이천호국원의 시설 및 묘역을 관리하고, 봉안당 확충, 현충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22억 3,900만원 중 219억 2,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8.6%)하고, 3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립이천호국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이천호국원	20,857	22,938	50	△749	22,239	21,921	-	318	5,443

(자료: 국가보훈부)

70) 세부사업: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2) 검토의견

□ 국립이천호국원은 2008년 개원하여 2017년 4월 만장(50,000기)되었음. 이에, 국립이천호국원은 2018년부터 안장시설 약 50,000기를 확충하기 위한 봉안당 확충사업을 시작하였고, 해당 확충공사는 2025년 1월 준공을 완료하였음.

〈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진행 경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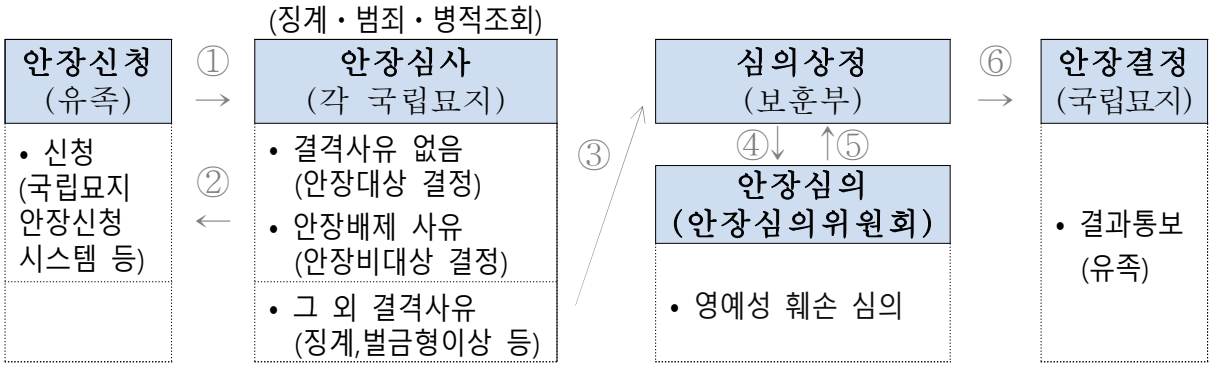
일시	내용
2008. 5.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2017. 4.	안장시설 50,002기 만장
2018.	봉안당 확충사업(봉안당 50,000기) 추진
2025. 1.	봉안당 확충공사 준공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안장대상자 또는 유족이 안장자격에 해당하는 국립묘지로 안장을 신청하면 안장심사 등을 거쳐 안장 여부에 대한 승인(대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실제 안·이장이 실시되는데, 국립묘지가 만장되면 해당 국립묘지의 안·이장은 중단되게 됨.

○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공실(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후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안장시설)에 안장이 가능함.

〈 국립묘지 안장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이천호국원도 2017년 만장됨에 따라 일반적인 안・이장은 중단하였다가 2025년 상반기까지 봉안당 확충공사를 완료하고 재개원할 계획으로 2024년 10월 사전 심사를 위한 안・이장 신청을 재개하였음.

□ 국립이천호국원은 수도권 내 위치한 유일한 호국원으로 만장 이후 오랜 기간 안・이장이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안・이장 신청 재개 이후 안・이장 신청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안・이장 승인 건수도 폭증하였으나, 실제 안・이장은 승인 건수 대비 상당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이장 대상자 신원조회 시 국가기록원의 자료회신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임.

〈 2024년・2025년 국립이천호국원 안・이장 현황 〉

(단위: 건)

연도	안·이장 신청	안·이장 승인	실제 안·이장
2024년	4,946	3,952	118
2025년	6,324	7,777	4,688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이천호국원에 이장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 평균 안·이장 기수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모두 해소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유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립이천호국원의 이장 대기인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립이천호국원 안·이장 대기인원 등 〉

(2025년 12월 말 기준)

구분	대기인원	일 평균 안·이장 기수	비고 (소요 기간)
국립이천호국원	2,767명	27기	약 102일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이천호국원 외 타 국립묘지 안·이장 대기인원 등 〉

(2025년 12월 말 기준)

구분	대기인원	일 평균 안·이장 기수	비고 (소요 기간)
국립서울현충원	218명	9.5기	약 23일
국립대전현충원	245명	5.4기	약 46일
국립영천호국원	115명	7기	약 17일
국립임실호국원	0명	3기	-
국립산청호국원	85명	4.7기	약 19일
국립괴산호국원	67명	2.3기	약 30일
국립제주호국원	16명	1.6기	약 10일

(자료: 국가보훈부)

17. 국립산청호국원[71]: 부적절한 예산 집행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산청호국원”은 국립산청호국원의 시설 및 묘역을 관리하고 호국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등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7억 5,800만원 중 27억 2,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8.6%)하고,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시설공사”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산청호국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5,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립산청호국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산청호국원	2,701	2,774	16	△32	2,758	2,721	-	37	2,900
- 시설공사	274	347	-	4	351	351	-	-	274

(자료: 국가보훈부)

71) 세부사업: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2) 검토의견

□ 국립산청호국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간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묘역확충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12월 완료하였음.

○ 2023년에는 묘역확충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24년 확충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준공하였음.

〈 국립산청호국원 묘역확충 사업 개요 〉

○ 총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2개년)
○ 확충 기수	:	봉안시설 10,000기(봉안담 9,500기, 자연장 500기)
○ 사업 예산	:	70억 3,500만원 (2023년 3억 3,600만원, 2024년 66억 9,900만원)
○ 추진 현황	:	2023. 3. 30. 제2묘역 확충사업 설계용역 착수 2024. 12. 14. 제2묘역 확충사업 완료 및 준공

〈 국립산청호국원 묘역확충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이·전용 등	집행	다음 연도 이월	불용	예산	전년도 이월	이·전용 등	집행	다음 연도 이월	불용
묘역확충 사업	336	-	298	1	37	6,699	1	△462	6,028	-	21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09	-	99	-	10	-	-	-	-	-	-
- 실시설계비 (420-02)	218	-	191	-	27	-	-	-	-	-	-
- 공사비 (420-03)	-	-	-	-	-	6,588	-	△1,036	5,460	-	92
- 감리비 (420-04)	-	-	-	-	-	102	-	574	558	-	118
- 시설부대비 (420-05)	9	-	8	1	-	9	1	-	10	-	-

□ 국가보훈부는 묘역확충 사업이 2024년에 완료됨에 따라, 2025년 예산에는 묘역확충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국립산청호국원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노후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공사”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나,[72]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묘역확충 사업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수수료 990만원)을 공사비(420-03)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 시설공사 사업 2025년 예산 편성 내역 >

■ 시설보수공사 : (2024) 274백만원 → (2025) 347백만원
▪ 시설개선 보완공사: 161백만원
▪ 제1주차장 법면 정비공사: 15백만원
▪ 야외봉안담 전면도어 교체공사 : 98백만원
▪ 시설물 도장 : 55백만원
▪ 도로 차선 도색 및 안전시설물 부수 : 18백만원

○ 해당 비용은 ①2024년에 이미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②묘역확충 사업과 무관한 시설공사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를 대행하게 하는 것

72) 시설공사 내역사업은 매년 2억 4,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으로,[73]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74]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 2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평가 업무대행을 의뢰하였고, 국토안전관리원은 2024년 11월 25일 해당 의뢰를 접수하면서 “관련 보고서는 2024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고, 업무대행비용의 납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음.

○ 해당 업무대행 비용은 2024년에 이미 그 지출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납부 시기가 2025년이라면 2024년에 편성된 묘역확충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여 2025년에 집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국가보훈부는 2024년 묘역확충 사업의 잔여 예산(2억 1,000만원)은 모두 불용 처리하고, 2025년 예산에서 해당 비용을 집행하였음.

□ 또한, 2025년에는 묘역확충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편성목적이 묘역확충과 무관한 시설공사 사업의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집행하였음.

---

73)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7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 그 밖에, 해당 업무대행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에 대한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감리비 비목(420-04)으로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공사비 비목(420-03)으로 집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집행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국립임실호국원의 묘역 확충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 업무대행 비용을 감리비 비목(420-04)에서 집행하였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8.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75]: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7억 9,100만원 중 166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제복근무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공익광고 집행 및 감사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3억 9,800만원 중 3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17,310	17,310	88	△607	16,791	16,605	-	186	15,233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3,400	3,400	-	△2	3,398	3,395	-	3	1,700

(자료: 국가보훈부)

75) 세부사업: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4160-390)

2) 검토의견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은 제복근무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 및 송출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임.[76)]

2025년 동 사업 내에서 추진된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 공익광고, 캠페인, 초청행사 및 포상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행사명	집행액
홍보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감사행사	제복근무자 초청 토크콘서트 ‘리스펙트 유’	272
		제대군인 주간 연계 ‘국민한마당 행사’	160
	체육행사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리스펙트 런’	360
	초청행사	LCK 결승전 제복근무자 초청행사	150
	출판·콘텐츠	제복근무자 50인을 대상으로 한 ‘마이 히어로북’ 제작·배포	633
		감사캠페인 키비쥬얼 및 메시지 개발	65
	포상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	525
	홍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방송·옥외·온라인 광고	1,090
	성과분석	국민인식도 조사 등 성과분석	34
소계			3,289
자체수행	초청행사	명예로운 보훈 제복근무자(가족) 초청 행사	96
	위문행사	제복관련 기관 위로·격려	10
소계			106
총계			3,395

76)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복근무자는 제복을 입고 국가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는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을 모두 포괄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관련 지출액은 총 33억 9,500만원으로, 이는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전체 집행액 166억 500만원의 2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홍보 대행 용역비가 32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주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각종 매체 광고료임. 이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부 용역업체에 의한 홍보활동에 총 집행액의 약 20%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인 LCK 결승전 제복근무자 초청 행사는 미래세대의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홍보영상 제작, 홍보부스 운영 및 제복근무자 초청 등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행사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또는 취업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는 명확하지 않음.

□ 국가보훈부가 설정한 사업 성과지표도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경도와 신뢰도 증가, 유튜브 조회 수,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수, 광고제 수상 실적 등 홍보 효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성과는 제복근무자 예우 문화 확산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제대군인의 취업률 제고, 전직 성공률 또는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본래 성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제복근무자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 등 다양한 직군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제대군인전직지원금[77]: 지급대상자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36억 5,700만원 중 128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7,382	7,382	-	6,275	13,657	12,888	-	769	9,583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의 편성 근거를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58만원,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 1인당 월 지급액은 8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78]

77)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78)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2024~202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세부내역>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합 계	**70억 500만원**	**73억 8,2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1억 4,800만원	**58만원** X 6개월 X 1,705명 X91.5%= 54억 2,9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 18억 5,600만원	**81만원** X 6개월 X 454명 X88.5%= 19억 5,300만원

자료: 2024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재구성

<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신청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장기복무자	559	712	937	736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414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의 연도별 계획인원 및 지급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계획인원 (A)	장기복무자	394	376	454	454
	중기복무자	1,802	1,710	1,705	1,705
지급인원 (B)	장기복무자	559	712	937	1,025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649
차이 (=A-B)	장기복무자	△165	△336	△483	△571
	중기복무자	△114	△826	△1,084	△944
	소 계	△279	△1,162	△1,567	△1,515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 2023년 및 2024년에는 '보상금'에서 각각 9억 1,500만원, 30억원 및 49억 4,600만원을 이·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여 왔음.

2025년에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2024년보다 훨씬 큰 금액인 62억 7,5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2022년~2025년 전직지원금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407	3,529		1,125
2019	3,314	3,313	-	
2020	3,314	3,314	-	
2021	3,314	3,314	-	-
2022	6,172	7,087	915	915
2023	6,172	9,135	2,963	3,000
2024	7,005	11,923	4,918	4,946
2025	7,382	12,888	5,506	6,275

(자료: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신청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연도	중기 및 장기 전역자(신청대상)		신청자	신청률	예산액
2019	중기	3,563	1,764	49.5	3,314
	장기	1,039	360	34.6	
2020	중기	3,125	1,631	52.2	3,314
	장기	1,157	403	34.8	
2021	중기	2,821	1,569	55.6	3,314
	장기	834	399	47.8	
2022	중기	2,999	1,916	63.9	6,172
	장기	1,103	559	50.7	
2023	중기	4,061	2,536	62.4	6,172
	장기	1,266	712	56.2	
2024	중기	4,486	2,789	62.2	7,005
	장기	1,700	937	55.1	
2025	중기	4,417	2,649	60.0	7,382
	장기	2,080	1,025	49.3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2년 신청자 수보다도 적은 숫자로 계상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전용 등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음.

〈 2025회계연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전용감액 세부사업	이·전용증액 세부사업	금액
이용(8.20.)	고엽제환자검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500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200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00
전용(8.20.)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325
이용(9.17.)	국립묘지조성		5,150
합 계			6,275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지원금 소진 시기 및 부족액 현황 등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예산 소진 시기	부족분 충당방식	규모
2021	3,314	3,314	-	-	-
2022	6,172	7,087	12월	이용	915
2023	6,172	9,135	9월	이용	3,000
2024	7,005	11,923	8월	이·전용	4,946
2025	7,382	12,888	8월	이·전용	6,275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202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목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기복무자 : 6개월 →7개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힘.

또한 2024년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음.

□ 전직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국가보훈부는 지원액 상향에 앞서 현재 기준으로도 매년 과소계상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직지원금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Ⅲ. 보훈기금

1.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79]: 보훈원 시설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은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감면비 지원, 민간요양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훈원 양로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95억 4,600만원 중 95억 1,700만원(99.7%)이 집행되고 2,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8,372	9,546	-	9,546	9,517	-	29	8,623
-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3,367	4,438	-	4,438	4,414	-	24	3,759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998	1,101	-	1,101	1,096	-	5	1,070
- 보훈원 양로지원	3,543	3,543	-	3,543	3,543	-	-	3,543
- 자원봉사 활동지원	67	67	-	67	67	-	-	-
- 보훈복지시설 환경개선	397	397	-	397	397	-	-	251

(자료: 국가보훈부)

79) 세부사업: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2161-444)

□ 내역사업인 “보훈원 양로지원”은 보훈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식주 비용 등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5억 4,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보훈복지시설 환경개선’은 11개소 보훈복지시설[80]의 노후화 시설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억 9,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위해 1997년 6월 보훈기금을 투입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양로시설인 ‘보훈원’을 건립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의식주, 의료 서비스 및 사후 묘지안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80)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 8개 보훈요양원

<보훈원 현황>

구분	내용
면적	· 대지 12,530㎡, 건물 10,340㎡(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 시설	· 주거시설(126실): 1인실 62실, 2인실 52실, 3인실 5실, 전문요양 7실 · 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장례식장, 강당, 식당, 노래방, 남·여 프로그램실, 탁구장, 이·미용실,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 · 창훈묘원(공동묘지) 안장 현황: 현재 234기 안장, 잔여기수 86기
건립연도	· 1997. 6월 신축

(자료: 국가보훈부)

□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을 시정요구[81]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조치완료'로 처리 결과를 통보(2025.12.31.)하면서 2026년 개보수 예산 30억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확보한 개보수 예산 30억원은 복권기금 법정배분금[82]으로,

---

81) [지적사항] 보훈원과 복지타운의 입소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국가가 무의탁 고령 유공자에게 양질의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

8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보훈복지타운의 리모델링[83]에 집행(현재 공사중, 12월 완료) 할 계획이며, 동 세부사업 환경개선 예산의 집행계획에는 보훈요양원과 휴양원에 대한 시설개보수 계획만 있을 뿐, 보훈원 시설 개선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6년 보훈복지시설 환경개선 계획>

시설명	개선 계획	집행액(원)
수원보훈요양원	요양원 출입구 바닥 보수 공사	15,000,000
	수원보훈요양원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20,000,000
광주보훈요양원	강당 및 물리치료실 등 바닥 교체 공사	74,000,000
김해보훈요양원	무정전 UPS 설치 공사	18,000,000
대구보훈요양원	세탁실 집진설비 설치 공사	14,000,000
대전보훈요양원	R형 수신기 교체 공사	34,000,000
	휠체어 구매	20,000,000
충주휴양원	냉난방기 등 노후 비품 교체	27,000,000
	객실용 TV 교체	11,000,000
합 계		**251,000,000**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원은 1997년 건립 이후 리모델링이 실시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시설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아도 안전 및 생활에 필수적인 공사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83) 보훈복지타운(1996년 준공) 리모델링: 120세대(싱크대·개수대·샷시 교체 예정)

〈최근 5년간 보훈원 시설 개보수 현황〉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백만원)
2021년	-	-
2022년	· 보훈원 방화셔터 및 피난안내유도선 설치 등 3건	30
2023년	· 보훈원 옥상 방수공사 등 18건	128
2024년	-	-
2025년	-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 '202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에서도 보훈원의 만족도는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VOC 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 의료장비 최신화 필요, 해충 방역 강화 등으로 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보훈원 만족도 조사 결과>

차원별 결과 [Base: 전체(n=10), 단위: 점]



주) 화살표는 전년 대비 GAP

세부항목별 결과 [Base: 전체(n=10), 단위: 점]

구분		보훈원	전체 대비	전년 대비
사례수		(10)	-	-
서비스 내용 및 품질 76.3점	본원적 욕구충족	76.0	-12.2	-9.0
	서비스 효익성	75.0	-14.7	-8.0
	서비스 완결성	78.0	-10.8	-5.0
서비스 제공과정 82.0점	상호작용	85.0	-6.5	0.0
	커뮤니케이션	77.0	-12.8	-1.0
	고객케어	84.0	-5.9	-1.0
서비스 제공 환경 78.7점	이용자 환경 편리성	75.0	-9.2	-11.0
	제도/절차/시스템 환경	80.0	-9.6	-6.0
	인적자원 역량환경	81.0	-9.4	-5.0
사회적 책임 81.3점	정책 타당성	80.0	-7.1	-2.0
	지속 가능성	83.0	-5.6	+4.0
	윤리성	81.0	-8.6	0.0
서비스 비교평가 77.7점	기대 대비	72.0	-14.5	-6.0
	이상점 대비	80.0	-5.8	+5.0
	타 기관 대비	81.0	-4.6	-1.0
전반적 만족도 76.0점	인지만족	77.0	-11.6	-5.0
	감정만족	75.0	-13.7	-3.0

(자료: 202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p.126)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훈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 양질의 양로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84]: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는 대부사업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위탁은행 계약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를 보전하고 체납채권 회수업무 외부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74억 1,000만원 중 173억 7,200만원(99.8%)이 집행되고 3,8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10,657	17,410	-	17,410	17,372	-	38	11,100
- 이차보전금	10,547	17,300	-	17,300	17,300	-	-	10,893
- 채권회수업무 위탁수수료	110	110	-	110	72	-	38	110
- 주택지원시스템 운영	-	-	-	-	-	-	-	97

(자료: 국가보훈부)

84)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2259-390~392)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은행 전용 상품(“나라사랑대출”)을 통한 위탁대부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하여 보훈관서에서 직접대부를 지원하고 있음.

○ 위탁대부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개 은행과 대부업무 위탁협약[85]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되, 은행금리와 보훈금리의 차이만큼을 보훈기금으로 매월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 현황>

구분	내용
목적	·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또는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배우자
종류	· 농토구입대부 ·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 · 사업대부 · 생활안정대부
방식	· **위탁대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은행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이차보전 · **직접대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대부 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8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부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이후 대부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이나,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증가('22년 77억 7,900만원 → '23년 108억 3,500만원 → '24년 172억 8,000만원 → '25년 173억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대출잔액이 누적되고 있고, 시중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점에 기인함.

<최근 위탁대부 규모 및 사업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 원	22,742	25,145	23,907	21,117
대부액	184,806	206,779	171,712	129,897
이차보전금	**7,779**	**10,835**	**17,280**	**17,300**

(자료: 국가보훈부)

<연도별 대출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출채권 평균잔액	590,356	642,053	683,034	667,228
보훈금리	1.4~2.4	2.4~3.4	3.0~4.0	3.0~4.0
시중금리	(부동산) 2.55~5.21 (신용) 3.30~6.18	(부동산) 4.70~5.04 (신용) 5.19~5.75	(부동산) 4.53~4.94 (신용) 4.99~5.39	(부동산) 3.69~4.32 (신용) 4.19~4.82
평균 이차보전율*	1.34	1.69	2.53	2.59

*이차보전율은 위탁은행에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평균잔액으로 나눠 역산하여 산출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이러한 대출채권 잔액 증가와 고금리 지속 추세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86], 매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22년 47억 4,800만원 → '23년 61억 800만원 → '24년 및 '25년 67억 5,300만원).

<2022년~2025년 이차보전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변경액	계획현액	집행액
2022년	3,031	**4,748**	7,779	7,779
2023년	4,727	**6,108**	10,835	10,835
2024년	10,527	**6,753**	17,280	17,280
2025년	10,547	**6,753**	17,300	17,3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재정법」 제70조[87]에 따르면, 금융성 기금이 아닌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자체 변경할 수 있고, 20%를 초과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86) 2025년 계획액 편성시 대출평균잔액은 604,495백만원, 이차보전율을 1.745%로 이차보전금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지 못한 추계로 보임.

87)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자체 변경 허용 한도 충족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변경하여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매년 기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도 이차보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이차보전금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지급금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9억 6,9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5년 당해연도 발생 지급 의무액이 감소하면서 연말 기준 75억 1,8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미지급액	당해연도 발생 지급 의무	당해연도 집행액	미지급액
2021년	-	1,561	1,487	**74**
2022년	74	7,831	7,779	**126**
2023년	126	20,389	10,835	**9,680**
2024년	9,680	19,569	17,280	**11,969**
2025년	11,969	12,849	17,300	**7,51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 및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이차보전금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위탁은행에 미지급한 이차보전금의 차년도 이월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함.

□ 매년 미지급 발생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 대부사업에 대한 민간은행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자 청구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 대책으로 2024년 7월부터 위탁대부 한도액을 축소한 바 있는데,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취지를 고려하면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탁대부 한도액 축소 내역>

자금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신축,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대도시 80백만원 중소도시 55백만원 농어촌 40백만원	대도시 60백만원 중소도시 40백만원 농어촌 30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금리 변동 추이와 대출잔액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골프장 위탁운영[88]: 88관광 위탁 근거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골프장 위탁운영”은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88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88관광개발(주)에 골프장 운영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02억 3,3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골프장 위탁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골프장 위탁운영	17,643	20,233	-	20,233	20,233	-	-	18,35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의 관리 주체로,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88골프장”을 건설·개장하였고, 같은 법 제7조제6항[89]에 따라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88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88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88관광과 「골프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 골프장 관리를 위탁·운영해 오고 있음.

---

88) 세부사업: 골프장 위탁운영(2362-434)

89) **「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88골프장 관리 · 운영 위탁 현황>

구 분	내 용
소유자	국가보훈부
수탁자	88관광개발(주)
위탁 근거	「보훈기금법」 제7조제6항
계약 일자	'88.7.1.('26.3.31. 등 5회 약정 변경)
위탁 업무	1. 88골프장 및 관련시설내의 토지·건물(장착물 포함), 수목, 잔디 및 기타시설물 등 보훈기금소유재산 일체에 대한 관리 2. 골프장(36홀), 식당, 티하우스 및 용품매점, 연습장, 실외연습장 및 PAR3홀 운영과 회원등록 3. 회원관리 및 기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
운영 인력	총 149명(임원 3명, 행정직 38명, 현장직 108명)
위탁수수료	43억원('25년, 부가가치세 포함) * 근거: 골프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 제5조(수탁회계 총수익의 1/3 범위 내)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88관광으로 하여금 88골프장을 관리·운영하게 하면서 매년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88골프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보훈대상자 복지 및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동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임.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90],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모법에 위탁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어야 함[91].

□ 한편,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92]에 따르면 국가

---

90)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② (생 략)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91)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4년판, p.488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계약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93]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의계약 사유 가운데 하나(제1항제5호마목)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근거 법령에 국가사업을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94].

□ 그런데, 현행 「보훈기금법」은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보훈부가 직접 조성한 사업장(88골프장)을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88관광)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또한, 하위 법령에 위탁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 략)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 자. (생 략)
② ~ ⑥ (생 략)

94) 법제처 07-0044(2007. 3. 23.), 법제처 21-0153(2021. 5. 8.) 등

88관광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88관광과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95].

〈「보훈기금법」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 ④ (생 략)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 최근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적용 기준을 통보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면 개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탁자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95) 관련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2026.4.1.)이 발의되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적용 기준〉

기준	내 용
1	- 개별 **법률**에서 특정 국가사업 관련 위탁 업무의 내용과 범위,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2	-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수탁자 지정 권한) 명시 필요** - 법률·법규명령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행위를 행정규칙으로 위임 필요 * 법률·법규명령에 수탁자 지정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정 및 수의계약 불가
3	- 수의계약 상대방은 1, 2에 따라 **법률·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수탁자로서 지정된 자(**명칭이 기재된 자**)이어야 함

(자료: 재정경제부,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와의 수의계약 업무 철저」, 계약정책과-234(2026.2.24.))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88골프장 위탁 및 88관광과의 수의계약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Ⅳ.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토지매각대[96]: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토지매각대” 사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수입으로, 2025년 계획현액 30억 7,200만원 중 12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1,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년도 토지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토지매각대	3,072	3,072	-	3,072	1,255	1,236	19	-	3,379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에 따라 환수된 친일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매각하고 있음.

96) 세부사업: 토지매각대(72-721)

□ 친일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53억원을 정점으로 2023년부터는 매각대금이 20억원을 하회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각액이 100억원을 하회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3월 당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토지 140필지를 뽑아 목록을 공개하고 매수를 독려하는 등 현재까지 매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2022년 150억원 매각을 정점으로 2023년부터는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2023년 8억원, 2024년 23억원, 2025년 11억원 등 매각실적이 매우 부진함.

- 매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활용도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토지는 일찍 매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캠코측은 '(최저입찰가를 결정하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음.[97]

<매각 실적>

(단위: 억원)

연도	'08~'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필지	31	78	118	62	174	52	30	77	31	20	12	20	4	2	11	21	36	779
매각	26	80	67	55	142	18	91	56	86	12	4	61	7	150	8	22	11	897
수납	26	57	78	46	145	38	31	91	88	24	17	15	57	153	9	18	12	905

97) 시사저널, '파묘' 안 하고 몰수한 친일파 땅 600억…정작 유공자에겐 '그림의 떡', 2024.3.15

□ 총 1,600필지의 친일 귀속 재산 중 779필지가 이미 매각되고 잔여 재산은 821필지임.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도로, 하천, 군부대 등 법령상 매각 제한 사유가 있는 매각제한 재산을 제외한 매각 가능 재산은 255필지로, 공시가는 84억원에 불과함.

2025년 토지 공시지가율(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 평균치인 65.5%를 적용하면, 매각 가능 재산의 시세는 대략 128 억원으로 추정됨.

<국가보훈부 소관 잔여 친일 귀속 재산 현황>

구분		계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합계	필지	822	367	107	286	61
	면적(천㎡)	6,362	407	30	5,852	71
	공시가(억원, %)	404(100)	61(15.1)	33(8.2)	299(74.0)	11(2.7)
매각 가능 재산	필지	255	136	15	86	18
	면적(천㎡)	1,022	203	2	762	55
	공시가(억원, %)	84(21.0)	22(28.2)	1(1.2)	57(65.9)	4(4.7)
매각 제한 재산*	필지	566	231	92	200	43
	면적(천㎡)	5,338	204	28	5,090	16
	공시가(억원. %)	320(79.0)	39(11.6)	32(10.0)	242(76.2)	7(2.2)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현재 매각 가능 귀속재산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기적으로 공매에 붙이고 있고, 매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등 재산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매각 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98]: 대상인원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1,043억 7,800만원 중 1,037억 9,482만원을 집행하고 5억 8,317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992억 2,800만원 중 98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96,997	104,378	-	-	104,378	103,795	-	583	98,097
(손)자녀 생활지원금	91,878	99,228	-	-	99,228	98,810	-	418	92,981

(자료: 국가보훈부)

98) 세부사업: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3141-401)

2) 검토의견

(1) 대상인원 추계정확성 확보 필요

□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99]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계획액이 부족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일반회계전입금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매년 실집행액이 계획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의 낮은 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매년 실제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을 상회함.

○ 2021년부터 매년 계획인원이 지원인원보다 과소 계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6억원~84억원을 계획변경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5년에도 국가보훈부는 73억 5,000만원을 계획변경을 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

9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1	'22	'23	'24	'25
단 가	100~478천원				
계획액	79,534	87,849	91,878	91,878	91,878
(계획인원)	(18,766)	(20,535)	(21,186)	(21,186)	(21,186)
집행액	87,764	90,504	93,378	94,865	98,810
(집행인원)	(20,498)	(20,905)	(21,479)	(21,734)	(22,556)
집행률	110.3	103.0	101.6	103.3	107.5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 등으로 유족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계획안 편성 시 지원대상인원을 '2022~2024년 3년 평균 지원자 수(21,373명) 또는 2025년초 지원자 수(22,260명)'가 아닌 '2025년 계획안 편성계획인원(21,186명) 대비 1.1% 증가한 21,402명'를 적용하는 등 과소계상하였는바, 2026년 집행 시에도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부족액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계획액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 검토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7년동안 고작 ‘1만원’만이 인상되었음.

○ 생활지원금은 2019년 최대 46.8만원에서 2025년 최대 47.8만원으로 1만원(2%) 인상에 그쳤으며, 2026년에도 2025년과 같은 금액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됨.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은 12.2% 상승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2019년 최대 51.2만원에서 2025년 최대 76.5만 원으로 약 24.3만원 인상되었음.

□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매년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 소요가 9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 여력이 부족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특성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26년 계획안에는 937억 5,4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고, 이 중 929억 8,100만원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에 쓰

인다고 볼 수 있음. 2026년 계획액도 과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집행예상액은 1,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규모*				손자녀 생활지원금 집행액**(B)	A/B
	합계	자체수입	일반회계 전입금(A)	여유자금 회수		
2017년	51,874	35,710	-	16,164	-	-
2018년	143,021	5,282	54,686	83,053	72,522	0.75
2019년	197,635	4,589	76,203	116,843	77,344	0.99
2020년	161,893	7,712	76,689	77,492	81,920	0.94
2021년	167,035	11,239	80,826	74,970	87,764	0.92
2022년	253,010	20,192	88,848	143,970	90,504	0.98
2023년	335,655	8,895	92,651	234,109	93,378	0.99
2024년	200,682	7,428	92,651	100,603	94,865	0.98
2025년	149,093	8,751	92,583	47,759	90,627	1.02
2026년	151,369	9,507	93,754	48,108	92,958	1.01

* 수입 규모: 2017~2024년 결산 기준, 2025~2026년 계획 기준

** 손자녀 생활지원금 계획액: 당초 계획액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소요 재원 전액이 사실상 일반회계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지출을 거쳐 집행되고 있는바,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요구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동 사업이 현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인상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의 자체 수입 비중(최근 5년간 9.3%)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매년 사업의 계획액 또한 과소 편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조세심판원[100]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구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101] 국세 및 지방세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2025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관련 세부사업은 5개로, 총 예산현액 148억 9,000만원 중 142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억 300만원(4.0%)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조세심판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	12,243	12,243	-	-	12,243	11,681	-	562	12,465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15	715	-	12 △14	713	687	-	26	777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440	1,440	22	41 △38	1,465	1,454	-	11	1,560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67	-	40 △46	161	159	-	2	117
조세심판원 정보화(정보화)	303	303	-	5	308	306	-	2	303
합 계	**14,868**	**14,868**	**22**	**98 △98**	**14,890**	**14,287**	**-**	**603**	**15,222**

(자료: 조세심판원)

100) 세부사업: 조세심판원 인건비(총액)(7001-1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7011-202),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3-325), 조세심판 정보화(정보화)(7036-307)

101)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심판원은 ① 납세자가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② 이를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되, ③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결정함.[102]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5천만원(지방세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

<2025년도 회의별 심판청구 처리현황>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조세심판관회의	주심단독	계
34건	7,137건	606건	7,777건

(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2026.4. p.108)

102) **「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1)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국세기본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03]

□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104]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등은 과세처분 불복에 대해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즉,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 3가지 행정심판제도(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②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③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해야 하는데, 심판·심사청구 후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105]

---

10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04)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5)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되어, 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②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106]

□ 그런데, 조세심판 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5년도 평균 처리일수가 225일로 나타나,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한 사건의 비율이 2023년도 50%, 2024년도 35.4%, 2025년도 12.8%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또한, 총 처리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평균 사건 처리일수는 오히려 2023년도 172일, 2024년도 185일, 2025년도 225일로 매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조세심판 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90일 이내		91~180일		180일 초과		총 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2	656	5.6	5,156	44.6	5,753	49.7	11,565	234
2023	8,244	50.0	2,857	17.3	5,384	32.7	16,485	172
2024	3,596	35.4	2,818	27.7	3,764	37.0	10,178	185
2025	1,024	12.8	3,027	37.9	3,945	49.3	7,996	225
2026.6. 기준	114	3.7	1,288	42.3	1,644	54.0	3,046	246

(자료: 조세심판원)

106)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특히, 지방세 분야의 사건 처리기간을 따로 살펴보면, 2025년도 평균 사건 처리일수가 255일에 이르고 있어, 내국세(2025년 평균 처리일수: 204일) 등 다른 사건에 비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방세 분야 심판사건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90일 이내		91~180일		180일 초과		총 건수	평균 처리일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2	153	6.9	332	14.8	1,752	78.3	2,237	**334**
2023	2,390	43.4	1,149	20.9	1,960	35.6	5,499	**195**
2024	1,557	41.7	458	12.3	1,722	46.1	3,737	**201**
2025	458	14.3	906	28.1	1,855	57.6	3,219	**255**

(자료: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2026.4. p.77)

다른 분야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는데, 감사원 심사청구[107]의 경우에는 접수사건 비중이 높지 않아, 전심절차로서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107) <2024년도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현황>

	접 수		
	계	전년도 이월	본년도 접수
계	**2,009**	1,180	829
내국세	1,085	875	210
관세	28	3	25
지방세	**182**	124	58
기타	714	178	536

(자료: 「2024 감사연보」, 감사원, 2025.5. p.501)

□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조세심판의 경우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사건처리 지연은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사건 법정처리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108]: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의 확대 집행 부적정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대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6,100만원 중 1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1.8%)은 불용하였음.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67	167	40 △46	161	159	-	2	117

(자료: 조세심판원)

□ 동 사업은 2025년도 신설 사업으로서, ‘조세심판제도 홍보’와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부는 ‘조세심판제도 홍보’에 9,200만원,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에 1억원을 배정하여 총 1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 중 납세자 권리보호와의 관련성이 크지 않은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2,500만원 감액하였음.[109]

108) 세부사업: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109)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中>

세부사업명	2025(안)	수정안	증감액	수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192	167	△25	○ 조세심판원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비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백서제작비 2,000만원, 동영상 제작비 500만원 등 2,500만원 감액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 예산안 감액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예산안	국회 심사결과	2025확정예산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192**	**△25**	**167**
- 조세심판제도 홍보사업	92	-	92
-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100	△25	75

(자료: 조세심판원 제공자료 재구성)

□ 또한,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110]

□ 그런데, 관련 경비 집행 현황을 보면,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에서 7,343만원,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에서 1,248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동 기념사업에 총 8,591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7035-325)' 사업 예산을 소진한 후, 별개의 세부사업인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에서 1,248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임.

110) <2025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법정 의무지출사업과 예산총칙에 따른 사업은 제외)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확보하도록 한다.

<개원 50주년 기념사업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 용	집행액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7035-325)	일반수용비	50주년 기념품 제작	5,247
	일반용역비	50주년 기념사업(백서 발간, 동영상 제작, 심포지엄 개최, 기념 행사)	68,182
소 계			73,429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7011-252)	일반수용비	50주년 기념행사 및 자문회의 관련 물품 구입	702
	임차료	행사장 LED 전광판 임차	4,730
	국내여비	행사장 이동 운임	1,760
	업무추진비	50주년 기념행사 및 자문회의 관련	5,291
소 계			12,483
합 계			85,912

(자료: 조세심판원 제공자료 재구성)

□ 이는 '개원 5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1억원 → 7,500만원)한 국회의 예산 심사 취지에 반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도록 요구한 부대의견에도 반하는 것임.[111]

□ 조세심판원은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확대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111)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50주년 기념행사에 내부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사전 점검 중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조세심판원 기본경비(7011-252)' 사업 예산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함.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112)]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정부업무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기관에 대한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억 4,500만원 중 28억 1,300만원(98.9%) 집행되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845	-	20 △20	2,845	2,813		32	3,194

(자료: 국무조정실)

112) 세부사업: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7031-303)

2) 검토의견: 정부위원 참석률 제고 필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

○ 위원장은 민간 위촉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게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위원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있으며,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음[113].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 평가결과 확인·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10회(서면 1회), 2024년 9회(서면 2회), 2023년 9회 등 매년 약 10회 내외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음.

□ 각 회의별 정부위원(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114],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의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의

11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4) 2025. 9.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경우 정부위원 참석 현황이 회의당 평균 1인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의 경우 9번의 회의에서 민간위원은 총 11명 중 평균 8.6명(78.8%)이 참석하였고, 정부위원은 총 4명 중 평균 2.3명(58.3%)이 참석하였음.

○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각각 9번, 10번의 회의 중 민간위원은 평균 9.3명(84.8%), 9.1명(82.7%)이 참석한 반면, 정부위원은 평균 1명(25%)이 참석하는 등 정부위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3~2025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연도	회의		위원 참석현황		회의		위원 참석현황	
	일시	방식	정부(4명)	민간(11명)	일시	방식	정부(4명)	민간(11명)
2023년	2023.2.3	대면	1	8	2023.6.16	대면	2	9
	2023.2.24	대면	2	9	2023.9.14	대면	3	10
	2023.3.24	대면	3	10	2023.10.20	대면	2	9
	2023.4.27	대면	2	8	2023.11.17	대면	3	8
	2023.5.19	대면	3	7	연평균		2.33 (58.3%)	8.67 (78.8%)
2024년	2024.2.2	대면	1	8	2024.6.28	대면	1	10
	2024.3.15	대면	2	9	2024.10.10	대면	1	9
	2024.3.29	대면	2	10	2024.10.23~10.29	서면	0	11
	2024.4.22 ~ 4.25	서면	0	11	2024.11.22	대면	2	8
	2024.5.31	대면	0	8	연평균		1.00 (25.0%)	9.33 (84.8%)
2025년	2025.1.17	대면	1	11	2025.8.29	대면	1	9
	2025.2.28	대면	1	9	2025.9.26	대면	1	10
	2025.3.28	대면	1	7	2025.10.17	대면	1	8
	2025.4.18	대면	2	9	2025.11.14	대면	1	8
	2025.5.30	대면	1	9	연평균		1.00 (25.0%)	9.10 (82.7%)
	2025.7.22 ~ 7.25	서면	0	11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정부위원의 참석 현황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정부업무를 평가하는 위원회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심으로 회의가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피평가기관인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척 대상이 되는 정부업무평가 결과 심의·의결 외에, 평가 관련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업무평가 심의·의결 등이 안건인 경우에도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아울러 2023년의 경우 정부위원이 회의별로 2명 또는 3명이 출석하였으나, 2024년 이후에는 사실상 국무조정실장 외의 정부위원은 참석하지 않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범정부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운영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총괄 기구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낮은 것은 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 정부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115)]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추가·신설 억제를 통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9억 8,900만원 중 18억 9,800만원(95.4%)이 집행되고, 9,100만원(4.6%)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989	1,989	67 △67	1,989	1,898	-	91	2,830

(자료: 국무조정실)

115) 세부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7033-301)

2) 검토의견: 연구용역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액은 3억원인데, 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전용(증)하여,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중 총 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연구용역비(260)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비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반연구비 (260-01)	250	250	50	300	283	-	17	417
정책연구비 (260-02)	50	50	-	50	47	-	3	50
합 계	**300**	**300**	**50**	**350**	**330**		**20**	**467**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을 위해 총 10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연도 내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납품받아, 다음연도 이월 없이 당초 계획대로 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런데, 각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대조해 보면, 하반기에 발주한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액	집행액	과업지시 이행 여부
경제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연구	1.20.-3.20. (수의)	20	20	○
행정.사회분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연구	1.16.-3.20. (수의)	20	20	○
지방규제혁신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4.30.-8.31. (수의)	20	20	○
공공기관 규정 등 유사행정규제 관리방안 연구	8.19-11.18. (제한경쟁)	27	27	○
인공지능 산업 진입규제 혁신 방안 연구	4.15-10.31. (제한경쟁)	90	90	○
바이오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과제 고도화 연구	8.14.-12.19. (수의)	19	19	○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9.24.-12.20. (수의)	20	20	○
2025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10.24.-12.31. (제한경쟁)	45	45	○
일본 규제특례 제도 연구	11.20.-12.19. (수의)	20	20	**<미이행 내역>** -일본규제특례 성과분석 (경제적 효과 및 편익 분석, 업역간 갈등 완화 등 사회적 편익 분석, 신산업창출효과 대표사례) -규제특례제도 도입전략 (한국형제도 경쟁력 확보 방안, 인프라 조성방식 유형 도출)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	11.17.-12.31. (제한경쟁)	49	49	**<미이행 내역>**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특별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책·이론적으로만 서술)
합 계		**330**	**330**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과업지시 이행 여부' 추가)

□ “일본 규제특례 제도 연구”의 경우 과업지시서와 달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본규제특례 성과분석(경제적 효과 및 편익 분석 등) 및 규제특례제도 도입전략(인프라 조성방식 유형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 규제특례 제도 소개에 중점을 두어 보고서가 작성되었음. 일반적 제도 소개는 관련 법률 번역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본 규제특례의 성과 분석과 한국형 규제특례 도입전략이 이 연구의 핵심 사항임에도 해당 사항은 누락된 것임.

<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 및 이행 여부>

연구용역명 (수행자)	과업지시 내용	이행 여부
일본 규제특례 제도 연구 (○○파트너스) 사업일수: 30일	① 일본 규제특례 제도 운영체계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의 법령체계, 구성요소, 운영 절차 및 개별 사례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 운영 주체, 참여자별 역할, 규제환경 등 분석	○
	② 일본 규제특례 제도 성과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신산업 창출 효과 분석: 편익 분석 및 신산업 분야 등 대표 사례 분석. 특히, 성공사례에 대한 성과 요인 등 분석 - 일본 규제특례 제도의 업역간 갈등 완화 등 사회적 편익 분석: 직역·업역 간 갈등 해소·완화 등 사례 분석	×
	③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 도출 - 한국형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론, 도입 기대효과 및 한계 등 전략적 방법 및 구현 요소 제시: 인프라의 규모 및 활용 방식에 따른 조성 방식 유형 도출 등, 한국형 규제특례 제도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등	×
	-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운영 합리화 방안 등 제시	○

이처럼 과업지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동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이 총 30일(2025년 11월 20일 ~ 12월 19일)에 불과한데다, 해당 용역 수행업체가 경영컨설팅 전문업체로서 규제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나 편익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책적·이론적으로만 서술하고 과업지시의 최종 목적인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동 연구용역 역시 짧은 사업 수행기간(계약기간: 2025년 11월 17일~12월 31일, 총 45일)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연구용역 과업지시 내용 및 이행 여부>

연구용역명 (수행자)	과업지시 내용	이행 여부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 (○○산학협력) 사업일수: 45일	① 우리나라 특구 현황 및 실태 분석 - 현재 특정 지역단위로 다수의 특구 존재하나 실제 실효성은 미흡 그럼에도 새로운 특구가 지속적으로 신설되어 누더기 운영 우려 - 새정부 출범에 따른 新특구제도 신설시 특례효과 향상을 위해 기존 특구의 문제점을 분석·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적립	○
	② 일본 국가전략특구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내용(안) >** **① 일본 특구제도 현황 및 국가전략특구 도입배경** **②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운영 현황과 성과사례 분석** **③ 일본 국가전략특구법의 주요 내용과 작동 체계** **④ 일본 국가전략특구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③ 메가특구 구체화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 우리나라 특구 및 일본 국가전략특구 연구·분석 내용을 토대로 메가특구의 도입·운영방안 마련	○
	- 특별법 제정안 구성	×

□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두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종 검사하고, 2025년 12월 23일에 각각 완수금을 지급하였음.

<연구용역의 계약기간, 검사일 및 완수금지급일>

(단위: 백만원)

연구용역명	수행자	계약기간	검사일	완수금 지급일	집행액
일본 규제특례 제도 연구	○○ 파트너스	2025.11.20.-12.19. (30일)	2025.12.19.	2025.12.23.	20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	○○ 산학협력	2025.11.17.-12.31. (45일)	2025.12.18.	2025.12.23.	49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일본 규제특례제도 연구'의 경우 총 사업기간이 30일인데, 그 사업종료 당일(2025. 12. 19.)에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음.

□ 또한,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연구'의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이 45일(최종기한: 12월 31일)임에도 사업 시작일(11월 17일)부터 1달 경과 시점인 12월 18일에 이미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음.

이후, 2026년 2월 국무조정실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및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2025년도 연구용역 수행업체(○○산학협력)와 다시 계약하였는데, 그 과업지시서[116]에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다시 포함됨.

116) <과업지시서 내용 中>
"메가특구 내 광범위한 규제특례 내용, 적용 방안, 운영방식 등의 근거 법령(가칭메가특구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 마련"

〈2026년도 ‘메가특구 규제특례 적용·운영 방안 연구’ 계약 현황〉

연구용역 목적	금액	수행자	계약 기간	계약 방법
메가특구 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과 내용을 연구하여 (가칭)메가특구특별법 및 시행령 마련	8천만원	○○ 산학협력	2026. 3.17.-8.31.	제한 경쟁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사할 때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음 연도인 2026년도 연구용역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과업지시 사항에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재차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낮은 계약을 연도 말에 무리하게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국무조정실은 연도 말에 무리한 일정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해당 결과보고서를 곧바로 검수해 완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4. 규제혁신추진단 운영[117)]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은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전직공무원, 연구기관, 민간)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여 덩어리규제[118)]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7억 9,500만원 중 33억 1,700만원(87.4%)이 집행되고, 4억 7,800만원(12.6%)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3,795	3,795	60 △60	3,795	3,317	-	478	-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덩어리규제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국무조정실은 2022년 8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하였음.

117) 세부사업: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118)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

○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된 한시조직(최초 3년 + 연장 2년)으로, 경제·사회분과 등 2개 분과별 전문위원과 지원국 등 총 13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는데,[119] 2025년 7월 말 기한 만료로 해체되었음.

○ 규제혁신추진단의 업무는 ①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덩어리과제 제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덩어리과제 발굴, ② 추진단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등을 통한 개선안 논의, ③ 개선방안 발표, ④ 필요 시 집행상황 점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규제혁신추진단 업무절차>

①덩어리과제 발굴	②개선안 논의	③개선방안 발표	④집행상황 점검 (필요시)
◦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덩어리과제 제시 ◦ 외부 건의 (현장 간담회 등) ◦ 부처 요청 등	◦ 단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 소관부처 협의 ◦ (필요시)규제혁신 전략회의 상정 등	◦ 부처 협의 완료시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소관부처 집행 ◦ 추진단 점검·보완

(자료: 국무조정실)

119)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제3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원으로 채용된 사람
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
나. 규제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국무총리가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된 사람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다.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
라. 그 밖에 추진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규제혁신추진단은 그 활동기간(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동안 총 41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별 세부 개선과제 총 434개를 선정해 발표하였는데,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무조정실에 대해 장기 미이행 덩어리규제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120]

□ 그런데, 2026년 6월 기준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을 2025년과 비교해 보면, 총 이행률은 2025년 45.7%에서 2026년 6월 69.4%로 23.7%p 상승하였으나, 2022년도 발굴 과제의 이행률은 64.7%에서 전혀 변동이 없고, 2023년도 발굴 과제도 8.1%p 상승에 그치고 있으므로, 두 연도 과제의 이행이 정체된 원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해당 부처에 대한 이행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0) <시정요구사항>

규제혁신추진단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규제혁신추진단 운영(7033-305)
	지적사항	○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이후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 400개 세부 개선과제 중 이행완료된 과제는 183개(45.7%)에 불과하였음
	시정 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장기 미이행 덩어리규제 세부 개선과제의 이행을 독려하는 등 규제관리 총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

(단위: 건)

연도	발굴 덩어리 규제	세부 개선과제(2026.6.기준)			2025년 이행률	2026년 6월기준 이행률
		합계	이행 완료	미이행		
2022	2	34	22	12	64.7%	64.7%
2023	17	98	74	24	67.4%	75.5%
2024	13	267	180	87	35.6%	67.4%
2025	9	35	25	10	-	71.4%
합계	**41**	**434**	**301**	**133**	**45.7%**	**69.4%**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규제혁신추진단은 활동기간(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동안 덩어리규제 발굴 사업 등에 총 16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덩어리규제 개선과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규제 개선으로 연계하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 규모에 상응하는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2~2025회계연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집행액>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합계
2,861	4,960	4,925	3,317	16,063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규제개혁은 개선방안 발표 자체보다 실제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에도 덩어리규제 개선과제 이행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당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121]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은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을 청년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청년층의 정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1억 5,800만원 중 21억 5,690만원(99.9%)이 집행되고, 11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정책통합 플랫폼 구축	100	200	1	2,158	2,157	-	1	2,558

(자료: 국무조정실)

121) 세부사업: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정보화)(7035-324)

2) 검토의견: 지자체와의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 노력 필요

□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온라인 청년센터'를 2022년부터 이관하여 '온통청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해왔으며, 2024회계연도에서는 '온통청년'을 고도화하여 실시간·맞춤형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정책을 통합 제공할 수 있고, 청년 개인에게 맞춤형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 개요>

구분	(기존) 온라인 청년센터		(신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정책 정보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책정보 중복·누락** 발생, **데이터 현행화에 장기간 소요**	⇨	청년정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중복·누락 없이 실시간 정책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서비스 제공	개인의 수요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정책 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정책 추천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담	상담원을 통한 분야별·심층 상담을 제공하나, **이력관리 부재**		청년의 분야별 상담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피상담자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인프라	**워크넷 서버** 공동 활용, **기능 추가 및 개선에 한계**		**별도 클라우드** 구축하여 기능 신설 및 개선을 위한 **확장성** 확보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122]’를 수립하면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2024년과 2025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4년에는 34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1차로 구축 완료하였음.

□ 국무조정실은 2025년도 예산안에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을 2차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14억 8,800만원이 삭감[123]된 바 있음.

○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사업의 운용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 제2차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함께 채택하였음.

○ 그 결과 2025년에 편성된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2차 구축 예산 중 1억원을 제외한 14억 8,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1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온통청년 플랫폼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청년정책 플랫폼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음.

---

122)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IS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123)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2차 구축예산 중 삭감되지 않은 1억원을 통해 온통청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간 연계사업을 진행하였음.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용역명	주요 내용	계약기간	집행액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 구축	· 청년정책 정보 연계 표준안 구현 및 기능 개발 등	2025. 6. ~ 2025. 12.	100

(자료: 국무조정실)

□ 동 용역사업을 수행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온통청년 플랫폼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간에 자동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2026. 7.말 기준으로 보면,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만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부산·인천·충남·전북의 경우 2025년에, 서울·전남·제주의 경우 2026년에 각각 연계 서비스를 완료하여 총 7개[124]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완료되었음.

○ 다만, 대전·대구·세종·울산·경기·강원·경남·경북·충북의 경우 위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체 청년정책 플랫폼과 온통청년 플랫폼 간의 자동 정보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았음.

124) 2026년 7월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현재 기준 연계가 완료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7개임.

<온통청년 및 광역지자체 청년 정책플랫폼 연계 현황>

지역	시스템명 (사이트명)		연계 여부	연계 시점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	'26. 4월 연계완료
전남·광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통합플랫폼		○	'26년 7월 통합신설
	통합	광주청년통합플랫폼	○	'25년 연계완료
		전라남도 청년센터	○	'26년 4월 연계완료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	'25년 연계완료
인천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	'25년 연계완료
충남	충남청년포털		○	'25년 연계완료
전북	전북청년허브센터		○	'25년 연계완료
제주	제주청년플랫폼 (청년이어드림)		○	'26년 3월 연계완료
대전	대전청년포털		×	-
대구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	-
세종	세종청년센터		×	-
울산	울산청년정책플랫폼 (U-PAGE)		×	-
경기	경기청년포털		×	-
강원	강원 청년포털		×	-
경남	경상남도청년정보플랫폼		×	-
경북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	-
충북	충청북도 청년포털		×	-

(자료: 국무조정실)

□ 이와 같이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양 청년정책 플랫폼 간의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연계가 완료된 7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1차 구축 당시 잔여 장비를 활용해 연계를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청년정책 플랫폼 자동 정보 연계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온통청년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온통청년 플랫폼에 청년정책을 등록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 그 결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중 일부가 온통청년에 등록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등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온통청년을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반면, 연계 서비스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자체 플랫폼에 등록하면 위 연계 서비스에 따라 온통청년에서도 바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이 온통청년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 것은 각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온통청년에서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 탐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연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무조정실은 온통청년 플랫폼을 구축할 당시 청년정책 탐색비용이 연간 약 87.4억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음.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편익 산출 근거>

※ 청년정책 탐색비용 감소로 인한 편익(연 87.4억원) 산출 근거

- 편익(약 87.4억/연) = 최저임금(9,160원) × 절감(95.4만시간=접속자수(286만명)× 단축시간(시간당 20분))
- 접속자수(286만명/연) : 청년인원 수(2021년 서울시 청년밀집 지역 기준-통계청) /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 단축시간(20분) : 유사사례(복지부 공공보건포털 구축 후 조회업무 단축시간 20분) 참조

(자료: 국무조정실)

6. 검찰개혁추진단 운영[125)]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71.6%)이 집행되고, 6,200만원(9.3%)이 이월되었으며, 1억 2,600만원(19.0%)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30 △30	663	663	475	62	126	1,734

(자료: 국무조정실)

□ 2025년 10월 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국무조정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었음.[126)]

---

125) 세부사업: 검찰개혁추진단 운영(7036-316)

126)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 등의 제정·개정 지원

○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127]

○ 검찰개혁추진단에는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협의회[128]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129]를 두고 있으며, 실무

---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및 운영 등 검찰개혁 업무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3.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이관·채용 업무 지원
4.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사와 관련 시설의 확보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5.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7. 그 밖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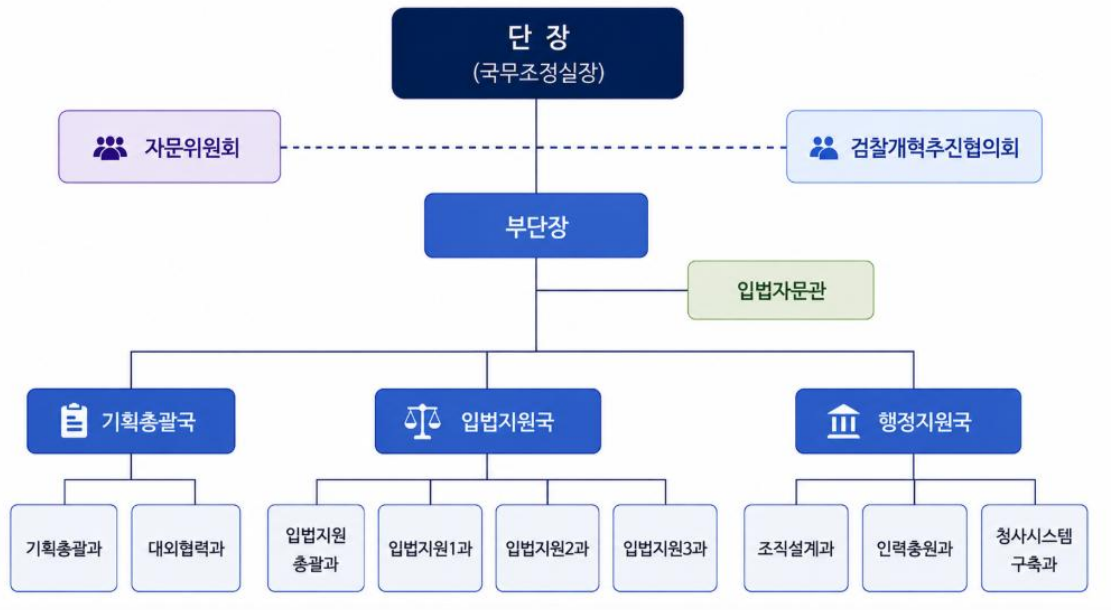
127)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진단의 업무에 관하여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 민간 전문가 중에서 채용된 사람
제9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8)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검찰개혁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 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검찰개혁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1>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및 법제처 차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검찰개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또는 차장

129)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에 관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추진단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검찰개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조직으로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등을 두고 있음.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2) 검토의견: 예비비 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정 소요액 계상 필요

□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130]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131]

130)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3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1.)

○ 2025회계연도 개시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9억 4,000만원의 예비비 배정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6억 6,3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음.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요구액	배정액	산출근거
상용임금(110-03)	58	29	3,236천원×3명×3개월
일반수용비(210-01)	247	170	56,502천원×3개월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	21	7,163천원×3개월
특근매식비(210-05)	28	28	9천원×51명×20일×3개월
임차료(210-07)	24	75	24,987천원×3개월
유류비(210-08)	2	2	300천원×2대×3월
복리후생비(210-15)	3	0	500천원×3명×3/12
기타운영비(210-16)	4	4	((180천원×4과)+(90천원×5과))×3월+300천원×3월
국내여비(220-01)	52	52	870천원×20명×3월
사업추진비(240-01)	30	30	9,840천원×3개월
관서업무추진비(240-02)	27	26	8,700천원×3개월
직책수행경비(250-02)	34	34	11,200천원×3개월
일반연구비(260-01)	90	90	90백만원×1회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백만원×1회
고용부담금(320-09)	7	3	1,113천원×3명
공사비(420-03)	72	59	58,704천원×1식
자산취득비(420-03)	201	0	-
합 계	**940**	**663**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 사업은 자문위원회 구성 지연, 실무지원 인력 채용 지연 등으로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음.

○ 이 사업은 예비비 6억 6,3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1.6%에 불과하였으며, 1억 8,800만원이 이월 또는 불용되었음.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비목	예비비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불용액	집행률 (B/A)
상용임금(110-03)	**29**	**-**	**29**	**8**	**21**	**27.6**
일반수용비(210-01)	170	△20	150	146	4	97.3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	△10	11	11	0	100.0
특근매식비(210-05)	**28**	**-**	**28**	**1**	**27**	**3.6**
임차료(210-07)	75	30	105	101	4	96.2
유류비(210-08)	2	-	2	0	2	0.0
복리후생비(210-15)	0	-	0	0	0	-
기타운영비(210-16)	4	-	4	4	0	100.0
국내여비(220-01)	**52**	**-**	**52**	**2**	**50**	**3.8**
사업추진비(240-01)	30	-	30	29	1	96.7
관서업무추진비(240-02)	26	-	26	26	0	100.0
직책수행경비(250-02)	34	-	34	26	8	76.5
일반연구비(260-01)	90	-	90	43	47	47.8
정책연구비(260-02)	40	-	40	18	22	45.0
고용부담금(320-09)	3	-	3	1	2	33.3
공사비(420-03)	59	-	59	58	1	98.3
합 계	663	30 △30	**663**	475	188	71.6

주: 일반연구비 4,300만원, 정책연구비 1,800만원 등 총 6,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자료: 국무조정실)

○ 비목별로는 국내여비 5,000만원, 특근매식비 2,700만원, 상용임금 2,100만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국내여비의 경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이 감소하였고, 상용임금의 경우 실무지원 인력의 채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예비비 요구 당시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였음에도 실무지원 인력의 채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용임금을 3개월분 요구하였다는 점,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의 경우 2025년 집행률이 각각 3.8% 및 3.6%에 불과하였고 2026년에도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각각 6.4% 및 2.4%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개혁추진단 소요 경비에 대한 최초의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132)]

○ 또한, 과거에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불용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2025년에도 예비비 요구액과 실제 집행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32) 2026년 6월 말 기준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액 17억 3,400만원 중 6억 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국내여비는 5,700만원 중 1,000만원(6.4%), 특근매식비는 8,300만원 중 200만원(2.4%)이 각각 집행되었음.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019	◦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	○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을 '20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19년 예비비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9.7)에 따른 추진단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	조치완료
2023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주의	○ 향후 면밀한 사전준비 및 검토를 통해 예측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 등을 최소화하겠음 - '24년, '25년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운영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음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기간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비비를 요구함으로써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1. 공통: 징계처분 관련 인사보수 운영 기준의 합리화 필요

1)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속 직원 중 법령,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내부 규정을 두어 징계의 요건, 절차, 효과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 각 연구기관의 징계는 공무원과 유사한 종류로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견책은 징계 사안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 감봉은 일정 기간 급여의 일부를 감하는 것,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해임은 직무를 면하게 하는 것, 파면은 신분의 박탈과 법률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됨.

<각 연구기관들의 징계 관련 규정>

기관명	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사규정」 제54조제1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징계지침」 제8조의2, 「인사규정」 제34조
국토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3항, 「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산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2항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규정」 제26조제3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2항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4조제2항
한국개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57조제1항
KDI국제정책대학원	「인사관리규정」 제57조제1항
한국교육개발원	「인사규정」 제57조의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
한국교통연구원	「인사규정」 제38조 2항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인사규정」 제54조제3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의2, 「보수규정」 제7조 제5항
한국법제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제3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2항
육아정책연구소	「인사관리규정」 제49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38조제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사규정」 제46조제1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1항
한국행정연구원	「인사규정」 제55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사규정」 제42조제4항
한국환경연구원	「인사규정」 제38조
건축공간연구원	「보수규정」 제11조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 개별 연구기관들이 각각 별도의 징계 규정을 두면서 징계의 효과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견됨.

○ 징계의 효과 측면에서 연구기관별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같은 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징계의 효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징계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 및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정직·해임 등 중징계는 단순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또는 기관의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직질서를 유지하고 공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징계의 효과가 기관마다 지나치게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첫째, 일부 연구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개 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보수의 절반을 지급함.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지급이 가능한 기관>

기관명	지급 수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국토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의 2분의 1 지급
한국노동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수의 3분의 1 지급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중징계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정직 기간에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징계의 제재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133]

○ 특히, 일부 기관들은 정직 처분 중에도 실제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징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3)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2015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정직 기간 중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례〉

기관명	연도	지급인원	규정개정여부(2026년 8월 기준)
국토연구원	2021년	1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년	2명	○
	2024년	1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21년	1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년	2명	×
	2024년	2명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1명	○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1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	1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년	1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	1명	○

주: 에너지경제연구원(2024년 12월), KDI 국제정책대학원(2022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2024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4년 12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5년 12월)은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음.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둘째, 기관마다 징계처분의 종류가 다르고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도 다르게 운용함.

○ 즉, 견책·감봉·정직·해임 4단계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 강등을 포함하여 5단계로 나누는 기관, 파면까지 6단계로 세분화한 기관 등 그 양태가 다양함.

〈기관별 징계의 종류〉

기관명		징계의 종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국토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산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에너지경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통일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개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파면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직원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한국교육개발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교통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노동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법제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육아정책연구소		견책, 감봉, 정직, 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한국행정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한국환경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파면
건축공간연구원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기관마다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승진 제한 기간도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관이 견책, 감봉, 정직에 대해 각각 처분일로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의 승진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데 반해, 한국노동연구원은 2회 이상의 견책의 경우에 비로소 6개월, 감봉과 정직도 각각 6개월 및 1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견책, 감봉, 정직에 대해 각각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규정하는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다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승진 제한 기간을 달리 규정한 사례>

기관명	징계처분		
	견책	감봉	정직
20개 기관	6개월	12개월	18개월
산업연구원	12개월	12개월	24개월
에너지경제연구원	6개월(12개월)	12개월(18개월)	18개월(24개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개월	6개월	12개월
한국노동연구원	6개월(2회 이상에 한정)	6개월	12개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개월(12개월)	12개월(18개월)	18개월(24개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개월(9개월)	12개월(15개월)	18개월(21개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개월(2회이상에 한정)	12개월	18개월

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괄호 부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채용비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따른 것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각 연구기관은 설립목적, 연구 분야, 조직 규모 및 인사 운영체계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나 징계처분에 따른 인사상 효과를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임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징계의 종류나 승진 제한 기간 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징계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을 기본으로 산정하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 비위, 채용 비리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가산 기간을 두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일부 연구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개 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능률성과급을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아니하고 있음.[134]

13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성과급 및 능률성과급 지급요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수규정, **한국노동연구원**: 별도 규정 없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능률성과급 지급 배제를 명문화하였으나, 규정개정 이전에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자가 56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수령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도 2025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규정개정 이전에 정직 처분을 받은 2명의 직원에게 총 약 41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2024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규정개정 이전에 정직 처분을 받은 자가 650만원의 능률성과급을 수령함.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자에게 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례>

(단위: 천원)

기관명	연도	지급인원	총 지급액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년	1명	1,148
	2025년	1명	5,590
한국개발연구원	2022년	1명	385
	2025년	2명	4,072
KDI 국제정책대학원	2021년	1명	6,293
	2022년	1명	2,4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년	2명	13,400
	2024년	2명	12,400
한국법제연구원	2021년	1명	5,971
육아정책연구소	2021년	1명	37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년	1명	6,48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년	1명	6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능률성과급은 인건비 예산 외에 초과수입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기관의 성과 향상과 우수한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제도인데, 중대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중징계는 조직질서와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넷째, 일부 연구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 후 전문성 활용제도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건축공간연구원 등 13개 기관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직 후 전문성 활용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35]

135) **국토연구원**: 퇴직자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규칙,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공로자우대제도 운영규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로우대자 운영요령, **한국교육개발원**: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준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공로자 임용지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위원 운영지침, **한국법제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규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지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

○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는 기관이 퇴직자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을 연구 및 정책지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에 부합함.

○ 그럼에도 중대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까지 별도의 제한 없이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징계의 실효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시 채용하거나 위촉하는 제도의 취지와도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참여를 제한하거나, 참여 필요성과 적정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종합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직 중 보수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징계 시 승진제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운용하며, 징계자에 대한 능률성과급 지급 및 퇴직 후 전문성 활용제도 참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로우대자 운영지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년 퇴직직원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명예위원 운영지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위원 운용규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로연구위원 임용규칙, **건축공간연구원**: 퇴직자 전문성 활용제도 운영지침

2. 공통: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무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136].

□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137]와

---

1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3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조(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1% 이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로 사용하여야 함.

2) 검토의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개 기관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은 법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1.1% 이상) 실적을 달성하지 못함.

<2025 회계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

(단위: %)

기관명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구매비율	1.1% 준수여부
경제인문연구회	4.04	준수	1.39	준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45	준수	8.14	준수
국토연구원	3.97	준수	2.93	준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45	준수	3.20	준수
산업연구원	2.85	**미준수**	1.98	준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89	**미준수**	2.70	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02	준수	2.58	준수
통일연구원	4.89	준수	2.03	준수
한국개발연구원	3.85	**미준수**	4.87	준수

(단위: %)

기관명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구매비율	1.1% 준수여부
KDI국제정책대학원	3.83	준수	1.25	준수
한국교육개발원	3.71	준수	1.43	준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32	준수	0.92	**미준수**
한국교통연구원	3.81	준수	1.01	**미준수**
한국노동연구원	2.84	**미준수**	3.27	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53	준수	1.10	준수
한국법제연구원	4.03	준수	2.49	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5	준수	6.62	준수
육아정책연구소	3.80	준수	14.11	준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6	**미준수**	7.45	준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1	준수	2.36	준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79	준수	2.23	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13	준수	1.91	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94	준수	1.32	준수
한국행정연구원	2.90	**미준수**	1.25	준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51	**미준수**	3.62	준수
한국환경연구원	4.00	준수	6.79	준수
건축공간연구원	4.17	준수	16.96	준수

주1: 고용률이 3.8% 미만임에도 '준수'로 표기된 경우는 의무고용인원 산정 기준(상시근로자 수*0.038 후 소수점 이하 절사)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은 충족했으나, 환산 고용률이 3.8% 미만으로 나타난 사례임.

주2: 고용률이 3.8% 이상이나 미준수로 표기된 한국개발연구원은 연평균 의무고용률은 충족하였으나, 일부 월에서 미달하여 '미준수'로 표기함.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하여 납부한 부담금은 2024 회계연도(6,347만원)보다 약 34% 증가한 8,515만원에 달함.

<2025 회계연도 고용부담금 납입액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고용부담금 납입액*	부담금 납부재원	
		본예산	이월금·자체수입 등**
산업연구원	9,762	9,762	-
에너지경제연구원	20,964	20,964	-
한국개발연구원	4,881	1,258	3,623
한국노동연구원	11,641	11,64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101	-	5,101
한국행정연구원	27,773	27,773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027	5,027	-
합 계	**85,149**	**76,425**	**8,724**

* 2025년도 결과에 대한 납부금액 기준으로 작성

** 이월금·자체수입: 출연금 이월액, 수탁용역사업 수입, 기타 수입, 이자 수입 등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노동연구원조차 2년 연속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달함.[138]

138)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4회계연도 1.89%(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함 27개 기관 중 최하위), 2025 회계연도 2.8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함 27개 기관 중 26위)에 불과함.

<연도별 한국행정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단위: 명, %, 천원)

연도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의무고용 준수여부	고용부담금 납입액
2022	173.5	6.2	5.9	3.41	미준수	9,117
2023	178.1	6.4	4.9	2.76	미준수	28,708
2024	165.1	6.3	4.3	2.57	미준수	27,411
2025	166.5	6.3	4.8	2.9	미준수	27,773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각 연구기관들은 연구직 중심의 인력구조로 인하여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인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적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라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 전산장비 관리, 도서관 콘텐츠 입력 등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의견임.

□ 연구직 중심의 인력구조와 장애인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장애인 의무고용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음.

○ 특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법정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법령이 추구하는 정책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담금 납부만으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노동·복지·교육·사회정책 등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정책적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별 직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적합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의 활성화,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법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구매계획의 사전 수립과 정기적인 실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공통: 정보화사업의 기본연구사업(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 타당성 검토

1) 연구사업의 분류: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사업)과 일반사업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연구사업을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수탁용역사업, 정부대행사업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기관고유사업은 다시 기본연구사업과 연구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139]

○ 일반사업은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이나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설비와 함께 특수사업으로 명명됨.

<연구사업의 정의>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적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 시 특정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13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23

2)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은 일반사업에서 연구지원사업으로 변경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25 회계연도에는 총 123억 1,300만원의 예산 중 12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정보화 사업의 상당수가 기관고유사업(연구지원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5 회계연도 기관별 정보화 예산>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	예산	결산	시작연도
합계		12,312,601	12,171,22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	302,000	302,000	2010
	출연연 통합 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250,000	1,250,000	2014
	출연연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 사업	1,266,000	1,262,815	2017
	출연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800,000	785,599	2022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구축 및 운영	690,000	689,801	20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40,000	223,098	2010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101,000	99,548	2016
국토연구원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380,000	378,414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350,000	316,862	2007
산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60,000	260,000	2016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0,000	198,964	20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83,000	183,000	2017
통일연구원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59,000	59,000	2010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8,000	440,888	2016
KDI국제정책대학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285,000	284,558	2024
	교육인프라 유지보수 및 시스템 개발	121,000	116,634	2006
한국교육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824,000	824,000	2003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	예산	결산	시작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운영	344,000	344,000	2024
	KICE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00,000	100,000	200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	74,000	74,000	2011
	수능 성적제공 등 보안인프라 구축	70,000	70,000	2021
	교육데이터 공유 선순환을 위한 KICE 지능형 플랫폼 구축	150,000	150,000	2023
한국교통연구원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85,000	85,000	2019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69,000	69,000	2016
한국노동연구원	통합 유지보수 사업	180,331	180,324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사업	145,000	144,838	2019
한국법제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345,000	340,896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257,000	257,000	2011
육아정책연구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35,000	134,991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지식플랫폼 운영 사업	400,000	377,000	2022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270,000	268,240	20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사업	294,270	295,216	200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및 기간계시스템 운영지원	144,000	143,665	2013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90,000	90,000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217,000	216,957	2011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109,000	108,967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210,000	210,000	2015
한국행정연구원	E-KIPA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256,000	241,422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 유지보수	169,000	168,314	2011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96,000	95,474	2011
한국환경연구원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135,000	135,000	2016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64,000	63,740	2016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135,000	132,000	2012

주. 연혁은 해당 사업의 최초 시작연도임.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성격상 한시적 사업이 아닌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운영되는 필수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속적으로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먼저, 비록 여러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편성과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심의를 받는 기관고유사업과 달리, 일반사업은 개별 연구과제마다 매년 재정당국으로부터 그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하는데, 필수사업에 가까운 정보시스템 예산에 대해 매년 존속 여부의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 낭비의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일반사업은 재량지출에 해당하여 舊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0% 이상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필수적인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마지막으로 편성의 비일관성의 문제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과 별도로 기관고유사업에 전산운영사업 등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편성된 정보시스템 사업은 그 지출목적과 내용이 실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화관련 사업은 모두 기관고유사업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정보시스템·전산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전산지원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확충사업	- 바이러스 백신 및 내 PC자킴이 라이선스 계약 - 노후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 대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
국토연구원	정보기술비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자원통합 유지보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보전산운영 사업	-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산업연구원	2023 전산 운영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보안서버(mOTP) 구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정보 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그룹웨어시스템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추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에너지·자원 전산 NETWORK 운영	- 성과확산시스템 고도화 마스터 플랜(ISMP) 수립 -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기록물생산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통합정보시스템 (KEEI-ERP) 웹표준화 및 호환성사업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전산개발 운영	- KISDI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등 유지보수 - 홈페이지 클라우드 이용료 - 백신사용료	KIS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서버 및 스토리지, 차세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 웹메일 보안 SMS 서비스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통일연구원	전산시스템 운영・유지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 항온항습기 및 UPS유지보수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유지	- 노후내부망 자료전송 서버구입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한국개발 연구원	전산개발 및 운용관리	- 하드웨어 구입 - 소프트웨어 사용료 - 경제정보센터 웹시스템 유지보수 - 포탈시스템 및 MIS 기능 고도화 -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KDI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백신 및 보안, 통계 소프트웨어 사용료 - 포탈, 서버, 방화벽, VDI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교육 개발원	정보자료·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한국교통 연구원	전산개발사업	- 신규 웹사이트 보안 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훈련 사업 - 인사노무 전자 시스템 유지 및 기능개선 용역	전산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 연구 및 행정업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 - 문서중앙화 솔루션 유지관리를 위한 에이전트 기능개선 사업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 구축사업	- 보안솔루션 구매비
한국노동 연구원	정보자료 (전산) 운영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 근로시간 관리 기능 개선사업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업무용 전산기기 임차료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 IT인프라,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공간정보 분석용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보안 인프라 운영 사업	- 홈페이지 및 CRM 유지보수 - 노후 DB서버 교체 - 침입탐지시스템 도입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정보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사업	- 각종 라이선스 및 백신 구입 - 정보보호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연구원 국영문 홈페이지,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원내 서버(MIS, CAPI 등)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그룹웨어 및 업무포털시스템 기능개발 및 유지관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지원 전산운영	- 정보보인감사용 PC렌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유지보수대금
			전산실 운영사업	- 전산실 인터넷 전용선, 전기 사용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보시스템 운영	- 기관홈페이지 유지보수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화 시스템 인프라 기능 개선 및 관리·운영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구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산운영부문 운영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계약 - PC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 라이선스 계약 - PC유지보수비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	-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정보 보안 관련 라이선스 계약

기관	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사업명	주요 지출내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화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정보시스템 인프라개선 기간계시스템 운영 지원	-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서버 변경사업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HRD웹정보서비스 생성·운영사업	- 리포지터리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등	사이버 보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운영	-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웹메일 및 메신저 유지보수 - 전자도서관 솔루션유지보수 - 원대표홈페이지 기능수정 개선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전산장비유지보수 - H/W 통합 유지보수
			정보자원 인프라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 소프트웨어 구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산개발 및 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정보보안시스템 및 전산망 운영유지 보수	- KMI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행정연구원	전산운영	- 각종 업무용 라이선스 구매	E-KIPA지식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한국환경연구원	전산운영	- KEI 연구 업무 시스템 서버 SSD교체 및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	KEI 정보 인프라시스템 유지보수	- KEINS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KEI 백업시스템 등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 KEI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인프라 확충 용역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사업	- 보안 소프트웨어 임차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정보화사업비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

음.[140]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정보화사업비를 일반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기관고유사업비가 기관운영비에 속하는데,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비의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일반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의 상당수는 10년 이상 계속 수행되어 온 상시·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연구기관의 연구지원과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기관고유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비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만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화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상시적·경상적인 정보화 사업을 선별하여 해당 사업부터

140) 2026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은 한시적 사업을 위한 일반사업비에 연구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보화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관고유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한다.

단계적으로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예컨대, 신규 시스템 구축, 대규모 기능개선 등 종료 예정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두되, 상시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은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141)]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연구 정책의 지원과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30억 8,100만원 중 223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122	22,122	959	-	-	23,081	22,312	241	528	32,366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보완 필요 등

(1)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 보완 필요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생산한 정책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지식 플랫폼으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141) 세부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1531-301)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지식정보법")에 따른 국가지식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142]

○ 2022년 4월 기준 국가정책연구포털에는 약 8만 9천여 건의 정책연구 성과물이 구축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및 정책연구의 활용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정책지식 인프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025 회계연도의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사업은 예산현액 3억 3,7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정책연구포털 운영·서비스	302	302	35	-	-	337	337	-	-	30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가정책연구포털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지식정보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에 해당함.

○ 국가지식정보법 제8조[143]는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을

14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143)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①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실태 점검, 국가기관 간 협의·조정 등 국가지식정보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144)

<법령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기관 및 직위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위원장
재정경제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교육부차관	위원(법률)
행정안전부차관	위원(법률)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위원(법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위원(대통령령)
산업통상부차관	위원(대통령령)
보건복지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고용노동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국토교통부차관	위원(대통령령)
해양수산부차관	위원(대통령령)
기획예산처차관	위원(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위원(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위원(법률)

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4)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러나 국가정책연구포털의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 현행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국가정책연구포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고, 구축된 연구성과물의 대부분 역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정책연구 결과물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무조정실 소관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국가지식정보의 주요 생산·관리 주체를 소관하는 국무조정실은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국가지식정보위원회는 단순히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가지식정보의 구축·활용 정책과 국가기관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정책연구포털의 운영기관을 소관하는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정책 수립과 집행 간 연계성 및 거버넌스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국가정책연구포털의 운영 방향, 연구성과의 개방·활용 확대, 정책연구정보의 연계 및 품질관리 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심의·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정책연구포털의 운영체계와 국무조정실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리·감독 기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 AI 구독 예산 편성기준 마련 필요

□ ‘생성형 AI’[145]는 연구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조사와 같은 연구업무뿐만 아니라 기획·인사 등 연구지원 업무에서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4개 출연연구기관[146]의 연구지원부서는 2025년도에 총 1억 2,732만원을 생성형 AI 구독료로 집행하였음.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AI 구독료 집행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부서 유형별 집행 금액								
	합계	경영기획	홍보	인사	총무	예산	회계	감사	기타
총계	127,322	33,602	13,640	6,796	4,235	12,413	6,435	5,232	44,969
연구회	17,967	-	-	-	-	-	-	-	17,967
과학	8,669	2,752	2,046	296	296	590	590	329	1,770
국토	4,376	4,194	44	-	138	-	-	-	-
대외	3,987	417	417	417	-	417	417	417	1,485
산업	1,896	-	-	-	-	-	-	-	1,896
에너지	10,108	3,849	482	482	482	482	482	-	3,849
정보	4,230	1,566	821	-	-	1,843	-	-	-
통일	3,340	2,905	244	191	-	-	-	-	-
KDI	2,666	1,396	382	-	-	-	-	-	888
대학원	9,817	524	1,501	1,090	797	586	1,090	494	3,735
교육	1,036	-	192	-	-	173	-	480	191
평가원	993	-	380	-	-	-	-	-	613
교통	3,171	993	-	-	-	2,178	-	-	-
노동	6,626	2,766	-	72	46	1,355	237	23	2,127

145) ChatGPT, Gemini등
146)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해당사항 없음.

기관명	부서 유형별 집행 금액								
	합계	경영기획	홍보	인사	총무	예산	회계	감사	기타
농촌	9,197	3,429	845	901	-	917	980	1,279	846
법제	3,954	-	-	-	-	-	-	-	3,954
보사	2,545	273	307	202	170	173	171	-	1,249
여성	542	-	-	-	-	-	-	-	542
조세	2,437	162	162	325	325	162	325	488	488
청소년	2,609	-	731	-	-	-	-	128	1,750
해양	155	155	-	-	-	-	-	-	-
행정	5,751	1,417	1,084	760	570	987	203	345	385
형사	7,388	1,347	970	1,173	579	1,482	872	576	389
환경	6,881	1,402	2,610	422	422	336	422	422	845
건축	6,981	4,055	422	465	410	732	646	251	-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그런데 기관별 연구지원부서에서 생성형 AI 구독료로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구독료임에도 연구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 다양한 예산 비목으로 집행하였음.

<연구지원부서의 생성형 AI 구독료 집행 사업·비목 현황>

부서	집행사업	비목
경영기획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운영비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홍보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구개발적립금	수용비
인사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부서	집행사업	비목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총무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공공요금
	경상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회계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감사	연구지원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
	경상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기관별 생성형 AI 예산 편성 비목이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2025년 8월 기관 설명회를 통해 연구정보활동비로 편성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2026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함[147].

□ 그런데, 연구정보활동비는 연구사업비에 편성 가능한 비목으로,

147) 「2026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 p. 31
사업비 (7) 연구정보활동비
(가) 정의: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
(나) 세부지침 중 일부
- 연구사업 내 AI 활용 시 투명성·재현성·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국책연구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며, 보안·개인정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연구정보활동경비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AI 기반 서비스·도구 활용 경비 등
연구자료구입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비
특근매식비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경상운영비에는 별도의 연구정보활동비 비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연구지원사업비 내 관련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서에서는 생성형 AI 구독료를 기관별로 서로 다른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가능성이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지출예산 각목명세서 양식(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관	항	세항	목
Ⅱ. 연구사업비	1. 기관고유사업비		사업인건비
	가. 기본연구사업	○○○부문	공공요금
	나. 연구지원사업	○○○부문	수용비
	2. 일반연구사업비	○○○부문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3. 청년인턴쉽운영	○○○부문	여비
	4. 수탁용역사업비	○○○부문	연구정보활동비
	5. 정부대행사업	○○○부문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Ⅲ. 경상운영비	1. 기본공과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자산관리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3. 인력관련경비		비정규직인건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교육훈련비
			채용경비
	4. 기타운영비		수용비
			전문가활용비
			여비
			외부용역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 생성형 AI 구독료는 업무수행에 활용되는 도구의 이용료라는 점에서 기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동일한 성격의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경우 기관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저해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구독료 예산의 편성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산업연구원[148]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기술, 산업별 통상 및 지역산업에 관련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산업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56억 5,300만원 중 242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산업연구원	23,973	23,973	1,680	-	-	25,653	24,282	1,300	71	30,23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예산 편성 및 파견인력 운영 개선 필요

□ 산업연구원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149]과의 실질적인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148) 세부사업: 산업연구원(1535-301)

149)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10개국임.

정책지원을 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운영하고 있음.

○ 센터의 2025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00만원을 합친 8억 2,200만원으로 그 산출 근거는 사업인건비(비정규직 인건비) 1억 4,200만원,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억 4,200만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억 4,300만원 등으로 구성됨.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동남아 정책연구협력센터	745	745	77	-	-	822	822 (742)	80	-	633
- 사업인건비	142	142	-	-	-	142	142 (138)	4	-	118
- 공공요금	1	1	3	-	-	4	4 (3)	1	-	1
- 수용비	32	32	4	0	0	36	36 (24)	12	-	32
-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85	85	57	-	-	142	142 (118)	24	-	128
- 여비	89	89	-	-	-	89	89 (77)	12	-	118
- 연구정보활동비	2	2	-	-	-	2	2 (-)	2	-	2
- 전문가활용비	30	30	-	-	-	30	30 (21)	9	-	5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센터는 본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연락사무소로 구성되는데, 본부는 아세안 관련 정책의제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부처·유관기관

과의 협력 및 지식 축적을 담당하는 정책 기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현지 연락사무소는 현지 대사관,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정부, 현지에 진출한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정보 수집, 사업 협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아세안 현지 연구를 지원하는 현장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었음.

□ 본 사업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와 예산집행율 부진, 예산편성 및 파견인력의 구성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정 및 재검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함.

○ 산업연구원은 현지 연락사무소 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당 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있음.

○ 즉, 산업연구원은 2025 회계연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파견 인력의 인건비 약 8,100만원과 거주지 및 차량 임차료 4,9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본 사업의 예산에서 집행하였음.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인건비 등에 사용되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해당 비용의 적정 예산과목 편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산업연구원이 두고 있는 북경지원사무소를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 등은 모두 기본운영비 예산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출은 집행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해외사무소 파견인력의 출연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사무소명 (사업명)	인건비 (지출 예산과목)	임차료 (지출 예산과목)	기타 (지출 예산과목)	합계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운영)	343,926 (기본운영비)	88,449 (기본운영비)	9,557 (기본운영비)	441,932
	KIEP 델리사무소 (KIEP 델리사무소 운영)	296,561 (기본운영비)	111,489 (기본운영비)	6,603 (기본운영비)	414,653
산업연구원	**자카르타 연락 사무소 (한-동남아 정책연구 협력센터 운영)**	**81,065 (사업비)**	**49,000 (사업비)**	**2,600 (사업비)**	**132,665**
	북경지원 사무소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사업)	60,000 (기본운영비)	36,000 (기본운영비)	-	96,000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운영)	239,810 (기본운영비)	70,756 (기본운영비)	-	310,566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운영)	189,484 (기본운영비)	52,755 (기본운영비)	-	242,23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다음으로, 파견인력의 구성 측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직원의 파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5년까지 현지사무소에는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 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1명을 파견하였고, 이 중 연구회 파견직원은 국가별 정책연구 기획,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아세안 역량강화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50]

<현지 연락사무소 인력구성 현황>

소속	직위	주요 역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장)	업무총괄 - 대사관 정책지원 - 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 대응 - 사무소 운영 총괄(행정 및 회계 등)
연구회	전문위원 (파견 중)	연구기획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 국가별 맞춤형 정책연구 기획 -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 및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 아세안 지역 역량 강화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파견종료)	산업협력 및 민간부문 네트워킹 - 산업계 현장 의견 청취 및 반영 - 현지 진출 기업 네크워킹

(자료: 산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을 파견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개별 연구기관 간 업무조정 및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의 파견은 신중

150) 2026년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 직원 파견은 종료되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의 파견만 이루어지고 있음.

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설립목적 측면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조정과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관리·지원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현지사무소의 운영에 연구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연구회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둘째, 파견직원의 역할과 업무성과의 측면에서, 2025 회계연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직원이 현지사무소에서 달성한 업무성과는 일부 국제세미나 공동 기획 외에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셋째, 다른 연구사무소와의 비교 측면에서 보면, 산업연구원의 본 현지사무소 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다른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연구회 직원이 별도로 파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각 해외사무소 인적 구성 현황(2025년)>

(단위: 명)

기관명	사무소명(소재지)	인력		
		본원 파견	타기관 파견	현지 채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 (중국 북경)	2	-	3
	KIEP 델리사무소 (인도 뉴델리)	2	-	2
산업연구원	자카르타 연락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	2	-
	북경지원 사무소 (중국 북경)	1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 사무소 (중국 북경)	1	-	1

(단위: 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중국 상해)	1	-	1

* 현지 채용 인력은 비정규직 인력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해외 현지사무소는 현지 연구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회가 직접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6. 에너지경제연구원[151]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에너지경제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에너지 시장과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27억 4,900만원 중 120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에너지경제연구원	12,374	12,374	375	-	-	12,749	12,047	238	464	25,486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노트북 등 휴대용 자산관리체계 개선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서는 각 연구기관의 자산관리책임자는 적정한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총괄적인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151) 세부사업: 에너지경제연구원(1536-301)

하도록 하고 있음.[152]

□ 이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부 '회계규정' 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153]

□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산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자산의 파손 및 분실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산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3년 3건, 2024년 1건, 2025년 4건의 노트북 파손 또는 분실 신고가 있었고, 제출자료에 따르면 모두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노트북 파손 및 분실 현황>

(단위: 원)

연도	사유 및 건수	손실단가
2023년	개인 부주의에 따른 파손 1건	352,784
	개인 부주의에 따른 분실 2건	322,592
		397,592
	소계(3건)	**1,072,968**
2024년	개인 부주의에 따른 분실 1건	1,165,683
	소계(1건)	**1,165,683**
2025년	개인 부주의에 따른 분실 3건	822,122
		367,200
		359,040
	개인 부주의에 따른 파손 1건	367,200
	소계(4건)	**1,915,562**
총계	**8건**	**4,154,213**

(자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 p. 23

153) 제38조(재고조사) 재고조사는 년 1회 이상(기말을 필히 포함)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장부가격과 대조하여 소정의 증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다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비교하여 노트북 손실·망실 신고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비록 자산을 손실하거나 망실한 직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변상금은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동일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데 추가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산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2024년과 2025년에는 도서자료의 손·망실 신고도 확인되었는데, 노트북 및 도서자료의 파손 및 분실 사례 가운데 상당수[154]는 퇴직 예정자가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퇴직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파손이나 분실이 확인된 사례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실제 자산의 분실 또는 훼손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자산관리의 적시성과 추적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이러한 사례는 연례적인 재물조사만으로는 자산의 실제 보유 여부와 관리상태를 적시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154) 2023년부터 2025년까지 8건의 노트북 파손 및 분실 사례 중 5건, 2025년의 도서자료 분실 사례는 모두 퇴직 예정자가 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것임.

것으로, 자산의 사용·이동·반납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 따라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자산 파손 및 분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노트북 등 휴대용 자산의 사용·반납 등에 대한 관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퇴직절차 이전에 자산 반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휴대용 자산의 정기적인 현황 확인, 직원 대상 자산관리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포함)[155]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개발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 연구 수행과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90억 7,500만원 중 467억 9,100만원이 집행되고, 10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개발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개발연구원	47,316	47,316	1,759	-	-	49,075	46,791	1,033	1,251	61,268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소속의 전문교육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20억 500만원 중 212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155) 세부사업: 한국개발연구원(1539-301)

6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000만원이 불용됨.

〈2025회계연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21,407	21,407	598	-	-	22,005	21,214	641	150	22,929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해외연수·학술파견제도 성과관리 강화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기관운영비를 통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연수와 학술 목적의 연구 파견을 행하고 있음.

○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회계연도에 소속 직원 9명을 대상으로 업무연수 목적으로 총 약 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국개발연구원의 업무연수 집행내역〉

(단위: 천원)

장소(연수기간)	출장자 직급	집행액
미국(2024.10.~2025.2.)	전문위원	12,379
캐나다(2025.12.~2026.2.)		11,319
캐나다(2024.12.~2025.4.)		29,477
일본(2025.4.~2025.7.)		31,233
스페인(2025.5.~2025.6.)		21,117
독일(2025.7.~2025.10.)		30,215
미국(2025.5.~2025.8.)		24,288
필리핀(2025.12.~2026.2.)		6,572
미국 하와이, 일본(2025.12.~2026.4.)		10,189
총계		176,789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 또한,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각각 1~2년의 기간으로 소속 연구자를 외국의 대학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하였는데, 2025회계연도가 포함된 전체 파견기간에 대한 총 집행액은 각각 약 5억 4,900만원, 9,600만원임.

<기관별 학술파견·국제기구파견 집행내역>

(단위: 천원)

기관명	출장자 직급	파견기관	기간	집행액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ECD	2023.2.~2025.3.	210,035
	연구위원	World Bank	2025.5.~2027.6.	115,037
	선임연구위원	UC San Diego	2024.8.~2025.9.	72,142
	연구위원	UC San Diego	2024.8.~2025.9.	59,950
	선임연구위원	베트남 사회과학원	2025.9.~2026.9.	51,673
	선임연구위원	UC San Diego	2025.12.~2027.1.	40,480
	소계			549,317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George Washington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24.1.~2025.1.	58,656
	교수	George Washington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25.5.~2025.12.	37,562
	소계			96,218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업무연수 및 학술 파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됨.

○ 첫째, 업무연수 제도가 업무역량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2025회계연도에 파견되었던 9명의 출장자가 제출한 업무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면, 파견자 중 6명은 해외 소재 학원 등에서 어학 연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부 연수자는 주요 연수 내용으로 '기본단어 외우기 및 쓰기' 등을 적시하여 제출하였고,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회화 프로그램 수강을 연수 내용으로 작성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또한, 일부 연수자는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 세미나 참가 실적을 제출하거나, 방문한 도시의 일반 현황을 연수 내용으로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업무연수가 기관의 업무역량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둘째, 두 기관이 운영하는 학술 목적의 파견 제도 역시 파견목적에 상응하는 성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음.

2025회계연도 한 해 기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해외 기관에 학술 목적으로 파견된 바 있는 6명의 연구자 중 파견이 종료된 3명의 연구자가 제출한 파견 성과보고서를 보면,

OECD에 파견된 선임연구위원은 파견 기간이 2년이 넘는데도, 분기별 1페이지의 활동보고서와 6페이지의 결과보고서만 제출[156]하였고, UC San Diego에 파견된 2명의 연구자는 국내사례와 국내 데이터

156) 한국개발연구원은 OECD에 파견된 연구자는 OECD 내에서 회원국 재정제도 연구, 고위예산당국자 회의 및 재정 포럼 지원 등의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답변함.

만을 이용하여 연구[157] 결과를 도출하였는바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 전문 교육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파견된 2명의 교수가 제출한 연구결과도 총 30페이지 남짓의 짧은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들 연구 모두 미국 현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가 아닌 파견자 단독 연구로서 미국의 정책 경험이나 사례보다는 기존 국내연구 등에서 검증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거나, 심지어 수치 오류, 표(table) 또는 그래프(figure) 누락,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문구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158]

아울러 2025년 1월에 종료된 파견의 경우 1년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부규정[159]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현

157) 해당 연구보고서는 각각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한 소득지원 연구: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연구'임.

158)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파견 연구를 종료한 교수의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데, 논문의 초록과 본문에서는 노령의존율이 1% 증가할 때마다 국가채무 비율이 0.3%~0.4% 증가한다는 결론을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검증표에 따르면 노령의존계수가 3.794(FE), 3.783(RE), 3.308(FGLS)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노령의존율 1% 상승 시 국가채무비율이 3.7%~4.2% 증가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 결론과 근거가 불일치 함. 또한, 2025년 12월에 파견을 종료한 교수의 연구주제는 '한국 노년층의 기술 수용 행태'인데, 서론에서 논문작성자가 추후 보완하겠다고 단순 메모해둔 내용이 보완 없이 그대로 최종본에 적시된 채 제출됨.

By 2023, this percentage doubled to 10 percent, with 804 million people. It is projected to double again by 2070, reaching 20.01 percent of the total global population. (UN, 2024). (add comparison between advanced vs. developing countries).

159) KDI 국제정책대학원 학술파견시행규칙 제13조(결과보고) ③ 전항의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저널에 발표하거나 연구원의 계간지, 단행본, 연구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학술파견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료 및 기타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재까지 발간이 지연되고 있음.

□ 업무연수와 학술 목적의 해외파견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해외에 파견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연구기관 전체의 연구역량 향상으로 환류시키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현재 두 기관은 업무연수 및 학술 파견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것 외에 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구성과를 다음 파견자 선정이나 제도 운영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해외 업무연수 및 연구 파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연구 파견의 경우,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향후 파견자 선정과 제도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업무연수 결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대외에 공개하여 성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연구기관 구성원과 정책수요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투입에 따른 공공성과 성과의 활용도를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업무연수는 직원 복지 차원의 해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의 정책연구 역량과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학원 중심의 연수는 최소화하고 연구·정책 분야와 연계되는 전문교육, 국제기구 연수 및 현지 연구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성과 중심의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8. 한국교육개발원[160]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 해결과 미래 교육을 위한 종합적·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적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25년 예산현액 223억 6,500만원 중 21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5,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개발원	22,079	22,079	286	-		22,365	21,315	195	855	28,624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한국교육 종단연구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 사회이동 등)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을 위한 기본연구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5억 9,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160) 세부사업: 한국교육개발원(1540-301)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실태조사 연구는 교육단계별 학교 수준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가수준의 주요 지표체계와 연동한 교육지표 산출 근거를 제공하는 등의 일반연구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4억 9,600만원 중 4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이월하였음.

수요맞춤 고등교육성과 정보 관리 체계 구축 연구는 대학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 성과 정보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출하고 있는 양질의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공개하여 대학 수요자의 실제적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일반연구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3억원 중 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본연구) 한국교육 종단연구	582	582	8	-	590	590	-	-	603
(일반연구) 공교육 모니터링연구	460	460	36		496	475	21	-	405
(일반연구) 고등교육 성과관리 (한국의 고등교육 동향)	300	300	-	-	300	297	3	-	3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은 동 연구원의 조사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학술·현장 연구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에 ‘제19회 KEDI[161]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제19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개요>

○ 행사목적: KEDI 조사 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학술·현장 연구 활성화 등
○ 일시: 2025. 12. 4.(목), 09:30 - 17:10
○ 장소: aT센터 3층, 세계로룸 Ⅰ~Ⅲ, 미래로룸 Ⅰ~Ⅱ(총 5실)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주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참여인원: 연구자, 교수, 대학원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250명
○ 행사 운영
- 발표: 연구논문 분과(13개)별로 3 ~ 4편, 총 41편 발표
- KEDI Insight Wall: 연구, 사업 소개 포스터 총 12편 게시
- 대학원생 경진대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내 별도 세션으로 진행(수상작 5편 발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동 학술대회는 2007년부터 2022까지 한국교육 종단연구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부터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 연구 등 학술대회 참여 연구과제 수와 관련 예산 및 집행액이 증가하였음.

16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최근 3년간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개최 현황>

(단위: 만원)

구분	17회(2023년)	18회(2024년)	19회(2025년)
일시/장소	2023. 11. 24.(금) 09:30 ~ 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024. 12. 12.(목) 13:30 ~ 18:00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	2025. 12. 4.(목) 09:30 - 17:10 aT센터 3층(세계로룸, 미래로룸)
참석자	약 300명	약 250명	약 250명
참여 과제 수	2개 - 한국교육종단연구 -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연구	4개 - 한국교육종단연구 -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연구 -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 공교육모니터링연구	6개 - 한국교육종단연구 - 대학교육혁신모니터링연구 -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 공교육모니터링연구 - 평생학습실태조사 - 고등교육성과관리연구 (한국의 고등교육 동향)
예산액	4,927	4,982	6,163
집행 총액	4,326	4,874	6,08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은 당초 동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기본연구사업인 한국교육종단연구와 일반연구사업인 공교육모니터링연구 및 고등교육성과관리에 6,16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외 기타 13개 사업에서 2,046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전체 집행액은 8,134만원임.

<제19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 관련 편성·집행내역>

(단위: 만원)

구분	편성액[162]	집행액	비고
한국교육종단연구	2,118	2,088	대학원생 경진대회 심사 수당 등(1,660)
			행사 식대 등 회의비(588)
			행사장소 임차료 등(513)
			행사 물품 등(101)
			행사 관련 직원 출장(180)
공교육모니터링연구	2,545	2,500	행사 지원 용역 대금(2,500)
			행사 관련 직원 출장(22)
고등교육성과관리 (한국의 고등교육 동향)	1,500	1,500	자료집 복사 제본비(160)
			발표수당 등(150)
			식대 등 회의비(43)
			행사 지원 용역 대금(15,000)
			행사 관련 직원 출장(142)
기타 13개 사업[163]	-	2,046	연구기자재임차료 및 전문가활용비(139) 행사 관련 직원 출장 등 기타(1,907)
합 계	**6,163**	**8,13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행사 운영비 및 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비 등을 분산하여 집행하는 것은 출장비는 각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 행사의 개최·참여와 관련된 비용이 다수 사업에 분산 계상됨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된 전체 재정 규모와 개별 사업별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62) 2025년도 각목명세서상 편성된 내역

163) 교사쏠림현상과 대응방안 연구(기본연구과제), 데이터기반 대학교육혁신 모니터링 연구(Ⅲ) 및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Ⅴ)(일반연구과제), (이하 수탁연구과제)2025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사업, 2025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시도분담금)_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방안, 유·초·중등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 교육통계 DB제공 및 분석 서비스, 유·초·중등 통계연보 발간 프로그램 개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25년 늘봄중앙지원센터 운영 사업, 2025년 국가 영재교육 지원 사업

□ 또한 참여 연구과제 수는 2023년 2개에서 2025년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등 6개로 증가하였음에도 행사 운영비는 한국교육종단연구, 공교육모니터링연구, 고등교육성과관리 등 특정 사업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어 있어 비용부담 기준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164]에 따르면,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회의, 번역, 간행물 발간 등을 하는 사업은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동 학술대회는 특정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연구성과 확산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164) **<연구기관 연구사업 구분>**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 (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자료: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 운용지침)

□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기관 차원의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와 같이 연구성과 확산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연구지원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개별 연구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술대회와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 및 사업별 비용부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행사 운영에 투입된 전체 재정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165]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260억 4,700만원 중 25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021	26,021	26	-	-	26,047	25,854	73	120	38,48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연구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KICE 학습포럼 운영 필요

□ KICE[166] 학습포럼은 교육 현안 및 최신 연구 동향 관련 발표 등을 통해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 방향 제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200만

165) 세부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1541-301)
166)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연구지원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2	12	-	-	-	12	12	-	-	12

(자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5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학습포럼의 목적을 ①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방향 제시 역량 제고, ② 원내 구성원의 연구 및 업무 역량 향상, ③ 임직원 소통 활성화 및 사기 진작 등임.

<2025년도 KICE 학습포럼 사업계획>

▣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교육 현안 및 최신 연구 동향 관련 발표 등을 통해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 방향 제시 역량 제고
- 원내 구성원의 연구 및 업무 역량 향상 기회 제공
- 다양한 포럼 콘텐츠 제공에 따른 임직원 소통 활성화 및 사기 진작

▣ 주요 사업내용

- 교육 관련 주제 발표 및 토론
- 외국의 교육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연구 역량 및 업무 역량 제고
- 기획 및 예산 관리 등에 관한 직무 교육 및 시사·교양 교육 운영

▣ 주요 사업계획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등 원내 직원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포럼 주제 설정
  - 경영혁신, 미래교육, 생활·건강, 인문·사회 교양 등의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되, 특히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추진
- 학습포럼 참여율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
- 합숙 일정이 집중되는 10월 이전에 모든 학습포럼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기관 행사 또는 업무일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일정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다양한 인문학 주제 및 생활 강좌를 통한 원내 직원의 교양 신장
- 전문적 주제를 통한 원내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기여
- 정보 공유 및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유대감 강화
- 차년도 기본연구과제 발굴 및 중·장기 연구 방향 제시 등 연구 역량 제고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근 5개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총 28회 학습포럼을 실시하였고, 연구자 등의 결과발표를 포함하여 교육정책, 교육평가, AI 기반 교육혁신, 교육데이터 분석, 연구방법론 등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과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 이외에 '지구멸망시나리오', '우리원 직원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등 다수의 인문교양·건강관리·문화예술·재테크 등 일반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KICE 학습포럼 운영 실적>

연도	회차	주제	강사	일시 및 장소
2021	1	2020년 연구연가 결과 발표회	2020년 KICE 연구연가자	3.24.(수) 09:30, 원내 회의실
	2	AI와 융합교육	남00 (고려대학교)	4.28.(수) 10:00, 원내 회의실
	3	**지구멸망시나리오 - 소행성에 대한 위협**	**조00 (한국천문연구원)**	**6.23.(수) 10:00, 원내 회의실**
	4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관련 대처 방안**	**이00 (동아S&C)**	**7.28.(수) 10:00, 원내 회의실**
	5	**우리원 직원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김00 (인하대학교)**	**8.25.(수) 10:00, 원내 회의실**
	6	**마술같은 미술-생각을 여는 미술 이야기**	**양00 (한국예술종합학교)**	**9.15.(수) 10:00, 원내 회의실**
2022	1	2021년 연구연가 결과 발표회	2021년 KICE 연구연가자	3.30.(수) 09:30, 원내 회의실
	2	미래교육과 에듀테크	계00 (KERIS)	4.13.(수) 10:00, 원내 회의실
	3	**인칭의 미학으로서 인문학**	**유00 (한양대학교)**	**6.29.(수) 10:00, 원내 회의실**
	4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신00 (한국환경연구원)**	**7.20.(수) 10:00, 원내 회의실**
	5	**디지털 화폐 경제**	**홍00 (홍익대학교)**	**8.30.(화) 10:00, 원내 회의실**
	6	플랫폼 경제 생태계와 교수학습 환경의 진화	조00 (이화여자대학교)	9.21.(수) 10:00, 원내 회의실
2023	1	Chat GPT로 바라본 High Touch High Tech	고00 (EBS)	3.23.(목) 10:00, 원내 회의실
	2	2022년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 시행결과 보고 및 평가회	2022년 KICE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자	3.28.(화) 09:30, 원내 회의실
	3	NDIS(NRC Data Information System)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노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5.(수) 10:00, 원내 회의실
	4	컴퓨터 적응형 학습의 동향과 혁신 방향	한00 (GMAC)	4.25.(화) 10:00, 원내 회의실
	5	**과학이 가르쳐준 것 들-과학자의 대화법**	**이00 (전, 국립과천과학관)**	**7.18.(화) 10:00, 원내 회의실**
	6	**탄소 중립 시대, 전기차의 역할 및 소비자 인식**	**권00 (국민대학교)**	**8.30.(수) 10:00, 원내 회의실**
2024	1	2023년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 시행 결과 발표 및 평가회	2023년 KICE 연구연가자 및 국외연수자	3.27.(수) 10:00, 원내 회의실
	2	AI × 인간지능의 시대	김00 (경희대학교)	5.29.(수) 10:00, 원내 회의실

연도	회차	주제	강사	일시 및 장소
	3	ESG 이해와 경영	박00 (성남문화재단)	7.31.(수) 10:00, 원내회의실
	4	AI 디지털교과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안00 (경인교육대학교)	9.25.(수) 10:00, 원내 회의실
	5	인공지능과 연구윤리	이00 (대학연구윤리협의회)	10.02.(수) 10:00, 원내 회의실
2025	1	2024년도 연구연가 및 국외연수 결과 보고	2024년 KICE 연구연가자 및 국외연수자	3.19.(수) 09:30, 원내 회의실
	2	모던의 탄생: 오르세 미술관 콜렉션을 통해 만나는 19세기 프랑스	박00 (아주대학교)	4.23.(수) 10:00, 원내 회의실
	3	항생제, 역사와 미래	고00 (성균관대학교)	7.2.(수) 10:00, 원내 회의실
	4	연금과 자산을 키우는 투자습관의 힘	이00 (연금비타민Lab)	8.20.(수) 10:00, 원내 회의실
	5	귀족 시대의 노스탤지어: 귀족적 이상과 사회적 차별화의 욕망	임00 (선문대학교)	10.1.(수) 10:00, 원내 회의실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2025년에는 전체 5회 중 연구 관련 프로그램이 연구연가 결과보고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4회는 미술사·항생제 역사·재테크·귀족문화 등 연구기관의 핵심 기능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주제로 운영되었음.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167]에 따르면 연구지원사업은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16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운용지침」
▢ 연구사업 정의

□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습포럼은 연구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학습포럼의 주제가 연구사업 전반의 수행 지원 또는 연구역량 향상과 일정 수준 연계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 학습포럼이 인문교양·문화·재테크 등 일반 소양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될 경우, 해당 예산은 연구지원사업비로 편성하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향후 학습포럼 운영 시 교육정책, 교육평가, AI 기반 교육혁신, 교육데이터 분석, 연구방법론 등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과 직접 연계된 프로그램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평가하는 등 사업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10. 한국노동연구원[168]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고용·노동·사회정책 개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63억 6,300만원 중 157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노동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노동연구원	16,244	16,244	119	-	-	16,363	15,786	198	379	21,017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68) 세부사업: 한국노동연구원(1543-301)

2) 검토의견: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등

(1) 연구개발적립금 제도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개발적립금 7,900만원 중 자체연구개발 및 기관발전사업에 7,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67	-	12	-	79	76	3	-	15
자체연구개발	-	-	-	-	32	29	3	-	-
연구지원인프라	-	-	-	-	-	-	-	-	15
교육훈련	-	-	-	-	-	-	-	-	-
기관발전	-	-	-	-	47	47	-	-	-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	-	-	-	-	-	-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출연연구기관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69]에 따라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또는 연구개발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을 부족한 퇴직급여충담금에 우선 적립 후 남은

16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부출연연구기관>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기관의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선적립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 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 후 그 잔여재원을 능률성과급*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170]에 따르면,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개발·교육훈련·기관발전 및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제5항은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적립금 사용계획에는 연례적·경상적 경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이 연구개발과 기관 발전을 위한 전략적·일시적 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적립금 7,900만원 중 4,700만원(59.5%)을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으로 집행하였음.

---

170)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적립금의 사용)**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자체연구사업
2. 연구지원·인프라사업
3. 교육훈련사업
4. 기관발전사업
5. 기타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② 연구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적립금 사용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사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사용계획 변경시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사업소요 중 정부출연금 매칭사업 및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④ **사용계획 수립 시에는 제1항제1호의 자체연구사업 비중을 당해 연도 적립금 총 사용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당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연례적 경상적 경비를 포함할 수 없다.**

<2025회계연도 연구개발적립금 세부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자체연구	AI기반 제조업 혁신과 고용	32	29	91.1
기관발전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47	47	100.0
합 계		**79**	**76**	**96.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2025년도 직장어린이집 원아 증가로 기관부담금이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기관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동 부담금 부족분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171].

□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0조[172]에

---

5) 한국노동연구원 2025회계연도 지출부에 따르면, 5월~10월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 4,7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집행하였고, 1월~4월, 11월~12월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 5,100만원을 인력관련경비(복리후생비)로 집행하였음.

17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운영비로서, 원아 수에 따라 금액의 증감은 있을 수 있으나 기관 운영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함.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기관부담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명, %)

연도	당초 경상운영비 중 편성액	집행액	부족분	연평균 원아 수	비고
2022	40,800	64,996	△ 24,196	11	부족분은 경상비로 집행
2023	40,800	58,002	△ 17,202	10	
2024	48,000	68,444	△ 20,444	12	
2025	48,000	98,366	△ 50,366	18	부족분 중 4,700만원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336만원은 경상비로 집행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개발적립금은 정부출연금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자체연구사업, 연구인프라 구축 및 기관 발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기관의 연례적·경상적 운영비를 충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적립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이번 사례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었다는 절차적 적정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사회 의결만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적립금 사용은 관리규정이 예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어린이집 기관부담금과 같이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는 기관의 일반 운영예산에서 편성·집행하고, 연구개발적립금은 자체연구사업, 연구인프라 구축 및 기관발전사업 등 관리규정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적립금을 연례적·경상적 경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연구기관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제5항의 ‘연례적 경상적 경비’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심사 시 경상경비 편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사업 간 예산 혼용 집행 개선 필요

□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연령대별 임금 격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실증 분석 등을 위해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3,6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본연구사업 중 '연령대별 임금격차연구'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연령대별 임금 격차연구	36	36	-	-	-	36	34	2	-	-
- 공공요금	0.7	0.7	-	-	-	0.7	0.7	0.0	-	-
- 수용비	2.8	2.8	-	1.7	-	4.5	4.4	0.1	-	-
- 연구기자재및임차료	-	-	-	7.9	-	7.9	7.6	0.3	-	-
- 여비	9.7	9.7	-	△7.5	-	2.2	1.7	0.5	-	-
- 연구정보활동비	2.8	2.8	-	3.5	-	6.3	6.0	0.3	-	-
- 전문가활용비	7.8	7.8	-	△1.5	-	6.3	5.8	0.5	-	-
- 회의비	2.7	2.7	-	2.5	-	5.2	4.9	0.3	-	-
- 외부용역비및부담금	9.5	9.5	-	△6.5	-	3.0	3.0	0.0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본연구사업인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한국재정학회와 ‘연령대별 임금격차의 거시모형 분석’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당초 해당 연구과제의 예산만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연구사업인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의 예산을 함께 분담하여 집행하였음.

〈 ‘연령대별 임금격차의 거시모형 분석’ 위탁비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과제명	집행액	위탁계약명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기본연구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	3,000	연령대별 임금 격차의 거시모형 분석	한국재정학회	2025. 6. 27. ~ 2025. 11. 15.	9,900
일반연구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	6,9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한편,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173]은 연구사업

173)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연구사업>

구분	내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을 기본연구사업, 연구지원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22조[174]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업별 예산의 독립성을 전제로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위탁연구가 두 연구과제와 모두 관련성이 있어 비용을 분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실제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에서는 위탁연구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위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보고서의 한 개 장을 직접 집필하는 등 주요 분석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였고,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노동시장 이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 일반사업이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계획 임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 후 5년간 의무유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직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은 동일항목의 사업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고유사업은 각각 동일 항목(기본연구→기본연구 / 연구지원 → 연구지원)으로 이월한다.

○ 일반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은 동일사업으로 이월하고, 종료사업의 집행잔액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편성한다.

○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74)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22조(실행연구계획서 변경)** ① 연구기관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연구사업 과제를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연구대상,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 연구주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과 연구과제명을 포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2>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변경 사유발생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와 기준은 <별표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지침으로 운영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없이 고의로 사업계획 변경 및 연구과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행과 계속고용 관련 후속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위탁연구의 활용 내용을 보면, 연구성과가 직접 반영된 것은 기본연구사업인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인 반면, 일반연구사업에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고려하면, 일반연구사업에서 계약금액의 약 70%(690만원)를 부담한 것이 각 사업별 연구목적이나 허용범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의 예산 편성 당시 사업계획에는 ‘임금격차 원인 분석을 위한 모형 파트 연구’를 위하여 외부용역비 950만원을 편성하고 있었으나, 사업계획 변경[175]을 통해 실제 집행은 300만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금액 690만원은 일반연구사업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대별 임금격차 연구 사업비 변경 내역>

(단위: 천원)

예산 과목	변경 전 (2024. 12.)	변경 후 (2025. 4.)
합 계	**36,000**	**36,000**
공공요금	660	660
수용비	2,802	4,502

175)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접 수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통계프로그램 등을 구입(연구기자재 및 임차료)하고 위탁용역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2025. 4. 29.)을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함.

예산 과목	변경 전 (2024. 12.)	변경 후 (2025. 4.)
연구기자재및임차료	-	7,900
여비	9,778	2,178
연구정보활동비	2,760	6,260
전문가활용비	7,800	6,300
회의비	2,700	5,200
외부용역비및부담금	9,500	3,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 또한 동 연구기관은 연구내용 간 연계성을 고려하였더라도 각 사업의 예산과 활용 범위에 맞게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에는 위탁연구 추진 단계부터 사업별 연구목적과 활용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분담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별 활용내용과 집행근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향후 동일한 위탁연구결과를 여러 연구과제가 공동 활용하기 위해 각 사업의 예산을 분담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 연구목적, 활용범위 및 비용분담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76]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을 지원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40억 3,800만원 중 239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786	23,786	252	-	-	24,038	23,968	70	-	29,578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검토의견: 일반 일간지 구독료를 개별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관행 개선 필요

□ 2025회계연도 기본연구사업 및 일반연구사업의 연구정보활동비에서 일반 일간지 구독료 총 389만원을 집행하였음.

176) 세부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1546-301)

<2025회계연도 연구정보활동비 일간지 구독료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정보 활동비 예산액	일간지 구독료 집행액	비고
기본연구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1,170	920	문화일보, 조선일보
기본연구	의료기관 사이버보안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426	680	코리아헤럴드, 한겨레신문
일반연구	부모급여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 시간지원제도 이용을 중심으로	1,106	600	서울경제, 중앙데일리, 코리아중앙데일리
일반연구	복수주소제 도입이 복지급여의 집행 및 비용분담구조에 미치는 영향	1,000	850	중앙일보
일반연구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복지재정정책 연구	900	840	경향신문, 매일경제
합 계		5,602	3,89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177)에 따르면 연구정보활동비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 학술정보 DB 사용

177)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7) 연구정보활동비
(가) 정의 : 해당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연수, 정보수집 또는 활동경비
(나) 세부지침
- 연구정보활동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은 여비에 편성한다.
- 특근매식비는 실제 각 부서별 업무량, 직원수, 특근일수 등을 감안하여 계획과 실적에 근거하여 편성한다.
  • 연구사업 및 연구지원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식대 등을 집행한다.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2시간 이상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

료, 연구 관련 도서 및 문헌 구입 등 연구 수행에 직접 필요한 정보활동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위 연구과제들은 사회보장제도, 복지재정, 인구구조 변화, 의료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로서, 주된 연구방법은 통계자료 분석, 행정자료 및 미시자료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제도 비교분석 등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연구정보활동비에서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일반 일간지 구독료를 집행한 것은 해당 연구 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순수혜의 계층별 배분에 관한 비교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 정립, 국민계정 자료 분석, 국가별 미시자료 분석 및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보고서상 일반 신문기사의 수집·분석 또는 언론보도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구독료를 연구정보활동비에서 집행한 것은 연구 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구분	내용
연구정보활동경비	국내·외 교육훈련, 정보수집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연구자료구입비	**당해 연구사업과 관련된 도서 등 문헌, 학술정보 DB 사용료 등 자료 구입비**
특근매식비	특근 직원에 대한 식비

□ 또한, 여러 연구과제에서 각각 서로 다른 일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연구 수행을 위한 정보수집이라기보다는 기관 구성원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신문 구독 비용을 연구사업비에서 분산하여 집행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정보활동비는 개별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정보수집 비용으로 한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공통으로 이용되는 일반 일간지 구독료는 기관 운영경비[178] 등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정보활동비가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학술자료·통계자료 등의 정보수집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

178)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3절 경상운영비
Ⅳ. 기타운영비
(1) 수용비
(가) 정의 : 일반적 사업 운영 또는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나) 세부지침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 편성한다.
- **기관운영과 직접 관련된 수용비(행정사무비, 소모품비 등)를 편성**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단가, 조달청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비적 성격의 비목은 산출단가의 현실화 등을 반영한 예산 절감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방지해야 한다.
- 매 회계연도 인쇄비용 등에 대한 미지급금을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 과도한 미정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분	내용
소모품등 구입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및 회의용품비
인쇄 및 출판비	예산서 등 인쇄발간비, 홍보물 제작비, 팜플렛 제작비, 복사비, 슬라이드 제작비
간행물 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전문학술지 구독료
기타 수용비	공고료, 신문잡지 광고료, **신문구독료**, 주차료, 일반화물 운송비, 감사패 및 기념패 등 제작비 등

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기관 공용으로 활용되는 일반 일간지 구독료를 개별 연구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행정연구원[179]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행정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48억 6,000만원 중 139억 6,9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1,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행정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행정연구원	14,292	14,292	568	-	-	14,860	13,969	572	319	16,649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 검토의견: 챗봇 서비스 성과관리 강화 필요

□ 한국행정연구원의 “인공지능기반 지식관리 웹플랫폼 구축 사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웹플랫폼(www.kipa.re.kr)의 국·영문을 웹 반응형 UI/UX로 개편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제공을 위한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에서 이월된 예산 5,168만원 중 4,949만원을 집행하였음[180].

179) 세부사업: 한국행정연구원(1552-301)

<인공지능기반 지식관리 웹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예산액	102,200	-	102,200
집행액	50,520	49,490	100,01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 중 챗봇 서비스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AI 서비스로, 2025년 6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후 8월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 중임.

□ 서비스 도입 이후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월별 이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챗봇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챗봇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별도의 통계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인 지표 산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월별 챗봇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질문 건수>

(단위: 명, 건)

년	월	이용자수(세션)	질문건수	질문/세션
2025	08	180	577	3.21
	09	131	441	3.37

180) 2024년 12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 4,949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함.
- 계약기간 2024. 12. 9. ~ 2025. 5. 8. / 총 계약금액 9,898만원

년	월	이용자수(세션)	질문건수	질문/세션
	10	96	219	2.28
	11	94	159	1.69
	12	215	4,717	21.94
계		716	6,113	32.49
2026	01	89	146	1.64
	02	45	222	4.93
	03	30	41	1.37
	04	26	42	1.62
	05	23	35	1.52
계		213	486	11.0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은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이용 로그 분석을 통해 챗봇 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홍보 강화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 챗봇 서비스는 정식 서비스 개시 이후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이용 패턴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능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답변의 정확성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챗봇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81]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40억 4,400만원 중 136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0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688	13,688	356	-	-	14,044	13,664	-	380	14,276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 검토의견: 수시연구과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수시연구사업비’는 「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연구원 기본연구사업비의 일부로,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임.[182]

---

181) 세부사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553-301)

○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8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62	62	36	-	-	98	53	46	-	57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5년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률은 53.6%로, 총 6개 과제 모두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 중 일부 과제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연구과제별 집행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82)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 구조(「2025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지침」 p. 23)

구 분	내 용
1. 기관고유사업	정관에 규정된 기관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1) 기본연구사업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은 사업연도 중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관부처 등의 요청에 의해 기관 내부의 적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총액만 승인하는 예비 연구과제
2) 연구지원사업	순수연구가 아닌 연구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구업무와 유관한 학술회의, 정책토론회, 국제교류, 번역, 해외사무소 운영 및 전산운영, 도서 및 정보자료 관리, 간행물 발간 등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
2. 일반사업	주로 한시성 사업,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 등,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정부대행사업 등)으로 편성된 사업 * 협동연구사업 :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
3. 수탁용역사업	부처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기관이 수주한 사업으로 학술용역계약에 따라 수행
4. 정부대행사업	정부업무 대행 성격으로 법률 등에 사업추진근거가 있는 사업(부처출연사업, 기금사업 등을 포함)

<2025회계연도 수시연구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배정 예산	집행 금액	집행 비율
1.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2024. 10. 4. ~ 2025. 4. 3.	36,407	25,555	70.2%
2.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2025. 5. 2. ~ 2025. 10. 31.	10,000	7,294	72.9%
3.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25. 6. 1. ~ 2025. 11. 30.	10,000	7,917	79.2%
4.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동향과 사법공조 강화 방안 모색	2025. 7. 15. ~ 2025. 12. 15.	10,000	3,862	38.6%
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2025. 8. 1. ~ 2025. 12. 31.	10,000	7,640	76.4%
6.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2025. 12. 10. ~ 2026. 4. 10.	22,000	452	2.1%
합계(6건)		**98,407**	**52,720**	**53.6%**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에 대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관련 부처의 연구 수요가 주로 부처의 정책연구비로 요청되는 수탁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부처의 수시연구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하반기에 개발·착수되어 일부 과제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었다고 설명함.

○ 다만, 수시연구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응하고 정책연구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부처의 연구수요뿐만 아니라 정책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안 수립이 필요한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적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3년간 수시연구사업비의 집행률도 2023년 81.7%, 2024년 66.7%, 2025년 53.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시연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수시연구사업 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예산액	예산집행 내역			
		연구과제명	배정 예산	집행 금액	집행 비율
총합	374,170	-	374,003	258,786	69.2
2023	149,276	소 계(12건)	149,109	121,788	81.7
		1. 첨단의료기술 임상연구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 디지털 치료를 중심으로	11,809	10,954	92.8
		2.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9,400	9,091	96.7
		3.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정책 연구	16,700	16,598	99.4
		4. 형사정책 분야의 국정과제 기여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적용 방안 연구	19,100	18,401	96.3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	14,400	13,980	97.1
		6.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16,800	16,409	97.7
		7. 수사경찰 핵심역량모델 개발연구	11,000	10,738	97.6
		8.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8,900	8,774	98.6
		9.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14,400	14,192	98.6
		10. (이연 23.10.01 ~ 24.01.31)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0,800	1,132	10.5
		11. (이연 23.11.01 ~ 24.04.30) 영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출생 및 양육·보호	10,800	1,520	14.1

연도	예산액	예산집행 내역			
		연구과제명	배정 예산	집행 금액	집행 비율
		12. (이연 23.12.30 ~ 24.03.30) 디지털 성범죄 대응 거버넌스 연구	5,000	-	0.0
2024	126,487	**소 계(10건)**	**126,487**	**84,311**	**66.7**
		1.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9,668	7,657	79.2
		2. 영아의 출생 및 양육·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9,280	8,008	86.3
		3.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8,000	7,514	93.9
		4. 생성형 언어모델을 활용한 형사법무분야 성과확산 방안 연구	10,000	9,814	98.1
		5. 수사 목적 폴리그래프 검사의 대상자 적합성 판단 기준 개선 방안	10,000	9,732	97.3
		6. 디지털 유산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10,000	9,810	98.1
		7. 해양형사·법무 분야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쟁점 연구	10,000	9,809	98.1
		8. 의료사고와 법적 책임의 귀속: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중심으로	10,000	9,981	99.8
		9.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방안 연구	10,000	8,855	88.6
		10. (이연 24.10.04 ~ 25.04.03)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39,539	3,132	7.9
2025	98,407	**소 계(6건)**	**98,407**	**52,720**	**53.6**
		1.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쟁점 연구	36,407	25,555	70.2
		2.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10,000	7,294	72.9
		3.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10,000	7,917	79.2
		4.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동향과 사법공조 강화 방안 모색	10,000	3,862	38.6
		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0,000	7,640	76.4
		6. (이연 25.12.10 ~ 26.04.10)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2,000	452	2.1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따라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관련 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수시연구과제를 조기에 선정·착수하는 한편, 연구 기간 및 진도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시연구과제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1.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개선

□ 「국가재정법」 제98조[183]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84]은 내부통제의 방법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두면서 심의회는 위원장(사무처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으로서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되,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85]

---

183)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184)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85) 제3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구성〉

소속	직위	비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위원장(1인)
	기획조정관	내부위원(11인)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심판관리관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서울대학교	교수	외부위원(2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재정법」과 훈령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훈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은

---

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것으로 보임.

○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총예산 1,633억 7,0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지원(7000)' 프로그램의 예산은 약 769억 4,200만원으로 전체의 약 47.1%에 불과한바, 기관 예산의 대부분이 심의 제외 대상인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회계연도에만 총 65건의 전용을 승인받아 국회에 통보하였는데, 원칙적으로 전용과 같이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속함.

○ 둘째, 「국가재정법」이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은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음.

따라서 훈령상 심의 제외 규정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근거로 장기간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예정한 내부통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예산집행심의회는 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주요 재정집행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실제 심의안건이 많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기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예산집행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예산집행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제외 대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운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워크숍이나 간담회 시 임차료와 식음료비의 구분집행 필요

□ 임차료(210-07)는 ①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②장소·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③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④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⑤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⑥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에 따른 임차료 등의 집행을 위한 경비를 말함.[186]

<공정거래위원회 부서별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실·국명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운영지원과	178	-	80	-	258	256	-	3
심판관리관실	13	-	4	-	17	17	-	-
기획조정관실	611	-	27	-	638	638	-	-
경쟁정책국	106	-	13	-	119	119	-	-
기업협력정책관실	27	-	△7	-	20	13	-	7
소비자정책국	57	-	△7	-	50	45	-	5
시장감시국	7	-	-	-	7	7	-	-
카르텔조사국	7	-	-	-	7	4	-	3
기업집단감시국	39	-	8	-	47	47	-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	-	10	-	10	10	-	-
서울사무소	13	-	-	-	13	13	-	-
부산사무소	21	-	△1	-	20	20	-	-
광주사무소	5	-	△1	-	4	4	-	-
대전사무소	15	-	2	-	17	17	-	-
대구사무소	15	-	△2	-	13	13	-	-
합계	1,114	-	126	-	1,240	1,222	-	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8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68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 회계연도 임차료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12억 4,000만원이고, 이 중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가예산은 사업의 성격과 집행 목적에 따라 목과 세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집행 단계에서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행정기관은 각 세목의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성격의 경비를 특정 세목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임차료 집행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구(舊)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차료는 장소·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세목이고, 회의·간담회·워크숍 등에서 발생하는 식사비는 사업추진비(240-01) 또는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통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부서별 워크숍, 초청연수, 간담회 및 설명회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장소 임차와 식사(다과)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행사에서 사업추진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임차료만을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예를 들어, ‘공정거래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부서별 워크숍 예산으로 약 6,400만원을 전액 임차료로만 집행하였는데, 이들 임차료에는 장소 사용료뿐 아니라 식사비까지 포함되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됨.

<사업추진비 집행이 없는 임차료 집행>

(단위: 천원)

세부사업	행사	집행액
공정거래지원	부서별 워크숍	63,589
대외활동 강화	2030 자문회 성과발표회	2,695
대중소기업 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025년 하도급 대금지급 안정성 강화 TF	1,402
	하도급 관련 간담회	55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및 공시제도 설명회	2,860
	하도급법령 제도 개선 간담회	385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필수품목 제도 개선 찾아가는 현장 홍보	704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간담회	1,925
합계		74,1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식사비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세목의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고,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187]과도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식사비를 임차료를 통하여 사실상 집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추진비의

187)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자율적인 증액을 제한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의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집행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 세목별 집행 내역만으로는 실제 경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져, 세목을 구분하여 편성한 취지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여 워크숍 등 행사에서 임차료를 통해 집행하던 식사비를 분리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향후 워크숍, 간담회 등 식사가 포함된 기관 행사 관련 예산은 구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할 때에도 장소 임차료와 식사비는 계약 및 증빙 단계에서 명확하게 분리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3.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절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각 개별 사업비,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총 5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1,642억 9,900만원 중 1,604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35억 7,400만원을 불용함.

<202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경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감	전용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63,370	199	730	723 △723	164,299	160,426	299	3,574
인건비	56,152	-	-	-	56,152	55,351	-	801
기본경비	8,935	17	-	182 △182	8,952	8,525	7	420
사업비	98,283	182	730	541 △541	99,195	96,550	292	2,35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강화 필요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르면,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일반적인 지출 절차에 따를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함)는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월 예산 과목별로 정하여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함.[188]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 또는 비목으로 우선 처리한 후 실제 집행과목으로 정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188)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분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관은 관서운영경비를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에 의하여 교부하되,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예를 들어, 심판관리관실은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우선 집행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과목정정 기능을 통해 실제 집행과목인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특근매식비’로 정정하였음.

<예산 집행 시 과목정정 내역>

(단위: 천원)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일반수용비 (210-01)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3,699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5,794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기타운영비 (210-16)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특근매식비 (210-05)	1,924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일반수용비 (21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357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2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내여비 (22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외업무여비 (220-02)	7,173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외업무여비 (220-02)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외업무여비 (220-02)	1,925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일반수용비 (21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2,83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내여비 (220-01)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1,706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일반수용비 (210-0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일반수용비 (210-01)	3,48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국내여비 (220-0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국내여비 (220-01)	2,507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국내여비 (220-01)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국내여비 (220-01)	6,26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일반수용비 (210-01)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5)	특근매식비 (210-05)	153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431-600)	국내여비 (220-01)	254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431-600)	사업추진비 (240-01)	147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1451-621)	사업추진비 (240-01)	95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126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1431-600)	임차료 (210-07)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국외업무여비 (220-02)	5,15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일반수용비 (210-01)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851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4)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4)	특근매식비 (210-05)	2,6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과목정정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당초에 지출 요청한 과목을 정정하는 절차로, 이체가 완료된 건이라도 정정이 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부받은 금액이 부족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관서운영경비는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이나 비목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사후적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방식은 「국고금 관리법」 제24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사후적인 과목정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지출 절차 준수 필요

□ 「국고금 관리법」 제19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지출원인행위는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89]

○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함.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도 지출원인행위부를 살펴보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2025년 3월 디지털포렌식 센터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2월 24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4월 17일에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였음.

---

189) 「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 종료 이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한 사례>

(단위: 천원)

내 역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기재 일자	금액
		시작일	종료일		
기업규모별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정책연구 공동 용역	2024. 10. 14.	2024. 10. 14.	7. 13.	11. 26.	40,000
2025년 3월 디지털포렌식 센터 유지보수 사업	2. 24.	3. 1.	3. 31.	4. 17.	14,000
2025년 공정거래백서 발간	3. 1.	3. 1.	3. 22.	3. 25.	15,950
감사담당관 조사실 벽체 방음공사	4. 8.	4. 7.	4. 9.	4. 10.	670
보안관제센터 이전 구축 사업(소방)	4. 10.	4. 7.	4. 9.	4. 10.	400
보안관제센터 이전 구축 사업(이사 및 환경개선)	6. 2.	5. 19.	5. 30.	6. 2.	4,820
사건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9. 8.	9. 3.	9. 30.	10. 13.	7,500
사무환경 개선 공사	9. 18.	9. 18.	9. 25.	10. 13.	23,100
업무지원팀 및 지하상황실 보안설비 공사	9. 18.	9. 18.	9. 25.	10. 13.	2,930
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행사 위탁	9. 26.	9. 19.	9. 26.	10. 15.	8,000
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컨퍼런스	10. 16.	10. 15.	10. 16.	10. 20.	12,000
2025년도 공정위-아시아경쟁연합 공동 학술심포지엄	10. 31.	10. 31.	10. 31.	11. 12.	9,400
중점조사팀 배치 관련 카르텔조사국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11. 19.	11. 19.	11. 21.	11. 24.	1,141
공정위-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행사 위탁	12. 8.	12. 8.	12. 19.	12. 30.	8,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지출원인행위는 계약 등에 따라 지출할 예산을 확정하여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바, 관련 절차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집행 가능액의 적정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190]

---

190)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 참고로, 2023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도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된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이 이루어진 바 있음.[191]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금 관리법」 제19조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계약 체결 시 지출원인행위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 기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91) 정무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4. 대외활동 강화[192]: CP 등급 조정 활성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외활동 강화”는 공정거래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5 회계연도에 예산현액 5억 7,300만원 중 5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함.

<2025 회계연도 대외활동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외활동 강화	618	618	-	△45	-	573	571	-	2	435
경쟁관 해외 파견	86	86	-	13	-	99	98	-	1	21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 정보 번역	46	46	-	-	-	46	46	-	-	48
CP제도 운영	41	41	-	-	-	41	41	-	-	46
서울국제경쟁포럼	207	207	-	18	-	225	225	-	-	-
ICN 부담금	4	4	-	1	-	5	5	-	-	4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25	25	-	△3		22	22	-	-	73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80	80	-	-	-	80	80	-	-	114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	62	62	-	△61	-	1	1	-	-	62
2030 청년자문단	67	67	-	△13	-	54	53	-	-	6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92) 세부사업: 대외활동 강화(1231-311)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의 확산을 위해 'CP제도 운영'을 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로 두고 있음.

○ 2025 회계연도 'CP제도 운영'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4,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193]는 경쟁촉진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 중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

193)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194]에 따라 CP 등급평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총 615개이고,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190개 기업에 달하는 등 신청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임.

<CP 등급평가 신청기관>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신청기업(개)	10	16	28	58	78	19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CP 등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AAA, AA, A로 구분되는데, AA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은 과징금 및 시정조치 감경, 일정 기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음.[195]

□ 반대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196]에서는 CP 등급을 받은 기업이 등급 유효기간(2년) 내에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

194)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95) CP 등급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은 기업의 악용 우려에 따라 2014년에 폐지되었다가 2023년 법 개정으로 재도입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재도입 이래 감경사례는 없음.

196) 제15조(평가등급의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기업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 받은 평가등급을 하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율준수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CP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의 법령 위반 사례>

등급평가 연도	기업명	평가등급	위반행위	행정처분
2022	㈜포스코케미칼	A	거래상 지위남용	시정명령
			부당한 경영간섭	과징금·시정명령
	유비벨록스㈜	A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시정명령
2023	한화시스템㈜	AA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	시정명령
2024	㈜포스코이앤씨	AAA	기업결합 신고규정위반	과태료
	한화시스템㈜	AA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
	디엘이앤씨㈜	AA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	과태료
2025	네이버	AA	허위과장표시광고	시정명령
	㈜아모레퍼시픽	A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	과태료
	씨제이대한통운㈜	A	부당한 자금지원	과징금·시정명령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2022년부터 현재[197]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기업 중 평가등급이 하향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예컨대, 씨제이대한통운㈜이 부당한 지원행위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197) 등급하향의 근거규정이 시행된 것은 2025년 4월부터로 이에 해당하는 위반 사례는 ㈜아모레퍼시픽과 씨제이대한통운㈜ 사례임.

부과받았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자율준수평가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급을 유지하였음.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 부여는 기업 내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담보하는 신호(signal)로서 기능하여야 함.

○ 따라서 CP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의 자율준수 시스템의 법 위반 예방 및 탐지 기능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등급 유효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반복·고의 여부, 조사방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급 재심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시할 필요가 있음.

5.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198]: 외부 위탁교육 과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은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복구·분석용 프로그램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SW의 업그레이드 및 신규 구매,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장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포렌식조사관의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9억 6,100만원 중 9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961	961	-	-	-	961	911	-	50	2,373
장비확충	758	758	-	-	-	758	758	-	-	1,933
유지보수	173	173	-	-	-	173	132	-	41	241
포렌식 교육	30	30	-	-	-	30	21	-	9	42
포렌식지원여비	-	-	-	-	-	-	-	-	-	15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포렌식 교육” 사업은 포렌식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198) 세부사업: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1231-503)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132만원을 집행하고 868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포렌식 교육 예산 집행 현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일반수용비, 210-01)	1,600만원	1,584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일반수용비, 210-01)	1,400만원	548만원
합 계	**3,000만원**	**2,132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 중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정보보호 및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석사과정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선발된 1명에게 2년간 매년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외부기관 위탁교육 개요>

◦ **(훈련기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계약학과로 수리정보과학과 설치, 디지털포렌식 전공 석사학위 과정 운영 중
◦ **(훈련기간)** 2년간 야간 교육과정으로 운영
- 금요일(저녁) 및 토요일(전일)을 이용하여 수업 진행
- 정규 4학기(각 6학점), 계절학기 2학기(각 3학점) 동안 필수과목 이수 필요(총 29학점 이수)
◦ **(신청요건)** 위원회 3년 이상(실근무기간) 근무한 4~9급 경력직 공무원, 만 53세 이하,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요건, 어학요건
◦ **(선발절차)** 추천서 등 제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최종 1명 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명의 위탁교육대상자 추천
◦ **(훈련 후 보직)** 교육이수 후 조사총괄담당관실에서 필수보직기간(3년) 동안 근무
◦ **(등록금)** 정규학기 800만 원, 계절학기 350만 원
- (공정위 예산지원) 정규학기 560만 원, 계절학기 280만 원
- (교육생 개인부담) 정규학기 240만 원, 계절학기 70만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런데, 2025년에는 위탁교육 지원자가 없어 교육생이 선발되지 못하였고[199],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석사과정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일부를 학술대회 참가비로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포렌식 교육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2025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5년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5,84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DFRWS USA 2025 참가비 지급	965
			DFRWS APAC 2025 참가비 지급	4,173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비 지급	340
2024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4년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3,980
			DFRWS APAC 2024 참가비 지급	1,734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 참석	48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4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4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4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3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3년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4,42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3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3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3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2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2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5,360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2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2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1년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16,000	2021년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	15,048
	외부기관 위탁교육	14,000	2021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2021년도 계절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2,800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 지급	5,6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99) 2025년 신규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2024년에 3차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무와 학업(매주 금, 토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과 예산지원 외에도 본인이 2년간 1,1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지원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함.

□ 기업의 업무환경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확보 및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조사 및 포렌식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디지털포렌식 교육 현황>

부문	목적	내용	
① 디지털조사, 포렌식업무 역량 강화	사건 담당자와 포렌식 조사관 등의 디지털 조사능력을 향상하여 진화하는 안티포렌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자체교육	(대상) 사건 담당자 (교육) 디지털 매체 조사방법 등
		위탁교육	(대상) 사건 담당자 (교육) 자체 포렌식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	(대상) 포렌식 담당자 (교육) 디지털 자료 수집·복구 분석 능력 향상
		포렌식 세미나	(대상) 포렌식 담당자 (교육) 타 기관과 교류 및 협력
② 윤리·보안 교육	포렌식 조사의 신뢰 제고 및 보안 사고 예방	윤리 및 보안교육	(대상) 포렌식 담당자 (교육) 행동강령 및 조사보안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현행 석사과정 지원 방식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25년도에는 교육생이 선발되지 않아 당초 계획한 석사과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의 일부가 학술대회 참가비로 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수년간 지원자 수, 이수자의 성과, 업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외부기관 위탁교육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카르텔환경개선 등[200]: 심사보고서 인쇄비의 분할 집행 부적정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카르텔환경개선” 세부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 82억 2,400만원 중 62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19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카르텔환경개선 등 7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카르텔환경개선	842	842	-	-	-	842	818	6	18	1,495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470	3,470	-	46	-	3,516	1,711	-	1,805	2,074
사익편취 행태개선	402	402	12	△20	-	394	363	27	4	32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718	1,718	-	-	-	1,718	1,631	-	87	2,69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501	1,501	-	-	-	1,501	1,447	-	54	1,150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9	119	1	△6	-	114	111	-	3	133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18	118	1	20	-	139	138	-	1	1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0) 세부사업: 카르텔 환경개선(1241-32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사익편취 행태개선(1251-33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1331-40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6),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2) 검토의견

□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201]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건당 500만원 이하인 경비임.[202]

---

201)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⑥ (생략)

20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4. (생략)

□ 그런데, 2025년 심사보고서 인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대금을 건당 5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심사보고서 인쇄비 분할 집행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내 역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2입담2043 등),	2025-02-24	702,100*	문중인쇄
	첨부자료 Ⅰ,Ⅱ	2025-02-24	4,406,6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삼사보고서(2023제카1409), 첨부자료 Ⅰ,Ⅱ	2025-04-01	4,904,900	문중인쇄
	첨부자료 Ⅲ,Ⅳ,Ⅴ	2025-04-01	4,862,000	
	첨부자료 Ⅵ,Ⅶ,Ⅷ	2025-04-01	4,504,500	
	첨부자료 Ⅸ,Ⅹ,Ⅺ	2025-04-01	4,922,500	
	첨부자료 Ⅻ	2025-04-11	2,375,4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2민수1584 등)	2025-04-23	1,278,100*	문중인쇄
	첨부자료 Ⅰ,Ⅱ,Ⅲ	2025-04-23	4,985,2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3카총0733)	2025-05-27	3,865,4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5-27	3,033,800	
	첨부자료	2025-05-27	3,619,0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심사보고서(2023카총0733)	2025-09-19	3,877,5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9-19	3,040,400	
	첨부자료	2025-09-19	4,302,100	
	첨부자료	2025-09-19	3,716,900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삼사보고서(2025제카2022 등), 첨부자료 Ⅰ,Ⅱ	2025-10-14	3,339,600	문중인쇄
	첨부자료 Ⅲ,Ⅳ,Ⅴ	2025-10-14	3,865,400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심사보고서(시지남용)	2025-12-01	2,590,5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12-01	3,946,800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 (생략)

② (생략)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④ (생략)

세부사업명	내 역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심사보고서(2023지원0015), 첨부자료 Ⅰ,Ⅱ	2025-04-30	4,906,000	삼일기획
	첨부자료Ⅲ	2025-04-30	2,530,000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심사보고서(2023지원1770), 첨부자료 Ⅰ	2025-05-14	4,587,000	삼일기획
	첨부자료Ⅱ,Ⅲ	2025-05-14	4,763,000	
	첨부자료Ⅳ	2025-05-14	2,354,000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심사보고서(2022내부2039), 첨부자료 Ⅰ,Ⅱ,Ⅲ	2025-10-13	4,950,000	삼일기획
	첨부자료Ⅳ,Ⅴ	2025-10-13	3,520,00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심사보고서(2022기감1740), 첨부자료 Ⅰ,Ⅱ,Ⅲ	2025-04-10	4,180,000	삼일기획
	첨부자료Ⅳ,Ⅴ	2025-04-10	2,695,00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심사보고서(2023하조1401)	2025-10-13	3,379,2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10-15	3,480,40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심사보고서(2025국결1566)	2025-09-01	3,540,9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9-01	4,996,200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6)	심사보고서(전상법)	2025-04-30	3,355,000	문중인쇄
	심사보고서 별지	2025-04-30	2,675,20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심사보고서(2025국결0217), 첨부자료 Ⅰ	2025-02-19	2,350,700	문중인쇄
	첨부자료Ⅱ,Ⅲ	2025-04-10	4,420,900	
	첨부자료Ⅳ,Ⅴ	2025-04-10	4,327,40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심사보고서(2025기결0985)	2025-06-04	3,934,7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06-11	3,287,900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심사보고서(2025기결1310 등)	2025-12-30	2,506,900	문중인쇄
	첨부자료	2025-12-30	2,700,500	

* 다른 사건 보고서와 함께 인쇄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부가세 제외 금액에 10%를 가산한 후 백원 미만은 절사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인쇄를 요청한 날짜가 달랐거나 인쇄업체가 물품을 순차적으로 납품함에 따라 대금 청구일자가 달라졌으며, 첨부자료는 권당 1,000~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분권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인쇄 대상 자료의 구성 및 제작 단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건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하지만,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는 동일한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함께 제작되는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인쇄 요청일이나 납품일 등이 다르거나 첨부자료를 분권하여 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각각 별개의 지출원인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쇄비가 각각 건당 500만원 이하로 집행되었으나 이를 합산하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서운영경비 지급 한도를 고려하여 분할 집행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심사자료의 인쇄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203]: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은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 및 신산업 분야인 온라인 플랫폼 등 ICT 분야에 대한 상시·체계적 감시를 통해 거래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5억 1,600만원 중 17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470	3,470	-	46	-	3,516	1,711	-	1,805	2,074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129	129	-	69	-	198	197	-	1	190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3,200	3,200	-	-	-	3,200	1,397	-	1,803	1,751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141	141	-	△23	-	118	117	-	1	13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3) 세부사업: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1251-330)

2) 검토의견

□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중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14가지 행위 유형>

①부당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④부당지원행위, ⑤부당고객유인행위, ⑥사원판매행위, ⑦미등록다단계, ⑧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⑨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⑩하도급법 위반행위, ⑪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⑫가맹거래법 위반행위, ⑬대리점법 위반행위, ⑭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신고포상금은 34건에 대하여 총 13억 4,7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31억 5,000만원의 42.7%에 불과함.

- 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것임.

<2025회계연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예산 집행 현황>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비(일반수용비, 210-01)	5,000만원	5,000만원
신고포상금(포상금, 310-03)	31억 5,000만원	13억 4,700만원
합 계	**32억원**	**13억 9,7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건수,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 실적(합계)	지급건수	31	43	67	37	**34**
	지급액	2,353,500	3,157,982	3,361,515	1,414,595	**1,347,069**
	예산액	2,130,000	3,130,000	3,350,000	3,000,000	**3,150,000**
부당한 공동행위	지급건수	6	9	17	14	**8**
	지급액	2,186,000	2,486,220	3,214,290	897,757	**1,288,51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지급건수	4	3	17	5	**3**
	지급액	7,200	892	75,385	2,550	**5,130**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지급건수	2	2	2	-	**-**
	지급액	650	300	300	-	**-**
부당한 지원행위	지급건수	2	2	-	1	**-**
	지급액	148,300	573,700	-	470,450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지급건수	1	1	2	-	**4**
	지급액	400	6,120	20,270	-	**6,500**
사원판매행위	지급건수	-	-	2	-	**1**
	지급액	-	-	1,900	-	**400**
미등록다단계	지급건수	1	-	1	-	**1**
	지급액	1,000	-	250	-	**300**
사행적판매원 확장금지	지급건수	-	-	-	-	**1**
	지급액	-	-	-	-	**1,50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1	1	**-**
	지급액	-	51,955	31,760	17,238	**-**
하도급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	-	-	**1**
	지급액	-	-	-	-	**4,000**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지급건수	-	-	-	-	**-**
	지급액	-	-	-	-	**-**
가맹거래법	지급건수	15	24	22	13	**14**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위반행위	지급액	9,950	38,295	7,600	24,300	39,974
대리점법 위반행위	지급건수	-	1	3	2	1
	지급액	-	500	9,760	700	750
기업집단지정자료 제출의무위반행위	지급건수	-	-	-	1	-
	지급액	-	-	-	1,60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예산은 매년 초에 차년도 포상금 지급 수요조사를 통해 편성하고 있어, 사건 처리 기간과 과징금액 등 처분의 결과를 편성 시점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2024년·2025년의 경우에는 2023년 이전 대비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었으며, 그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도 적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사건의 과징금 액수>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급 실적	포상금 건수	31	43	67	37	34
	포상금 지급액	2,354	3,158	3,362	1,415	1,347
	과징금 액수	295,705	149,023	321,120	46,047	59,49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하였음[205].

---

204)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공정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 6. 17.)

□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제 신고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기간 SNS 등을 활용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해왔음.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현황>

연도	홍보시기	홍보수단
2022	11.15.~12.20.	블라인드 앱 배너 광고, 경기도 버스 동영상 광고
2023	11.1.~12.5.	블라인드 앱 배너 광고, 페이스북 배너광고, 지하철 내 액자 광고
2024	12.1.~12.31.	포스터·리플릿 배포, 배너광고·인포그래픽 영상의 블라인드 앱, 유튜브 등 매체별 광고 집행
2025	6.27.~7.25. 8.25.~9.24.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 내 신고포상금 홍보 동영상 게시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매체별 광고 집행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신고포상금 예산이 2년 연속 절반 이상 불용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홍보 방식이 신고 활성화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관련자의 신고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고,

205) 기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피해 수급사업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2026년 8월 11일 시행).

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추진된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홍보 수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홍보 수단·매체·시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206]: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 및 관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17억 1,800만원 중 16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1,718	1,718	-	-	-	1,718	1,632	-	86	2,696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551	1,551	-	-	-	1,547	1,493	-	54	2,5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62	62				66	34	-	32	62
공시위탁운영	105	105				105	105	-	-	1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6) 세부사업: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에서는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음.

○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되어 있음.

○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6,000만원 중 5,347만원을 집행하였음[207].

○ 공정위는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5년도 기술자료 비밀 컨설팅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현액	계약 금액	집행액	계약방식	계약자	계약기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6,000	56,100	53,466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공정 거래 조정원	2025. 4. 30. - 12. 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입찰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원가계산서에 노트북 구입비를 반영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비로 노트북 1대를 구입하였음.

---

207)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과 5,61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따라 실제 소요된 5,347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 원가계산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일반 수용비	인쇄비	5,800	9,731
	소모품 구입	600	239
	강사비(컨설팅 비용)	10,200	9,710
	교육 동영상 제작	2,000	3,960
	홍보웹툰 제작	1,000	-
	전문가 자문비	9,000	5,500
	소계	28,600	29,140
여비	현장 교육 여비	2,600	2,182
	유관기관 협의 출장	1,120	
	소계	3,720	2,182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2,000	1,849
	소계	2,000	1,849
인건비	책임연구원	3,816	3,816
	연구위원	7,628	7,628
	소계	11,444	11,444
업무추진비	기술관리 실태 관련 간담회	2,400	1,814
	유관기관 협의	1,200	
	사전교육 및 회의	450	751
	소계	4,050	2,565
일반관리비		1,186	1,186
소 계		51,000	48,366
부가가치세		5,100	5,100
총 계		**56,100**	**53,46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 자료 재구성)

□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해당 노트북을 자체 자산으로 등록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부 규정인 「물품관리규칙」[208]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의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였고, 사업 종료 후인 2026년 현재에도 공정거래종합지원팀의 온라인 교육 업무에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제출하였음.

○ 최근 4년간 동일 사업에서 조정원은 2022년 노트북 3대, 2025년 노트북 1대를 사업비로 취득하여 4대 모두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소기업 비밀보호 컨설팅사업에서 취득한 자산 현황>

(단위: 원)

연도	품목	금액	자산등재 및 보유 여부
2022	노트북(3대)	2,994,000	O
2025	노트북(1대)	1,849,000	O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노트북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자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계약 종료 후 해당 자산의 귀속 여부나 처리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한 동 기관의 내부 규정

□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용역계약에서 취득한 자산은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자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종료 시 계약목적 달성 여부와 향후 활용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가 귀속, 계약상대자의 계속 사용 또는 처분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본 사업에서는 수탁기관이 사업비로 취득한 노트북을 계약 종료 후에도 자체 자산으로 계속 보유·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의 귀속 주체를 확인하거나 계약 종료에 따른 인계·반납 또는 계속 사용 승인 여부 등에 대해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이 불명확해지고, 동일한 사업이 반복될 경우 사업 종료 시마다 취득자산이 별도의 검증 없이 수탁기관의 자산으로 계속 축적될 우려가 있음.

□ 더욱이 동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 종료 시 자산 귀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수행기관이 국가예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차기 사업자의 장비 확보 부담이나 입찰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최근 4년간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 방식	계약자	계약금액	노트북 취득 여부
2022	수의계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8	O
2023	수의계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9	X
2024	경쟁입찰	한국생산성본부	50	X
2025	경쟁입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6	O

(단위: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기준과 관리절차를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종료 시 취득자산의 귀속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비로 취득한 자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수탁기관의 일반 자산으로 사실상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209]: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및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5억 100만원 중 14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5,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501	1,501	-	-	-	1,501	1,447	-	54	1,150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1,192	1,192	-	-	-	1,192	1,170	-	23	895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5	305	-	-	-	305	275	-	30	255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	4	4	-	-	-	4	4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9) 세부사업: 건전한 규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2) 검토의견

(1)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가맹·유통·대리점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실태와 거래관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내역사업과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내역사업에 총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4억 1,985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가맹·유통·대리점 서면실태조사 예산 집행 현황>

내역사업명	내 역	예산액	집행액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거래행태 개선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7,500만원	7,200만원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7,500만원	7,335만원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대리점분야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	3억 500만원	2억 7,450만원
합 계		**4억 5,500만원**	**4억 1,985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25년 서면실태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는 응답률이 100%인 반면, 가맹점·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체”라 함)·대리점의 응답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 가맹분야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맹점의 응답률은 38.8%임.

- 유통분야는 7,600개 납품업체 중 37.7%가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였으며, 21개 업종 510개 본사와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분야의 응답률은 35.6%임.

<2025년 가맹·유통·대리점 실태조사 대상 및 응답 업체 현황>

연 도		대상업체 수	응답업체 수
가맹	가맹본부	200개	200개(100.0%)
	가맹점	12,000개	4,661개(38.8%)
유통	납품업체	7,600개	2,868개(37.7%)
대리점	본사	510개	510개(100.0%)
	대리점	50,000개	17,823개(3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는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있고 미응답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반면[210], 가맹점·납품업체·대리점은 과태료

---

2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응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등의 미응답 사유에 대해서 실태조사 참여가 법적 의무가 아닌 점, 영세사업자는 조사 응답 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 설문 문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211]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가맹점·납품업체·대리점의 응답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응답률은 각각 38.8%, 37.7%, 35.6%로, 2021년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가맹·유통·대리점 실태조사 응답업체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태조사 응답 업체 수	가맹	가맹본부	200개 (100.0%)	200개 (100.0%)	200개 (100.0%)	200개 (100.0%)	200개 (100.0%)
		가맹점	3,180개 (26.5%)	2,830개 (23.6%)	4,421개 (36.8%)	4,567개 (38.1%)	4,661개 (38.8%)
	유통	납품업체	1,497개 (21.4%)	1,517개 (21.7%)	2,333개 (33.3%)	2,762개 (36.3%)	2,868개 (37.7%)
	대리점	본사	153개 (100.0%)	546개 (100.0%)	552개 (100.0%)	519개 (100.0%)	510개 (100.0%)
		대리점	3,705개 (33.3%)	19,252개 (38.5%)	20,078개 (39.9%)	18,214개 (36.4%)	17,823개 (3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11) ('21년 대비 '25년 설문문항 수 변화) [가맹] 34→52개 [유통] 54→64개 [대리점] 40→45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등의 응답률 제고를 위하여 등기·메일·문자를 이용한 안내, 고객센터 운영, 응답 독려, 답례품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5년간 서면실태조사 참여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사항>

<table>
<tr><th>연도</th><th>가맹</th><th>유통</th><th>대리점</th></tr>
<tr><td>2021년</td><td rowspan="5">-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 답례품 제공</td><td>-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td><td rowspan="3">-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td></tr>
<tr><td>2022년</td></tr>
<tr><td>2023년</td><td rowspan="3">-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 답례품 제공('23~)</td></tr>
<tr><td>2024년</td><td rowspan="2">- 안내(등기·메일·문자)
- 편의성 제고(유선 및 카카오톡 고객센터 운영)
- 응답 독려(유선)
- 답례품 제공</td></tr>
<tr><td>2025년</td></tr>
</tabl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연도별 거래실태 및 거래관행의 변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와 현장 안착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맹점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조사 결과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에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리점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급되고 있음.[212)]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과 변화하는 거래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으며,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사업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유통 분야 직매입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하였으며,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였음.[213)]

□ 그런데, 2025년도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42.8%로 가맹 및 유통 분야에

---

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표준거래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13) 참고로, 가맹 분야는 2024년 12월 30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음.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214]

<가맹·유통·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

구 분	조사대상	사용	미사용	사용률
가맹분야	가맹본부	192개	8개	96.0%
유통분야	납품업체	2,793개	75개	97.4%
대리점분야	공급업자	213개	285개	4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최근 4년간 대리점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43%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급 확대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4년간 대리점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현황[215]>

업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식음료	62.5%	54.5%	50.8%	54.1%
가구	50.0%	30.0%	40.0%	36.4%
도서출판	33.3%	27.3%	46.2%	25.0%
제약	32.1%	34.5%	39.2%	42.9%
의류	57.5%	65.9%	66.7%	60.6%
통신	27.3%	38.9%	38.9%	35.3%
기계	38.1%	33.3%	47.6%	43.5%
사료	42.3%	36.4%	40.0%	31.6%
생활용품	54.8%	46.4%	50.0%	52.0%
주류	25.0%	16.7%	14.3%	16.7%
페인트	33.3%	25.0%	41.7%	50.0%
화장품	55.0%	66.7%	68.4%	38.9%
자동차판매	28.6%	33.3%	20.0%	25.0%
자동차부품	40.4%	39.2%	40.8%	34.8%
보일러	66.7%	66.7%	50.0%	80.0%
가전	47.2%	50.0%	46.7%	51.7%
석유유통	26.7%	32.3%	46.2%	33.3%
의료기기	37.7%	40.8%	39.4%	39.7%
총합	**43.0%**	**43.0%**	**45.1%**	**42.8%**

※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된 업종만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14) 표준계약서 미사용 공급업자 중 기존 계약서에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감안하여도 실질적인 사용률은 약 69.3%(전년도 대비 2.7%p 감소)로 추정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함.

215) 2025년도 서면실태조사는 2024년도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2024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가 다양한 업종[216] 및 거래형태[217]가 존재하여 표준계약서 사용률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대리점법상 의무사항보다 강화된 대리점주 보호 조항[218]이 포함된 점도 공급업자의 사용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제시하고 법 위반 및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19]

○ 또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업종별 거래 특성과 계약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급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임.

216) 대리점 분야: 의류, 가구, 가전, 기계, 화장품, 자동차, 통신 등 19개 업종
하도급 분야: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등 3개 업종
유통업 분야: 소매업 1개 업종(8개 업태)

217) 전속/비전속 대리점, 도매/소매 대리점, 위탁/재판매 대리점, 온/오프라인

218) (예) 대리점법에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절차, 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금지 의무 등을 규정

219) 현재는 상생 협력 모범업체 선발 기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여부를 포함하고 있음.

*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의 필수요건 중 하나로서 '표준계약서 사용'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 항목에 18점 배정(100점 만점)

않는 사유로 '거래관계 및 업종의 특수성'을 답변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5.4%p)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에 대리점법상 의무사항보다 강화된 대리점주 보호조항이 포함된 점이 사용률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단순한 홍보나 사용 권장만으로는 사용률 제고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공급업자의 표준대리점계약서 미사용 사유>

사유	2023년	2024년	증감
기존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220))	50.0%	46.3%	△3.7 %p
거래관계 및 업종 특수성	24.8%	30.2%	5.4 %p
표준대리점계약서로 전환 예정	9.9%	10.5%	0.6 %p
표준대리점계약서 알지 못했음	1.4%	0.7%	△0.7 %p
기타	13.8%	12.3%	△1.5 %p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및 2025년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미사용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유, 거래 관계 및 업종별 특수성, 강화된 대리점주 보호 조항에 대한 의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등 사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0) 2023년: 표준대리점 계약서 주요 내용 반영
2024년: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70% 이상 반영

10. 선진소비자정책 추진[221]: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강화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국제협력 및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18억 1,200만원 중 1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792	1,792	-	20	-	1,812	1,589	203	20	1,304
소비자의날 행사	83	83	-	-	-	83	83	-	-	43
소비자정책 종합체제나	11	11	-	△4	-	7	6	-	1	18
소비자정책사업운영 지원	42	42	-	-	-	42	42	-	-	45
특수전자거래인식개선	40	40	-	-	-	40	40	-	-	20
소비자중심경영활성화	150	150	-	-	-	150	150	-	-	150
소비자정책연구용역	40	40	-	△15	-	25	25	-	-	40
표준약관 교육	11	11	-	-	-	11	11	-	-	11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29	29	-	△1	-	28	24	-	4	29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181	181	-	△1	-	180	180	-	-	360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50	50	-	△20	-	30	29	-	1	50

221) 세부사업: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점 대응과제 직권조사	61	61	-	-	-	61	61	-	-	55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	-	-	25	24	-	1	25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40	40	-	△40	-	-	-	-	-	-
SNS 부당광고상시 모니터링	189	189	-	-	-	189	185	-	4	189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6	56	-	-	-	56	51	-	5	56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75	75	-	△1	-	74	74	-	-	19
소비자관련 법률교육 콘텐츠 제작	40	40	-	△20	-	20	18	-	2	11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9	9	-	-	-	9	9	-	-	9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660**	**660**	**-**	**123**	**-**	**783**	**578**	**203**	**2**	**17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강화 필요

□ 내역사업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300만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의 날’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의 날	83	83	-	-	-	83	83	-	-
· 일반수용비(210-01)	1	1	-	-	-	1	1	-	-
· 임차료(210-07)	40	40	-	-	-	40	40	-	-
· 일반용역비(210-14)	39	39	-	-	-	39	39	-	-
· 사업추진비(240-01)	3	3	-	-	-	3	3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날’을 개최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을 최종 계약자로 선정하였음.

<2025년도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방식	계약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한국소비자원	2025. 10. 23. ~ 12. 31.	3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사업의 입찰공고 내역을 살펴보면,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2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

2조[223]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224]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찰참여를 허용하였으며, 행사대행업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였음.

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2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마.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 '제30회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입찰공고 내역 〉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공동이행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와 같이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국제회의기획업종, 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내용은 행사장 선정·대관, 행사기획, 무대 설치, 행사 진행, 사회자 섭외, 영상 제작, 홍보, 안내인력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등 행사대행 전반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30회 소비자의 날 행사 위탁' 과업지시서 〉

업무구분	과업 내용
1. 총괄	□ 전 부문 소요예산 산출 □ 현장 진행계획서 마련 및 지속 업데이트 □ 집행경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에는 예산 집행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가 포함되어야 함 ○ 예산집행내용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각 항목별 계산내역을 명시할 것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실시내용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업결과 최종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 최종보고서에는 행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2. 기념식	□ 행사장소 선정 및 대관 행사 주제선정 □ 초청인사 관리 및 포상대상자 행사참석 관리 ○ 초청메일 발송리스트 인적사항 등 정리 ○ 각종 문의 안내(등록절차 등) 및 참석자 최종 참석 확인(전화문의) □ 기념식 식장 디자인 및 행사장 무대세팅

업무구분	과업 내용
	□ 행사진행 전반 관리(접수데스크 운영 포함) □ 기념식 진행 시나리오 작성 등 행사진행사항 일체 □ 행사 참석자 안내도 부착 및 설치, 안내요원 배치 □ 행사 사회자 섭외·사진촬영 등 행사 부속사항 관리 □ 참석 귀빈 대기실 구성, 운영 □ 종합 리허설 준비 및 시행
3. 영상 제작 및 홍보	□ 소비자의날 관련 축하·홍보 영상 제작 □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 현수막, X배너 등 제작 □ 초청장 인쇄 및 발송 □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실시
4. 인력	□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 행사진행요원, 초청인사 안내요원, 수상자 안내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225]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225) **「판로지원법」**

제4조(구매 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의3은 이러한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특히,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 비영리법인의 참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용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마.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

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 사업과 같은 일반적인 행사대행 또는 기념식 운영 용역은 해당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여가 필요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서 비영리법인인 한국소비자원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자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26]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심사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을 예외적으로 입찰에 참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

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하는지를 명확히 검토하고, 그 근거를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참가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내역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수행 필요

□ 내역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은 플랫폼 유형별 거래구조·거래현황 및 소비자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경쟁촉진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50	50	-	△20	-	30	29	-	1
· 일반연구비(260-01)	50	50	-	△20	-	30	29	-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사업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2022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선방안(2023년),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점검 실태조사·전자상거래법 조치 수준 합리화(2건, 2024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25년) 연구를 실시하였음.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연구용역명	계약자
2025	50	30 227)	29	1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025. 6. ~ 11.)	한국법제연구원 (김00)
2024	50	50	50	-	전자상거래법 조치 수준 합리화 관련 연구 (2,000만원, 2024. 9. ~ 12.)	한국외대 산학협력단 (정00)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점검 실태조사 (3,000만원, 2024. 4. ~ 7.)	한국소비자원
2023	50	50	45	5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선방안(2023. 6. ~ 12.)	한국소비자연맹 (강00)
2022	50	50	50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2022.. 8. ~ 12.)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 (정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2025년에 실시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이용계약 관련 표준약관 마련 연구'는 소비자계약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전자상거래 시장의 거래구조·거래관행 개선, 온라인 소비자 피해구제 등 내역사업의 주요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임.

227) 일반연구비 2,000만원을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의 상용SW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430-01)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있음에도, 사업 목적과 연계성이 낮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와 달리 집행될 소지가 있고, 전자상거래 분야 제도개선에 활용되어야 할 연구재원이 분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사업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과제를 우선 발굴·수행할 필요가 있음.

(3)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사전 기술·보안 검토 강화 필요

□ 내역사업인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가 가입정보, 납입금액 등 계약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시장 현황·사업자 정보 등을 통합 공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7억 8,300만원 중 5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660	660	-	123	-	783	578	203	2
· 일반연구비(260-01)	660	660	-	-	-	660	457	203	-
· 자산취득비(260-01)	-	-	-	123	-	123	121	-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경과는 2024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하였고, 2025년 6월에 제한경쟁 방

식으로 에스큐아이소프트(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2026년 9월 30일에 완료 예정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경과>

(2026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현액	계약액	집행액	계약자	계약방식	계약기간
2024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ISP	200	114	114	㈜아던트	제한경쟁	2024. 3. 22. ~ 2024. 6. 20.
2025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660	653	457	에스큐아이소프트(주)	제한경쟁	(변경 전) 2025. 6. 25. ~ 2026. 1. 22. (변경 후[228]) 2025. 6. 25. ~ 2026. 9. 30.
		123	121	121	펜타시큐리티시스템㈜ ㈜위드마인에스코아 반디에스앤씨 반디에스앤씨 주식회사 라메인소프트	상용 SW 조달구매	2025. 11. 28. 2025. 12.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동 사업의 ISP 단계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2025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반 용역비로 6억 6,000만원을 반영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

228)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수적인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 8. 20.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클라우드를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보안 SW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2,3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았음.

<2025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정부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및 예산과목	사업 세부내역	금액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일반연구비, 260-01)	선불식 할부거래 플랫폼	660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DB 구축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구축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공정위 업무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자체 관련정보 지원 제공 기능	
	내·외부 연계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설계(클라우드 사용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은 보안성 검토[229] 결과 해당 플랫폼이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클라우드가 아닌 국가정보관리원의 G클라우드[230]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22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8조는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11조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보안성 등을 고려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230) 「전자정부법」 제5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및 각 센터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지침」 제2조제1항제1호).

□ 이에 따라 G클라우드 입주에 필요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동일 세부 사업 내 소비자정책연구용역 등 4개 내역사업 및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사업의 우수 지자체 포상금 예산에서 총 1억 2,300만원을 전용하여 1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용 SW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전용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5 예산	전용액		전용후 2025 예산현액
세부사업	세사업	세목명		증	감	
선진 소비자 정책 추진 (1400-1431-600)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자산취득비 (430-01)**	-	123		123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일반연구비 (260-01)	40		△23	17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일반연구비 (260-01)	50		△20	30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38		△38	-
		업무추진비 (240-01)	2		△2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컨텐츠 제작	일반용역비 (210-14)	40		△20	20
소비자권익 증진 지원 (1400-1441-610)	우수지자체 포상금	포상금 (310-03)	20		△2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G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추가 상용 SW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품명	수량(식)	단가	소요예산	비고
DB암호화	2	34	69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AGENT	2	9.4	18.8	(주)위즈디엔에스코리아
통합계정관리(IAM)	2	9	18	반디에스앤씨
통합계정인증(SSO)	2	6	12	반디에스앤씨
형상관리 AGENT	2	1.5	3	주식회사 리메인소프트
조달수수료	2	0.54%	0.6	
합 계			12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이러한 예산 전용을 통해 감액된 소비자 정책연구 용역 사업 등의 경우 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당초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전용 감액 사업의 2025년도 계획 및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감액규모	예산현액	계획	실적
선진 소비자 정책	소비자 정책연구 용역	40	17	소비자정책 관련 연구용역 1 ~ 2건 추진	중장기 소비자정책 추진전략 기초분석 연구(1건)

세부 사업	내역사업	감액 규모	예산 현액	계획	실적
추진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 개선	50	30	전자상거래 분야 등 연구용역 1 ~ 2건 추진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1건)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38	-	소비자피해 발생 예상분야를 신규 발굴하여 위반행위 점검 추진	집행실적 없음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컨텐츠 제작	40	20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동영상, 카드뉴스 형식 콘텐츠 제작 등	신유형 부당광고 피해예방 교육컨텐츠 제작 1식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우수지자체 포상금	20	-	전국 지자체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집행실적 없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공공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정보화사업의 기본 설계 단계인 ISP 수립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능

여부, 보안 및 정보자원관리 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ISP 수립단계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다른 사업의 규모 축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ISP 수립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업무 성격, 보안등급, 클라우드 이용 가능 여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연계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축 단계에서의 계획변경과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231]: 상담수당 예산운용의 적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은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43억 700만원 중 42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3,527	3,527	-	50	730	4,307	4,279	-	28	3,877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203	2,203	-	50	730	2,983	2,983	-	-	2,553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	1,144	1,144	-	-	-	1,144	1,139	-	5	1,144
공공요금	180	180	-	-	-	180	157	-	23	18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31) 세부사업: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상담이 필요한 소비자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영역을 선택하면 인근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함으로써 상담과 피해구제를 진행하게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세부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상담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232].

□ 최근 5년간 상담수당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상담위탁수당 1억 7,200만원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2025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상담위탁수당 6,500만원을 2026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여, 「국가재정법」 제3조[233]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234]”에 비추어 적정한 예산집행인지 검토가 필요함.

---

232)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건수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23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34)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임. 즉,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타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임.

<최근 5년간 상담수당 예산집행현황>

(단위: 건,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보 제공	예산 편성	450,000	350,000	320,000	252,000	246,240
	실적	290,440	235,301	252,091	282,795	326,703
	차이	159,560	114,699	67,909	△30,795	△80,463
피해 처리	예산 편성	120,000	120,000	115,000	120,750	111,490
	피해처리	102,085	100,466	113,661	124,904	167,939
	차이	17,915	19,534	1,339	△4,154	△56,449
예산현액		29.8	25.3	23.6	21.0	27.8(26.1*)
상담수당		21.2	18.6	20.4	22.7	26.8
잔 액		8.6	6.7	3.6	△1.7*	△0.7**

* 집행부족분 1억 7천만원은 2025년 상담수당 예산으로 충당

** 집행부족분(2025.12.22. ~ 12.31 기간동안 발생한 상담 건에 대한 상담수당)을 2026년 예산으로 2026.1.28.에 6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담수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전년도 상담실적을 기초로 다음 연도의 상담건수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제 상담건수가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이에 따라 상담수당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음.

□ 특히 2025회계연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비(7억 3,000만원) 및 예산 전용(5,000만원) 등을 통하여 부족한 상담수당 재원

을 확보하였음에도, 2024회계연도 상담수당 부족분(1억 7,200만원)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여야 했던 영향으로 연말 상담수당 일부(6,500만원)를 다시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결과적으로 2024회계연도 상담수당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해당연도의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다시 당해연도 수당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예산부족이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일회적인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상담수요 예측 실패 및 예산편성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동일한 집행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도 중 상담실적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협약서」 제8조제3항[235]에 따른 운영비 조정기준을 적시에 활용하는 한편, 최근 소비자 피해 발생 양상과 상담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상담수요 예측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35)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협약서」**

제8조(상담업무 운영비용) ②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간 배정된 상담위탁 운영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상담에 대한 처리건당 4,500원, 피해해결 처리건당 8,000원
2. 상담관리자 인건비 월 100만원
3.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담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말에 각 단체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정위는 예산감소, 업무량 증감 및 경제사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업무 운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236]: 홍보비의 집행절차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은 26개 기관이 보유한 리콜, 안전·피해예방, 인증정보 등 소비자생활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분쟁조정 포함) 신청창구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12억 2,900만원 중 12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이월하여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1,228	1,228	1	-	-	1,229	1,202	6	21	1,188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452	452	1	7	-	460	453	2	5	479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65	65	-	-	-	65	64	-	1	65
시스템 유지보수	492	492	-	-	-	492	479	4	9	492
시스템 기능개선	219	219	-	△7	-	212	206	-	6	15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36) 세부사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1451-621)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의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하는 홍보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5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65	65	-	-	-	65	64	-	1	65
일반수용비 (210-01)	65	65	-	-	-	65	64	-	1	6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은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한 후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광고 및 서울정부청사 옥외전광판 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제5조, 제10조 및 시행령 제6조[237]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었음.

---

237)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2025년도 소비자24 연간 홍보예산액>

(단위: 천원)

광고유형 및 목적	기간	집행 예산
온라인 홍보 업체를 통한 광고진행	1 ~ 12월	37,000
홈페이지 이벤트 진행	1 ~ 12월	13,000
옥외전광판 표출	6 ~ 11월	2,970
리플릿 등 홍보물품 제작	수시	12,000
합 계		64,97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도 소비자24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계약건명	계약 상대방	집행액	홍보실적
온라인(모바일 앱)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캐시닥 주식회사, 넛지헬스케어 주식회사)	46,948	소비자24 방문 유도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실시(33회)
	지에스엠비즈 주식회사	2,212	소비자24 온라인 이벤트 경품 구입(6건)
	우정사업본부, 신세종로지스	335	경품 발송 배송비
리플렛 제작	경성문화사	2,246	공공기관,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리플렛 배포
포스터 제작	경성문화사	594	전국 지하철 역사 내 게시판에 홍보 포스터 부착
홍보 물품 구매	삼일기획, 고려기프트	8,629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물품 배포
서울정부청사 옥외 전광판 표출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동조합)	2,970	옥외 전광판에 소비자24 홍보영상 표출
합 계		**63,93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정부광고법」 제2조[238]는 정부기관 등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광고·홍보 등을 실시하는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정부광고로 규정하고,

동 법 제3조, 제5조 및 제8조[239]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연간 광고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며, 광고 종료 후 광고료 및 관련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 이러한 정부광고는 광고계획 수립, 광고 의뢰, 광고 집행, 광고효과 확인 및 광고료 지급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반복 추진되는 계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 브랜드 홍보, 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이벤트 경품 등의 홍보비를 관서운영경비 방식으로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등[240]에 따라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는 관서운

---

238) **「정부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239) **「정부광고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4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52조, 「수입과 지출 증에 대한 회계예규」 제50조**에 따르면 운영비(210)의 경우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청사임차료,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금액제한 없음)는 관서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025회계연도 소비자24 홍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건 명	예산과목	지급 구분	지급 금액	수령인명	비고
소비자24 온라인(모바일 앱)/오프라인 광고·홍보대금 지급 21건	일반수용비(210-01)	관서운영경비	49,918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물품 3건 (치약칫솔 세트 등)	〃	〃	8,629	고려기프트(주), 삼일기획	
소비자24 온라인 이벤트 경품 대금 등 7건	〃	〃	2,212	삼성카드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물품 2건 (리플릿 및 포스터)	〃	〃	2,840	경성문화사	
홍보물품 및 제주지원 홍보물품 배송비 지급 2건	〃	〃	335	우정사업본부, ㈜신세종로지스	
합 계			63,93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그러나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241]에 따라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국고금 관리법」 제22조[242]에 따른

24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42)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따를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 지급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소비자24 홍보사업은 연초에 수립된 홍보계획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계획적·계속적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지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럼에도 동 사업의 광고비 상당수를 건별 500만원 이하의 관서운영경비 방식으로 반복하여 지급한 것은 법령상 허용 여부와 별개로, 관서운영경비 제도의 취지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24 관서운영경비 지급방식 광고·홍보대금지급 상세내역>

(단위: 천원)

연번	지급일	수령인	건명	지급액	비고
1	2025-2-13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모바일 광고대금 지급요청(1월)	2,420	
2	2025-3-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모바일 광고대금 지급요청(2월)(브랜드 홍보)	2,420	
3	2025-3-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모바일 광고대금 지급요청(2월)(이벤트 홍보)	3,630	
4	2025-4-17	한국언론진흥재단	캐시닥 용돈퀴즈 온라인 광고(4월 청구분)	4,356	3월분
5	2025-5-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5월 청구분)	4,356	4월분
6	2025-5-27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5월 청구분)	3,630	4월 이벤트 홍보
7	2025-6-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6월 청구분)	4,356	5월분
8	2025-7-3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브랜드 홍보대금 지급(6월분)	4,356	6월분
9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홍보대금 지급	4,356	7,8월분
10	2025-10-13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	4,356	8,9월분
11	2025-12-11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	4,356	10,11월분
12	2025-12-2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온라인 홍보대금 지급(11, 12월분)	4,356	11,12월분
13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청구)	330	
14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청구)	330	
15	2025-9-9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청구)	330	
16	2025-9-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330	
17	2025-9-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330	
18	2025-9-16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광고대금(6~8월)	330	
19	2025-11-12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대금 지급(10월)	330	
20	2025-12-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대금 지급(11월)	330	
21	2025-12-10	한국언론진흥재단	소비자24 오프라인 홍보대금 지급(9월)	330	
합 계				49,91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광고 등 연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성 홍보는 일반적인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적인 예산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13.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243]: UNCTAD 공무원 파견 관련 예산편성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 회계연도 예산현액 13억 9,200만원 중 11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 회계연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346	1,346	7	39	-	1,392	1,123	7	262	1,81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당국과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UN 산하 국제기구인 UN Trade and Development(UNCTAD)에 소속 공무원을 3년 주기로 파견하고 있음.

○ 통상 UNCTAD 공무원 파견경비는 임차료(210-07), 국외업무여비

243) 세부사업: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220-02), 기타보전금(310-04)으로 구성되고, 2025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액은 총 약 1억 700만원임.

<연도별 UNCTAD 공무원 파견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임차료		국외업무여비		기타보전금		합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021	63,795	48,138	24,741	0	19,000	8,720	107,536	56,858
2022	54,240	81,745	19,676	46,291	17,700	8,811	91,616	136,847
2023	61,920	73,897	19,676	0	20,248	1,769	101,844	75,666
2024	62,400	80,195	19,276	0	20,405	1,880	102,081	82,075
2025	66,240	114,432	19,277	54,807	21,660	1,649	107,177	170,78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의 UNCTAD 공무원 파견 예산은 매년 약 1억원 내외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 반면,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매우 큰데, 이는 공무원의 파견 주기가 3년이기 때문인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파견자 교체가 이루어지는 2022년과 2025년의 집행액은 각각 약 1억 3,700만원(예산액: 약 9,200만원), 약 1억 7,100만원(예산액: 약 1억 72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고, 이러한 초과집행이 주로 임차료와 국외업무여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은 파견자의 이사비와 항공료 등인 것으로 추정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회계연도를 비롯해 파견 교체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여 예산의 전용이나 세목변경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그 밖의 해에는 예산이 남아 다시 전용이나 세목변경을 통해 다른 목적의 사업에 집행하고 있음.

○ 예컨대, 2025 회계연도의 경우 임차료가 부족하여 약 4,800만원을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하였고,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은 약 3,800만원을 전용하여 충당하였음.

<예산의 전용 등 실시내역(2022년, 2025년)>

(단위: 천원)

연도		편성액	집행액	전용 등
2022년	임차료	54,240	81,745	· 세목조정(13,490) · 동일 세목 내 집행잔액 사용(14,015)
	국외업무여비	19,676	46,921	· 세목조정(17,691) · 동일 세목 내 집행잔액 사용(8,924)
2025년	임차료	66,240	114,432	· 내역변경(2,335) · 세목조정(45,857)
	국외업무여비	19,277	54,807	· 전용(37,5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UNCTAD 공무원의 파견은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사업으로서 파견자 교체 시기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파견 교체 여부에 따라 예산의 전용 또는 세목변경을 반복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국회 예산 심사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예산의 전용이나 세목변경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를 사실상 정례적인 예산 조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 소요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UNCTAD 공무원의 파견 교체시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동 사업의 예산 전용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4. 지방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244]: 일부 지방사무소 국내여비의 적정 편성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각 지방사무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 2025년도 예산현액 9억 6,000만원 중 9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지방사무소의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958	958	-	7 △5	-	960	957	-	2	1,024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31	231	-	1	-	232	232	-	-	202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11	211	-	2	-	213	213	-	-	574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48	348	-	△4	-	344	343	-	1	78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7	87	-	4	-	91	91	-	-	89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1	81	-	△1	-	80	78	-	1	8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44) 세부사업: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9),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0),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1),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3)

2) 검토의견

□ 2025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고, 각 지방사무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245][246]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2025년 기준)>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서울특별시·경기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247] 토대로 재작성)

---

24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2025. 12. 30. 개정, 2026. 3. 1. 시행)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임(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임).

24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 지방사무소의 국내여비는 사건조사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2025년에는 5곳 지방사무소의 국내여비로 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200만원이 집행되어 2,8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각 지방사무소별 국내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서울사무소	50	10	60	60	50*
부산사무소	42	12	54	54	42
광주사무소	28	3	31	31	28
대전사무소	26	-	26	26	26
대구사무소	28	3	31	31	28

* 경인사무소와 별도로 편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3년간의 각 지방사무소의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지방사무소에서는 당초 편성된 국내여비 예산을 초과하는 소요가 발생하여 부족분을 다른 사업이나 비목에서 전용이나 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특히, 부산사무소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서울·광주사무소도 최근 2년 연속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일부 지방사무소에서는 국내여비 부족이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4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최근 3년간 각 지방사무소별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서울 사무소	2025년	50	10	60	60	-
	2024년	50	3	53	52	1
	2023년	47	-	47	46	1
부산 사무소	2025년	42	12	54	54	-
	2024년	42	21	63	63	-
	2023년	39	7	46	46	-
광주 사무소	2025년	28	3	31	31	-
	2024년	28	6	34	34	-
	2023년	27	△4	23	22	1
대전 사무소	2025년	26	-	26	26	-
	2024년	26	△12	14	12	2
	2023년	24	1	25	25	-
대구 사무소	2025년	28	3	31	31	-
	2024년	28	△4	24	23	1
	2023년	26	1	27	2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간 각 지방사무소 국내여비로의 전용, 조정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서울사무소>						
2025년	전용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9)	일반 수용비 (210-01)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9)	국내여비 (220-01)	9.7
	내역 변경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4)	국내여비 (220-01)			0.3
2024년	내역 변경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국내여비 (220-01)			2.5

구 분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부산사무소>						
2025년	전용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일반 수용비 (210-01)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국내여비 (220-01)	7.8
			임차료 (210-07)			1.0
			유류비 (210-08)			0.6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8
	내역 변경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국내여비 (220-01)			2.0
2024년	전용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일반 수용비 (210-01)			10
	내역 변경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국내여비 (220-01)			2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국내여비 (220-01)			3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3)	국내여비 (220-01)			1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국내여비 (220-01)			5
2023년	전용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일반 수용비 (210-01)			3.8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2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9

구 분		~에서		~으로		금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광주사무소>						
2025년	전용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임차료 (210-07)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국내여비 (220-01)	1
			유류비 (210-08)			1.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5
2024년	전용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일반 수용비 (210-01)			4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1
			유류비 (210-08)			1,2
<대전사무소>						
2023년	전용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국내여비 (220-01)	0.6
<대구사무소>						
2025년	내역 변경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국내여비 (220-01)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3)	국내여비 (220-01)	3
2023년	전용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3)	일반 수용비 (210-01)			0.8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는 일부 지방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여비 예산이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예산 부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23년 대비 2025년 현장조사건수는 서울·부산·광주사무소에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여비 예산은 모든 지방사무소에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최근 3년간 지방사무소 현장조사 출장건수>

(단위: 건, 백만원)

소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75	87	136
	예산액	47	50	50
부산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86	85	115
	예산액	39	42	42
광주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43	112	80
	예산액	27	28	28
대전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41	32	38
	예산액	24	26	26
대구 사무소	현장조사건수	64	53	43
	예산액	26	28	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예산의 전용이나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248], 예산집행지침[249]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

---

248)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24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396

□ 내역변경의 개념

○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내역변경(조정) 절차

○ 내역변경(조정)은 국가개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

는 제도인 만큼, 동일한 비목에서 연례적으로 예산 조정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이 실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인 예산 조정이 발생한 지방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출장건수, 출장인원, 출장일수 등 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최근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적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5. 한국소비자원 출연[250]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소비자원 출연”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액(수입실적)은 출연금 536억 4,600만원 등 563억 7,3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389억 2,600만원, 사업비 118억 5,900만원, 운영비 43억 7,500만원 등 총 551억 6,000만원(집행률 97.2%)임.

<2025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53,696	53,696	53,646	△50	99.9
2. 자체수입	3,044	3,044	2,727	△317	89.6
- 전년도이월금	952	952	883	△69	92.8
- 수탁용역수입	1,483	1,483	1,332	△151	89.8
- 교육연수수입	5	5	-	△5	-
- 이자수입	248	248	178	△70	71.8
- 임대·기타수입	356	356	334	△22	93.8
수 입 합 계	**56,740**	**56,740**	**56,373**	**△367**	**99.4**

(자료: 한국소비자원)

250) 세부사업: 한국소비자원 출연(1461-630)

<2025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인건비	37,950	38,931	38,926	5	100.0
2.사업비	12,763	12,763	11,859	904	92.9
(항)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688	1,643	1,416	227	86.2
(세항) 정책연구	578	578	502	76	86.9
(세항) 거래조사	909	864	740	124	85.6
(세항) 대외협력	201	201	174	27	86.6
(항)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2,787	2,832	2,795	37	98.7
(세항) 소비자 정보제공	369	348	339	9	97.4
(세항) 소비자 역량강화	121	101	97	4	96.0
(세항) 소비자원 정보화	2,176	2,221	2,199	22	99.0
(세항) 소비자홍보	121	162	160	2	98.8
(항)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5,203	5,203	4,857	346	93.3
(세항) 소비자안전	2,165	2,165	2,003	162	92.5
(세항) 시험검사	3,038	3,038	2,854	184	93.9
(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743	1,743	1,507	236	86.5
(세항) 피해구제	864	900	832	68	92.4
(세항) 분쟁조정위원회	546	510	433	77	84.9
(세항) 지방소비자	333	333	242	91	72.7
(항) 수탁용역	1,342	1,342	1,284	58	95.7
(세항) 수탁용역	1,342	1,342	1,284	58	95.7
3. 운영비	4,639	4,639	4,375	264	94.3
(세항) 경영기획	4,056	4,056	3,826	230	94.3
(세항) 부서운영비	583	583	549	34	94.2
4. 예비비	1,388	407	-	407	-
지 출 합 계	56,740	56,740	55,160	1,580	97.2

(자료: 한국소비자원)

2) 검토의견

(1) 연말 인건비 잔액의 과도한 사후 전용 지양 필요

□ 한국소비자원은 2025회계연도 인건비 수정예산 389억 3,100만원 중 389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당초예산	이·전용 등	수정예산	집행액	잔액	비고(사유)
보수	33,566	1,044	34,610	34,605	5	
기본급	18,380	△241	18,139	18,139	-	예비비에 편성된 증원인건비 전용 및 타비목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상여금	4,165	496	4,661	4,661	-	3급 이하 평균인원 증가로 고정상여금(31.6%) 지급분 증가
사회보험부담금	2,633	171	2,804	2,804	-	'25년도 사회보험부담금 인상
퇴직급여충당금	2,028	-	2,028	2,028	-	
성과급	1,375	△153	1,222	1,222	-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현원 차이로 잔액 발생

비목	당초예산	이·전용 등	수정예산	집행액	잔액	비고(사유)
복리후생비	2,266	622	2,266	2,266	-	
직급보조비	1,396	△80	1,316	1,312	4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현원 차이로 잔액 발생
제수당	1,324	△130	1,193	1,193	-	
경영평가 성과급	-	981	981	980	1	예비비에 편성된 경영평가 성과급 전용
상용임금	3,976	131	4,107	4,107	-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인상 및 상시근무인원 증가
일용임금	245	△31	214,413	214	-	
합계	**37,787**	**1,144**	**38,931**	**38,926**	**5**	

(자료: 한국소지바원)

□ 한국소비자원의 2025회계연도 인건비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12월 31일에 인건비 비목간 총 4건, 7억 9,8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일자	조정사유	재원			충당			조정액
			관	세항	목	관	세항	목	
1	12.31.	공무직 사회보험금 인상 등 상용임금 재원 마련	인건비	인건비	일용임금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31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상용임금	100
2	12.31.	인건비 내 비목 조정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인건비	인건비	상여금	304
				인건비	제수당		인건비	상여금	130

연번	일자	조정사유	재원			충당			조정액
			관	세항	목	관	세항	목	
				인건비	직급 보조비		인건비	상여금	62
3	12.31.	인건비 내 비목 조정	인건비	인건비	직급 보조비	인건비	인건비	복리 후생비	1
4	12.31.	인건비 내 비목 조정	인건비	인건비	직급 보조비	인건비	인건비	국민 연금 부담금	17
				인건비	성과급		인건비	국민 연금 부담금	153
합 계									798

(자료: 한국소비자원)

□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251]은 회계연도 말에 경상경비를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251)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 회계연도 말에 경상경비를 집중 집행하거나 과다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2월 급여(12. 15.) 및 임금인상분(12. 30.)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를 우선 집행한 후, 12월 31일에 인건비 비목간 전용을 일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12월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원)

지출결의일자	항	세항	목	지출건명	지출결의금액
2025-12-30	인건비	인건비	상여금	2025년 임금인상분 지급	116,277,650
2025-12-30	인건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2025년 임금인상분 지급	21,424,670
2025-12-30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임금인상분 지급	37,896,35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산재보험료 납부	16,408,29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국민연금 납부	92,101,46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	91,480,74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2월 고용보험료 납부	33,202,56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산재보험료 납부	2,187,67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	11,901,19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국민연금 납부	11,242,070
2025-12-26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고용보험료 납부	4,387,18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상여금	2025년 12월 정규직 급여	385,229,75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2025년 12월 정규직 급여	119,267,38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계약직 급여	11,589,080
2025-12-15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2월 공무직 급여	303,199,84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국민연금 납부	91,505,16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고용보험료 납부	33,159,47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	93,173,110

지출결의일자	항	세항	목	지출건명	지출결의금액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2025년 11월 산재보험료 납부	16,383,07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	11,977,44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국민연금 납부	11,352,32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산재보험료 납부	2,186,620
2025-12-09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2025년 11월 고용보험료 납부	4,385,110
합 계					1,521,918,180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하여 인건비는 퇴직, 휴·복직, 단축근로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액 변동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전용절차에 따른 행정부담 및 임금 지급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연말에 일괄 전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252].

□ 그러나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일정 수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요인인 만큼,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연말에 대규모 사후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적인 예산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인건비 집행 변동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월별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252)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도에 보수체계의 변화(*직무급 신규 도입)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 기본급(직급급·근속급·직무급)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 직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적기에 전용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연말에 과도한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기관 고유기능과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평가[253] 대응을 위한 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정례협의체[254] 참여기업인 L사와 공동으로 L사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사업 관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항)-(세항)-(목)	예산		집행액
		당초	수정	
민간협업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	소비자안전-위해정보-일반용역비	-	5	3.8
	대외협력-대외협력-여비	-	3	3
	운영비-기획예산-업무추진비	-	0.3	0.3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비용 지원사업	운영비-기획예산-일반수용비	-	6	5.9
해외 유관기관 방문연수 연계 홍보 지원 사업	-	-	-	-
합 계		**-**	**14.3**	**13**

(자료: 한국소비자원)

253)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0조의1항에 따라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노력을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실시, 그 결과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대외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 및 각 부처에 통보(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 평가 해외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 수 지표 평가 기준>

실적	61개사 이상	46~60개사	31~45개사	16~30개사	5~15개사
득점	3.0	2.4	1.8	1.2	0.6

254) 안전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13개 산업 분야의 152개 기업, 8개 협회가 참여

□ 한국소비자원은 민간협업을 통해 홍콩(Cosmoprof Hong Kong 2025)에서 개최된 국제 박람회에 참가 16개사, 해외판로 개척 비용지원 20개사 및 연계 홍보지원 1개사 등 총 37개사를 지원하였음.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결과>

○ 민간협업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
- **(개요)**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사업자정례협의체 참여사인 L사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공동 사업 추진
- **(지원내용)** L사 협력 중소기업의 국제 전시회(Cosmoprof Hong Kong 2025*) 참여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탐색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지원 실적)** L사 협력 중소기업 16개 사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비용 지원 사업
- **(개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전시회 참여, 바이어 발굴, 물품 발송 등 수출 전과정에 걸친 비용 지원
- **(지원내용)** 2025년 해외판로 개척 활동과 관련하여 비용 지출이 있는 기업 중 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지원 실적)** 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20개 사

○ 해외 유관기관 방문연수 연계 홍보 지원 사업
- **(개요)** 해외 유관기관의 소비자원 방문 연수 시 기관 협력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전 개최
- **(지원내용)** 연수 프로그램에 홍보전을 포함하여 기관 협력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 및 설명을 통한 홍보 실시
- **(지원 실적)** 사업 관련 협업 중소기업 1개 사

(자료: 한국소비자원)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255]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소비자 권익증진, 소비자안전 확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자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수출지원 또는 해외마케팅 지원은 본래 기관의 법정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소비자원의 법정 기능 및 정부출연사업의 목적과의 연계성이 다소 낮고,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평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예산 편성 시 기업과의 협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사업 단독 세부사업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 내 '대외협력' 및 소비자안전 사업 내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과 연계하여 기존 세부사업

---

25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5조(업무)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의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 물론 공공기관은 정부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자율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정부출연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부출연사업의 목적 범위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경영평가 및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안전, 소비자중심경영(CCM[256]), 제품안전관리 등 기관의 설립목적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56)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257]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은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연구,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 가맹·대리점종합지원, 공정위 수탁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조정원의 2025회계연도 수입액(수입실적)은 공정위 출연금 127억 5,700만원 등 141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82억 2,200만원, 운영비 26억 7,900만원, 사업비 19억 8,800만원 등 총 140억 4,600만원(집행률 95.8%)임.

<2025회계연도 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 예산	수정 예산 (A)	수입 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2,757	12,757	12,757	-	100
2. 기타수입	609	609	175	△434	28.7
3. 수탁사업비	1,242	1,296	1,174	△122	90.6
수 입 합 계	**14,608**	**14,662**	**14,106**	**△556**	**96.2**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57) 세부사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350)

<2025회계연도 조정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8,504	8,504	8,222	282	96.7
2. 운영비	2,698	2,698	2,679	19	99.3
3. 사업비	2,164	2,164	1,988	176	91.9
- 분쟁조정	707	707	676	31	95.6
- 공정거래연구	513	513	427	86	83.2
- 협약이행평가	291	291	276	15	94.9
- 공정거래전문교육	101	101	99	2	98.0
- 가맹·대리점종합지원	341	341	320	21	93.9
- 동의의결이행관리	17	17	15	2	88.2
- 시정조치이행관리	69	69	51	18	73.9
- 전산운영지원	125	125	124	1	99.2
4. 수탁사업비	1,242	1,296	1,157	139	89.3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337	337	328	9	97.3
- CP등급평가	381	384	379	5	98.7
- 기술자료비밀보호컨설팅	-	51	36	15	70.6
- 경쟁영향평가 연구	320	320	214	106	66.9
- 하도급연동지원본부	204	204	200	4	98.0
합 계	**14,608**	**14,662**	**14,046**	**616**	**95.8**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검토의견

(1) 분쟁조정 처리량 증가에 대응한 신속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분쟁조정사업은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7억 700만원 대비 95.6%인 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258], 분쟁당사자는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2025회계연도 분쟁조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분쟁조정사업	707	707	676	31	95.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59]등 6개 법률[260]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

---

2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59)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6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률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대리점거래의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처리건수는 2023년 3,151건에서 2025년 4,407건으로 39.9% 증가하였으나, 조정성립률은 79%에서 76%로 3%p 하락 하였음.

○ 조정성립 건수가 2023년 1,278건에서 2025년 1,709건으로 증가한 점은 처리량 확대에 따른 일정한 성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불성립 건수도 같은 기간 350건에서 553건으로 58.0% 증가하여 조정성립 건수 증가율 33.7%를 상회하여 조정의 실효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 분야별로도 2025년 조정성립률은 대리점 분야가 56%로 가장 낮았고, 공정거래·가맹·하도급 분야도 각각 75%에 그쳤음. 특히 대리점 분야의 성립률은 2023년 90%에서 2025년 56%로 3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 건수	증감률	처리건수					성립률 [A/A+B]
				계 [A+B+C]	증감률	성립* [A]	불성립** [B]	종결*** [C]	
2023년	소 계	3,481	22	3,151	10	1,278	350	1,523	79
	공 정	1,372	26	1,267	13	475	135	657	78
	가 맹	605	24	575	12	263	62	250	81
	하도급	1,044	16	929	9	354	100	475	78
	유 통	29	4	26	△24	13	1	12	93
	약 관	339	32	278	3	137	48	93	74
	대리점	92	7	76	△3	36	4	36	90
2024년	소 계	4,041	16	3,840	22	1,450	465	1,925	76
	공 정	1,795	31	1,603	27	624	150	829	81
	가 맹	584	△3	587	2	246	96	245	72
	하도급	1,105	6	1,107	19	375	113	619	77
	유 통	29	-	29	12	16	3	10	84
	약 관	457	35	429	54	152	96	181	61
	대리점	71	△23	85	12	37	7	41	84
2025년	소 계	4,726	17	4,407	15	1,709	553	2,145	76
	공 정	2,424	35	2,174	36	792	258	1,124	75
	가 맹	691	18	595	1	247	81	267	75
	하도급	1,040	△6	1,074	△3	413	137	524	75
	유 통	29	-	29	-	16	-	13	100
	약 관	451	△1	442	3	216	57	169	79
	대리점	91	28	93	9	25	20	48	56

*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거나, 스스로 합의하여 조정절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성립 및 불성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또한,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47일에서 2025년 57일로 10일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90일을 초과한 장기 사건은 209건

에서 518건으로 증가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 특히 90일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209건에서 2025년 518건으로 147.8% 증가하였고, 전체 처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6%에서 11.8%로 5.2%p 높아졌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261] 등 분쟁조정관련 규정[262]은 원칙적으로 신청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양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사건 증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위: 건, %, 일)

구분		처리건수	기한내		60일 도과		90일도과		평균 처리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3년	소 계	3,151	2,462	78.1	480	15.3	209	6.6	47
	공정	1,267	1,062	83.8	141	11.1	64	5.1	44

2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

26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제4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4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구분		처리 건수	기한내		60일 도과		90일도과		평균 처리 기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맹	575	459	79.8	84	14.6	32	5.6	44
	하도급	929	697	75.0	156	16.8	76	8.2	48
	유통	26	24	92.3	2	7.7	-	-	39
	약관	278	188	67.6	72	25.9	18	6.5	53
	대리점	76	32	42.1	25	32.9	19	25.0	78
2024년	**소 계**	**3,840**	**2,943**	**76.6**	**638**	**16.7**	**259**	**6.7**	**49**
	공정	1,603	1,330	83.0	204	12.7	69	4.3	45
	가맹	587	467	79.6	95	16.1	25	4.3	45
	하도급	1,107	770	69.6	219	19.7	118	10.7	54
	유통	29	21	72.4	5	17.3	3	10.3	52
	약관	429	319	74.4	89	20.7	21	4.9	51
	대리점	85	36	42.4	26	30.5	23	27.1	76
2025년	소 계	**4,407**	**2,881**	**65.4**	**1,008**	**22.8**	**518**	**11.8**	**57**
	공정	2,174	1,423	65.5	539	24.7	212	9.8	56
	가맹	595	401	67.4	136	22.9	58	9.7	54
	하도급	**1,074**	**686**	**63.9**	**200**	**18.6**	**188**	**17.5**	**60**
	유통	**29**	**10**	**34.5**	**9**	**31.0**	**10**	**34.5**	**79**
	약관	442	317	71.7	99	22.4	26	5.9	51
	대리점	**93**	**44**	**47.3**	**25**	**26.9**	**24**	**25.8**	**7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① 분야별 처리기간 편차에 대한 관리 필요

□ 2025년 분야별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대규모유통업거래와 대리점거래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9일로 전체 평균 57일보다 22일 길었고, 하도급 분야도 평균 60일로 나타나 분야별 편차가 큼.

○ 90일 초과 비율도 유통 34.5%, 대리점 25.8%, 하도급 17.5%로서 공정거래 9.8%, 가맹 9.7%, 약관 5.9%보다 현저히 높았음.

○ 조정원은 하도급 분야의 경우 조정금액이 큰 복잡사건과 방대한 제출자료 등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유통·대리점 분야는 사건 수가

적어 협의회 개최 간격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2	20	1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16	13	1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9	22	18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8**	**8**	**4**
약관분쟁조정협의회	9	11	12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7**	**11**	**8**
계	71	85	67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낮은 발생빈도를 감안하더라도,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건관리 및 협의회 운영방식을 마련하여 편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고액·복잡 하도급 사건은 일반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단순 사건의 처리가 함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건 수가 적은 분야는 정기 협의회 개최 외에 수시개최 형태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처리량 증가에 대응한 인력배분 점검 필요

□ 조정원의 조정 관련 정원은 2023년 45명에서 2025년 52명으로 13.5% 증가하였으나, 현원은 2023년 44명에서 2025년에는 48명으로 9% 증가에 그쳤고,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같은 기간 3,151건에서 4,407건으로 39.9% 증가하였음.

○ 현원 1인당 처리건수는 2023년 약 72건에서 2025년 약 92건으로 증가하므로, 사건 증가와 처리기간 장기화가 인력 부족이나 분야별 인력배분의 불균형과 관련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263].

<최근 3년간 분쟁조정 관련 인력 및 평균 처리건수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23	2024	2025
현원 / 정원	44 / 45	46 / 51	48 / 52
분쟁처리 건수	3,151	3,840	4,407
현원 기준 1 인당 처리 건수	71.6	83.5	91.8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 자료 재구성)

263) 다만 연말 현재 현원만으로는 실제 연간 업무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월평균 근무인원, 결원기간, 휴직·파견 및 신규채용 시기,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인력 등을 반영하여 적정인력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③ 결론

□ 분쟁조정 처리건수와 조정성립 건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평균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장기사건· 불성립사건이 더 빠르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양적 처리실적의 확대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성과로 충분히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처리건수 증가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처리기간, 장기사건 비율, 조정성립률 등 질적 성과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조정원은 처리단계별 지연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건 난이도를 반영한 인력배분 및 장기사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상여금 지급수준의 계획적 설정 및 산정기준 개선 필요

□ 조정원은 2025회계연도 인건비 예산 85억 400만원 중 82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2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7%임.

<2025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 예산	수정 예산 (A)	집행 (B)	잔 액 (C=A-B)	집행률 (D=B/A)
인건비	**8,504**	**8,504**	**8,222**	**282**	**96.7**
- 기본급	4,833	4,643	4,406	237	94.9
- 성과상여금	**362**	**453**	**452**	**1**	**99.8**
- 제수당	1,256	1,200	1,175	25	97.9
- 기타보수	752	782	781	1	99.9
- 사회보험부담금	695	630	619	11	98.3
- 퇴직급여충당금	606	796	789	7	99.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은 2025년 12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예산을 당초 3억 6,200만원에서 4억 5,300만원으로 9,100만원 증액하였으며, 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성과상여금 증액 재원은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제수당 및 사회보험부담금 등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충당하였음.

<2025년도 조정원 인건비 전용내역>

(단위: 천원)

연도	전용일자	목	2025년 예산 [A]	전용액[B]		전용 후 예산 [A+B]	집행액
				증	감		
2025	12. 24.	퇴직급여충당금	605,560	190,000		795,560	789,024
		성과상여금	**361,805**	**91,000**		**452,805**	**452,349**
		기타보수	752,372	30,000		782,372	781,371
		기본급	4,833,357		△190,000	4,643,357	4,405,383
		제수당	**1,255,487**		**△56,000**	**1,199,487**	**1,175,229**
		사회보험부담금	**695,419**		**△65,000**	**630,419**	**618,70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에 대해 조정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성과제고를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수준을 연말에 당초 계획보다 모든 등급에서 각 50%p씩 상향 조정하였음.

<2025년도 조정원 성과상여금 지급률>

<성과평가 계획(2025. 4.)>

구 분	S	A	B	C	D(E)
지급률(기준월봉 기준)	150%	125%	100%	75%	50%(0)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025. 12.)>

구 분	S	A	B	C	D(E)
지급률(기준월봉 기준)	200%	175%	150%	125%	100%(0)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급기준과 소요재원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연말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식은 예산 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한편,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출연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264]은 경영평가 성과급,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 시 기준년도를 2024년도로 하고, 월 기본급 및 기준월봉은 별도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정원은 2025년도 성과상여금 예산 편성 및 지급시 정부지침과 달리 2025년도 임원 연기본급 및 직원 기준월봉을 적용하고 있음.

---

264)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24년도로 하며, 월 기본급·기준월봉 산출은 [붙임 1]에 따른다. [붙임 1] 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급 산정기준(생략)

<2025년도 성과상여금 산출내역 및 지급기준>

• 예산서 기준 2025년도 성과상여금 예산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계(단위: 천 원)
임원(성과급)	280,955,600원*×36%	101,143
직원(내부평가급)	(5,213,230,250원×1/12×60%)**	260,662
계		361,805

* 2025년도 임원 연기본급

** 2025년도 직원 기준월봉

• 성과평가 계획서 기준 성과평가 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조정원 소속 정규직 등 직원
- 평가대상 기간: 2025. 1. 1. ~ 2025. 11. 30.

• 성과급 지급계획서 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 지급 시기: 2025. 12. 31.(수)
- 지급기준
  · 임원: 연 기본급 36%(보수규정 제6조~제7조 및 2025년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 정규직 직원: 기준월봉 150%(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예산범위(200%)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조정원의 「보수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및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수 규정」

제6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은 기준월봉에 대하여 연간 200%, 임원은 연기본급에 대하여 연간 6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성과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및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방법은 조정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퇴직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하여 지급한다.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성과상여금은 평가기간 동안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바, 지급액 산정기준이 지급일 현재의 보수 수준에 연동될 경우, 임금인상, 승급 등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수 변동 요인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반영될 수 있음.

□ 특히 조정원의 경우 202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반면, 평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평가기간 이후 발생한 보수 변동사항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동일한 성과평가에도 평가기간 이후의 보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조정원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년도 및 기준월봉 산정방식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게 된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조정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수준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연말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 예산운용지침과 성과상여금 산정기준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 소관 】

제1장 일반회계

1. FIU 전산망 구축운영(정보화)[265]

1) 사업 및 결산 개요

□ “FIU 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보호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9억 4,700만원 중 48억 7,000만원(98.4%)이 집행되고,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FIU 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FIU 전산망구축 운영(정보화) 사업	4,947	-	-	4,947	4,870	-	77	4,801

(자료: 금융위원회)

265) 세부사업: FIU 전산망구축운영(1132-501)

2) 검토의견: 용역 계약 절차 진행 시 공고기간 준수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FIU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동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25년도에 44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4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FIU정보시스템' 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 외부 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리용역비 39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3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

<FIU 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조달수수료, 소모용품비 등	50	50
공공요금 및 제세	전용회선 사용료, 기업데이터 이용료 등	192	178
관리용역비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3,972**	**3,910**
자산취득비	노후장비 교체 등	235	235
일반연구비	RBA 시스템 개선 ISP 용역	498	497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고, 3년간의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있음.

○ 장기계속계약[266]이란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 계약과 같이 그 성

2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다년도에 걸쳐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공고 과정에서 계약기간 동안의 총 용역비를 부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년차 이후의 연도별 용역 집행금액은 각 회계연도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2024년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용역을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동 계약의 경우 3년간 총 용역비를 122억 7,2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연도별 소요 예산은 아래와 같음.

<FIU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기간	예산액
1차연도	2025.1.1. ~ 2025.12.31.	3,972
2차연도	2026.1.1. ~ 2026.12.31.	4,088
3차연도	2027.1.1. ~ 2027.12.31.	4,212

(자료: 금융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그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최소 4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갖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만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267]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되, 재공고, 긴급한 행사 등 또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긴급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268]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을 25일로 설정하였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러한 긴급입찰을 추진한 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267) FIU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

2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의 경우 2025년 1월 1일자로 연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종료 즉시 새로운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내에 계약 및 인수인계 완료가 필수적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269]에 따라 공고기간을 25일[270]로 단축하는 긴급공고를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련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2024년에 미리 2025년도 1월 1일자로 수행할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긴급공고를 추진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FIU정보시스템과 별도로 '2025년도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동 입찰 공고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를 실시[271]하였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4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

269)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함.
270) 2024. 10. 23. ~ 2024. 11. 15.
271) 2024. 10. 18. ~ 2024. 11. 29.

○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와 같은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다른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특정 업체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이 2024년과 2021년에 각각 발주한 FIU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 결과를 보면, 모두 단일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었으며, 최근 6년간의 계약은 모두 동일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음.

<최근 FIU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내역>

구분	계약방식	계약 사업자	비고
2025년~2027년	단독입찰로 유찰 → 수의계약	케이씨씨정보통신, 올포랜드	5:5지분
2022년~2024년	단독입찰로 유찰 → 수의계약	케이씨씨정보통신, 올포랜드	5:5지분
2021년	단독입찰로 유찰 → 수의계약	올포랜드	

(자료: 금융위원회)

□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사업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기간을 준수함으로써 여러 업체가 실질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272)]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273)274)] 추진' 사업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 금융당국과의 면담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9억 8,100만원 중 9억 7,000만원(98.9%)이 집행되었고, 1,100만원(1.1%)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981	981	-	-	981	970	-	11	997
-금융관련 국제협력	581	581	17	-	599	591	-	11	655
- 금융중심지추진	73	73	△17	-	55	52	-	3	59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327	327	-	-	327	327	-	-	283

(자료: 금융위원회)

272) 세부사업: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1431-301)

27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3.21.>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74)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 내역사업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사업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275]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설치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억 2,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026년 현재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팀)에 설치되어 있으며, 1개 팀(총 11명) 및 1개 분소(1명,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음[276].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현황 〉

구 분	금융감독원 직원	통역전문역	수견직원	계
금융중심지지원팀	6	3	2	11
부산 지원센터	1	-	-	1

주) 수견직원 :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운용하는 직원

(자료: 금융위원회)

27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6) 센터장 : 수석부원장, 부센터장 : 국제업무국 국장

2) 검토의견: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를 금융기업 지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당초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목적과는 관련성이 낮은 일반 국제협력 및 행사 개최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실집행 실적(2022~2025년) 〉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022년	466	331	135	71.0
2023년	450	281	169	62.4
2024년	327	283	44	86.5
2025년	**327**	**189**	**138**	**57.8**

(자료: 금융감독원)

□ 2025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교부액 3억 2,700만원 중 1억 8,900만원(57.8%)이 집행되었으며,

세부 실집행 내역 상 주로 해외 IR(Investor Relations)과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해외 IR의 경우 당초 1억 7,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7,200만원이 집행되어 9,800만원이 불용되었고,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의 경우 당초 3,3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700만원이 집행되어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 내역별 실집행 실적 〉

(단위: 원)

내 역	배정금액(A)	집행금액(B)	잔액(A-B)
○ 인건비	3,000,000	3,000,000	-
○ 경상경비	324,000,000	186,204,732	137,795,268
- 해외 IR	**170,010,000**	**71,898,016**	**98,111,984**
-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13,008,000	12,641,000	367,000
-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	**33,000,000**	**7,385,586**	**25,614,414**
-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10,562,000	6,271,100	4,290,900
-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4,420,000	3,283,130	1,136,870
-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80,000,000	75,195,000	4,805,000
-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13,000,000	9,530,900	3,469,100
합 계	327,000,000	189,204,732	137,795,268

(자료: 금융감독원)

□ 한편, 2025년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제협력 행사를 운영하는데 실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외 IR,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등 동 사업을 통하여 개최된 행사는 국제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 등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 동 사업을 통한 행사 내역 〉

구 분	주요 참석자	주요 내용
해외 IR	금융감독원장	(4월) 홍콩 : 글로벌 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 설명회 개최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금융감독원장	(1월)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 개최 - 2025년 글로벌 금융이슈 및 최근 국내 금융상황 의견 교환 (9월) 25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 개최 - 금융현안 관련 제언 청취
해외 감독당국 방문 출장	금융중심지지원팀 직원	(4월) 홍콩: 양국 자본시장 현안사항 등 논의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방문 (11월) 싱가포르: 핀테크 생태계 조성현황 등 논의를 위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방문 (12월) 홍콩: 디지털은행 감독방안 등 논의를 위해 홍콩 금융관리국(HKMA) 방문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	(5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통합감독국장 등) 초청 세미나 -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 관련 설명 (9월) 미국 보험감독당국(뉴저지주 감독당국 보험계리 최고 책임자) 초청 세미나 - 계리감독 선진화 공개 세미나 -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1시간)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금융감독원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해양금융종합센터	(11월) 부산 해양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및 조선·해운산업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 토론회 개최

(자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재작성)

□ 반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기업 자문 및 컨설팅, 투자 유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또는 사업 실적은 부재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277]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실적에도 해당 내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27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업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 관련 통계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음.

□ 당초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최초로 설치된 2008년[279]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외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2009년에는 금융기업의 인허가 지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금융투자자 출입국 우대제도 도입, 해외 금융전문인력 매칭 등 금융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277)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업무실적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78) **제7조(금융중심지 지원업무 관련 통계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지원 실적, 경영환경 개선 처리 실적 등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79) 본 센터(서울)는 20명(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에는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부산 지원센터(5명)도 별도로 설치되었음.

□ 그러나,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강화되고 종전의 지원 업무에 관한 수요는 감소한 반면,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고유 지원 업무 정립은 미흡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과 관행적인 국제행사 중심의 업무 체계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지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허가·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국내 금융업 경영환경 개선 등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관의 일반적인 국제협력 업무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실적 및 통계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280]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25억원 전액을 진흥원에 교부하였음.

<2025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	56,000	92,500	-	-	92,500	92,5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은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고 이로써 불법사금융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출시하였음.

○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281]이고 연소득 4,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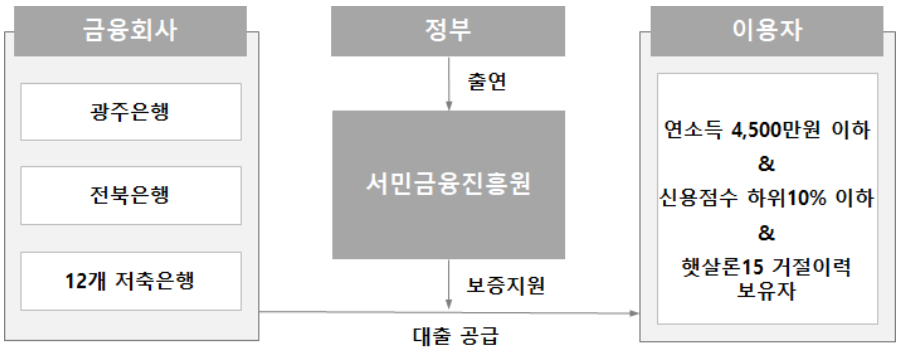
280)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1831-881)
281) KCB와 NICE 중 더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

이하인 자 중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282]이 거절된 자임. 대출한도는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이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500만원 한도) 이용자격을 부여하여 최대 총 1,000만원 이내임.

○ 대출금리는 최초 15.9%이고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방식인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차주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최종금리가 9.8%~9.9% 수준까지 인하되도록 설계되었음.

○ 대출을 원하는 최저신용자가 진흥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여 진흥원 심사 결과 보증이 승인되면, 최저신용자는 이를 근거로 시중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시중은행은 동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함.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집행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282) 햇살론15 기본 이용요건: ①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②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정책금융상품을 개편하면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과 햇살론 15 상품[283]을 통합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을 신설하였음.

○ 기존 '햇살론 15' 상품과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정부 및 민간 재원이 투입되는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되어, 소득기준은 상대적으로 강화(연소득 3,500만원 이하)되고 신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신용 하위 20% 이하)될 계획임.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		⇩		⇩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민간**		
업권	**全 업권**				

(자료: 금융위원회)

283) 햇살론15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대부업·미등록대부업을 이용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이 보증을 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9월 햇살론17(연 17.9%)로 처음 출시되었으며, 2021년 1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5(연 15.9%)로 개편되었음.

2) 검토의견: 사업 부실률 관리 철저 필요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보증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후 차주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함.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은 2022년에 첫 보증 공급을 실시하여 매년 일반회계로 정부 출연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본예산에서 5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65억원을 증액하여 총 925억원을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음.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공급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22년[1)]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편성액 (집행액)	본예산	480 (200[2)])	280 (560[3)])	560 (560)	560 (560)
	추경	-	-	-	925 (925)
지원인원		34,208	112,009	70,636	82,170
보증공급 목표	본예산	2,400	1,400	2,800	1,700
	추경	-	-	-	2,800
보증공급액		1,002	2,924	1,935	2,962

주1) 2022년 9월 보증 공급 첫 실시
주2) 2022년도 보증공급액이 1,002억원에 불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위변제액 및 준비금 총 200억원만 집행
주3) 본예산 280억원과 2022년 미활용분 280억원을 합산한 총 560억원 집행

(자료: 금융위원회)

□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상품의 2025년도 순대위변제율은 28.8%로, 진흥원이 취급하는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보증상품별 대위변제 등 현황>

(단위 :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근로자햇살론[1] (2016년~)	순대위변제율[3]	10.4	12.1	12.7	12.4
	회수율[4]	20.9	20.7	22.3	24.6
햇살론15(17)[2] (2019년 9월~)	순대위변제율	15.5	21.3	25.5	26.8
	회수율	6.6	7.7	9.6	11.7
햇살론유스 (2020년 1월~)	순대위변제율	4.8	9.4	12.7	13.6
	회수율	5.0	5.3	7.2	9.7
햇살론뱅크 (2021년 7월~)	순대위변제율	1.1	8.4	16.8	17.1
	회수율	0.5	1.5	3.9	7.7
햇살론카드 (2021년 10월~)	순대위변제율	6.1	12.3	17.8	22.2
	회수율	2.8	4.7	6.9	9.3
최저신용자특례보증 (2022년 9월~)	순대위변제율	0.01	14.5	26.8	28.8
	회수율	-	0. 7	2. 8	5.4

주1) 근로자햇살론Ⅱ(2016년~2025년)
주2) 국민행복기금 보증 햇살론15(17),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햇살론15 합산
주3) 순대위변제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보증공급액
주4) 회수율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회수액 / 각 기간말 누적 대위변제발생액

(자료: 금융위원회)

○ 특히, 각 연도별로 보증공급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가 집행된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이 신설된 2022년의 공급액 1,002억원의 53.2%에 해당하는 533억원에 대해 대위변제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회수액 43억원을 제외한 순부실률은 48.9%에 해당하는 등 상품의 부실률이 매우 높은 실정임.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연도별 공급액 기준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증공급액(A)	1,002	2,924	1,935	2,962
대위변제액(B) (해당연도 보증공급액 기준)[1)]	533	1,327	556	271
대위변제회수액(C) (해당연도 보증공급액 기준)[1)]	43	84.9	15.8	1.8
대위변제율(B/A)	53.2%	45.4%	28.7%	9.1%
순대위변제율 [(B-C)/A]	48.9%	42.5%	27.9%	9.1%

주1) 각 연도에 보증공급한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액 또는 대위변제회수액을 의미(예를 들어, 2022년도에 1,002억원을 공급한 경우 2022년도 이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를 한 금액 및 해당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은 최초 대출금리를 15.9%로 설정하되, 정상상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를 매년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인원의 비중이 약 17%에 미치지 못하는 등 향후 부실률이 더욱 상승할 우려도 존재함.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인센티브 제공 현황〉

(단위: 명, %)

상환기간	성실상환 금리인하	인원 수	비중
3년	인하	13,303	16.9
3년	미인하	65,209	83.1
소계		78,512	100.0
5년	인하	34,899	16.7
5년	미인하	174,431	83.3
소계		209,330	100.0
합계		48,202 (전체 287,842)	16.7

주: 2022. 9. 1. ~ 2025. 12. 31. 기간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이용자 기준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동 사업은 2025년 말 공급을 끝으로 종료되고, 2026년부터는 햇살론 15와 통합된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공급된 보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부실률이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정부 출연금을 통해 대위변제를 진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284]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67억 6,500만원 중 3,467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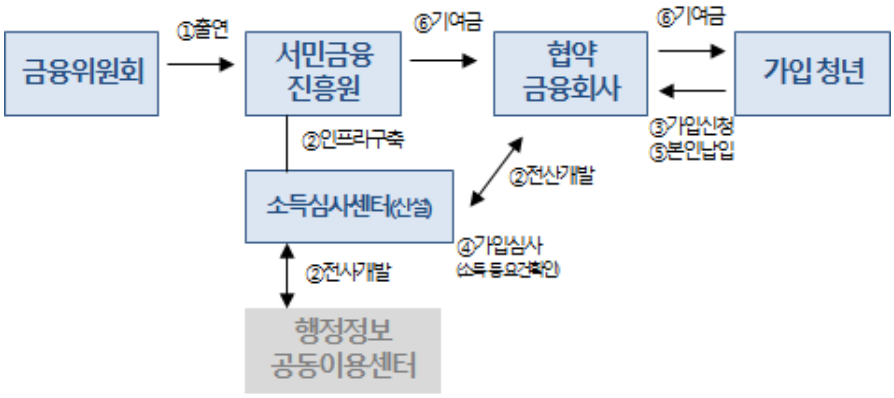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사업	347,015	40	△290	346,765	346,758	-	7	124,185

□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상품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납입금을 납입(월 70만원 한도)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출연을 받은 진흥원이 매월 본인 납입액의 3.0%~6.0%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284) 세부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1831-882)

○ 동 상품의 기본구조는 ①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② 협약은행[285] 중 한 곳에서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③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하여 가입자의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3.0%~6.0%에 상응하는 기여금을 매칭 지급하고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286]을 제공하는 것임.

<청년도약계좌 사업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2025년도까지 종료하고,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신규로 출시하였음.

---

285)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11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28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매월 50만원의 납입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6%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일반형),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287]한 청년의 경우 보다 강화된 12%의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우대형).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② 총급여 7,500만원 이하[288]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③ 가구 중위소득[289] 200% 이하인 사람임.

○ 만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단축된 3년이고, 본인납입금 및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290]하게 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었음.

287)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직전연도에 최초로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여야 함(이직은 2회까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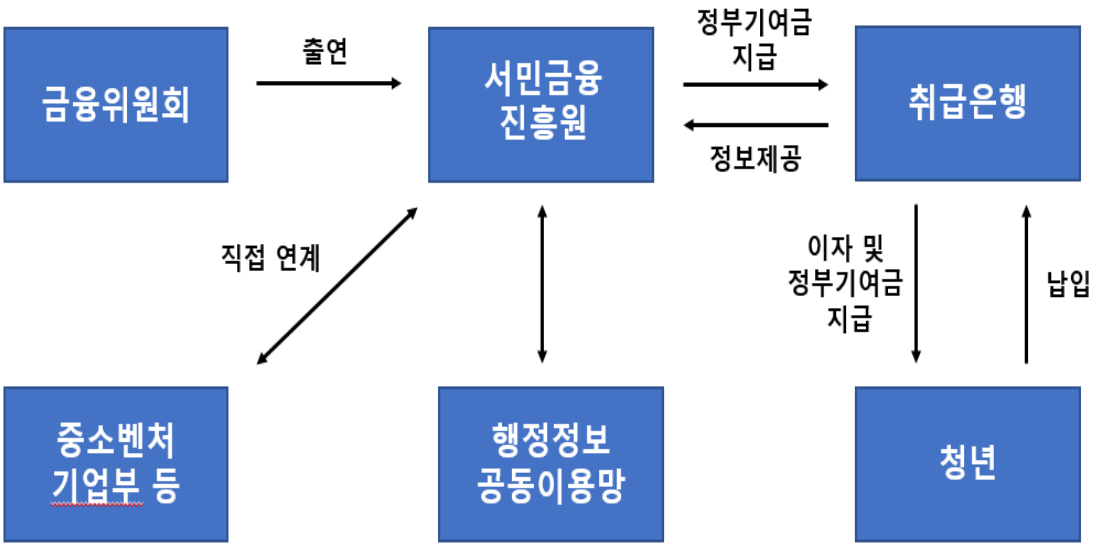
288) 단,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 예정

289) 2025년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원)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290) 기본금리 5.0% 적용(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3~2.3%p, 소득플러스우대금리 0.5%p, 청년 재무상담 이수 시 0.2%p 가산 적용)

〈청년미래적금 사업 운영구조〉



· 중소기업 근속여부 정보

· 소상공인 매출액 정보 등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기여금 지원 출연금의 과도한 진흥원 유보 개선 필요

□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내역사업 '기여금 지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용자가 매월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매칭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진흥원이 이를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됨.

○ 구체적으로, 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매월 이용자의 본인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해당 은행의 계좌[291]에 입금한 후 이를 매월 정산하여 진흥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

○ 2025년도에는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3,36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진흥원으로 출연되었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기여금 지원	336,804	336,804	100.0	진흥원 출연
인프라 구축	9,707	9,707	10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504	247	49.0	직접 수행
합계	347,015	346,758	99.9	

(자료: 금융위원회)

291)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위한 별도 개인계좌 개설

□ 기여금 지원을 위한 진흥원 출연금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한 2023년 이후 진흥원이 기여금을 지급한 실제 집행액에 비해 과도한 출연금이 교부되어 왔음.

○ 2023년의 경우 3,440억 3,700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전액 진흥원에 교부하였으나, 진흥원이 실제 기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432억 2,200만원에 불과하였고, 출연금 중 집행 잔액 3,008억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4년의 경우에도 3,590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이 중 3,029억 9,300만원을 진흥원에 교부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038억 800만원 중 2,843억 2,900만원을 실제 기여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3,194억 7,900만원은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2025년에는 3,368억 400만원을 진흥원에 교부하고, 진흥원은 기여금 지원을 위해 4,019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기존에 이월된 출연금으로 인해 진흥원에는 집행잔액 2,543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6년도로 이월되었음.[292)]

292) 금융위원회는 실제 가입수요는 자산시장 등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유 있게 재원을 운영하여야 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여금 지원 예산(출연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정부예산	교부액	서민금융진흥원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2023년	344,037	344,037	-	344,037	43,222	300,815
2024년	359,043	302,993*	300,815	603,808	284,329	319,479
2025년	336,804	336,804	319,479	656,283	401,911	254,372

*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부족으로 56,050백만원 내역변경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은 집행잔액 외에도, 집행실적 대비 과도한 출연금이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액 341억 7,400만원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로 발생한 환수액 798억 6,200만원 등 1,140억 3,600만원이 진흥원에 유보되어 있음.

〈청년도약계좌 환수액 및 이자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환수액	이자수입액	합계
2023년	1,557	6,298	7,855
2024년	24,153	13,237	37,390
2025년	54,152	14,639	68,791
합 계	79,862	34,174	114,036

(자료: 금융위원회)

□ 국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집행가능성이 없는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로 발생한 기여금 환수액을 국고로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경우에도 기여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 규모에 비해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대규모의 유보금이 발생하였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기여금 지원을 위해 출연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진흥원에 유보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자수입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로 인한 환수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유보금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흥원과 금융위원회는 현재 유보되어 있는 금액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진흥원 내규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293]을 제정[294]하였으며,

---

293) **「자산형성 지원사업 출연금 관리규정」 제7조(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①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의 출연금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해당사업의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②사업부서는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연도 내에 환수액, 이자 등의 수입을 고려한 최종 집행잔액을 정산한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국고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사업이 종료하는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

동 내규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종료한 이후 최종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할 예정이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집행잔액 및 이자 또는 환수액을 국고로 사전에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내규에서는 출연사업이 종료된 이후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되,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잔액의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반납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미리 반납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연사업이 종료 하는 해 이전에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반납할 수 있다.

294) 2024. 12. 13. 제정

5.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295]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8억 4,9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05	1,559	290	-	1,849	1,849	-	-	1,906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96]에 따

295)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29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채무자는 대리인 선임 시 대부계약·추심행위에 대한 불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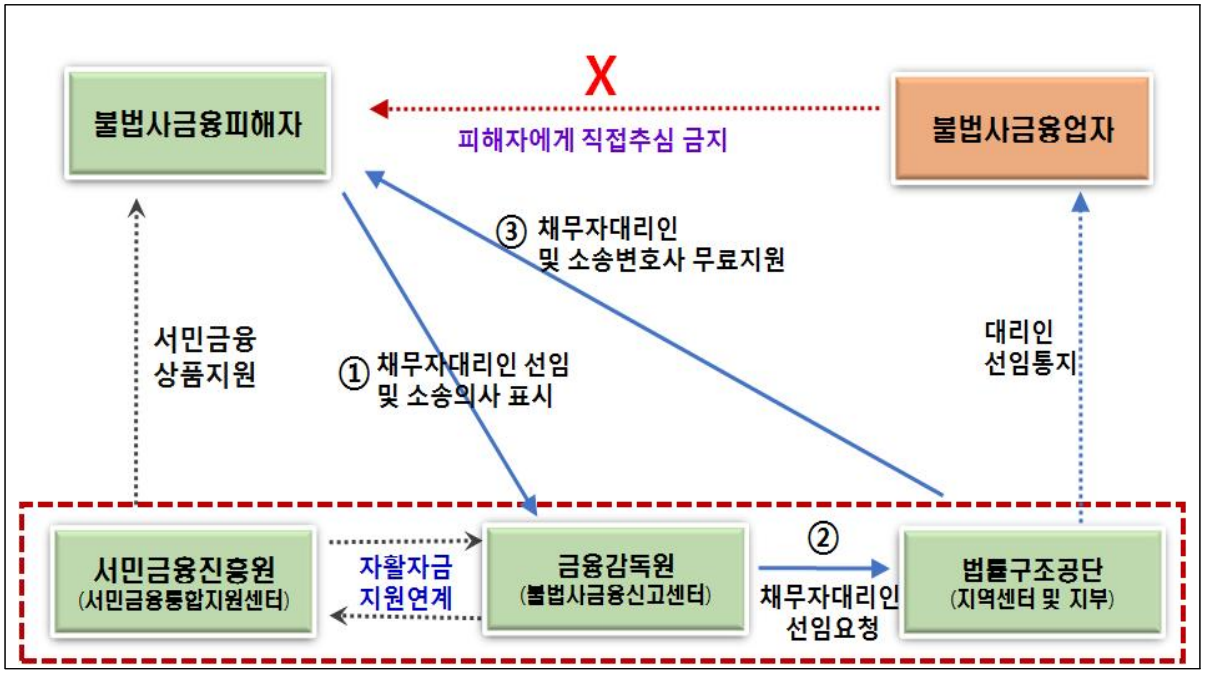
○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 구체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리인 선임” 사업의 경우 채무자등의 소득 등과 관계 없이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의 경우 1인 중위소득 125%[297] 이하가 지원 대상임.

2) 검토의견: 면밀한 수요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2025년 신청양식 개선, 신청창구 및 전담인력 확대 등 제도개선과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98]에 맞춘 집중 홍보 등에 따라 지원건수가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1,08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지원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말
신청건수[1](A)	1,252	5,657	5,225	3,760	3,489	12,162	9,077
지원건수[2](B)	919	4,841	4,510	3,249	3,096	11,083	8,387
지원비율(B/A)	73.4	85.6	86.3	86.4	88.7	91.1	92.4

주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이첩+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접수(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주2) 소송구조, 소송전구조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297) 2025년 기준 약 299만원

2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1.21. 일부개정, 2025.7.22. 시행) 주요 내용: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계약 전체 무효,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 상향 등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463	442	412	736	902	896	1,344	1,264	1,284	948	1,218	1,041	10,950
부수사건 소송대리	-	42	-	-	1	-	-	76	1	2	-	-	122
채무자관계인 지원	3	-	-	-	-	-	-	1	2	-	-	5	11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본예산 12억 500만원을 추경을 통해 15억 5,9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이후 전용[299]을 통해 예산현액을 18억 4,900만원으로 확대하여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및 전용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억 4,5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이를 2026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미지급금 내역〉

구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채무자관계인 지원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합계
2025년 (2026년 지급)	2,183건	4건	44건	445백만원
	435백만원	0.7백만원	10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299) 2025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전용 사유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전용 ('25.10.1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1831-882)	210-14	250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33-301)	320-01	290	지원실적 급증으로 인한 지원예산 부족
		260-02	40				

□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은 1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 미지급금 4억 4,500만원을 지급한 데 더하여 2026년 상반기 지원실적도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6월말 기준 이미 14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0%)되어 2026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는 전용을 통해 일부 해결하고 부족분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2026년 6월말 기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906	1,906	-	-	1,906	1,429	75.0	-	-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상반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채무자(본인) 대리인선임	1,344	1,159	1,477	1,457	1,165	1,679	8,281
부수사건 소송대리	1	-	1	-	1	2	5
채무자관계인 지원	-	-	28	25	26	21	100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원실적의 변동에 따라 불용과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어 왔음.

〈연도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및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D)]	집행률 (C/A)	실집행률 (D/B)	불용액	미지급금
	본예산	추경(A)							
2020	1,150	1,150	-	1,150	164 [164]	14.3	14.3	986	-
2021	604	604	-	604	604 [604]	100.0	100.0	-	533 (2022년 지급)
2022	1,144	1,144	-	1,144	1,144 [1,144]	100.0	100.0	-	274 (2023년 지급)
2023	886	886	-	886	886 [886]	100.0	100.0	-	18.7 (2024년 지급)
2024	1,255	1,255	-	1,255	628 [571]	50.0	45.5	627	-
2025	1,205	1,559	290	1,849	1,849 [1,849]	118.6	100.0	-	445 (2026년 지급)
2026.6.	1,906	1,906	-	1,906	1,429 [1,429]	75.0	75.0	-	집행중 (미지급금 발생 예상)

(자료: 금융위원회)

○ 사업 첫 해인 2020년에는 인지도 저조 등으로 예산 11억 5,000만원 중 1억 6,400만원(14.3%)만을 집행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 이후 2021년부터 지원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지원(구조) 결정시에서 지원 종료시로 늦추고(보조금 지급시점 6개월 연기) ② 송달료 등 실비 미집행액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과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2021년에는 7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5억 3,300만원을 2022년에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9월에 예산이 소진되어 2억 7,400만원을 2023년에 집행하였음.

- 이에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연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미지급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300]

○ 한편, 2023년도 미지급금 1,870만원이 2024년에 집행되면서 미지급금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으나,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대리인 선임 및 부수사건 소송대리 지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4년 예산의 실집행률은 45.5%로 상당히 부진하였음.

- 이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301]

○ 이처럼 동 사업은 2024년에는 실집행률이 45.5%에 그쳐 6억 2,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2025년에는 지원실적 증가에 대응하여 추경과 전용을 실시하고도 다시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집행부진과 예산 부족이 교차하여 나타나고 있음.

---

300)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금융위원회는 향후 연간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미지급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301)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불법추심 등 변화하는 범죄수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에서 6억원 이상의 예산을 불용시킨 바, 향후 실효성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금융위원회는 향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별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필요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제도개선)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사업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대규모 불용이나 미지급금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산업은행 출자사업 총괄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산업은행 출자’ 사업은 정책모펀드 조성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부담분을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을 통해 출자하기 위한 사업과 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5년 예산현액 8,912억원이 전액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2026년 예산
		본예산	추경					
정책모펀드 조성	산업은행출자(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176,200	176,200	-	-	-
	산업은행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50,000
	산업은행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35,000	35,000	35,000	35,000	-	-	-
	산업은행출자(반도체생태계펀드)	30,000	30,000	30,000	30,000	-	-	-
	산업은행출자(국민성장펀드)	-	-	-	-	-	-	1,000,000
기업저리대출	산업은행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	250,000	450,000	450,000	450,000	-	-	-
	산업은행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	100,000	100,000	100,000	-	-	-
합계		591,200	891,200	891,200	891,200	-	-	1,050,0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모펀드 회수재원을 고려한 출자사업 예산 편성 기준 제도화 필요

□ 금융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산업은행을 경유하여 재정을 출자함으로써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에서는 민간 자본과 매칭하여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302] 방식의 재정모펀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025년 말 기준으로 성장지원펀드, 소부장혁신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의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경유 출자된 재정 규모는 총 2조 9,937억원(예산액 기준)에 달함.

<한국산업은행 경유출자를 통한 재정모펀드 조성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모펀드명	예산반영기간(계획)	총 재정투입액(~'25)	2026 예산	모펀드 청산시기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일반회계)	성장지원펀드	2018-2020년	3,200	-	2033.6.
산업은행출자 (혁신모험펀드, 소부장특별회계)	소부장 혁신펀드	2020-2021년	4,400	-	2035.4.
산업은행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 혁신펀드	2020-2021년	1,425	-	2036.6.
산업은행출자 (뉴딜펀드)	뉴딜펀드	2021-2022년	11,100	-	2047.6.
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혁신성장펀드	2023-2027년	7,162	-	2040.3.
산업은행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4-2028년	2,000	500	2054.4.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생태계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2025-2027년	300	-	2040.6.

302)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한경 경제용어사전)

사업명	모펀드명	예산반영기간(계획)	총 재정투입액(~'25)	2026 예산	모펀드 청산시기
산업은행출자(원전산업성장펀드)	원전산업 성장펀드	2025년	350	-	2040.6.
산업은행출자(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2026-2030년	-	10,000	2041.4.
합 계			**29,937**	**10,500**	

주1) 각 년도 예산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 재정모펀드에는 자펀드 청산 및 투자금 회수 등에 따라 회수재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누적 회수액은 총 7,320억원으로 나타남.

이 중 2,494억원은 2026년 4월 특별배당을 통해 국고에 반환[303]되었고, 1,838억원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혁신성장펀드에 재투자되었음[304]. 이에 따라 별도의 국고 반환 또는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수재원 규모는 2026년 7월 기준으로 2,988억원[305]에 달하고 있음.

○ 산업은행에 따르면 회수재원 2,988억원에 대한 2026년 중 추가 재투자 계획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임.

303) 산업은행은 회수재원을 직접 국고에 반환하기 위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저하, 「상법」 상 채권자 보호절차(채권자에게 이의 제출 기간 공고 등) 이행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무부담(이의제출 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 등)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임. 이에 산업은행(정부가 지분 100% 보유)은 2026년 4월 모펀드 회수재원 2,494억원을 특별배당 방식으로 정부에 반환하였음.
- 일반배당 : 6,312억원 (당기순이익 × 36.8(배당성향))
- 특별배당 : 2,494억원 (모펀드 회수재원)

304) 혁신성장펀드의 연도별 예산이 당초 연 3,000억원의 조성계획에 미달함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투자

305) 해당 회수액에는 원금 회수액 5,620억원 외 투자이익 1,700억원이 포함됨. 산업은행은 1,700억원은 평가이익에 계상됨에 따라 일반 배당 또는 이익 실현 시 법인세로 일부 국고에 반환되는 측면이 있으며, 그 밖에도 모펀드 보수 등 운용 비용 지출을 위하여 회수재원에서 일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정책펀드 회수액[주1, 2)]>

(단위: 억원)

구 분	성장 지원	소부장	구조 혁신[주3)]	뉴딜	혁신 성장[주5)]	지역 활성화	반도체	원전	합계
총 재정투입액	3,200	4,400	1,425	11,100	9,000	2,500	300	350	32,275
누적 회수액[주2)] (A)	2,199	1,872	392	2,686	167	4	-	-	7,320
회수액 중 국고반납액[주3)] (B)	360	517	236	1,336	45	-	-	-	2,494
회수액 중 재투자액[주4)] (C)	1,089	584	-	165	-	-	-	-	1,838
잔액 (회수재원) (A-(B+C))	**750**	**771**	**156**	**1,185**	**122**	**4**	**-**	**-**	**2,988**

주1) 2026. 7월 말 기준

주2) 회수액은 자펀드 청산 및 투자금 회수 등으로 인해 모펀드로 분배된 금액을 의미하며,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 요건(2인 이상 투자) 충족을 위해 해당 모펀드에 출자한 재정 外 산은캐피탈 등 소수 지분(구조혁신 2%, 그 외 0.1% 이내 수준) 앞 분배될 금액이 포함됨.

주3) 2026. 4. 27. 특별배당으로 국고에 반환된 금액

주4) 2024년 및 2025년 혁신성장펀드에 재투자된 금액

주5) 혁신성장펀드의 연도별 신규 예산은 2023년 3,000억원, 2024년 2,400억원, 2025년 1,762억원으로 총 7,162억원이며, 계획(매년 3,000억원 출자) 대비 부족한 금액은 상기 주석4 재투자액 1,838억원으로 충당하였음.

(자료: 금융위원회)

□ 회수재원이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모펀드에 유보될 경우, 해당 재원이 적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입되지 못하고 유휴 자금으로 잔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정책펀드 회수재원의 재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회의 재정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이 2026년 개정[306]되어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국가재정법」은 재정모펀드가 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307],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책펀드의 재투자 계획, 회수재원 및 투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재투자 계획,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회수재원의 재투자가 국회의 별도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규모와 활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확보하는 한편,

회수재원의 발생, 보유 및 실제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재원이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취지임.

---

306) 「국가재정법」[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19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0.>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07) 자펀드 청산금의 재투자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까지 현재 모펀드에 잔존하고 있는 회수재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모펀드에 잔존하고 있는 회수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 산업은행 출자사업 예산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이미 기존 회수재원을 별도로 특별배당 등을 통하여 국고에 반환하는 불필요한 자금 순환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 중인 회수재원을 가장 신속하게 정책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향후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회수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회수재원의 재투자 및 활용에 관한 상시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원의 장기간 유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책펀드 출자사업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현재 모펀드에 잔존하는 회수재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규 정부출자 소요에서 차감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08].

308) 예산 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 기관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편성 방식 참조

○ 참고로, 산업은행에 따르면 2027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모펀드 회수 예상 재원(원금 기준)은 총 1조 7,2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원금 회수흐름 추정 〉

(단위: 억원)

구분	~'22	'23	'24	'25	'26(E)	'27~'31(E)	'32(E)~	합계	만기
성장지원펀드	536	310	317	286	469	1,278	-	3,196	2033년
소부장혁신펀드	172	197	514	219	1,761	1,536	1	4,400	2035년
기업구조혁신펀드	10	23	149	58	33	1,177	-	1,450	2036년
뉴딜펀드	2	30	190	1,278	1,253	6,142	2,205	11,100	2047년
혁신성장펀드	-	-	2	43	95	4,654	4,206	9,000	2040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	-	-	523	1,977	2,500	2054년
반도체생태계펀드	-	-	-	-	-	161	139	300	2040년
원전산업성장펀드	-	-	-	-	-	105	245	350	2040년
국민성장펀드	-	-	-	-	-	1,716	2,784	4,500	2041년
소 계	**720**	**560**	**1,172**	**1,884**	**3,611**	**17,292**	**11,557**	**36,796**	
누적 합계	**720**	**1,280**	**2,452**	**4,336**	**7,947**	**25,239**	**36,796**		

주 1) 2026년 이후 원금 회수 예상치는 시장환경 및 자펀드 회수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2)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 요건(2인 이상 투자) 충족을 위해 해당 모펀드에 출자한 재정 外 산은캐피탈 등 소수 지분(구조혁신 2%, 그 외 0.1% 이내 수준) 앞 분배될 금액이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7.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309]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310] 및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여 민간투자 마중물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가 민간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개별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50,000

(자료: 금융위원회)

□ 정부는 2023년 7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방안’[311]을 마련하여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 · 소규모 지역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하였음.

309) 세부사업명 : 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2414-320)
310)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금인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의미
311)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2023. 7. 12.

○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발굴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가 마중물 투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간(2024년~2028년)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312]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을 출자할 계획으로,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 조성된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되[313],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된 자펀드는 광역시 또는 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314]에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투자(출자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joject Financing, 이하 'PF')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시행사, 건설사 등) 및 금융기관 등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추진 주체인 SPC의 출자금과 자펀드 투자금(출자, 대출), PF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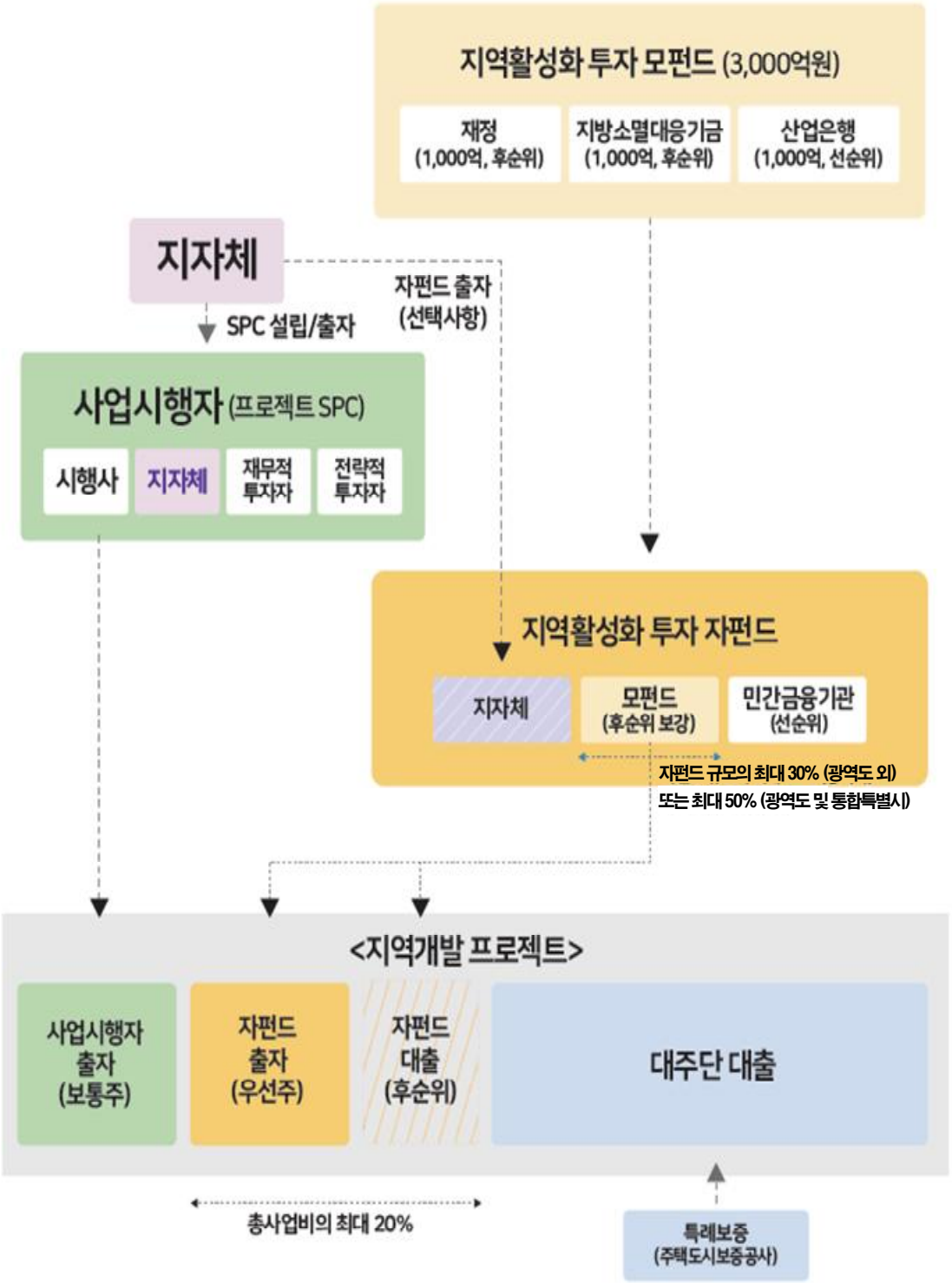
---

31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낙후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신설된 기금임.

313) 모펀드는 광역도 외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광역도 및 통합특별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14) 펀드의 취지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프로젝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은 제외(「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구조도〉



(자료: 기획예산처)

□ 2026년 7월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선정(2024년 5개, 2025년 3개, 2026년 1개)하여 투자를 추진 중에 있음.

○ 2024년에는 ①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680억원), ②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임직원 신규 주거시설 건립, 876억원), ③ 여수 묘도 LNG 터미널(1조 4,362억원), ④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8,191억원), ⑤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스마트팜 단지, 900억원)의 5개 프로젝트를,

○ 2025년에는 ①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7,200억원), ② 장성 첨단데이터센터(3,959억원), ③ 태안 Seed Farm(177억원)의 3개 프로젝트를,

○ 2026년에는 포항 AI 데이터센터(6,000억원)의 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음.

2) 검토의견: 자펀드 결성 지연 등에 따른 모펀드 유보금 과다

□ 동 사업은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민간투자자 모집 등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예산이 재정모펀드 계정에 유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7월 기준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프로젝트 선정 및 자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선정된 5개 프로젝트 중 4건의 경우 재심사[315]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에 비로소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었으며, 1건(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여전히 사업 내용 변경(가스 공급 계약 관련 협의 지연)으로 재심사 중에 있음.

2025년 선정된 3개 프로젝트 중 2건(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태안 Seed Farm) 또한 현재까지 각각 민간투자자 모집을 위한 금융조건 협의 등으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음.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진행 현황〉

(단위: 억원)

선정 연도	지역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선정일	자펀드 최종 결성 기한[주1)]	자펀드 실제 결성일	총사업비
2024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1차) 2024.2.16. (2차) 2024.11.26.	(1차) 2024.12.19. (2차) 2025.9.29.	2025.9.26.	680억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1차) 2024.2.22. (2차) 2024.11.26. (3차) 2025.1.23.	(1차) 2024.12.24. (2차) 2025.9.29. (3차) 2025.8.24.	2025.8.21.	876억원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024.8.29.	2025.4.2.	2025.2.28.	1조 4,362억원
	경북 경주	강동 수소 연료전지발전	(1차) 2024.11.26. (2차) 재심사 중	(1차) 2025.9.29. (2차) 재심사 중	재심사 중	8,191억원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차) 2024.12.24. (2차) 2025.9.26.	(1차) 2025.4.24. (2차) 2026.5.3.	2026.4.9.	900억원

315) 자펀드 결성 기한은 심사 완료 후 선정통보일로부터 최초 4개월 이내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거쳐 3개월씩 2회, 총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자펀드 운용사가 제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안할 경우 기존 결성 기한을 초과하여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선정 연도	지역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선정일	자펀드 최종 결성 기한[주1)]	자펀드 실제 결성일	총사업비
2025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025.11.4.	2026.8.28.[주2)]	결성 중	7,200억원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025.11.4.	2026.3.7.	2025.12.10.	3,959억원
	충남 태안	Seed Farm	2025.11.28.	2026.10.1.	결성 중	177억원
2026	경북 포항	AI 데이터센터	2026.7.28.	2026.8.28.주2)	결성 중	6,000억원

주 1) 자펀드 결성 기한은 원칙적으로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개월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함. 연장된 경우, 연장된 결성 기한으로 표기
주 2) 투자 예정 모펀드(2024년 모펀드)의 투자가능기간(2026.8.28일) 내 결성 필요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2026년 7월 기준으로 결성된 자펀드에서 개별 프로젝트로의 투자액은 총 1,757억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모펀드에서 자펀드로 출자된 금액은 총 894억원[316)]에 불과함.

○ 2024년 프로젝트의 경우 ①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78억원, ②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에 934억원으로 총 1,012억원이 투자되었고, 2025년 프로젝트의 경우 장성 첨단데이터센터 사업에 745억원이 투자되었음. 나머지 사업의 경우 자펀드 미결성 또는 PF 대출 모집 등에 따라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

316) 298억원 × 3 = 894억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별 약정액 및 투자액 현황〉

(단위: 억원)

지역명	프로젝트명	총사업비	모펀드 약정액	자펀드		
				결성여부	약정액	투자액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680	68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136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876**	**39**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78**	**78**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14,362**	**1,435**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2,872**	**934**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8,191	786	재심사 중	1,572	-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900	90	결성완료 (PF대출 모집 중)	180	-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7,200	420	결성 중	840	-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3,959**	**372**	**결성완료 (공사 진행 중)**	**745**	**745**
충남 태안	Seed Farm	177	18	결성 중	35	-
경북 포항	AI 데이터센터	6,000	658	결성 중	1,315	-
합 계		42,345	3,886	-	7,773	1,757

(자료: 금융위원회)

□ 결과적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계정에서 지역활성화투자 모펀드로 투입된 자금은 298억원에 불과하여 총 2,202억원[317]이 계정에 유보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유보금과 산업은행 미투자한도[318]를 합하면 총 6,606억원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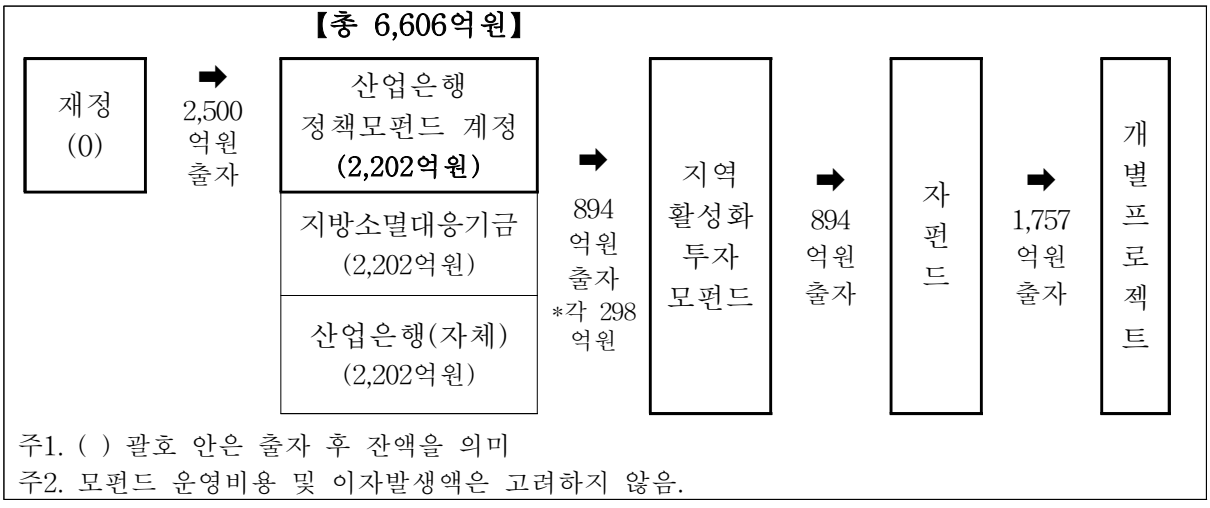
317) 2,500억원(2024~2025년 각 1,000억원, 2026년 500억원 정부 출자) - 298억원 = 2,202억원
318) 중앙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2024~2025년 1,000억원씩 출자, 2026년의 경우 500억원 출자)

○ 출자금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 현재까지 2,500억원(2024~2025년 각 1,000억원, 2026년 500억원)이 전액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계정에 출자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자체) 계정에도 동일 금액이 출자되었음.

○ 위 3개 계정은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로 2026년 7월까지 각 298억원[319]을 출자하였으며, 이에 각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은 출자금 누적액 2,500억원에서 298억원을 차감한 2,202억원임.

○ 한편, 지역활성화투자모펀드는 각 계정에서 받은 출자금을 합하여 자펀드에 총 894억원[320]을 출자하였으며, 자펀드는 민간투자자 출자금 894억원[321]을 합하여 총 1,757억원을 개별 프로젝트에 출자하였음.

〈 2024~2026년 출자금 현금 흐름 (2026년 7월 말 기준)〉



319) 대규모 지역 개발 및 인프라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한 번에 납입하지 않고, 투자 집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출자자)에게 자금을 요청해 납입받는 수시납(캐피탈 콜, Capital Call) 방식

320) 298억원 × 3 = 894억원

321) 모펀드는 자펀드 규모의 최대 50%(도 기준) 출자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와 같이 과다한 유보금이 산업은행 재정모펀드 계정에 유보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자 협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사업선정 이후 민간투자자 모집, 자펀드 결성을 거쳐 실제 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추진여건 등을 보다 충실히 검증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사업선정 및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도 인·허가, 민간자금 모집, 자펀드 결성 등 주요 추진단계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정 기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정모펀드 계정으로의 출자를 연기하는 등 재정자금이 장기간 유보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322]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및 R&D투자 자금 등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현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500억원이 전액 집행(100.0%)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	-	450,000	45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은 정부 출자를 통해 산업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20.4조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지원하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임,

322)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2)

〈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요 〉

(운용 목적) 반도체 산업의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운용 기간) 2025년 ~ 2027년(3년)

* 2024.7월부터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중

(지원 규모) 정부출자를 통해 산업은행 대출공급 여력을 확충하여 20.4**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지원**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2027년	합계	
	본예산	추경		당초	추경포함
운용규모	42,500	76,500	127,500	**170,000**	204,000
현금출자	2,500	4,500	7,500	**10,000**	12,000

* 현금출자와 동일한 규모의 현물출자 예정

(지원 대상) 국내에 신규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중소·중견·대기업 포함)

(자금 용도) 설비, R&D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 지원,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지원

(대출한도)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상 동일계열 여신한도*까지 지원

* BIS개별자기자본(기본자본+후순위채 등 보완자본)×25%

(금리 조건) 국고채+가산금리(이용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조건 등에 따라 산업은행 조달금리 이하인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지원 가능)

*일반 한국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

(자료: 금융위원회)

○ 당초 정부는 동 사업 예산을 통한 현금출자 규모를 2,500억원(운용규모 : 4조 2,5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금출자 규모를 4,500억원(운용 규모 : 7조 6,500억원)으로 확대하였음.

2) 검토의견

(1) 최우량 대기업에 대한 대출승인 집중 문제

□ 2026년 7월 말 기준 동 프로그램의 대출 승인액은 7조 6,402억원으로, 당초 조성규모 7조 6,500억원의 99.9%가 대출 승인되었음.

□ 다만, 동 사업의 대출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8개 대기업에 대하여 전체 대출 승인액(7조 6,402억원) 중 68.5%(5조 2,330억원)이 승인되는 등 동 프로그램의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 전체 82개 지원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8개 기업으로 9.8%에 불과하나, 대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액은 5조 2,330억원으로 68.5%를 차지하였으며, 실제 대출 실행액은 4조 8,095억원으로 80.7%를 차지하였음.

○ 반면 중소기업은 37개 기업으로 전체 82개 지원기업의 45.1%를 차지하였으나, 대출 승인액은 6,539억원(8.6%), 실제 대출 실행액은 2,651억원(4.5%)에 불과하였음.

□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신용도가 매우 높은 최우량 및 우량 등급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승인액 7조 6,402억원 중 최우량(AAA) 등급 대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액은 3조 6,000억원으로 47.1%에 달하며, 우량(AA) 등급 이상 대기업까지 포함하면 5조 330억원으로 65.9%에 달함.

〈 기업규모별 대출 실적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비중)	8 (9.8%)	37 (45.1%)	37 (45.1%)	82 (100.0%)
대출 승인액 (비중)	52,330 (68.5%)	17,533 (22.9%)	6,539 (8.6%)	76,402* (100.0%)
대출 실행액 (비중)	48,095 (80.7%)	8,836 (14.8%)	2,651 (4.5%)	59,582 (100.0%)

주) 중견기업 1개 社 앞 98억원(후공정) 한도 배정 후 현재 승인 진행 중

(자료: 금융위원회)

〈 대출승인액의 기업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단위:억원)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최우량 AAA	36,000 (47.1%)	- (-)	- (-)	36,000 (47.1%)
우량 (AA+～AA-)	14,330 (18.8%)	8,032 (10.5%)	2,930 (3.8%)	25,292 (33.1%)
양호 (A+～A-)	1,300 (1.7%)	8,142 (10.7%)	2,623 (3.4%)	12,065 (15.8%)
보통 (BBB+～BBB-)	700 (0.9%)	1,159 (1.5%)	872 (1.1%)	2,731 (3.6%)
투기적 (BB+～BB-)	- (-)	200 (0.3%)	114 (0.1%)	314 (0.4%)
합계	52,330 (68.5%)	17,533 (22.9%)	6,539 (8.6)	76,402* (100.0%)

주) 중견기업 1개 社 앞 98억원(후공정) 한도 배정 후 현재 승인 진행 중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최우량 등급 대기업에 동 프로그램의 지원이 집중된 것은 타 프로그램과 달리 기업별·건별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국가 산업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대기업에 산업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설비투자 및 R&D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동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최우량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또는 민간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고, 특히 202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323]에서 정부 재정을 통하여 최저 국고채 수준까지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23)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1Q	2Q	상반기 계
삼성전자	**327,260**	436,011	572,328	894,924	1,467,252
SK하이닉스	**234,673**	472,063	376,103	605,426	981,529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따라서 향후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우대금리 차등을 강화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대출의 재원 변경에 따른 구축(Crowding-out) 효과 고려 필요

□ 산업은행은 동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을 통하여 2조원 규모로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Ⅰ’(이하 ‘자체 프로그램’이라 함)을 운영하였음.

□ 자체 프로그램과 2025년 정부 출자를 통한 동 프로그램은 모두 신규 투자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및 R&D투자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 지원대상 등 지원조건이 동일하였음.

○ 다만 자체 프로그램은 최대 1.40%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 반면, 동 프로그램은 정부 출자를 통해 최저 국고채 수준까지 금리를 우대하도록 설계되었음.

○ 실제 각 프로그램의 평균 적용금리를 보면 자체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경우 3.32%,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74%였으나,
동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경우 2.68%,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60%로, 각각 평균적으로 0.64%p 및 1.14%p 낮은 수준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였음.

〈 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과 정부 출자 프로그램의 비교 〉

<table>
<tr><th>구분</th><th>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Ⅰ(자체재원)</th><th>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재정연계)</th></tr>
<tr><td>지원대상</td><td colspan="2">국내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전분야 기업
(소재·부품·장비 포함)</td></tr>
<tr><td>자금용도</td><td colspan="2">시설자금(설비투자, R&D투자)</td></tr>
<tr><td>운용규모</td><td>2조원</td><td>7.65조원</td></tr>
<tr><td>출시일</td><td>2024. 7. 1.</td><td>2025. 1. 24.</td></tr>
<tr><td>운용기간</td><td>재정연계 프로그램 출시 전까지 운용</td><td>한도 소진 시까지 운용</td></tr>
<tr><td>적용금리</td><td>최대 △1.40%p 우대
<table><tr><th>구분</th><th>평균 적용금리</th></tr><tr><td>대기업</td><td>3.32</td></tr><tr><td>중견·중소</td><td>3.74</td></tr></table></td><td>최저 국고채 수준
<table><tr><th>구분</th><th>평균 적용금리</th></tr><tr><td>대기업</td><td>2.68</td></tr><tr><td>중견·중소</td><td>2.60</td></tr></table></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2024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승인된 대출 9,205억원(46.0%, 20개 기업)이 2025년 정부 출자를 통한 동 프로그램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기업들은 정부 출자 이전에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 승인이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그램 재원 변경에 의하여 대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데 그쳤을 뿐, 기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조달이 구축(Crowding-out)된 측면이 있음.

□ 특히, 프로그램 재원이 변경된 기업별 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창출한 대기업(2개 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액 5,1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우수한 대기업에 15년(만기) 동안 매년 32억원 수준[324]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경감해 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프로그램 재원 변경 기업별 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 〉

(단위: 개, 억원)

구분 (단위:억원)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최우량 AAA	- (-)	- (-)	- (-)	- (-)
우량 (AA+～AA-)	**5,100** **(55.4%)**	1,040 (11.3%)	150 (1.6%)	6,290 (68.3%),
양호 (A+～A-)	- (-)	650 (7.1%)	470 (5.1%)	1,120 (12.2%)
보통 (BBB+～BBB-)	- (-)	1,040 (11.3%)	687 (7.5%)	1,727 (18.8%)
투기적 (BB+～BB-)	- (-)	- (-)	68 (0.7%)	68 (0.7%)
합계	**5,100** **(55.4%)**	2,730 (29.7%)	1,375 (14.9%)	9,205 (100.0%)

(자료: 금융위원회)

324) 5,100억원 × (3.32%(기존 프로그램 대기업 평균 금리) - 2.68%(동 프로그램 대기업 평균 금리)
= 매년 32억 6,400만원

□ 따라서 향후 정부 출자를 통한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이미 대출 승인이 완료된 기존 대출의 재원 변경은 구축효과를 유발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325].

325)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먼저 지원한 이후 재정 프로그램으로 재원을 변경하였다는 입장임.

9.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326]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제외)과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100.0%)되었음.

<2025회계연도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재원 특별프로그램)	-	100,000	-	-	100,000	10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25%) 발표 이후 불확실성 극대화 및 대미 수출 감소 우려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제외) 및 관세피해기업 대상 저리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하였음.

326) 세부사업: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2414-324)

□ 동 사업은 총 4조원 규모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반도체 외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및 R&D투자 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하고,

② 관세 피해 예상 기업에 운영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하였음.

○ 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자금은 반도체설비투자와 동일하게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지원하고,

② 관세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은 산업은행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0%p를 감면한 금리로 지원하였음.

〈 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개요 〉

구분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대상 산업	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AI 등 첨단전략산업	관세 피해 예상 중소 중견기업 등
용도	설비투자 자금 (신규 설비투자 및 R&D 투자)	운영자금
지원규모	1조원	3조원
금리 수준	최저 국고채 수준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0%p
대출 만기	15년 이내	1년 이내
추경금액	500억원 현금 출자	500억원 현금 출자

주)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개요는 프로그램 개편 이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2026년 7월 말 기준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의 대출 승인액은 1조원으로, 당초 조성규모 1조원의 대출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음.

□ 다만, 동 사업의 대출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 4개 대기업에 3,650억원(36.4%), 16개 중견기업에 4,895억원(49.0%), 9개 중소기업에 1,455억원(14.6%)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대출 실적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비중)	4 (13.8%)	16 (55.2%)	9 (31.0%)	29 (100.0%)
대출 승인액 (비중)	3,650 (36.4%)	4,895 (49.0%)	1,455 (14.6%)	10,000 (100.0%)
대출 실행액 (비중)	2,680 (37.0%)	3,353 (46.3%)	1,205 (16.7%)	7,238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신용등급별 승인실적을 보면 3,650억원(36.4%)의 대출을 승인받은 4개 대기업의 경우 모두 신용등급이 양호(A)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출승인액의 기업규모 및 신용등급 현황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단위:억원)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최우량 AAA	-	-	450 (4.5%)	450 (4.5%)
우량 (AA+～AA-)	2,000 (20.0%)	1,825 (18.3%)	260 (2.5%)	4,085 (40.8%)
양호 (A+～A-)	1,650 (16.5%)	2,110 (21.1%)	236 (2.4%)	3,996 (40.0%)
보통 (BBB+～BBB-)	-	960 (9.6%)	509 (5.1%)	1,469 (14.7%)
합계	3,650 (36.5%)	4,895 (49.0%)	1,455 (14.5%)	10,00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한다는 당초 프로그램의 취지, 대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양호하므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 등급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지원할 필요성은 중소·중견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도와 자체 자금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우대금리 차등을 강화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연도 중 프로그램 확대 개편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은 당초 관세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2025년 8월 말까지 대출승인액은 150억원(4개 기업), 실행액은 130억원에 불과하였음.

□ 이에 산업은행은 2025년 9월부터 지원대상을 대기업과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계열대기업에는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하였음.

〈 2025년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개편 내용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 관세 부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 관세 부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품목관세 부과 대상 기업** -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
지원 한도	(중소) 30억원 (중견) 50억원	(중소) **300억원** (중견) **500억원** **(계열대) 1,000억원**
지원 금리	기준금리 대비 최대 △0.20%p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0%p**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대하여 산업은행은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의 본격적인 발효에 따라 기업 피해 확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327].

□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2026년 7월 기준 기업 규모별 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편을 통하여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대기업(17개 기업)의 대출 승인액이 3조원 중 6,661억원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승인액은 12.3%인 3,688억원(80개 기업)에 불과함.

< 기업규모별 대출 실적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비중)	17 (7.7%)	125 (56.3%)	80 (36.0%)	222 (100.0%)
대출 승인액 (비중)	6,661 (22.2%)	19,651 (65.5%)	3,688 (12.3%)	30,000 (100.0%)
대출 실행액 (비중)	5,461 (19.0%)	19,501 (68.1%)	3,688 (12.9%)	28,65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기업당 평균 대출 승인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321.2억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46.1억원에 불과함.

327) 산업은행은 2025년 8월 상호관세가 발효되었고,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본격화되어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는 입장임.

〈 기업규모별 평균 대출 현황 (2026년 7월 기준) 〉

(단위: 개, 억원)

구분	대기업 (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수	17	125	80	222
평균 대출 승인액	391.8	157.2	46.1	135.1
평균 대출 실행액	321.2	156.0	46.1	129.1

(자료: 금융위원회)

□ 즉,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관세피해 대응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반면,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대기업 등에 상당 규모의 저리자금이 지원되는 결과가 나타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향후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민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328]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우려)차주[329]를 대상으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기반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5,000억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분 7,000억원을 포함해 예산현액 1조 2,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500,000	1,200,000	-	1,200,000	1,20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328)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329)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는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말함.

□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사업 운영을 위해 부실(우려)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주된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채권매입 소요 재원 중 예상되는 손실분만큼을 국가 재정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총 2조 9,1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되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새출발기금(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하였고, 출자받은 국가 재정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체 조달한 자금을 새출발기금에 대여해, 부실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① 국가재정 출자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채 발행 등	➡	③ SPC 출자·대여	➡	④ 부실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확충)		(채권매입자금 조달)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새출발기금 자금 조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기준)	합계
국가재정(출자)	11,000	2,800	3,300	12,000	-	29,100
캠코차입(공사채)	-	3,600	15,600	15,500	11,000	45,700
합 계	11,000	6,400	18,900	27,500	11,000	74,800

주: 2022년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은 두 가지인데, ①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매입형'(원금 감면) 방식을,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중개형'(금리 인하) 방식을 적용함.

'매입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새출발기금이 협약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330]을 매입한 후 동 기금이 채권자 지위에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순부채를 감면해주는 방식임.

'중개형'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방식인데,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방식 비교>

구분	매입형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
대상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부실차주(담보채권),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채권)
채무조정 범위	원금 및 이자 감면	이자만 감면(금리 인하방식)
채무조정 절차	새출발기금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 단,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해 채권자로서 중개형 채무조정에 참여

(자료: 금융위원회)

330)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임.

□ 2026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총 약정 채무액은 12조 8,816억원이며, 매입형의 경우 원금의 평균 73%, 이자의 100%가 감면되었으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평균 5.4%p의 금리가 인하되었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현황>

(2026. 6.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약정자	약정 채무액	평균 채무감면율
매입형 (원금감면 방식)	71,768	65,931	원금의 73% 이자의 100%
중개형 (금리인하 방식)	70,053	62,885	이자율 5.4%p
합 계	141,821	128,816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1) 철저한 사전 제도설계 및 일관성 있는 집행 필요

□ 동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는데, 새출발기금 운용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신청기간, 채무감면 폭, 지원 대상채무 등을 조정해 왔음.

□ 2022년 제도 신설 당시에는 2020년 4월~2023년 11월 기간 중 소상공인·자영업자[331]로서 사업을 영위한 부실(우려)차주 관련 채권을 2025년 10월까지 총 30조원 매입하여 순부채의 60~80%(취약계층은 90%)를 감면하는 계획이었음.

이후 2024년 9월, 2025년 3월, 2025년 7월에 지원 대상 및 채무감면 폭 등에 대한 변경 등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6년 6월에는 감사원[332]의 지적에 따라 채무감면율을 종전 60~80%에서 30~80%로 개정하였음.

결과적으로, 2026년 6월 현재, 지원대상 기간은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되고,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어, 총 33.4조원의 채권을 매입해, 순부채의 30~80%(취약계층·저소득층차주·취업재창업 교육이수자는 90%까지)를 감면하는 안으로 변경되었음.

---

331) 순자산 6.5억원 초과자 및 사행성제조업·부동산임대업·전문직종 등 제외
332)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 11.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

<table>
<tr><th></th><th>종전</th><th>2024. 9.</th><th>2025. 3.</th><th>2025. 7.</th><th>2026. 6.</th></tr>
<tr><td>채권
매입</td><td colspan="3">총 30조원의 부실(우려)차주 관련 채권 매입계획</td><td colspan="2">총 33.4조원 매입계획</td></tr>
<tr><td rowspan="2">지원
대상</td><td>2020. 4.-2023. 11.</td><td>2024. 6.까지</td><td>2024. 11.까지</td><td colspan="2">2025. 6.까지</td></tr>
<tr><td colspan="5">2020.4.부터 위 기간 중 사업(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td></tr>
<tr><td>신청
기간</td><td>2022.10.-
2025. 10.까지</td><td colspan="4">2026. 12.까지</td></tr>
<tr><td>채무
감면</td><td>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td><td colspan="2">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td><td>저소득차주
333)
90% 일괄
감면</td><td>변제가능률 100%
초과 시
5~30%p
축소334)

1년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경우
5~10%p 추가
감면335)</td></tr>
<tr><td>대상
채무</td><td colspan="5">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서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td></tr>
<tr><td rowspan="3">제외
채무</td><td colspan="5">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td></tr>
<tr><td>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td><td colspan="4">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td></tr>
<tr><td>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가능</td><td colspan="4">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 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td></tr>
<tr><td>만기
연장</td><td colspan="4">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td><td>취약계층·저소득차주:
거치기간 최대 3년,
최대 20년 분할상환</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333) "저소득층 차주"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를 말함.

334)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한 감사원(「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11.) 통보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채무감면율을 종전 60~80%에서 30~80%로 개정함.

335)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약정자의 거치기간(최대 1년~3년) 종료 등으로 상환이 개시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간의 채무상환기간(채무종류별 최대 10년~ 20년) 동안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하도록 조기·성실 상환 인센티브 등을 마련함.

□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신청기한(2026년 12월) 종료 6개월 전인 2026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권매입 실적은 채권액 기준 48.2%, 채권매입액 기준 52.2%에 그쳐,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계획 및 실적>

(2026. 6.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채권액		채권매입액[336]
계획 (2022. 10. ~ 2026. 12.)		334,000	136,000
실적 (2022. 10. ~ 2026. 6.)	매입형	106,999	29,835
	중개형[337]	54,152	41,216
	합 계	161,151	71,051
계획 대비 실적		48.2	52.2

(자료: 금융위원회)

이러한 실적 저조는 제도 설계 시에 코로나 피해 관련 다양한 정책지원과의 중첩성,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제도 등 기존 채무조정제도[338]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책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336) 부실(우려)채권에 매입가율을 적용하여 실제 채권을 매입한 가격을 말함.
337) 중개형은 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을 부동의한 경우 기금이 매입한 채권액
338) 상시적 채무조정제도

구분	개인금융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운영주체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근거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또한, 2026년 6월 기준 채무조정 약정 실효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약정 체결자 중 매입형은 25.4%, 중개형은 52%가 약정을 실효하였고, 주된 실효 사유는 장기연체(매입형은 98%, 중개형은 91.2%)인 것으로 나타남.

<채무조정 약정 실효자 현황>

(2026. 6. 기준,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기준)	합 계	실효 사유
매입형	약정 체결	-	15,417	14,266	27,808	14,277	71,768	장기연체(98%) 다른 채무조정(0.6%) 도덕적 해이(0.3%) 기타(1.1%)
	약정 실효	-	3,913	1,987	374	1	6,275	
	실효율	-	25.4	13.9	0.1	0.0	8.7	
중개형	약정 체결	305	13,234	17,513	25,876	13,125	70,053	장기연체(91.2%) 다른 채무조정(8.6%) 기타(0.2%)
	약정 실효	152	6,885	6,504	3,893	70	17,504	
	실효율	49.8	52.0	37.1	15.0	0.5	25.0	

주: 여기에서 말하는 실효율이란 해당연도 채무조정 확정자 중 2026년 6월 기준 시점 실효자 수 비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약정 실효 후 재신청 현황을 보면, 부실우려차주로서 약정을 체결했다가 실효된 채무원금 1조 6,543억원의 89.8%인 1조 4,863억원이 부실차주로서 재신청된 것으로 나타남.

<채무조정 약정 실효 후 재신청 현황>

(2026. 6.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약정 실효 채무원금	약정 실효 후 재신청 (부실차주 전환) 채무원금
부실우려차주	16,543	14,863 (89.8%)
부실차주	7,829	-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이,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 실효 후 다시 '부실차주'로서 재약정[339]하려는 이유는, 순채무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이자도 100% 감면받는 '부실차주'[340]와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만 조정되는 '부실우려차주'[341]의 경계가 3개월 이상 연체 유무로 결정되고,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에서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부실차주 기준을 적용해 채무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부실우려차주로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기보다, 연체를 지속해 원금까지 감면받는 부실차주로 전환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감사원[342]은 소득 등 변제능력에 맞게 원금·이자를 감면하는 것

339)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19조(채무부담액의 산정)** ② 부실차주 및 그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액은 별표 3의 부실차주의 채무유형별 채무부담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부실우려차주 및 그 채무관계자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협약 제16조 제1항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개형 채무조정약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 협약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채무부담액은 별표 3 부실차주의 채무유형별 채무부담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40) "부실차주"란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대상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중개형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또는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무자 포함)를 말함(「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2조).

341) "부실우려차주"란 채무조정 신청일 현재 채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상 '요주의' 이하로 평가하는 채권의 채무자 등 장기연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대상차주 중 부실차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함(「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2조).

342)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 11.

이 ‘채무조정’의 본래 의미임에도 새출발기금이 변제능력(변제가능률 100% 이상)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점을 지적하였고, 새출발기금은 이를 수용해 2026년 6월부터 채무감면율을 종전 60~80%에서 30~80%로 개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2026년 6월 이후 채무조정 신청자는 종전 신청자 보다 낮은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며, 2026년 2분기 기준 74.3%를 나타내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향후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매입형 채무조정의 감면 현황>

구 분	부실차주(신용·보증채권)		
	원금 감면율	이자 감면율	분할 년수
2022년 4/4분기	69.8%	100%	8.7
2023년	69.8%	100%	8.7
2024년	71.3%	100%	10.1
2025년	73.0%	100%	10.4
2026년(6월기준)	74.3%	100%	10.4

(자료: 금융위원회)

이와 같은 기존 약정자와 신규 약정자 간 지원기준의 차이는, 변제능

- 채무조정은 현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채무변경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절차이므로 소득 등 변제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원금·이자 감면 등)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시 감면율을 차주의 변제가능률·연령·상환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변제가능률은 월소득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나, 변제능력(변제가능률 100% 이상)이 충분한 차주조차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함.
-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총 1,944명이 변제가능률 100% 이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총계 840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임.

* 사례: A(만 50세, 10년 상환)는 월소득 8,084만원으로 변제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 62%로 산정, 채무 3.3억원 중 2억원 감면

력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사전 검토가 부족한 정책과 이로 인한 잦은 정책 변경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정책 변경 시마다 시스템 개편, 담당자 재교육, 지침 재작성, 대상자 재심사 등을 위한 부수 비용이 발생해 행정·집행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향후 제도 설계 시에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 시행 중 제도 변경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2) 사해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감사원은 2025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343]에서 새출발기금이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재산 숨기기 등)에 취약한 구조임을 지적하였음.

감사원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회수가능액(자산에서 부채·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을수록 채무 감면액이 커지는 구조임에도, 법 규정 미비 등으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 그 결과 새출발기금 신청 전후로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269명, 가족 등에게 1천만원 이상 증여한 자 77명, 비상장주식 1천만원 이상 보유자 39명이 재산조사망을 벗어나 있었는데, 이중 증여자 77명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제도시행 기간(2022. 1. 1.- 2025. 3. 21.) 중 자산가액 총 119억원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총 67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았음.

이에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한 자를 추가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약정 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음.

343)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25.11.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사원 통보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6년 6월 25일에야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음.[344] 이 개선방안의 핵심은 ① 가상자산 보유내역 제출 의무화 및 비상장주식의 재산심사 대상 포함, ②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도 재산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 ③ 재산 누락·허위신고 확인 시 약정 해지 및 채권 회수 조치 등인데, 사해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반년 이상 소요된 점은 개선방안 마련이 지체되었음을 보여줌.[345]

□ 새출발기금은 순채무액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한 구조로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감면액을 키우려는 유인[346]이 큼.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가격과 채무조정 약정자의 감면된 채무액의 차액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되므로, 감면액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나게 됨. 따라서, 보유 재산을 숨기는 등 사해행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2조[347]는 채무조정 신청과

34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 6. 25.

345)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감사원 통보 이후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보유재산 파악 및 심사체계 구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 준비를 거쳐 법 개정이 확정된 이후, 2026년 6월 25일에 개선방안 관련 진행 경과를 발표하였다고 설명함.

346) 신청자 입장에서는 재산의 회수가능액이 커질수록 상환해야 할 채무부담액이 늘어나므로(감면금은 줄어들므로) 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함.

347)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2조(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채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주무부점의 장은 즉시 채권의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해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즉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약정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모든 이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채무자로부터 받고 있음.

□ 그런데, 2026년 6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사해행위자 약정 취소 및 회수 실적을 보면,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한 사례는 차주 수 기준 16명에 불과함. 또한, 이 16명과 관련해 총 16억 6,000만원의 채무원금에 대해 약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채권 회수액은 총 4,020만원(회수율 약 2.4%)에 그쳐 회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사해행위자 약정 취소 및 채권회수 실적>

(2026. 6. 기준, 단위: 백만원)

약정 연도	사해행위자 수	약정 취소 연도	약정취소 채무원금	채권 회수액
2023년	11명	2024년, 4명 2025년, 3명 2026년, 4명	1,150	39
2024년	2명	2024년, 1명 2026년, 1명	130	0.2
2025년	3명	2026년, 3명	380	1
합계	**16명**		**1,660**	**40.2**

2. 채무조정 신청 당시에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인 경우
3.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7. 채무조정 신청 당시에 회수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채무조정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16명은 현재 재산 보전조치 등의 법 조치를 진행 중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348]에 따라 채무자별 은닉, 증여 등의 재산정보 확인 후 기 적발된 부정수급자를 포함하여 기약정자 대상 재산은닉·사해행위 등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약정취소 등과 함께 회수강화 등 조치 방향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각종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349]의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350]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348)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

349)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원금,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5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자격 없이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함.

□ 그러나,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5조[351]는 채무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허위가 있거나, 재산의 도피·은닉 등 재산 감소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새출발기금과 재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해행위를 억제할 만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352]

□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법률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금 등의 형태로 신청자에게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원금의 평균 70% 이상을 감면해 주고 있고, 앞서 살펴본 사해행위자 약정 취소 실적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자 1인당 평균 채무원금이 약 1억원임을 고려하면, 1인당 7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감면받는 셈이어서 부정이익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51)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 제35조(채무조정의 재약정) ① 협약 및 이 요강에 따라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관계자가 채무조정의 재약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약정 신청서를 받아 채무조정의 약정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352)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허위자료제출, 재산 감소행위 등이 확인되면 채무자별 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재약정*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며, 재기지원 목적인 채무조정기구 특성 상 타 채무조정기구에서도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재약정시 확인된 재산은 채무자의 회수가능재산에 포함되어 총 채무액에서 공제 후 채무조정 실시

「새출발기금 위탁채권 관리업무요강」은 사해행위 시에 약정 효력 상실 및 해당 사유 해소 후 재약정(원상회복 수준)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수록 채무 감면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신청자는 재산을 숨길(사해행위) 유인이 있고, 이러한 유인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국가 예산 낭비, 국민 부담 증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으로 인해 새출발기금 운영 전반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또한, 새출발기금 외에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활용 가능한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이미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한 새출발기금을 사해행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재산 조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사해행위자에 대한 채권 회수를 신속히 진행하며, 재약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해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353]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 재정을 출자하여 모펀드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500억원이 편성되어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	50,000	-	50,000	5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등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자본과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후 피투자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운용해 오고 있는데,[354]

353)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2432-304)

354) 정부는 2017년 12월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동 펀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1호~6호) 조성되었음.

○ 모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된 국가 재정은 2020년도 750억원, 2021년도 675억원, 2024년도 500억원, 2025년도에 500억원임.

<기업구조혁신펀드 제1호~6호 모펀드 출자자별 출자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국가재정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KAMCO	국민	농협	하나	우리	신한	키움	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합계
제1호 (2018)	약정총액	-	1,502	1,102	646	250	350	350	350	350	350	-	40	125	**5,415**
	(비중)	-	(27.7)	(20.4)	(11.9)	(4.6)	(6.5)	(6.5)	(6.5)	(6.5)	(6.5)	-	(0.7)	(2.3)	(100.0)
제2호 (2020)	약정총액	**750**	1,502	1,062	686	1,000	-	-	-	-	-	-	15	-	**5,015**
	(비중)	(15.0)	(30.0)	(21.2)	(13.7)	(19.9)	-	-	-	-	-	-	(0.3)	-	(100.0)
제3호 (2021)	약정총액	**675**	1,322	935	668	600	-	-	-	-	200	100	10	-	**4,510**
	(비중)	(15.0)	(29.3)	(20.7)	(14.8)	(13.3)	-	-	-	-	(4.4)	(2.2)	(0.2)	-	(100.0)
제4호 (2023)	약정총액	-	1,495	1,110	835	1,560	-	-	-	-	-	-	-	-	**5,000**
	(비중)	-	(29.9)	(22.2)	(16.7)	(31.2)	-	-	-	-	-	-	-	-	(100.0)
제5호 (2024)	약정총액	**500**	1,335	991	824	1,350	-	-	-	-	-	-	-	-	**5,000**
	(비중)	(10.0)	(26.7)	(19.8)	(16.5)	(27.0)	-	-	-	-	-	-	-	-	(100.0)
제6호 (2025)	약정총액	**500**	1,129	975	896	1,500	-	-	-	-	-	-	-	-	**5,000**
	(비중)	(10.0)	(22.6)	(19.5)	(17.9)	(30.0)	-	-	-	-	-	-	-	-	(1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임.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355]은 사전적 ·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인데, 이는 부실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355) 정책펀드의 투자대상은 ①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② 운용 효율성이나 민간자금 유입 등 시장성 확보를 위해 일부 허용되는 일반 투자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구조혁신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은 60%이며,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에는 100%임.

사전적 구조조정기업	사후적 구조조정기업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기업[356] ②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대상기업[357] ③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의 지원대상기업[358] ④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⑤ 코로나19 피해 기업[359]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④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자료: 금융위원회)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조성된 자펀드는 ① 펀드 조성 후 운용사가 4~5년의 투자기간에 걸쳐 여러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② 운영사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정한 후 민간 투자자가 출자 여부를 정해 단건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즉시 소진하는 프로젝트 펀드로 구분됨.

○ 블라인드 펀드의 투자기간은 일반적으로 4~5년이며, 그 운용기간은 8~10년인데 반해, 수시 제안접수 방식의 프로젝트 펀드는 통상 1~3개월의 투자기간과 4~5년의 운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임.

356)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57) 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기업, 최근 2년간 영업손실 발생 기업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271조의27제3항)

358)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인 중소기업으로서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35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대상 업체 등

2) 검토의견: 펀드 적정 조성주기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26년 6월 기준, 총 6개의 모펀드로 구성되는데, 모펀드 총액은 2조 9,940억원이며, 총 펀드 조성액은 7조 8,177억원임.

<기업구조혁신펀드 1호~6호 조성 실적>

(2026. 6.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결성 현황(모펀드 기준)			조성 실적(펀드 총액 기준)		
		모펀드 총액 (A)	모펀드 출자액 (B)	결성률 (B/A)	조성 목표[2] (C)	조성 실적 (D)	조성률 (D/C)
1호 (2018)	소 계	5,415	5,415	100.0%	16,441	16,441	100.0%
	프로젝트펀드	1,415	1,415	100.0%	6,213	6,213	100.0%
	블라인드펀드	4,000	4,000	100.0%	10,228	10,228	100.0%
2호[1] (2020)	소 계	5,015	5,015	100.0%	15,851	15,851	100.0%
	프로젝트펀드	2,006	2,006	100.0%	8,881	8,881	100.0%
	블라인드펀드	3,009	3,009	100.0%	6,970	6,970	100.0%
3호[1] (2021)	소 계	4,510	4,510	100.0%	17,793	17,793	100.0%
	프로젝트펀드	1,510	1,510	100.0%	10,280	10,280	100.0%
	블라인드펀드	3,000	3,000	100.0%	7,513	7,513	100.0%
4호 (2023)	소 계	5,000	4,430	88.6%	11,680	11,110	95.1%
	프로젝트펀드	2,200	1,630	74.1%	5,404	4,834	89.5%
	블라인드펀드	2,800	2,800	100.0%	6,276	6,276	100.0%
5호[1] (2024)	소 계	5,000	3,350	67.0%	13,822	10,322	74.7%
	프로젝트펀드	1,650	-	-	3,500	-	-
	블라인드펀드	3,350	3,350	100.0%	10,322	10,322	100.0%
6호[1] (2025)	소 계	5,000	3,000	60.0%	10,410	6,660	64.0%
	프로젝트펀드	2,000	-	-	3,750	-	-
	블라인드펀드	3,000	3,000	100.0%	6,660	6,660	100.0%
합 계	소 계	29,940	25,720	85.9%	85,997	78,177	90.9%
	프로젝트펀드	10,781	6,561	60.8%	38,028	30,208	79.4%
	블라인드펀드	19,159	19,159	100.0%	47,969	47,969	100.0%

주: 1) 재정출자사업

2) 조성목표 = 조성실적 + (현재 모펀드 미출자액 + 모펀드 미출자액의 민간자금 매칭 추정 규모)

(자료: 금융위원회)

□ 동 펀드의 투자집행기간이 4~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제1호~제3호펀드는 투자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2026년 6월 기준 제4호~제6호펀드의 투자가 진행 중임.

투자집행이 완료된 제1호~제3호펀드는 투자집행기간(4~5년) 종료 시점에 95% ~ 100%의 집행률을 기록하여, 프로젝트펀드는 사실상 전액이, 블라인드펀드도 대부분의 자금이 투자로 소진되었음.

□ 그런데, 제1호~제6호펀드 중 블라인드 펀드의 세부 현황을 보면, 펀드 결성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2026년 6월 기준 미투자율은 2023년 조성된 제4호펀드 46.2%, 2024년 조성된 제5호펀드 52.3%, 2025년 조성된 제6호펀드 99.3% 수준임.

2024년 및 2025년에 조성된 제5호·제6호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집행기간(4~5년)을 감안할 때, 미투자 잔액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2023년 조성된 제4호펀드의 경우에는 1년 늦게 조성된 제5호펀드와의 미투자율 격차가 6%p(46.2% vs 52.3%)에 불과해 투자집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호~6호 블라인드펀드 결성 및 집행 현황>

(2026. 6.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운용사	결성현황				투자액	미투자 잔액	비율
		모펀드	민간	합계	결성 연월			
제1호 (2018)	합계	4,000	6,228	10,228	'20.2.	9,782	446	4.36
제2호 (2020)	합계	3,009	3,961	6,970	'20.12.	6,621	349	5.01
제3호 (2021)	합 계	3,000	4,513	7,513	-	6,737	776	10.33
제4호 (2023) (투자기간: 5년)	A	1,100	1,100	2,200	'23.12.	914	1,286	58.45
	B	500	1,360	1,860	'23.12.	1,430	430	23.12
	C	500	600	1,100	'23.12.	450	650	59.09
	D	350	250	600	'23.11.	270	330	55.0
	E	350	166	516	'23.12.	310	206	39.92
	합계	2,800	3,476	6,276	-	3,374	2,902	46.24
제5호 (2024) (투자기간: 4-5년)	A	300	200	500	'24.11.	457	43	8.6
	B	300	115	415	'24.12.	304	111	26.75
	C	500	3,877	4,377	'25.1.	2,050	2,327	53.16
	D	500	680	1,180	'25.2.	302	878	74.4
	E	1,250	1,685	2,935	'25.3.	1,380	1,555	52.98
	F	500	415	915	'25.4.	425	490	53.55
	합계	3,350	6,972	10,322	-	4,918	5,404	52.35
제6호 (2025) (투자기간: 4-5년)	A	1,500	1,000	2,500	'25.12.	-	2,500	100.0
	B	500	750	1,250	'26.3.	50	1,200	96.0
	C	500	335	835	'26.3.	-	835	100.0
	D	500	1,575	2,075	'26.4.	-	2,075	100.0
	합계	3,000	3,660	6,660	-	50	6,610	99.25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프로젝트펀드의 경우에는 2026년 6월 기준, 제4호펀드가 결성을 완료하지 못해 모펀드 재원 57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제5호·제6호펀드의 경우 결성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1호~6호 프로젝트펀드 결성 및 집행 현황>

(2026. 6. 기준, 단위: 억원)

구분	모펀드 잔여재원	운용사	결성현황				투자액
			모펀드	민간	합계	결성연월	
제1호 (2018)	-	합 계	1,415	4,798	6,213	-	6,213
제2호 (2020)	-	합 계	2,006	6,875	8,881	-	8,881
제3호 (2021)	-	합 계	1,510	8,770	10,280	-	10,280
제4호 (2023)	570	A	120	120	240	'24.8.	240
		B	220	682	902	'24.10.	902
		C	250	767	1,017	'25.4.	1,017
		D	210	155.5	365.5	'25.9.	365.5
		E	200	334.4	534.4	'25.11.	534.4
		F	180	125	305	'26.1.	305
		G	150	520	670	'26.2.	670
		H	300	500	800	'26.4.	800
		합 계	1,630	3,203.9	4,833.9	-	4,833.9
제5호 (2024)	1,650	-	-	-	-	-	-
제6호 (2025)	2,000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종합하면, 2026년 6월 기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가능액은 제4호펀드 2,902억원, 제5호펀드 5,404억원, 제6호펀드 6,610억원으로, 총 1조 4,916억원이며,

프로젝트펀드의 투자가능액(민간 매칭을 고려해 모펀드 잔여재원의 2배로 추정) 8,440억원[360]까지 더하면 총 2조 3,356억원에 달함.

□ 기업구조혁신펀드의 2021~2025년(5개년) 연평균 투자집행액이 9,218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투자가능액 총 2조 3,356억원을 모두 집행하는 데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2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기업구조혁신펀드 연도별 투자 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연평균
10,885	13,703	4,756	7,047	9,697	46,088	**9,218**

(자료: 금융위원회)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관련 민간 재원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규 펀드와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한정된 투자처를 두고 서로 경합하면서 기존 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 재정으로 출자한 재원이 구조조정 수요 기업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고 모펀드에 장기간 유보되어,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361]

---

360) 8,440억원 = (제4호 570억원 + 제5호 1,650억원 + 제6호 2,000억원) * 2

361)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6호 펀드의 경우 기존 제1호-제5호펀드를 통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향후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기존 펀드의 투자 진행 상황과 시장의 투자 수요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펀드 조성 주기를 검토하고, 기존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를 독려하여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않은 주력산업(석유화학·철강·자동차·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행될 예정으로 펀드 간 경합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362]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장기간 연체된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새도약기금)에서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현액 4,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400,000	-	-	400,000	40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7년 이상[363] 연체된 5천만원[364] 이하 개인[365] 무담보[366]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 채권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권 전체를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를 조정

362)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2432-305)
363) 금융위원회는 ①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②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는 입장임.
36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한 금액
365)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 및 개인 비사업자(근로자 등)인 경우 모두 포함
366) 담보·보증부 채권은 제외

해주는 사업임.

○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의 전체 규모를 총 16.4조원, 채무자수 기준 약 1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매입가율을 평균 5% 수준[367]으로 산정하여 총 매입 소요액을 약 8,000억원(= 16.4조원 × 5%) 규모로 산출하였음.

○ 이 중 4,000억원은 정부가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고, 채권 매입에 소요되는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회사의 출연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음.

2) 검토의견

(1) 채권 매입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등

□ 장기연체채권의 일괄 매입을 전제로 금융위원회가 2025년 제2회 추경[368]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 4,000억원을 편성·집행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2025년 8월 설립하였고, 이후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였음.

---

367)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과 유사한 과거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7년 이상 연체건에 대한 매입가율이 평균 4.00%(신용회복기금)~5.19%(국민행복기금)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책정했다는 입장임.

368)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 및 정부 이송

○ 이 때 발표된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에 걸쳐 금융업권별로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부터[369] 순차적으로 소각[370]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371]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음.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새도약기금) 당초 추진일정(안) 〉

세부내용	당초 추진일정(안)
금융회사·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25.10월~
장기 연체채권 매입	'25.10월~'26.10월
상환능력 심사	'25.11월~'27.6월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25.12월~
상환능력심사 기반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연내

(자료: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2025.10.1.))

□ 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채권 매입을 시작하여 2025년 말까지 7조 7,22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2026년에 추가로 2조 6,75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여 2026년 6월말 기준 총 10조 3,971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였음.

369)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 소각
370) 소각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371)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20~7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2026년 6월말 기준)〉

(단위: 억원, 만명)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1차 매입 ('25.10.)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54,493	34.0
2차 매입 ('25.11.)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28개사)	8,003	7.6
3차 매입 ('25.12.)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93개사)	14,724	18.0
2025년 소계		**77,220**	**59.6**
4차 매입 ('26.1.~2.)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290개사)	4,409	4.7
5차 매입 ('26.3.~5.)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930개사)	9,602	11.6
6차 매입 ('26.6.)	유동화전문회사, 상호금융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491개사)	12,739	14.1
2026년 소계		**26,750**	**30.4**
합계		**103,971**	**90.0**[1)]

주1) 동일 업권 내 중복 제거 시 88.5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 2025년 중에 매입한 채권이 7조 7,220억원으로 당초 추산한 전체 대상채권 16조 4,000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2026년 6월말까지 매입한 채권은 총 10조 3,971억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상채권 16조 4,000억원 대비 6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채권매입가액은 3,135억원, 평균 채권매입가율은 3.0%로 당초 산정한 채권매입가율 5.0%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업권별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2026년 6월말 기준)〉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채권매입가액	채권매입가율
공 공	(28개 사)	60,405억원	37.0만명	1,562억원	2.6%
은 행	(17개 사)	5,417억원	3.7만명	222억원	4.1%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원	0.7만명	20억원	3.7%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원	1.0만명	38억원	3.4%

카 드	(8개 사)	8,473억원	10.3만명	380억원	4.5%
캐피탈	(21개 사)	2,592억원	5.1만명	143억원	5.5%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원	1.7만명	41억원	5.7%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원	0.8만명	13억원	2.3%
수 협	(71개 사)	344억원	0.3만명	9억원	2.6%
신 협	(400개 사)	401억원	0.5만명	14억원	3.6%
농 협	(383개 사)	273억원	0.3만명	10억원	3.7%
산림조합	(63개 사)	22억원	149명	1억원	3.8%
대 부	(25개 사)	7,382억원	11.2만명	230억원	3.1%
기타(AMC 등)	(6개 사)	15,701억원	15.9만명	452억원	2.9%
합 계	**(1,824개 사)**	**103,971억원**	**88.5만명**	**3,135억원**	**3.0%**

(자료: 금융위원회)

○ 이는 추경 편성 당시 적용한 매입 대상채권의 규모 및 평균 매입가율과 실제 채권 매입실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의 준비상황과 실제 재원 소요시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 전액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집행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당초 계획한 매입기간이 2026년 10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잔여 대상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융위원회는 매입대상 장기연체채권 중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보유한 채권액을 4조 6,88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2026년 6월말까지 매입한 대부업권 채권액은 7,382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 대부업권 채무자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취약채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어 대부업권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새도약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협약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당초 계획한 기간 내 채권 매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업권별 잔여 대상채권 규모와 월별 매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리하면, 새도약기금 사업은 추경 편성 당시의 대상채권 규모·매입가율과 실제 매입실적 간 차이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잔여 대상채권을 신속히 매입하여 당초 매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상환능력 심사 지연 문제

□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부터 상환능력 심사를 시작하여 2027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5년 12월부터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음.[372]

○ 이를 위해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을 2025년 연내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법률 개정이 2026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개시 시점이 당초 2025년 11월에서 2026년 8월로 약 9개월 지연되었음.[373]

372)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중 우선 소각
3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8.13.] [법률 제21646호, 2026.5.12., 일부개정]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새도약기금) 추진일정(안) 변경〉

세부내용	당초	변경('26.6. 기준)
금융회사·공공기관과 협약 체결	'25.10월~	'25.10월~
장기 연체채권 매입	'25.10월~'26.10월	'25.10월~'26.10월
상환능력 심사	'25.11월~'27.6월	**'26.8월**~'27.6월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1)]	'25.12월~	'25.12월~
상환능력심사 기반 마련(신용정보법 개정)	연내	**'26.5월 개정 완료**

주1)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소각은 2025년 12월부터 진행 중이고, 상환능력 심사에 따른 소각 및 채무조정은 2026년 8월부터 심사 이후 진행될 예정임

(자료: 금융위원회)

○ 그 결과 일반 채무자에 대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 및 채권 소각·채무조정은 2026년 6월말 기준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령자 등 관계부처의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이미 확인된 채무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채권 소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10조 3,971억원 중 21.7%에 해당하는 2조 2,583억원이 소각되었음.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현황 (2026년 6월말 기준)〉

구 분	채권액(비율)		채무자수(비율)	
매입(1~6차)	103,971억원	(100%)	88.5만명	(100%)
소각(1~3차)	22,583억원	(21.7%)	26.9만명[1)]	(30.4%)
1차 소각('25.12.)	11,305억원	(10.9%)	6.7만명	(7.6%)
2차 소각('26.3.)	6,286억원	(6.0%)	13.3만명	(15.0%)
3차 소각('26.6.)	4,992억원	(4.8%)	6.9만명	(7.8%)

주1) 소각 채무자수 차수간 중복 제거 시 23.7만명

(자료: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분기별로 계속하는 한편, 2026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안내한다는 계획임.

□ 비록 새도약기금이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있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발생하고 있으나, 상환능력 심사가 지연될 경우 채무관계의 종국적인 정리와 채무조정 확정,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 등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재기 지원 효과도 함께 지연될 수 있음.

○ 특히 2026년 6월 말까지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수가 중복 제거 기준 88만 5,000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채권이 소각된 채무자 23만 7,000명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처리하여야 할 채무자가 최대 64만 8,000명에 이르며, 2026년 10월까지 채권 매입이 계속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계획된 2027년 6월까지 상환능력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환능력 심사가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행정정보 및 금융자산 정보의 연계, 심사시스템 구축 및 심사인력 확보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상환능력 심사와 채권 소각·채무조정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잔여재원 및 회수재원의 처리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정부가 출자한 4,000억원과 금융회사 출연금 4,400억원[374]을 재원으로 하여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는 사업임.

○ 그런데 2026년 6월말까지 채권 매입에 사용된 금액이 3,135억원이고, 평균 채권매입가율도 당초 예상한 5.0%보다 낮은 3.0%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채권 매입실적에 따라 조성한 재원 중 상당한 잔여재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업권별 장기연체채권 매입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채권매입가액	채권매입가율
공 공	(28개 사)	60,405억원	37.0만명	1,562억원	2.6%
은 행	(17개 사)	5,417억원	3.7만명	222억원	4.1%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원	0.7만명	20억원	3.7%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원	1.0만명	38억원	3.4%
카 드	(8개 사)	8,473억원	10.3만명	380억원	4.5%
캐피탈	(21개 사)	2,592억원	5.1만명	143억원	5.5%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원	1.7만명	41억원	5.7%
새마을금고	(740개 사)	572억원	0.8만명	13억원	2.3%
수 협	(71개 사)	344억원	0.3만명	9억원	2.6%
신 협	(400개 사)	401억원	0.5만명	14억원	3.6%
농 협	(383개 사)	273억원	0.3만명	10억원	3.7%
산림조합	(63개 사)	22억원	149명	1억원	3.8%
대 부	(25개 사)	7,382억원	11.2만명	230억원	3.1%
기타(AMC 등)	(6개 사)	15,701억원	15.9만명	452억원	2.9%
합 계	**(1,824개 사)**	**103,971억원**	**88.5만명**	**3,135억원**	**3.0%**

(자료: 금융위원회)

374) 금융기관(업권별) 출연 현황(총 4,400억원): 은행연합회 3,600억원,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 채권 매입이 2026년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최종 잔여재원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금융위원회는 잔여 매입 대상채권의 규모와 예상 매입가율 등을 토대로 최종 재원 소요액을 산정하고, 채권 매입 종료 후 남은 정부 출자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375]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한 후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376]에 대해서는 추심을 재개하여 상환을 요구할 계획이므로, 향후 채무조정 이행금과 추심금 등 회수재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은 정부 출자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이 함께 투입된 사업으로, 회수재원의 사용·귀속 및 재원별 정산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원의 성격과 부담주체별 정산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재원이 장기간 새도약기금에 유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채권 매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재원과 채무조정 이행금·추심금 등 회수재원이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장기간 유보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금과 금융회사

375)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76)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출연금 간 정산기준, 잔여재산 및 회수재원의 사용·귀속, 새도약기금의 존속기간과 청산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적정 시기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377]

377) 금융위원회는 2026년 3분기 중에 예상 매입채권 규모 파악 후 잔여재원 규모를 추정할 예정으로, 이후 기획예산처·출연 금융회사들과 채무조정 회수금을 포함한 잔여재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제2장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49조원(원금기준)을 2027년까지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계획현액은 5조 9,977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조 5,400억원(92.4%)만 상환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계획액
당초	수정					
5,997,739	5,997,739	5,997,739	5,540,024	457,715	92.4	7,148,632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1~2025회계연도까지 원금 기준 총 35조 4,206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였음.

<2021~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실적>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5,540,024	35,420,624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에 예상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채무상환을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으로,[378] 2025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의 계획현액은 3조 8,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3조 2,000억원(84.2%)만 전출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계획액
당초	수정						
3,800,000	3,800,000	3,800,000	3,200,000	-	600,000	84.2	4,800,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5회계연도까지 총 14조 6,400억원을 전출하였음.

<2021~2025회계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실적>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250,000	2,400,000	2,600,000	5,190,000	3,200,000	14,640,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

378)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807호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검토의견: 잔여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차입하였음. 이는 회수가 어려운 정부보증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 69조원 가운데 49조원[379]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차입금 49조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380] 등의 재원으로 상환하고 있는데,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각각 「공적자금상환기금법」[381] 및 「예금자보호법」[382]에 따라 2027년 12월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는 이 시한까지 잔여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두 기금을 청산하여야 함.

□ 2025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원금 기준 15조 712억원임.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조 1,486억원, 2027년 7조 9,225억원을 상환한 뒤 기금을 청산한다는 계획이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상환 실적을 살펴보면 3개 회계연도 모두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379) 69조원 중 나머지 20조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03년-2027년까지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함.

380) 20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45.7조원) 받을 때 체결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간 약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 상환을 위해 전출하고 있음.

381)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82)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이하 생략)

〈 공공자금관리기금 부채(원금) 상환 계획 및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계획	2027계획
당초 계획	10,342,600	9,789,418	5,997,739	7,148,632	7,922,520
상환 실적	8,345,572	8,842,338	5,540,024	-	-
계획 달성도	80.7	90.3	92.4	-	-
잔여부채(원금)	28,011,614	20,611,176	15,071,152	-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383]은 ① 세계잉여금, ②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 전입금, ③ 일반회계전입금 및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계잉여금[384]과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385]에 따른 정형화된 산식으로 결정되므로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

---

38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384)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지방교부세 정산 후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따라 출연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수 있음. 실제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28억원은 모두 지방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어서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8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천분의 1)*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천분의 1)*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386]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뿐인데, 최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 내역을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비중이 월등히 높아, 잔여부채 상환은 사실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 조달 능력에 의존하는 구조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주요 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계획	결산	당초계획	결산	당초계획	결산	계획
세계잉여금	-	1,684,340	-	-	-	133,738	-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112,757	110,705	115,655	112,873	118,631	115,961	121,843
일반회계 전입금	2,160,000	303,86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2,600,000	2,600,000	4,250,000	5,190,000	3,800,000	3,200,000	4,800,000
재고자산매각 (한화오션 주식[387])	18,028	534	30,099	81,597	18,908	-	-
합 계	**4,890,785**	**4,699,439**	**6,895,754**	**7,884,470**	**6,437,539**	**5,949,699**	**7,420,637**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388]		4,124,204		1,441,900	-	-	-
부채(원금) 상환 실적		**8,345,572**		**8,842,338**		**5,540,024**	-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38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387)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오션 주식은 2024년도에 매각 완료됨.

388)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원금) 상환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다시 차입해 충당함.

□ 실제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5년도에 총 수입 3조 4,343억원 중 3조 2,000억원(93.2%)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하였고, 2026년도에도 총수입 계획 4조 8,867억원 중 4조 8,000억원(98.2%)을 전출할 계획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정부출자수입 (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주식에 대한 배당금)	167,736	195,258
이자수입 (연기금투자풀 운용)	65,714	115,089
재고자산매각대 (보유 주식, 채권 등 매각)	261,536	1,818,514
법정부담금 (부보금융회사 특별기여금)	2,689,339	2,747,819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250,013	10,000
총 수입	**3,434,340**	**4,886,680**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3,200,000** (총수입의 93.2%)	**4,800,000** (총수입의 98.2%)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공자료 재구성)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원은 ① 보유 자산 매각대, ② 보유 자산 관련 배당금 및 이자수입, ③ 부보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389] 등으로 구성되는데,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특별기여금은 부보금융회

389)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법률 제6807호(2002. 12. 26.)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사가 예금 등 잔액의 0.1%를 매년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며, 동법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만 유효함. 또한, 보유 자산 관련 배당금 및 이자수입은 보유자산 규모에 연동되며 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재원 확보 여부는 사실상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보유 자산 매각 규모에 달려 있음.

□ 2025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채 없이[390] 순자산 4조 1,094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출자금융회사인 한화생명 및 서울보증보험의 주식 평가액이 3조 1,95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025. 12. 기준) 재정상태>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순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8	0	4,109,358
주식(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	3,195,420		
국채(수협중앙회)	479,728		
연기금투자풀 운용자산	233,240		
KR&C 대여금[391]	200,270		
기타자산(공사 임차보증금 1억원 포함)	692		
총 계	**4,109,358**		

(자료: 2025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무결산 中 재정상태표 재구성)

39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21년 8월에 차입 부채를 모두 상환함.

391) KR&C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대지급, 부실금융회사 자산 인수, 대출 채권 회수 등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임. 동 기금이 보유한 KR&C 대여금은 대출원금 14조 2,815억원 중 회수가능성이 낮아 14조 81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순계상액이 2,003억원임.

□ 2025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순자산(4조 1,094억원)에 향후 2년치 부보금융회사 특별기여금 예상치(5조 4,000억원=2조 7,000억원*2년)를 더하면 약 9조 5,094억원이 조달 가능하며,

여기에 우체국특별회계·일반회계 전입금이 2026년도 계획 수준으로 2027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6 ~ 2027년 확보 가능한 총 상환재원은 약 14조 7,530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2025년 말 기준 잔여 부채 15조 712억원에 약 3,182억원 부족한 수준임.

구 분	2026~2027년 상환재원 추정
우체국특별회계 전입금	약 2,436억원 = 121,843 * 2년
일반회계 전입금	약 5조원 = 2,498,794 * 2년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전입금	약 9조 5,094억원= 2025년말 상환기금 순자산(한화생명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 등) + 2년치 부보금융회사 특별기여금
합 계	**약 14조 7,530억원**

더욱이 이 시나리오는 2025년 말 주식 평가액을 전제로 한 것인데, 2026년 8월 기준으로 평가하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종전 평가액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상환재원 부족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즉, 향후 주가 수준이 2025년 말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상환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출자금융회사 주식 보유 현황 〉

구 분	2025.12. 평가액	평가액 추정			
		2026.8.기준 보유주식	2026.8.기준 평가	2026 매각 실적	합계
한화생명 보험	2,827억원	86,857,001주 (지분 10%)	약 3,743억 원 (2026.8.4.종가 4,310원 적용)	-	약 3,743억 원
서울보증 보험	2조 9,127억원	55,546,746주 (지분 79.56%)	약 2조 3,635억 원 (2026.8.4.종가 42,550원 적용)	1,610억원 (2026.3. 300만주 매각)	약 2조 5,245억원
합 계	3조 1,954억원	약 2조 8,988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3월 상장을 통해 보유 주식 10%를 매각하여 1,815억원을, 2026년 3월 추가로 4.3%를 매각하여 1,610억원을 회수하였으나, 경영권 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29.56%)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시점(2027년 말) 이내에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로드맵 외에는 구체적인 매각 일정과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금 청산 시한에 쫓겨 대량 지분을 서둘러 매각할 경우 적정 가격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또한, 한화생명 주식도 액면가(5,000원)를 밑도는 주가가 지속되면서 매각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시한인 2027년 12월 말까지 서울보증보험 및 한화생명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잔여부채 전액 상환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5년 이내, 즉 현세대 내에 상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만기를 2027년으로 설정한 것인데,

미상환 잔액을 차환 등의 방식으로 유예하는 것은 이 원칙과 배치되며, 이미 편익이 과거 세대에 귀속된 채무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세대 간 재정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또한,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기금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해 충당할 의무가 있음.[392)]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7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에 대비하여 상환 소요 및 재원조달계획을 재점검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는 등 청산 시한 내 부채상환을 전제로 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 주식의 효율적 매각 방안과 함께 주식 매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기금 청산 후 잔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39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제3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393]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500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	-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필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함)의 건전성 악화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농신보 기본재산[394] 확충을 통한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편성되었음.

393) 세부사업: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394)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익금,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됨.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395]는 기금의 운용배수[396]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규정」 제12조[397]는 추가적 보증여력의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398]에 따라 적정운용배수를 12.5배[399]로 설정·운용하고 있음.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2014년~2019년 농특회계로 1.6조원 반환[400]과 보증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 보증잔액[401]의 증가 등으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였으며, 2023년 16.8배에서 2024년 17.3배로 상승하였음.

---

39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6)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397)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398) 적정운용배수 관리의 필요성(자료: KFR 한국펀드평가, 「적정운용배수 산정 컨설팅 연구용역」, 2020 8.)

구 분	내 용
추가적 보증여력 확보	○ 보증 상품의 다양화, 보증 수요의 확대 등으로 보증자산규모가 증가될 수 있음 ○ 계획보다 보증 자산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운용배수를 법정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기본재산 가치변동에 대응	○ 기본 재산은 경기 변동,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동할 수 있음 ○ 극단적으로 기본 재산의 평가금액이 하락하더라도 보증 배수가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는 법정 수준 이하의 보증 배수 유지 * 이러한 필요성은 Basel III에서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임
보증자산의 질적변화에 대응	○ 기본 재산은 대위변제의 재원으로서 보증 자산의 사고율 증가, 대위변제 증가시 기본 재산의 유출 및 감소가 불가피함 ○ 운용배수의 분모항에 해당하는 기본 재산의 감소는 운용배수를 급격히 증가시킴 ○ 이러한 보증 자산의 부실화 상황에서도 법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법정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

399)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Ⅱ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

400) 기본재산 감소의 주요원인은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낮게 유지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 6,000억원이 기금에서 농특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임.

401)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증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농어업분야의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의 확대* 등에 따라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업분야 지역소멸대응 및 시설현대화 관련 정책자금 배정규모: (2021년) 8조 9,419억원 → (2023년) 10조 3,585억원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정부출연금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1,500
	금융기관출연금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2,247	2,207
	보증료,이자수입등	1,085	1,042	957	810	756	1,610	1,372	1,259
	계	325	311	3,343	3,943	4,027	3,728	3,919	5,732
지출	보증보조비용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06	△3,759
	구상채권상각비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3,271	4,176
	관리업무비 등	666	590	566	633	660	626	635	655
	계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4,012	13,667
기본재산(A)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14,813
보증잔액(B)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운용배수(B/A)		**9.7**	**15.4**	**16.7**	**15.2**	**14.6**	**16.8**	**17.3**	**12.2**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처럼 농신보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정부출연 등 기본재산 확충방안과 보증총량 및 보증관리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기금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2024년도 300억원에 이어 2025년도 1,5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전입하고, 금융기관의 특별출연[402] 및 기준보증료율 인상[403] 등을 통하여 기본재산 확충을 추진하였음.

○ 또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한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조정[404] 및 유의업종[405] 관리, 부실보증 감축을 위한 성과평가 강화, 부실보증 감축 특별추진 및 관련 실적의 보증센터 성과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보증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였음.

□ 이러한 정부출연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에 따라 2025년말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전년 1조 384억원에서 1조 4,81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보증잔액은 전년 17조 9,913억원에서 18조 97억원으로 소폭 증가함에 따라, 운용배수는 2024년말 17.3배에서 2025년말 12.2배로 하락하여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 이하로 개선되었음.

○ 다만, 2025년 운용배수의 개선에는 정부출연 및 보증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증충당부채 산출방식 개선에 따른 보증충당부채[406] 환입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402) 농협은행 특별출연금 100억원 전입(2024. 12. 24.) 및 수협은행 특별출연금 15억원 전입(2025. 12. 16.)
403) 기금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기준보증료율 0.2%p 인상*
* 기준보증료 적용 : 0.3 ~ 1.2% → 0.5 ~ 1.4% (대상자 및 금액에 차등)
404) 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2 ~ 9등급에 대하여 보증한도 10% 감액
405) 신용평가 모형별 대위변제 등 사고율이 높은 업종으로, 유의업종 지정 시 보증한도 감액
406)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향후 기금이 부담하게 될 대위변제금의 추정액으로, 농신보는 보증승낙잔액에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대손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적립하고 있음.

- 농신보는 그동안 보증잔액의 정상·부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과거 경험률을 적용하여 보증충당부채를 산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검사 및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 등을 거쳐 보증잔액의 신용위험 등을 반영하도록 산출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적립된 보증충당부채가 환입되면서 2025년도 보증보조비용이 △3,759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이는 기본재산 증가 및 운용배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정부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과 보증관리 강화 등 그간의 기금 건전성 제고 노력에 따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운용배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액은 2024년 4,195억원에서 2025년 4,378억원으로 증가하고 대위변제율도 2.33%에서 2.43%로 상승하였으며, 불건전보증잔액은 같은 기간 1,390억원에서 1,69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5	4,378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2.4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또한, 구상채권잔액은 2024년 2조 7,034억원에서 2025년 2조 8,067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구상채권회수율은 2.6%에서 2.5%로 하락하였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구상채권 회수액(A)	1,051	874	711	711	713
구상채권 잔액(B)	23,605	23,971	25,371	27,034	28,067
구상채권회수율(A/B)	4.5	3.7	2.8	2.6	2.5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아울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정부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대위변제 증가 등에 따른 기본재산 감소 또는 보증공급 확대에 따라 운용배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운용배수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대위변제 및 불건전보증 감축,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등 기금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자금 공급 규모와 보증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보증공급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정부출연 규모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위변제금[407]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금”은 피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농신보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4,380억 100만원 중 4,378억 1,300만원(99.9%)이 집행되고, 1억 9,700만원(0.1%)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금	438,010	438,010	-	438,010	437,813	-	197	454,5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대위변제 규모는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904억원에서 2025년 4,37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1.69%에서 2.43%까지 상승하였음.

○ 2025년말 기준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보증[408], 우대보증[409], 특례보증[410]에서 각각 3,087억원, 914억원, 377

407) 세부사업: 대위변제금(2432-680)
408) 농림어업인의 영농림어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억원의 대위변제금이 집행되었으며, 대위변제율은 각각 3.28%, 1.72%, 1.15%로 나타나고 있음.

<농신보 보증 유형별 대위변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보증	보증잔액(A)	99,464	99,367	97,827	96,739	94,205
	대위변제(B)	2,409	2,272	3,201	3,183	3,087
	대위변제율(B/A)	2.42	2.29	3.27	3.29	3.28
우대보증	보증잔액(A)	45,773	48,253	50,590	51,969	53,232
	대위변제(B)	432	468	620	729	914
	대위변제율(B/A)	0.94	0.97	1.23	1.40	1.72
특례보증	보증잔액(A)	18,348	24,232	28,003	31,205	32,660
	대위변제(B)	181	162	253	284	377
	대위변제율(B/A)	0.99	0.67	0.90	0.91	1.15
합 계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6	4,378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2.4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국회는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농신보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증건전성 관리, 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의 사전 관리 및 사후 점검 강화, 부실보증 감축 특별추진 및 관련 실적의 보증센터 성과 평가 반영 등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음.

409) 농어업 생산성 향상, 조기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조건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보증

410) 재해피해복구 등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3회계연도] ○ [지적사항]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불건전보증과 대위변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23년 대위변제액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74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당초 계획액 3,196억원 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00억원(+28.2%)을 증액변경하였음 * 2024년도 상반기 대위변제금 집행률: 61.9% ○ [시정요구사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조기경보시스템 및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 등을 통해 전년 동기대비 대위변제금 감소('24.1분기 1,153억 → '25.1분기 846억) -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증건전성 관리 강화 ('25.1분기 관리목표 7,123건 100% 달성) * 금융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유의관리가 필요한 피보증인의 신용정보, 휴폐업정보 등을 확인하여 유효보증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 - 불건전보증·대위변제 감축 특별추진*을 통해 지역센터별 대위변제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25년 업적평가 배점 확대(2점→3점)	조치완료
[2024회계연도] ○ [시정요구사항]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감축 및 불건전보증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제도개선	○ 부실감축을 위하여 채무조정제도* 적극 지원을 통해 한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건전보증 정상화 방안 강구 *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른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 ○ 조기경보 모형*을 통해 불건전보증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현장출장 기록을 전산화하는 등 사후점검 체계 강화 운영 * 정상보증 사후관리 단계로 일반·유보·관찰·주의 등급으로 구분, 요주의 대상은 실태조사 실시 등 매월 관리 실시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대위변제액은 4,378억원으로 전년 4,195억원 대비 183억원 증가하였고, 대위변제율도

2.33%에서 2.43%로 상승하는 등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향후 대위변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보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불건전보증잔액은 2021년 526억원에서 2023년 1,053억원, 2024년 1,390억원, 2025년 1,69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불건전보증비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60%, 0.77%, 0.94%로 상승하였음.

<농신보 불건전보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180,097
불건전보증잔액(B)	526	789	1,053	1,390	1,694
불건전보증비율(B/A)	0.32	0.46	0.60	0.77	0.94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그간 추진한 대위변제 감축 조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건전보증의 발생 방지 및 정상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위변제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3. 기금관리비[411]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금관리비”는 기금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68억 900만원 중 65억 2,500만원(95.8%)이 집행되고, 2억 8,400만원(4.2%)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금관리비	5,939	6,809	-	6,809	6,525	-	284	5,543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적정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연례적 계획변경 지양 필요

□ 농신보의 임차료는 지역보증센터 등의 사무공간 임차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최근 3년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당초 계획 범위에서 집행되었으나, 2024년 및 2025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계획액을 증액한 후 집행하였음.

○ 2024년에는 당초 계획액 3억 9,500만원에서 4억 900만원을 증액한 8억 4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

411) 세부사업: 기금관리비(3277-201)

년에는 당초 계획액 3억 5,700만원에서 5억 7,100만원을 증액한 9억 2,800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9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임차료	722	722	719	395	804	803	357	928	92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최근 2년간 임차료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세부 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 사업명	세목	금액
2024. 12. 23.	자체 변경	기금 관리비	일반수용비	35	선급 법인세	공공요금 및 제세	△479
			임차료	409			
			관리용역비	35			
2025. 10. 21.	자체 변경	기금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운반비)	87	선급 법인세	공공요금 및 제세	△870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98			
			임차료	571			
			관리용역비	111			
			일반연구비	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신보는 2024년 원주센터의 임차료 증액 및 해남센터 이전, 2025년 인천센터 및 경남센터 등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료 증가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 주요 사무소의 임차료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소 이전 및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조정, 월세 전환·인상 등에 따라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주요 사무소 이전 및 재계약 등 변동 내역>

(단위: 억원, %)

사무소명	구분 (이전/ 재계약 등)	계약시기	변경전		변경후		임차료 인상분 (월)	임차료 인상분 (년)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중앙본부	임차료 상승	'23년~'26년	0	27.7	0	33.1	5.4	64.8
원주센터	갱신	'24.02.02.	330	0	330	2.5	2.5	30
해남센터	임시이전	'24.08.06.	300	0	20	2.2	2.2	26.4
제주센터	갱신	'25.01.01.	264	0	400	0.4	0.4	4.8
경남센터	이전	'25.01.06.	492	1.2	30	3.1	1.9	22.8
인천센터	이전	'25.10.28.	315	0	100	4.2	4.2	50.4
전남센터	이전	'25.11.01.	257	0	200	2.2	2.2	26.4
합계							18.8	225.6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무소 이전이나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임차료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종료·갱신 시점과 최근 임차료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최근 2년 연속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임차료를 증액하고 특히 2025년에는 당초 계획액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증액한 것은 적정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사무소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갱신 시점, 최근 임차료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임차료의 적정 소요액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연례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4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사업 개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3년·5년 만기의 정기적금을 운영하는 사업임.

○ 동 저축의 가입자는 만기도래 시에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2025년 기본금리: 연 3.68%)에 더해, 가입대상 및 저축기간에 따라 저축장려금(연 0.9%~4.8%)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가입한도는 연간 총 240만원(월 20만원)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일반농어민</th><th>저소득농어민</th></tr>
<tr><td rowspan="3">가입대상
(법 시행령 제2조)</td><td colspan="2" rowspan="3">·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td><td>·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td></tr>
<tr><td>·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td></tr>
<tr><td>·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td></tr>
<tr><td>저축형태</td><td colspan="3">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td></tr>
<tr><td>저축기관금리</td><td colspan="3">연 3.68% (2025년 기본금리)</td></tr>
<tr><td rowspan="5">저축장려금</td><td rowspan="2">계약기간</td><td colspan="2">이자율(%)</td></tr>
<tr><td>일반</td><td>저소득</td></tr>
<tr><td>3년 만기</td><td>연 0.9</td><td>연 3.0</td></tr>
<tr><td>5년 만기</td><td>연 1.5</td><td>연 4.8</td></tr>
<tr><td colspan="3">* 저축기간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td></tr>
<tr><td>장려금재원</td><td colspan="3">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td></tr>
<tr><td>가입한도</td><td colspan="3">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 이하)</td></tr>
<tr><td>취급기관</td><td colspan="3">단위농협·수협, 산림조합</td></tr>
</table>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 각각 241억 4,700만원, 기금운용수익금 1억 5,800만원 등을 재원으로, 총 491억 3.000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412]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되고 있음.

< 저축장려금 재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원	정부 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4,147
	한국은행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4,147
	기금운용수익	17	12	23	132	118	158
저축장려금지급액		67,757	68,233	53,260	54,135	62,429	49,130
	만기 지급액	64,441	67,045	53,071	49,771	60,627	49,094
	중도해지지급액	1,401	1,186	1,208	1,350	1,185	1,158

(자료: 금융위원회)

4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기금 사업방식 재검토 및 신속한 제도개선 필요

□ 기금은 조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재정수단으로, 특정 목적사업과 재원 간의 연계가 강하고 잉여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어 단년도 원칙의 일반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이러한 신축성은 재원의 수요·공급이 연도별로 변동하거나 특정 재원과 지출사업 간에 실질적인 견련관계가 있는 사업에서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까지 기금 형태로 운용할 경우 기금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기금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수입-지출 견련성 부재)** 기금의 정당성은 특정 재원이 특정 목적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데, 이 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한국은행 출연금은 저축장려금 지급이라는 목적사업과 실질적인 견련관계를 갖지 않음. 한국은행 출연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법률로 강제된 것일 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농어민 저축장려 간에 내재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님.

○ **(신축적 운용의 실익 부재)** 기금 제도가 전제하는 재정 신축성은 연도별 지출 규모의 변동성이 크거나, 잉여재원을 이월하여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저축장려금 지급액은 기존 가입자의 저축 잔액과 약정 이율에 따라 사실상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경직적 지출로, 매해 연말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로서, 기금 특유의 이월·적립 기능이 활용될 여지가 없음.

○ **(재정 통제의 약화)** 일반회계 사업은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별 사업 단위로 세부 심사를 받는 반면,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절차로 심의됨. 따라서, 사업 규모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재정 통제가 일반 예산사업 대비 느슨해질 우려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5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 재정제도인 기금이 방만하게 설치·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 **(한국은행 출연 구조의 통화정책 중립성 문제)** 이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413]에 따라 재원의 절반이 한국은행

41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출연금으로 충당되는데, 중앙은행이 재정성 지출사업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구조는 중앙은행의 재정 중립성 및 통화 발행 기능과 재정 지출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할 소지가 있음.

참고로, 한국은행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매년 무상 출연을 하는 사례는 동 기금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움.

□ 기획재정부는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동 기금에 대해 반복적으로 폐지 또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였는데, 2025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고,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관성이 부족하며, 단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지출을 하는 구조로 인해 중기가용자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운용방식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하였음.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결과[414]〉

연도	평가결과	기금 존치의 타당성
2018	조건부 존치	농어가 재산형성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지를 권유하는 것이 타당하나, 저소득 농어민 중심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조건부존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규모의 단계적 감축 등을 권고함.
2019	폐지 (일몰)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기금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 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함.

414) 2025년도 기금존치평가, p.60 (일부 내용 축약)

연도	평가결과	기금 존치의 타당성
2022	폐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한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함.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025	폐지	현재 기금의 운용방식으로는 농어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며, 기금운용방식의 개편으로 해결이 불가한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수행 및 기금 폐지를 권고함.

□ 동 기금의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다른 기금과의 통합, 사업 자체의 재설계 등 여러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관계부처 간 재원조달 방식과 소관 주체를 둘러싼 이견[415]으로 인해 구체적인 논의가 수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음.[416] 그러나

415)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재원마련 방안 등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 중이라고 밝힘.
○ (소관부처 이관) 농식품부는 재원조달 방안 이견 해소 시 일반회계 전환 및 소관부처 이관에 동의
○ (일반회계 전환) 한국은행은 일반회계 전환 시 정부사업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나, 기획예산처는 한국은행의 출연금 유지가 타당하다는 입장

416) <시정요구사항>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사업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적사항	○ 동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매년 1:1 비율로 출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기금의 수입(한국은행 출연금)과 지출(저축장려금 지급)의 연계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기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9년, 2022년, 2025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에서 폐지를 권고받음
	시정요구사항	○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러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계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축불입액 역시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 '농어민 저축 유도' 등을 동 사업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417] 최근의 사업 실적을 보면, 이 사업이 동법의 입법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단위 : 좌 수,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가입 계좌수(누적)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206,820
불입액(누적)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11,289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조율하여 실질적인 협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사업 목적이 유효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수산업·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신용보증기금

1. 일반회계 전입금[418)]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 전입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정부출연금을 계상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은 1,000억이고, 전액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 전입금	-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30,0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동 수입금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정부출연금 1,000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차원의 수입을 계상하기 위해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반영되었음.

○ 동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정부출연금 1,000억원과

418) 세부사업: 일반회계 전입금(91-911)

자체재원 1,4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총 3조원 규모[419]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2025년 5월부터 공급하였음.

2) 검토의견: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 공급 실적 저조 문제

□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도에 운영한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기업은 관세조치·산업위기·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이고, 특례한도는 3억원(산업위기·재난)에서 5억원(관세조치)[420],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3%p(산업위기·재난)에서 0.5%p(관세조치) 차감하도록 하였음.

○ 관세조치 피해기업이란 미국 수출입 실적이 감소하거나 자동차 등 관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산업위기 피해기업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421][422]의 주된산업 관련 협력기업을, 재난 피해기업이란 특별재난지역[423]에 소재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함.

---

419) 보증공급 3조원 = 재원 2,400억원(정부출연 1,000억원 + 자체재원 1,400억원) × 12.5배

420) 단,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공급

42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22) 2025. 10. 기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4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2025년 중에 총 3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급 결과를 보면 공급이 시작된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약 1.6조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음.

<위기대응 특례보증 월별 보증공급 실적(2025년)>

(단위: 개, 억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위기대응 특례보증	**93**	**425**	**332**	**1,192**	**583**	**2,059**	**790**	**2,679**
관세조치 피해기업	91	419	328	1,181	574	2,034	757	2,606
산업위기 피해기업	1	3	1	3	2	6	-	-
재난 피해기업	1	3	3	8	7	19	33	73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1,173	**4,238**	**730**	2,676	**597**	2,177	**173**	**482**	**4,471**	**15,928**
1,129	4,126	704	2,599	582	2,149	167	448	4,332	15,562
-	-	2	8	1	3	1	1	8	24
44	112	24	69	14	25	5	33	131	342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2025년도 공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① 짧은 자금 공급 기간(약 7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② 추경 이후 한미협상을 통해 부과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어 관련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며 경제 영향도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자금 수요가 변경·이연된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결과라고 설명함.

□ 기업의 위기 상황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보증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정부 출연금 집행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출연금 1,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 1,4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3조원을 공급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실제 공급된 1조 6,000억원의 경우 총 보증공급 계획 대비 약 53%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이와 유사한 보증 공급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정부 출연금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424)]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만기 도래 시, 선순위유동화증권의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5,468억 8,700만원 중 2,148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39.3%)되고, 3,320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546,887	546,887	-	546,887	214,876	-	332,011	438,446

(자료: 신용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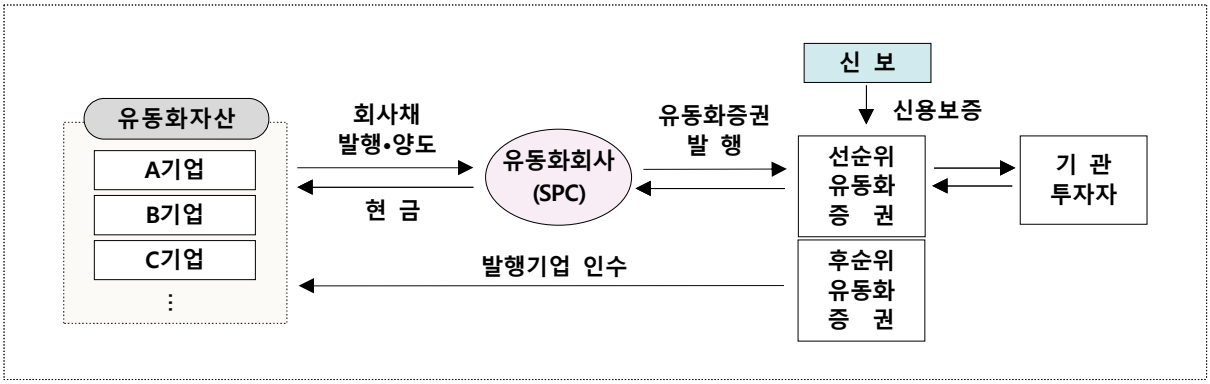
424) 세부사업: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2) 검토의견: 대위변제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2025회계연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크게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과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 958억 7,500만원, 채권시장안정계정 4,51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기금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함.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일반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은 2020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 유

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425]을 수행하고 있음.

□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편성된 계획액에 비해 실제 대위변제액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3년에는 2,10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었고, 2024년과 2025년의 집행률은 각각 19.1%, 31.4%에 불과함.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세부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유동화 계정구분	예상 대위변제액 (A)	실제 대위변제액 (B)	불용액(A-B)	집행률
2023년	일반	1,171	346	825	29.5%
	채권시장안정	2,109	0	2,109	0.0%
2024년	일반	923	754	169	81.7%
	채권시장안정	3,048	582	2,466	19.1%
2025년	일반	959	733	225	76.4%
	채권시장안정	4,510	1,415	3,095	31.4%

(자료: 신용보증기금)

425) 코로나19 피해 대응 유동화회사보증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어 현재는 공급이 종료되었고, 2023년 신설된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에 편입되어 있음. 2023년부터 공급된 채권시장 안정 유동화회사보증은 2년 만기(차환)가 도래하는 2025년부터 부실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시작되었음.

□ 이와 같이 채권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계정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당초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위변제 규모가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대위변제 규모를 기존 발생한 부실금액에 부실발생 예상금액을 더한 후 후순위유동화증권[426] 규모(버퍼)만큼을 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2025년 채권시장안정화계정 대위변제금액 산출 방식>

대위변제 예상액	=	기 발생 부실금액	+	부실발생 예상금액	—	버퍼 (Buffer)
4,510억 1,200만원		588억원		5,027억 9,200만원		1,105억 8,000만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 이 중 부실발생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경험부실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회사채 부실 발생[427]으로 대량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 경험부실률에 반영된 결과 부실발생 예상금액이 실제 당해연도 부실발생 금액보다 과도하게 산출된 것임.

□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해 '예상 부실률을 현실화하여 적정 규모의 대위변제 계획액을 편성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426)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선순위유동화증권과 후순위유동화증권으로 구분되어 발행되며, 이 중 선순위유동화증권은 투자자 등에게 발행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나, 후순위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을 발행한 기업이 인수하고 신용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427) 2015년 동부제철(주) 2,053억원, 2016년 현대상선(주) 4,675억원, 2016년 ㈜한진해운 3,705억원 등

○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 대위변제 계획액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채권시장안정 계정의 추정부실률 산출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유동화회사보증 부실 예측모형 도입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음.

-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액을 2025년도 대비 19.8% 감액한 4,38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말 기준 동 사업의 집행률은 34.7%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동 사업의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부실률 추계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26년	438,446	152,329	34.7%

(자료: 신용보증기금)

3.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428)]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은행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향후 보증한 대출 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479억 4,600만원 중 1,884억 9,900만원(54.2%)이 집행되고, 1,594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347,946	347,946	-	347,946	188,499	-	159,447	109,590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일반회계로부터의 임시전용 재원 반환 필요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

428) 세부사업: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1년 프로그램의 개편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의 잔여한도 2.85조원을 활용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음.

○ 사업 기간 동안 동 프로그램을 통해 총 7.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부터는 추가 보증공급 없이 피보증인이 주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위변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 개요>

구 분	소상공인위탁보증	
	기본 프로그램	임차 프로그램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기업인 소기업 (도박·사치·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기본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영위 임차 기업
지원한도	1,900만원	1,900만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및 구조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10년 만기) ※ 당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만기)에서 거치기간 1년 연장(2022.4월) 및 기존 5년 만기 차주 요청 시 최대 10년 만기로 갱신 가능(2024.12.)	
보증료율	- 1년차 0.3% - 2~10년차 0.9%	- 1~2년차 면제 - 3~5년차 0.4% - 6~10년차 0.9%
보증심사	- 수탁은행에서 심사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 · 지방세 체납,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심사 - 현장조사 미실시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투입된 정부 출연금을 살펴보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600억원을 편성하여 출연한 이후 2021년 1,500억원, 2024년 800억원 등 총 6,9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출연금 규모 현황>

(단위: 억원)

연도	구분	출연금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4,600
2021년	본예산	1,500
2024년	본예산	800
합계		6,900

(자료: 신용보증기금)

○ 동 사업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반보증과 달리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위탁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23년부터 누적부실은 빠르게 상승하였고, 순자산은 잠식되어 대위변제를 위한 현금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위탁방식은 신용보증기금과 수탁은행 간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은행을 통해 보증심사 및 보증부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의 현장조사와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규모,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변동 내용 등을 수반하는 일반보

증과 달리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경우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함.

○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잔여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환보증 계정’으로부터 2,000억원을 전용받았고, 2024년에는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반환을 전제로 2,000억원을 임시 전용받았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32e
누적부실	1,324	3,863	9,749	13,499	14,477		15,567
순자산	3,079	1,527	⊿1,100	⊿2,778	⊿1,781		⊿935
기말현금	8,407	6,322	1,803	⊿793	⊿1,471	…	⊿1,185
일반계정 임시전용 반영 시 (2024년)				1,207	529		815
대환보증계정 전용 반영 시 (2025년)					2,529		2,815

주) 보증 만기 최대 10년으로 ’32년에 보증기한 종료 예정 (최종 지원 2022.1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다만, 2025년부터 보증잔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초 예상 대비 부실잔액과 부실순증액 등 부실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동 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의 현금 재원은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25년도 동 사업의 계획액은 2024년 부실잔액을 2,306억원, 2025년 부실순증액을 2,622억원으로 예상하여 3,479억원을 대위변제할 것으

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2024년 부실잔액은 1,274억원, 2025년도 부실순증액은 978억원에 불과하여 1,885억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집행하였음.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부실잔액, 부실순증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획(A)	결산(B)	차이(B-A)
대위변제	3,479	1,885	⊿1,594
부실잔액(2024)	2,306	1,274	⊿1,032
부실순증액(2025)	2,622	978	⊿1,644

(자료: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64,954	57,283	21,654	9,457
실적	65,082	44,785	22,459	7,847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 사유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작성 당시(2024년 5월)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발생 규모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2025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 규모를 예측하였으나, 2025년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부양·민생안정 목적의 조치로 인해 부실 발생 규모가 예상보다 양호하였다는 입장임.

○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동 계정의 현금재원은 2,529억원이 남아있고, 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약 2,8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소상공인 위탁보증 프로그램의 부실률 증가로 대환보증 계정 및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전용받은 4,000억원 중 일반보증 계정으로부터 임시전용된 2,000억원은 해당 계정으로의 상환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2,000억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일반보증 계정은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증배수를 일반적으로 12.5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임시 전용한 2,000억원은 실질적으로 일반보증 공급 규모가 2조 5,000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음.

4. 대환보증 대위변제[429)]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 위탁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은행이 보증심사 후 여신을 지원하고, 향후 보증한 대출 건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261억원 중 1,810억 1,700만원(55.5%) 집행되고, 1,450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환보증 대위변제	326,100	326,100	-	326,100	181,017	-	145,083	158,425

(자료: 신용보증기금)

2) 검토의견: 사업종료를 반영하지 않은 대위변제금액 추계 부적절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도입되었음.

429) 세부사업: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연 최대 6.5%(금리 최대 5.5%, 보증료 연 1%)로 10년간 상환(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한도임.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재원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6,800억원, 2023년도 예산 800억원 등 총 7,600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교부받아 마련되었으며, 공급액의 9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총 9조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었음.

□ 이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까지 9조 5,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공급 실적을 보면 2024년까지 약 1조 6,600억원을 공급하여, 공급계획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음.[430]

430)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도 접수분 중 서류 미비 등에 따른 수탁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2025년 1월에 공급된 24억 9,6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본 사업의 최종 누적 신규보증공급액은 약 1조 6,626억 원이라고 설명하였음.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증공급 계획(a) 주1)	8,500,000	9,500,000	9,500,000
신규 보증공급액 주2)	232,085	933,288	494,712
누적 신규 보증공급액(b)	232,085	1,165,373	1,660,085
계획 대비 보증 공급 실적(b/a)	2.7	12.3	17.5

주1) 보증공급 계획: 정부출연금[2022년 추경(6,800억원) + 2023년 본예산(800억원)] × 운용배수(12.5배)
주2) 신규보증 운용기간: 2022년 9월 ~ 2024년 12월

(자료: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유사 대환프로그램을 출시하여 대환대출의 수요가 분산되었고, 이들 유사 프로그램에 비해 금리, 보증료율 측면에서 상품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대환보증, 소상공인 대환대출, 기회UP 특례보증 비교〉

구 분	신보 (저금리 대환보증)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경기신보 (기회UP 특례보증)
대환 금리	· (1년) 5.0% 고정 · (2년) 5.5% 고정 · (3~10년) 시장금리 적용	· (1~10년) 4.5% 고정	· 시장금리 - 2%(이차보전) * 2024년 9월 기준 3.6%
보증 료율	· (1년) 0% · (2~3년) 0.7% · (4~10년) 1.0%	· 해당 없음	· 0.5%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9조 5,000억원의 공급 규모를 전제로 7,600억원의 출연금을 교부받았으나, 공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해당 출연금의 상당 부분이 잔여 재원으로 남게 되었음.

○ 그 결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2024년말 종료하고, 기존 정부 출연금 중 잔여재원 2,000억원에 대해서는 현금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계정으로 전용[431]한 바 있음.

□ 한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대환보증 프로그램의 대위변제를 위해 동 사업의 계획안을 7,139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까지의 공급 실적을 감안하여 3,261억원으로 감액 조정한 바 있음.

○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에 약 8.3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동 사업의 대위변제액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공급 목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10월까지의 공급 실적을 토대로 2024년 말까지 약 5,400억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상하되, 2025년에는 잔여 공급계획에 해당하는 7.8조원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2025년도 대위변제 예상액을 3,261억원으로 산출하였음.

---

431)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환보증 예상 잔여재원의 일부를 현금 재원이 부족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전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단위 : 억원, %)

구 분	변경 전 계획(A)	변경 후 계획(B)	차이 (B-A)
대위변제	7,139	3,261	⊿3,878
부실잔액 (2024)	782	579	⊿203
부실순증액 (2025)	9,328	4,040	⊿5,288
산출근거	보증공급액 × 연차별 예상 부실률 = '22년 공급분 2,321×8.2%=190 + '23년 공급분 9,333×10.3%=962 **+ '24년 공급분 83,346×9.8%=8,176**	보증공급액 × 연차별 예상 부실률 = '22년 공급분 2,321×12.0%=279 + '23년 공급분 9,333×15.3%=1,428 **+ '24년 공급분 5,436×11.4%=620** **+ '25년 공급분 77,910×2.2%=1,714**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런데, 2025년도 실제 대위변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되어 확정된 3,261억원 중에서 1,810억 1,700만원(55.5%)만 집행되어 상당 부분의 계획액이 집행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도에 약 7.8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재산출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감액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동 프로그램을 2024년 말 종료하고 2025년에 신규 공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432].

432)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동 사업의 운용 기간의 연장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임.

□ 이와 같이 실제 동 프로그램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잔여 공급 계획을 전액 이행할 것을 전제로 대위변제액을 산출하여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했던 측면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보증 프로그램의 대위변제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종료 여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고 정확한 산출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대위변제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주택신용보증계정)[433]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위변제” 사업은 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현액 1조 3,364억원 중 1조 1,850억 7,600만원(88.7%)이 집행되고, 1,513억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위변제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	1,336,400	1,336,400	-	1,336,400	1,185,076	-	151,324	1,313,0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채무관계자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등 구상권 행사에 의한 구상권 회수금, 법인세 환급금 및 구상권관리비 회수액 등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5년 계획액은 2,887억 5,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4조 1,516억 2,900만원 중 2,891억

433) 세부사업: 대위변제(2631-303),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6,300만원을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7.0%)하고 3조 5,146억 9,200만원은 미수납, 3,477억 7,5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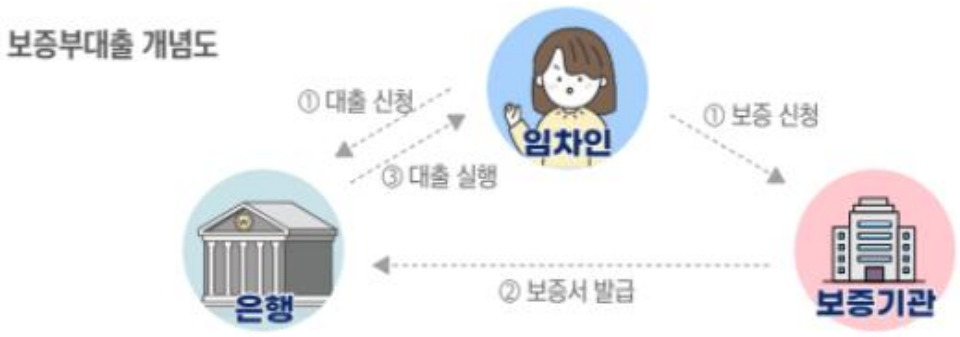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288,759	288,759	288,759	4,151,629	289,163	3,514,692	347,775	366,074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 포함)·개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개인보증), 사업자가 주택의 건설·임대를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거나(사업자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반환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함.

〈개인보증 구조〉



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림에서 “보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구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5년도 보증공급 규모는 총 68조 6,779억원이고, 연도말 보증잔액은 126조 7,374억원임.

〈주택신용보증계정 보증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보증실적										보증잔액(2025년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개인	610,000	588,873	674,000	641,769	623,000	618,766	652,000	615,960	597,000	545,282	968,793
반환		10,700		30,650		68,298		92,666		104,977	190,899
사업자	40,000	51,370	44,000	57,488	48,000	68,196	60,000	53,951	60,000	36,520	107,682
총계	**650,000**	**650,943**	**718,000**	**729,907**	**671,000**	**755,260**	**712,000**	**762,577**	**657,000**	**686,779**	**1,267,374**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2) 검토의견: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구상채권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대위변제 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286억 2,200만원, 2022년 3,167억 6,700만원, 2023년 5,890억 6,700만원, 2024년 8,578억 5,700만원, 2025년 1조 1,850억 7,6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위변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1	281,000	281,000	-	281,000	228,622	81.4	-	52,378
2022	291,200	320,000	-	320,000	316,767	99.0	-	3,233
2023	306,100	594,445	-	594,445	589,067	99.1	-	5,378
2024	669,400	870,000	-	870,000	857,857	98.6	-	12,143
2025	1,336,400	1,336,400	-	1,336,400	1,185,076	88.7	-	151,324

(자료: 금융위원회)

□ 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공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구상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DM발송, 유선연락 등 채권추심 활동을 실시함.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상환을 회피하거나 채무조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자발적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또한 통상적인 법적절차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하고, 시효 내 구상권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완성 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공사의 구상권 발생액이 회수액을 상회하면서 구상권 잔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우선 개인보증의 경우 구상권 발생액이 2021년 2,242억원에서 2025년 7,78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회수액은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이 6~8%대에 불과한 상황임.

○ 반환보증 또한 구상권 잔액이 2022년 54억 7,600만원에서 2025년 3,973억 8,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회수율이 11~14%대로 저조하며, 특히 사업자보증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회수율이 0~2%대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최근 5년간 구상권 발생 및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인보증	구상권 발생액	224,155	309,924	503,514	616,754	778,455
	회수액(A)	112,909	106,793	109,896	137,611	170,438
	구상권 잔액(B)	1,324,552	1,410,494	1,643,001	1,886,980	2,162,983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A/B)	8.52	7.57	6.69	7.29	7.88
반환보증	구상권 발생액	-	6,122	83,967	227,468	167,624
	회수액(C)	-	646	11,350	30,497	45,098
	구상권 잔액(D)	-	5,476	78,093	275,064	397,381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C/D)	-	11.80	14.53	11.09	11.35
사업자보증	구상권 발생액	4,466	721	1,586	13,635	238,996
	회수액(E)	1,504	2,340	4,544	713	21,222
	구상권 잔액(F)	780,597	760,914	745,969	743,533	947,396
	구상권 잔액 대비 회수율(E/F)	0.19	0.31	0.61	0.10	2.24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92.4~105.3%로 대체로 계획 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1~7.0%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2021년 2조 1,197억원에서 2025년 3조 5,147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매년 수납액보다 불납결손액이 더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124,043	124,043	124,043	2,443,416	130,624	105.3	5.3	2,119,703	193,089
2022	135,197	135,197	135,197	2,452,207	124,922	92.4	5.1	2,190,830	136,455
2023	145,612	145,612	145,612	2,798,656	143,348	98.4	5.1	2,481,273	174,035
2024	192,993	192,993	192,993	3,375,018	201,359	104.3	6.0	2,925,541	248,119
2025	288,759	288,759	288,759	4,151,629	289,163	100.1	7.0	3,514,692	347,775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보증대상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실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보증의 대위변제액(2021년 2,242억원→2025년 7,785억원)과 대위변제율(2021년 0.21%→2025년 0.8%)이 지속 증가·상승하여 전체적인 대위변제액·율의 증가·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출시된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빠르게 증가·상승한 후 2025년에는 다소 감소·하락하였으나 2022년~2023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가운데,

사업자보증은 2025년 대위변제액·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보증대상별 보증 공급 및 사고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인 보증	보증공급액	588,873	641,769	618,766	615,960	545,282
	보증잔액	1,078,006	1,102,294	1,087,086	1,029,849	968,793
	대위변제액	2,242	3,099	5,035	6,168	7,785
	대위변제율	0.21	0.28	0.46	0.60	0.80
	보증사고액	3,596	5,287	7,790	9,445	10,365
	보증사고율	0.33	0.48	0.72	0.92	1.07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1]	보증공급액	10,700	30,650	68,298	92,666	104,977
	보증잔액	13,384	41,849	96,557	154,110	190,899
	대위변제액	-	61	840	2,275	1,676
	대위변제율	-	0.15	0.87	1.48	0.88
	보증사고액	-	111	1,013	2,524	1,608
	보증사고율	-	0.26	1.05	1.64	0.84
사업자 보증	보증공급액	51,370	57,488	68,196	53,951	36,520
	보증잔액	78,599	92,192	124,586	125,819	107,682
	대위변제액	45	7	16	136	2,390
	대위변제율	0.06	0.01	0.01	0.11	2.22
	보증사고액	35	55	1,791	2,026	3,196
	보증사고율	0.04	0.06	1.44	1.61	2.97
총계[2]	보증공급액	650,943	729,907	755,260	762,576	686,779
	보증잔액	1,169,990	1,236,335	1,308,230	1,309,777	1,267,374
	대위변제액	2,286	3,168	5,891	8,579	11,851
	대위변제율	0.20	0.26	0.45	0.65	0.94
	보증사고액	3,631	5,450	10,594	13,995	15,169
	보증사고율	0.31	0.44	0.81	1.07	1.20
	운용배수	13.4	13.7	12.6	11.1	9.7
	기말기본재산	86,654	88,993	100,176	110,595	121,180
	기본재산증감	7,478	2,339	11,183	10,419	10,585

주1)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2020년 7월 처음 출시되어 2020년도 보증공급 건의 만기도래 시점인 2022년부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주2) 총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 전체를 의미함

주3) 대위변제 및 사고발생은 연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4)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액/보증잔액 ×100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에 선행하는 보증사고액·율 역시 증가·상승하는 추세임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의 표를 보면, 전체 보증사고액·율(2021년 3,631억원→2025년 1조 5,169억원, 2021년 0.31%→2025년 1.20%)이 계속 증가·상승하는 상황이고, 특히 2023년 이후 PF보증과 건설자금보증 등 사업자보증의 보증사고액·율(2022년 55억원→2025년 3,196억원, 2022년 0.06%→2025년 2.97%)이 빠르게 증가·상승하고 있음.

□ 대위변제 확대와 구상채권 잔액의 누적은 기금의 손실 부담을 높여 향후 기본재산 및 보증공급 여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금리·주택시장 여건 및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피보증인의 상환능력뿐만 아니라 보증유형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고, 신규 발생 구상채권의 조기관리와 재산조사·법적조치의 적시성을 높이는 등 구상채권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재산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434] : 공공기관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징수 노력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부패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액, 과오납급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징수하는 항목으로, 2025년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8,600만원이며, 이 중 10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682	-	682	1,286	1,056	230	-	70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 권익위는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경우,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434)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공기관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35], 「공익신고자 보호법」[436] 등에 따라 보상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2억 3,024만원)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에게 상환받아야 할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2억 2,009만원이며 이는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의 95.6%를 차지함.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의 경우 100% 수납하였음.

<최근 3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항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연도	내용	금액(원)	건수(건)	비고
2023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68,418,440	36	납기 미도래 11건 (16,270,260원)
	과오지급금 등 반납액	11,966,820	28	-
2024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16,171,720	3	납기 미도래 3건 (16,171,720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51,242,290	44	납기 미도래 35건 (238,605,520원)
	과오지급금 등 반환액	31,858,820	29	-
2025년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220,088,830	42	납기 미도래 16건 (21,587,260)
	과오지급금 등 반환액	10,148,320	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43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 중 납기 미도래 상환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약 10%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관계기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권익위는 이와 같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상환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독촉 공문 발송 및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 실제로 납부 독촉을 위한 공문 발송 횟수는 2025년 181회, 현지점검 출장도 8건으로, 2024년 공문 발송 90회, 현지점검 7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은 100% 수납되었음.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공문 발송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공문 발송 횟수	104회	90회	181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금 상환액 납부 독려를 위한 출장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장 기관 수	6개	7개	8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러나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의 경우 2024년에는 징수결정액 7억 1,717만원 중 2억 5,124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이 약 35%였고, 2025년에는 징수결정액 8억 9,157만원 중 2억 2,009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이 약 24.7%로 여전히 높음.

○ 또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수납액 중 납기 미도래를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억 9,85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2억 2,008만원 중 90%를 차지하고 있음.

<부패신고 보상금 미수납 현황>

(단위: 원, %)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순수 미수납액 (납기 미도래 제외)	미수납률	비고
2023년	826,046,100	757,627,660	68,418,440	52,148,180	8.3	납기 미도래 11건 (16,270,260)
2024년	717,168,410	465,926,120	251,242,290	12,636,770	35.0	납기 미도래 35건 (238,605,520)
2025년	891,566,240	671,477,410	220,088,430	198,501,170	24.7	납기 미도래 16건 (21,587,260)

1) 징수결정액 : 당해연도 신규 상환결정액 + 과년도 미수납에 따른 재징수액
2) 수납액 : 당해연도 마감일(12.31.) 기준 실제 납부된 금액
3) 순수 미수납액 : 전체 미수납액 중 당해연도 마감일(12.31.) 기준 납부일이 미도래한 금액을 제외한 미수납 금액
4) 납기 미도래 : 당해연도 마감일(12.31.) 기준 납부일이 미도래한 금액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부패신고 상환액을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437]: 신규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09억 100만원 중 106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고, 2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2억원 중 61억 7,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7,665	3,236	-	10,901	10,620	-	281	2,670
-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운영	2,964	3,236	-	6,200	6,173	-	27	-[43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37)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0)

438) 동 사업은 2026년부터 행정심판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4) 세부사업으로 분리(2026년 예산액 18억 2,200만원)되었음.

2) 검토의견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운영”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은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분야별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행정심판시스템 통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6월부터 통합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2025년 6월 통합시스템을 개통하였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기간	내용
’23. 3. ~ ’23. 8.	BPR/ISP/ISMP 용역 추진
’23. 9. ~ ’24. 3.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의뢰
’24. 6. ~ ’25. 6.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25. 6.	통합시스템 개통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사업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각 기관이 자동화·전자화된 통합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바, 동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중요하였음.

○ 당초 행정심판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대상 기관을 118개 기관으로 계획[439]하였으나, 24개 기관이 계획 수립 당시부터 통합시스템 참여에 미동의하였고, 통합시스템이 개통된 현재에는 미참여 기관 수가 오히려 4개 증가하는 등 통합시스템 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변화>

(단위: 개)

구분	계획 수립 단계 (2023년 12월 기준)	시스템 구축 단계 (2024년 10월 기준)	시스템 구축 단계 (2025년 5월 기준)	시스템 개통 (2025년 6월 ~ 현재)	시스템 개통 계획 대비
통합 대상 기관	118	118	118	118	-
참여 기관	94	93	95	90	△4
미참여 기관	24	25	23	28	+4
참여율	79.67	78.81	80.51	76.2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개별 기관들의 성격과 시스템 미참여 사유를 살펴볼 때, 일부 기관은 기관의 독립성이나 국가안보·군사보안 등의 사유로 통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선행 조건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관별 특성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439)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총 123개 기관 중 5개 기관(중앙노동위원회, 특허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난민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제외.

○ 일반행정심판 및 소청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중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해당 기관들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통합시스템 참여에 미동의하였음.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과 같이 기관 성격상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거나 국가정보원, 군인사소청위원회와 같이 국가안보·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시스템 통합이 부적절한 기관들은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음.

그럼에도 이러한 기관들까지 통합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은 통합의 조건 및 각 기관의 성격에 대한 고려와 관계 기관의 의견청취 등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 동 시스템 구축 시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결국엔 참여하지 않은 조세분야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경우,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법(관세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440] 해당 기관들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 법 개정을 전제로 참여 기관에 포함하였으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인 법 개정을 위한

---

440)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세법」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력 및 구체적 이행방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통합시스템 미참여 기관 현황>

구분		계획 수립 시 (24개 기관)	시스템 개통 이후 (28개 기관)	비고
일반행정심판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개 기관
특별행정심판	소청	중앙 소청심사위원회,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헌재 소청심사위원회,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11개 기관
	조세	-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3개 기관
	보상보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5개 기관
	토지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개 기관

*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은 계획 당시 통합시스템 참여기관이었으나, 그 이후 미참여로 변경한 기관을 의미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국민의 권익구제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세, 보상보험 등의 분야와 같이 개별 처분에 따라 소관 심판기관의 개별시스템을 각각 이용하여야 하였던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의 참여가 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당초 통합시

스템 구축 사업이 목표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분야별 특별행정심판기관(소청심사 제외) 통합시스템 참여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기관	통합 대상 기관 (A)	통합시스템 참여 기관 현황		
			참여 (B)	미참여	참여율 (B/A)
조세	3	3	0	3	0
(개별시스템 이용)	(3)	(3)	(0)	(3)	(0)
보상보험	8	8	3	5	37.5
(개별시스템 이용)	(4)	(4)	(2)	(2)	(50)
토지 등	5	4	3	1	75
(개별시스템 이용)	(2)	(1)	(0)	(1)	(0)
계	16	15	6	9	40
	(9)	(8)	(2)	(6)	(2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을 종합하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제반 조건, 관계기관 의견 등의 고려가 미흡하였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달성 노력 및 관계기관 협의가 부족하여 다른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시스템 참여가 저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목표하였던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통합시스템에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다수 기관의 참여가 전제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목표하였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사전에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441]: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의 경쟁 활성화 및 사업 추진체계 개선 검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억 8,400만원 중 28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1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4,500만원중 25억 4,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984	-	-	2,984	2,868	-	116	2,741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645	-	-	2,645	2,542	-	103	2,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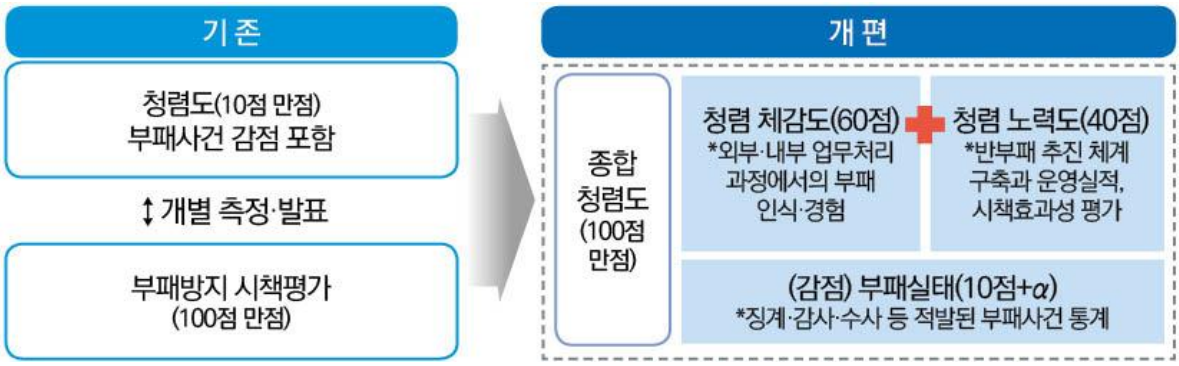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41) 세부사업: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1136-360)

2) 검토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운영해 왔음. 이후 2022년 이를 통합하여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각각 60%, 40% 비율로 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음.

<2022년 청렴도평가 개편 내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에는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청렴도 평가사업'과 '청렴노력도 정성평가 용역'을 각각 발주하여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수행 업체에게 청렴노력도 정성평가 용역 수행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통합 점수표 작성 및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였음[442].

○ 2023년부터는 예산 편성시 사업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42)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제안요청서

평가사업'으로 단일 편성하였고, 용역 발주도 1건으로 하게 되었음.

□ 그런데, 동 사업에서의 일반연구비(260-01목) 집행은 경쟁입찰 절차를 따랐지만, 유효한 응찰이 매년 1~2개 수준에 그치고 최근 동일 기관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

2022년 체계 개편 첫 해에 각각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평가를 분리 수행하였던 기관이 2023년 통합 발주 전환에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이후 해당 과업을 매년 수행해오고 있음.

<최근 6년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 현황>

연도	계약명	계약일	계약방법	계약금액	낙찰율	투찰자수	계약자
2026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6.4.28.	일반경쟁	2,310,000천원	98.4%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5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5.4.21.	일반경쟁	2,530,000천원	95.7%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4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4.5.24.	일반경쟁→수의	2,669,550천원	97.5%	1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3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3.5.9.	일반경쟁	2,232,940천원	97.0%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 C 연구소
2022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2022.4.19.	일반경쟁	2,002,560천원	96.0%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정성평가 용역	2022.7.13.	일반경쟁→수의	117,600천원	98.0%	1	C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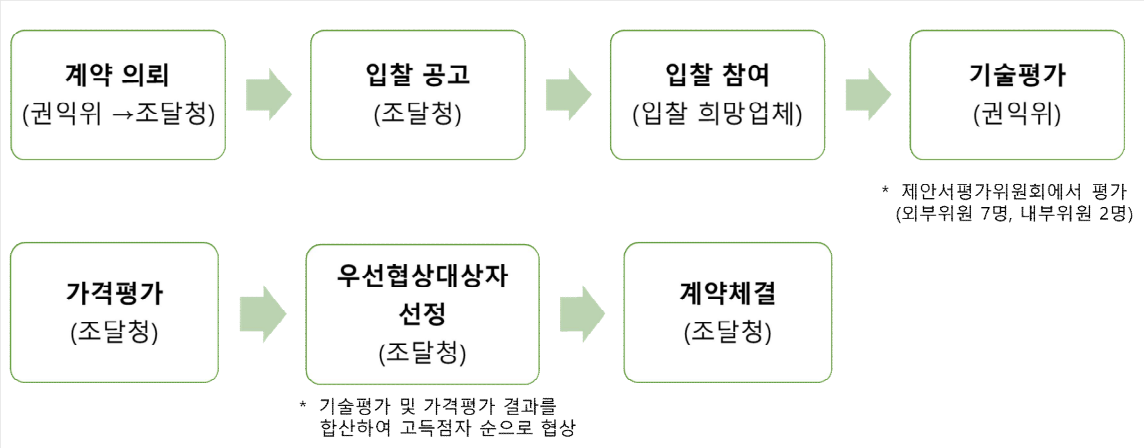
연도	계약명	계약일	계약 방법	계약 금액	낙찰율	투찰자 수	계약자
2021*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사업	2021.5.18.	일반 경쟁	1,805,000 천원	99.2%	2	A 리서치회사 & B 리서치회사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021.6.4.	일반 경쟁 →수의	117,600 천원	98.0%	1	D 산학협력단

* 2021년에는 특화모형(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사업 용역도 있었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낙찰자 선정은 입찰 참여 업체들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결과를 합산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술평가는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이 실시하여 최종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 것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용역업체 선정절차>



□ 그런데, 동일한 컨소시엄의 반복적인 수주는 특정 업체에 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구조를 고착화하여 향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혁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업체에 대한 사업 수행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최근 몇 년 간 동일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응찰업체 수가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수행 역량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가 선정된 것이며, 사업규모 대비 예산액이 크지 않고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어 참여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유효한 응찰 수가 1~2개 수준에 그치고 동일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 평가 체계 통합으로 리서치 인프라와 학술 연구 역량을 동시에 보유할 것이 요구되며, 제안서 기술평가[443]의 '과업에 대한 이해도', '조사·평가 계획', '조사 경험' 등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한 업체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신규 업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설명회 개최, 공고 기

443) < 기술평가표 >

간의 확대[444], 분할 발주 검토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사업 추진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종합청렴도 평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평가제도로, 전문성·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청렴도 평가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자체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평가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의 설립·운영 등 안정적인 평가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8	18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조사·평가 계획	▲조사·평가 설계(표본설계, 응답거절 관련 대책, 평가방안 등)의 타당성 * 전문가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안, 평가추진의 전문성·효율성	16	28
	▲조사·평가 계획(면접원 및 평가인력 관리, 검증체계, 비표본오차 방지 등)의 타당성	7	
	▲조사·평가 진행절차 및 일정계획의 적절성	5	
조사·평가 수행능력	▲시설규모(전화회선, 실사실, 서버 등)의 적합성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업체 간 역할분담 등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포함	14	29
	▲제안업체 및 관리인력의 조사·평가 경력 및 전문성	10	
	▲면접원(고정·등록조사원 규모 등) 및 평가인원 수급·관리 능력	5	
조사 경험	▲최근 2년 간 사회조사·평가 경험, 유사 연구·용역 과제 수행 경험	5	5
결과 분석	▲조사·평가 결과 분석의 충실성 및 전문성 * 자료취합, 문서관리, 평가결과 및 분석내용의 검증 등 포함	10	10
합계		90	

4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되, 긴급입찰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그런데,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사업 용역의 공고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22일, 12일, 14일, 22일, 21일로 확인됨.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사업으로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긴급입찰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동일 업체가 선정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참여 제한요인을 개선하는 등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적정한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청렴교육및의식확산[445]: 계약변경 절차 없이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 증액 지급 부적정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억 1,500만원 중 22억 3,700만원(92.6%)이 집행되고 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11	-	4	2,415	2,237	-	178	2,967
- 청렴교육과정 운영	765	-	-	765	715	-	50	795
- 청렴교육시설 운영	899	-	4	903	817	-	86	1,310
-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80	-	-	80	80	-	-	200
-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185	-	-	185	179	-	6	150
-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	-	384	344	-	40	407
-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70	-	-	70	69	-	1	70
-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 발간	28	-	-	28	33	-	△5	3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45)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2) 검토의견

(1) 계약변경 절차 없이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 증액 지급 부적정

□ 내역사업 “청렴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공직자 등에 대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6,500만원 중 7억 1,500만원이 집행(93.5%)되고,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예산에는 학습관리시스템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나라배움터 이용이 제한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청렴 사이버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청렴권익교육원[446] 홈페이지에서 연결 가능한 사이버 청렴교육 전용 학습관리시스템을 임대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당초 49,61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육 인원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로 계약 종료 후 계약금액의 약 38%인 1,900만원을 증액 집행함.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 시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하였고, 교육 인원 증가 등 초과 금액분[447]은 시스템 운영이 종료된 연말

---

446) 2025년 12월 기관 명칭을 ‘청렴연수원’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함.

447) 기본요금은 월 전송량 10,000GB 기준, 추가요금은 초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2025년 4월까지 GB당 165원, 2025년 5월부터 GB당 220원씩 과금된 것임.

<2025년 학습관리시스템 초과사용량 및 초과요금>

에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 학습관리시스템 임차 계약·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계약금액	집행액
2025년 청렴연수원 학습관리 시스템(LMS)운영 용역	'25.1.20.~ '25.12.12.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아목 클라우드서비스 계약	50	69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계약은 '확정 계약[448]'으로 체결되었는데, 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확정계약이 체결되면 발주기관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449].

구분	교육 수료생	초과 사용량(GB)	단가	초과요금
1월	-	-	-	-
2월	16,511	24,909	165원	4,109,985
3월	15,650	23,177	165원	3,824,205
4월	13,440	15,188	165원	2,506,020
5월	6,853	3,588	220원	789,360
6월	6,703	2,208	220원	485,760
7월	8,548	4,192	220원	922,240
8월	8,485	4,576	220원	1,006,720
9월	9,613	6,691	220원	1,472,020
10월	8,819	5,836	220원	1,283,920
11월	11,034	11,699	220원	2,573,780
12월	5,406	121	220원	26,620
합계	**111,062**	**102,185**	-	**19,000,630**

※ '25.5월부터 학습관리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플랫폼 전환에 따라 초과 단가 증가

448) 계약금액을 계약 시 확정하는지 사후정산하는지에 따라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나눌 수 있음. '확정계약'은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이고, '개산계약'은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형태의 계약방법이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해당 비목의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방법임.

449) 계약이행이 완료된 확정계약에서 사후 계약금액 정산 가능여부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58, '12.9.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계약서에 일부 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

○ 다만, 입찰공고 시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으로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였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하나[450],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어디에도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451]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절차 없이 시스템 초과 사용량을 확인 후 추가 대가를 지급하였음.

○ 이러한 방식이 허용된다면 계약금액은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게 되고, 계약 종료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만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게 되어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게 됨.

○ 또한, 계약변경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계

용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확정계약서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액 지급 후에 그 차액을 반납토록 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450) 총액계약의 사후정산 가능 여부 관련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461, ’24.4.22.) 총액계약의 사후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 시에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조건을 정하였다면 가능할 것임.

4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약법 제5조의 계약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452].

□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하고, 근거 없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모전 운영 규정 준수 필요

□ 내역사업인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 운영” 사업은 국민들이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굿즈, 영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억 8,5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이 집행(96.8%)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렴의식 확산과 양질의 콘텐츠 발굴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여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음. 또한, 공모전 수상작은 작품집 발간 및 샌드아트 등 2차 창작물로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등 3개 부문에서 532건을 접수하여 40점을 수상작으로 결정한 바 있음.

<2025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응모 · 수상 현황>

구 분	초등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연극 영상	
			공직자 부문	일반국민 부문
접수	188	237	88	19
수상	14	14	6	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453]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1년 행정기관 주최 공모전에서 기존 수상작 등을 표절·도용하여 수상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45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와 국민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455].

○ 실태조사 결과, 응모작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시스템이 부족하고 공모전을 등록·관리·접수하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국민들이 기관별로 진행하는 공모전의 개최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심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음.

○ 이에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2022년 8월 10일)하고, 공모전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공개심사·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

4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54) 한겨레신문, “베낀 소설로 5개 문학상 휩쓴 손 씨, ‘복사-붙여넣기 보고서’로 특허청장상 받았다”, 2021.1.18.

455)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 의안번호 제2021-356호(2021.6.7.)

동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인 소통24(www.sotong.go.kr)에 공모전 공고를 게시하고,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함[456].

□ 그런데 정작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사례 공모전을 공고할 때 자체 공모전 홈페이지[457]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접수를 진행함.

부정행위 검증은 1차 심사 통과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대국민 투표) 진행 시 표절 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공개검증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수상작 역시 자체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고 및 수상작 공개를 해야 한

456)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57) https://www.integritycontents.kr/

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2026년 공모전부터는 동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임[458].

□ 동 규정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권익위가 직접 발굴·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제도개선 권고 제도의 실효성과 대외적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향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모전 운영 시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에 공모전 공고를 게시하고, 수상작을 공개하는 등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스스로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458) 권익위는 2026년 공모전을 공모전 통합 관리시스템(소통24)에 공고하였음(6.22).

(3) 수의계약 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 미흡 및 후속 절차 미이행

□ 내역사업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사회 전반으로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미래세대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8,400만원 중 3억 4,400만원이 집행(89.6%)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6,000만원의 일반연구비(260-01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 5,000만원은 ‘교육대학교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일반연구비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교육대학교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50	A교대 산학협력단	’25.3.4.~ ’25.12.31.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차목 (학술연구)
2025년 청렴교육 현업적용도 조사 및 분석사업	10	㈜B업체	’25.5.28.~ ’25.12.19.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2) (소액수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459]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대학교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A교대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460] 중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근거로 하였다는 설명임.

○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에 청렴 관련 정규 교과과정 개설 추진 과정에서 A교대가 관심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양 기관간 체결한 MOU[461](’25.2.6.체결)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

4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4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461)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A교육대학교 업무협약서 제3조**

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동 조항에 근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A교대 산학협력단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A교대 산학협력단만 있는 경우 등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고[462],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 간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경쟁입찰을 배제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배한 것임.

○ 해당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제시된 과업은 국내 대학교 청렴교육 운영 현황 분석, 교육대학생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평가 등으로, 일반적인 정책연구·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성격으로 보임.

○ 따라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복수의 학술·연구기관, 대학별 산학협력단 등이 있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해당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한 것임.

□ 나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5항[463]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

(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4. 대학생 및 초등학생 청렴교육 콘텐즈 개발 지원 및 협력
5. 청렴교육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연구 및 협력

462) **용역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41301-949, '03.8.2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4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는 수의계약의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 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은 이에 해당함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계약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임[464].

□ 동 의무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이 수의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정 후속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464) 권익위는 해당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감사원 통지를 완료하였고(7.14), 교육원 계약 담당자를 공공조달 역량개발원 교육 파견(6.10~6.12)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

4.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465]: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개선을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신고제도 교육 등을 통한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4억 2,600만원 중 50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되고, 3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5,500	-	△74	5,426	5,066	-	360	4,994
- 신고자 보·포상금 등	5,425	-	△74	5,351	4,993	-	358	4,875
- 제도운영경비	60	-	-	60	57	-	3	84
- 공익신고제도 교육	15	-	-	15	16	-	△1	3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65) 세부사업: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1136-364)

2) 검토의견

□ 내역사업 “신고자 보·포상금 등” 사업은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 신고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53억 5,079만원 중 49억 9,329만원이 집행(93.3%)되고, 3억 5,749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내역사업 중 ‘보상금’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7억 3,841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2025년 신고유형별 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건, 천원)

구분	공익신고	부패신고	공공재정부정청구 등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청건수	838	674	-*	148	4
지급건수	33	145	76	3	0
예산액	1,117,800	3,424,000	527,988	30,000	6,000
지급액	379,386	3,389,479	796,765	6,364	0
집행잔액	**738,414**	**34,521**	**△268,777**	**23,636**	**6,000**

* 신청건수: 신고기관, 신고일 기준으로 부패신고와 공공재정간 전환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패신고’** 신청건수에 복지부정·공공재정부정청구 등 신청 건을 통합하여 관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466]’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

46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해당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67].

○ 공익신고법상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보전하고 나아가 공익신고를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조치임[468]을 고려할 때, 지급요건을 충족한 신고자에게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1. ~ 6. (생 략)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6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468)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면,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469].

□ 따라서,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처리현황 및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의 종결 사유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838건 중 지급 33건, 기각 23건, 종결은 741건으로 나타남.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 건수에는 특정인의 반복 신청 559건[470]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182건의 종결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 처리 현황>

(단위: 건)

신청 건수	처리 건수			
	지급	기각	종결	계
838(279)	33	23	741(182)	797(238)

*괄호는 특정인의 반복 신청 건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2025년 종결 사유별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종결 182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는 경

469)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197

470) '23년까지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신청하던 특정인이 '24년부터 공익신고 등으로 다수 신청
- 부패신고: ('21년)1,302건→('22년)2,194건→('23년)1,950건→('24년)4건→('25년)1건
- 공익신고: ('21년)0건→('22년)1건→('23년)8건→('24년)49건→('25년)559건

우(75건)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55건)로, 이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를 제외하면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24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5년 공익신고 보상금 종결사유 통계>

(단위: 건)

종결사유	건수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3
1의2.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의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3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24
3. 제3조의3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
4.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5. 위원회의 재보완 요구(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재보완 요구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2
6.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취소한 경우	10
7.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8. 제17조의2에 따른 연간 1인당 보상금의 지급건수를 초과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9. 보상금 지급 신청인이 명백히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경우	55
10. 그 밖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 및 수사중, 수입회복 없음, 동일 건의 반복신청·민원사항, 특정인(서OO)*의 신청 건 등	634 (75)
합계	**741 (182)**

*괄호는 특정인의 반복 신청 건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관계의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신고자가 이를 직접,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관계 미확정 등을 이유로 종결되는 사례를 일부 감소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익신고자는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렵고 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471]을 놓치거나 법률관계 미확정을 이유로 각하 처리되는 사례[472]가 발생하고 있음.

□ 관련하여, 권익위가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수입의 회복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규정[473]하고 있으나,

---

47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2) 2014년 인천 요양병원 원무과장이 병원장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0여억원 환수처분 등을 이끌어 내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신청하자 '법률관계 미확정'을 이유로 종결하였고, 이후 재신청하자 '신청기한 경과'를 사유로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을 하였음('21.9.7. SBS뉴스 "공익신고로 30억 넘게 환수...보상금은 못 줘").

47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동 표준안은 각 기관의 자체 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권고안으로, 각 기관의 해당 규정 마련 및 실제 통지 이행 여부를 권익위가 별도로 점검·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신고자가 처분결과나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를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체 규정 제정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통지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474].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공기관이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상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74)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등의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제2216128호)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5.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475]: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신고 접수·처리 및 채용실태 조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전담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청탁금지제도운영 사업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운영’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3년 예산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476], 2025년 예산액 1억원 중 2,000만원(20%)을 내역변경 및 자체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8,100만원 중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5%)되고,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00	-	△20	81	62	-	1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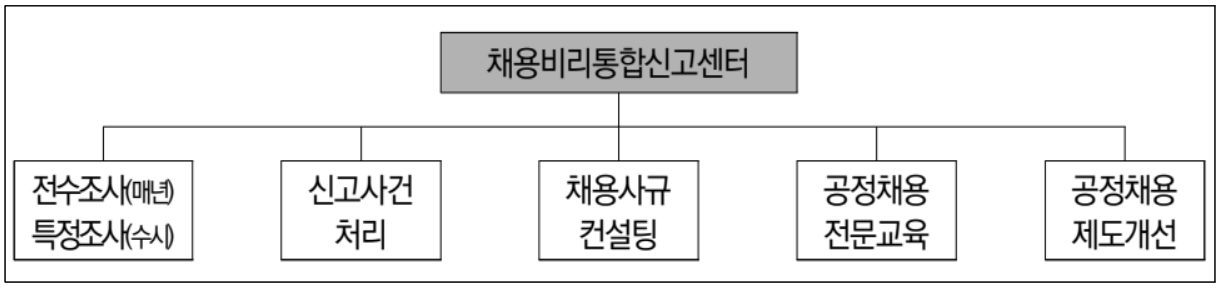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75) 세부사업: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1136-369)

476)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였으나, 2023년 1월 채용비리 적발 외 사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위원회 총액인건비팀으로 설치함.

□ 동 센터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따라 출범하였는데, 상시적으로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채용비리 사후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사규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교육, 제도개선 등 사전예방 기능을 확대하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요 업무>



(자료: 2025 국민권익 백서, p.75)

2) 검토의견

(1)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2025년에는 931개[477]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6년에는 1,5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중[478]에 있음.

---

477) 전체 공직유관단체(총 1,423개)를 대상으로 필수(617개)·재량(806개)으로 구분하여 조사
* 재량조사: 경영평가 미대상 기관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단, 재량조사 대상 기관도 3년 내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478) 조사기간: '26년 2월~10월(9개월)

○ 전수조사는 감독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되,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은 기관,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중 징계 이상 적발 기관 등 일부 기관[479]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21년 76건에서 2025년에는 34건으로 감소하여 제도 운영과 채용 비리 예방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480]>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채용비리	수사의뢰	5	4	2	-	1
	징계요구	71	43	42	39	33
	소계	**76**	**47**	**44**	**39**	**34**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799	774	823	822	79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단순한 적발 건수 감소만으로 채용의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의 정확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

479) 2025년 기준 조사 완료 931개 기관 중 감독기관 주관 905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6개 기관

480) 채용비리 및 업무부주의 구분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채용비리	수사의뢰	○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사항
	징계요구	○ 직원 채용 과정(채용공고, 심사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에서 합격자 혹은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 위반 사항
업무부주의		○ 경미한 절차 위반, 규정적용 단순오류 등 경미한 업무부적정 사항

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사건은 총 12건이었으나, 이 중 기소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10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었음(1건 수사중). 수사의뢰 사건 대부분이 불기소로 종결된 점을 고려할 때, 조사 단계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수사의뢰 기준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의뢰 사건 12건 중 실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7건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별개로 기관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 이행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단위: 건)

구분	수사의뢰	수사의뢰 결과			후속조치 (징계)
		기소	불기소	수사중	
2021년	5	1	4	-	2
2022년	4	-	4	-	3
2023년	2	-	2	-	1
2024년	-	-	-	-	-
2025년	1	-	-	1	1
계	**12**	**1**	**10**	**1**	**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는 행정조사로서 조사 대상자의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실태조사 결과 민간인 또는 다른 기관 직원과 유착 등 범죄행위의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고,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시 유의사항 배포·설명회 개최 등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징계 등 후속조치는 개별 기관별로 자체 징계 기준 등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전수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며, 채용비리 근절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실태 전수조사의 기준과 조사 역량을 보완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등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신속 처리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를 연중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신고사건 처리는 증거 확인, 신고자 면담 외에도 관계기관 현지 출장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내여비(220-01목)를 편성·집행하고 있음.

○ 2025년에는 신고사건 147건을 접수하고 174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출장은 7건 실시되어, 2023년 27건과 2024년 38건 대비 출장 조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국내여비 예산액인 4,200만원 중 47.6%인 2,000만원을 타 세부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내역변경 등의 재원으로 사용함.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접수 ·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사건접수(배정)	처리			
		계	이첩	송부	종결·기각
2023년	131	116	17	32	67
2024년	129	91	5	38	48
2025년	147	174	7	44	1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내출장 건수 및 국내여비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신고사건		실태조사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2023년	27	6	322*	124
2024년	38	4	54	12
2025년	7	1	53	10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 조사단' 출장 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 현지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고 채용서류 검토가 중점이 되는 사안이 있으며, 최근 업무량 증가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 그러나 비대면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 중 종결 처리된 사건을 제외한 이첩·송부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2023년 42일 → 2024년 72일 → 2025년 111일)[481].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첩 · 송부 건 평균 처리기간>

구분	이첩·송부(건)	평균 처리기간(일)
2023년	49	42
2024년	43	72
2025년	51	11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신고사건 관계자들의 신분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라는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인력의 적정한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신고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81) 권익위는 2024년에 약 8개월 간 전담 조사인력이 1명으로 감축 운영되어 신고사건 처리기간이 지연되었고,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사건이 처리되는 등의 사유로 평균 처리기간이 길게 집계되었다는 설명임.

(3)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등 채용비리 재발 방지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사후점검뿐 아니라 채용비리 예방을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 규정 개선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리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채용비리 발생 방지에 기여하고 있음.

○ 컨설팅은 기관에서 제출한 채용규정이 법령 및 상위지침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분석하여 개선안을 통보하고, 조치기한 6개월 이내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 업무 흐름도>

사규 컨설팅 계획수립 및 시달	➡	기관별 자체 채용규정 제출	➡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통보	➡	개선결과 제출 * 6개월 이내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에는 354개 기관,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2026년 5월 기준 이행률은 2023년 78.5%, 2024년 77.1%, 2025년 51.7%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2025년 11월 기준 이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

으나[482],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두차례 걸쳐 이행 독려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회신 기관의 절반 가량이 6개월 이후 추가로 이행 결과를 회신하면서 이행률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행 독려 등 사후관리가 실제 이행률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선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직유관단체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 이행 결과>

(단위: 건, %)

구분	채용 규정 컨설팅(A)	조치 결과 회신(B)	회신율(B/A)
2023년	354	278	78.5
2024년	402	310	77.1
2025년	402	208	51.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6개월 이후 조치 결과 회신 기관 현황>

컨설팅 실시연도	6개월 이후 조치 결과 회신 기관	
2023년	128개	46.0%
2024년	151개	48.7%
2025년	21개	10.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82) 2025년 11월 기준 이행률은 2023년 47.2%, 2024년 44.5%, 2025년 12.7%였음.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규 컨설팅 반영 결과를 6개월 이내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회신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관 자율적으로 반영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최근 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된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연속 매년 적발된 기관이 43개, 4회 적발된 기관 90개, 3회 적발된 기관이 169개로 동일한 기관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채용 규정 개선 컨설팅이 실제 채용절차 개선과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충실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2021년~2025년 전수조사 시 반복 적발 기관 현황>

적발 횟수	5회	4회	3회	2회
기관 수	43개	90개	169개	308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관련 규정 개선 컨설팅을 하는 취지는 엄정한 채용 관련 규정의 미비가 채용 비리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컨설팅 후 그 이행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컨설팅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안 이행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 적발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채용비리 예방 및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 행정심판운영[483]: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심판운영”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지원,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담당자 교육, 모의행정심판경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억 4,300만원 중 13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8%)되고, 2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은 비상임위원 수당·국선대리인 사례비·경상경비 지급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억 2,700만원 중 8억 2,000만원을 집행(집행률 88.5%)하고 1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모의행정심판경연”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00만원 중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

---

483)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1137-370)

<2025회계연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심판운영	1,543	-	-	1,543	1,324	-	219	1,344
- 행정심판운영지원	922	-	5	927	820	-	107	825
- 모의행정심판경연	12	-	△1	11	11	-	-	1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검토의견

(1)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방식 개선 필요

□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총 1,200만원으로, 비목별로는 일반수용비(210-01) 600만원, 국내여비(220-01) 200만원, 사업추진비(240-01)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해당 사업은 예산이 최초 편성된 2018년을 제외하고는[484] 해마다 유사한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사업수행이 정착화된 2022년부터는 매년 같은 비목에 같은 금액이 편성되고 있음.[485]

484) 2018년의 경우 대회우수자를 대상으로 안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일용임금(4,500만원)이 편성되었었음.

485) 2021년까지는 대회 우수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일반수용비 6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사업추진비 4백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 동 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후 매년 일정 규모의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비목의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임.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 결산 내역(2019년~2025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집행액 (B)	불용액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2019	16	△2	13	1	3	81.25
2020	18	-	14	4	4	77.78
2021	18	-	16	2	2	88.89
2022	12	△1	9	2	3	75
2023	12	△4	8	-	4	66.67
2024	12	△2	10	-	2	83.33
2025	12	△1	11	-	1	91.67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경연 사업 비목별 집행 내역(2021년~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일반수용비	6	7	6	7	6	7	6	7	6	9
국내여비	2	1	2	-	2	-	2	2	2	1
사업추진비	4	2	4	2	4	1	4	1	4	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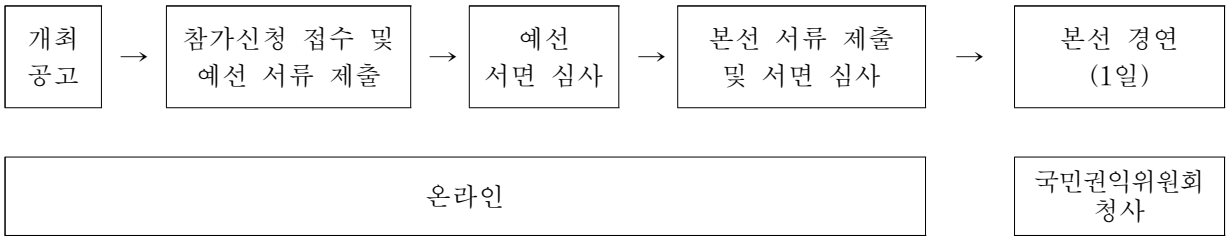
□ 동 내역사업의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 비목의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지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같은 비목에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임.

○ 동 내역사업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참가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대회는 ① 참가자의 온라인 참가 신청 및 예선 서류 제출 → ② 예선 서면 심사 → ③ 본선 경연대회(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 순으로 진행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회 준비 및 진행 소모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 등 일반수용비로 지출할 비용과 참가자 간담회 등을 위한 사업추진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비목의 예산편성 필요성이 낮은 구조임.

- 특히, 동 대회는 이미 10회의 대회가 개최되어 그 진행방식이 정착화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업무협의, 출장 등의 지출원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가 현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진행 방식>



○ 2025년에는 편성된 예산 중 약 91.67%가 집행되어, 예년에 비하여 집행액 및 집행률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집행률 상승이 지출 내용의 변화 또는 지출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편성상 문제점 및 편성 방식 변경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2025년 집행액 및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전년 대비 일반수용비 지출이 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변화는 심사위원 인원 및 수당을 늘렸기 때문이지 다른 지출원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여비(집행률 50%) 및 사업추진비(집행률 25%)의 집행 부진은 2025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음.

<전년 대비 심사위원 수당 변화>

(단위: 명, 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합계	인원	수당		인원	금액
예선	180	6	30	150	3	50
본선	150	3	50	350	7	5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국내여비의 집행액의 경우 심사위원 교통비 및 숙박비에 사용된 것으로, 그 중 약 86.3%가 2명의 심사위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심사위원이 대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인원이 아니라면 국내여비를 현재 금액만큼 편성할 필요가 낮은 것으로 보

임.[486]

<본선 심사위원 여비 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성명	여비(국내여비)		
	계	교통비	숙박비
A	11.6	11.6	-
B	37	37	-
C	37	37	-
D	**445**	258	187
E	37	37	-
F	**271.4**	84.4	187
G	-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을 종합하면, 모의행정심판경연 내역사업은 사업의 내용 및 특성, 정착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여비 및 사업추진비가 편성될 필요가 낮고, 그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집행 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경연의 예산을 사업의 특성과 지출 구조에 부합하도록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그 편성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대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경우 대회 시상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비목을 제외하면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사업추진비의 편성 금액은 동 사업의 50% 수준임.[487]

---

48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236.)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2) 환경 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9억 2,200만원으로, 이 중 2억 4,900만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210-02)으로 편성 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각종 서면 등의 송달 및 통지[488] 등을 위한 우편·통신요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편성되는 것임.

□ 그런데, 최근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집행액은 약 1억 9,000만원, 집행률은 76.3%로, 동 비목의 집행액과 집행률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집행액이 급증하였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489]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4년과 2025년에는 특히 집행이 부진하였음.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2021	249	236	94.7
2022	249	232	93.1
2023	249	277	111.2
2024	249	191	76.7
2025	249	190	76.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87) 내역사업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헌법재판소): 일반수용비 17백만원, 사업추진비 2백만원, 포상금 24백만원

488)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서, 답변서 송부, 심리기일·심리결과 재결서 등의 송달 및 통지

489)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3.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 건 이상 청구한 ○씨에 대한 행정심판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이로 인한 우편요금은 3년간 7,200만원이었음(국민권익위원회 2024. 3. 18. 보도자료 참조)

□ 동 비목의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동 비목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인 우편요금의 집행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합계	우편요금	통신요금
2021	236,180	229,878	6,302
2022	232,092	224,473	7,619
2023	276,633	266,785	9,848
2024	191,340	180,648	10,692
2025	190,933	182,028	8,90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에는 ①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운영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온라인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에 따라 그 통지 방법이 상이하고, 그 중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우편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의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하게 됨.

○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이 송달 방법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우편을 통하여 송달이 이루어지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서면에 대한 송달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지는 문자 등 통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됨.[490]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단가>

구분	우편요금	통신요금		
		SMS	LMS	카카오톡
건당 단가	50g 520원 (50g 증가 시 120원 추가)	8.03원	26.4원	4.95원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최근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 방식을 살펴보면, 온라인을 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의 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서면을 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의 수는 감소하였음.

490) 「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청구 방식별 행정심판 접수 건수>

(단위: 건, %)

연도	계	온라인 청구	서면 청구	전체 사건 대비 온라인 청구 비중
2021	39,722	18,061	21,661	45.5
2022	45,776	27,319	18,457	59.7
2023	57,279	41,388	15,891	72.3
2024	43,932	28,577	15,355	65.0
2025	45,309	28,587	16,722	6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고비용이 소요되는 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건수는 감소한 반면, 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건수는 증가하였음.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통지 방법별 통지 건수>

(단위: 건, %)

연도	계	우편 통지	통신 통지	전체 통지 건수 대비 통신 통지 비중
2021	290,443	86,632	203,811	70.2
2022	327,555	82,756	244,799	74.7
2023	469,474	101,380	368,094	78.4
2024	355,924	66,430	289,494	81.3
2025	386,951	60,074	326,877	84.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즉, 행정심판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집행액 감소는 행정심판 청구 방식 변화에 따른 지출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비상임위원들이 그동안 우편으로 송부되어 온 심사자료를 통하여 안건을 검토하였던 방식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e-위원시스템)[491]한 환경 변화 등도 우편요금 감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 방식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 변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491) 비상임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를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1.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492)]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을 통하여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7억 1,400만원 중 36억 6,900만원(98.8%)이 집행되었고, 4,500만원(1.2%)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714	3,714	-	-	3,714	3,669	-	45	3,71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1,240	1,240	-	-	1,240	1,213	-	27	1,240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650**	**650**	**-**	**-**	**650**	**650**	**-**	**-**	**650**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	2,474	2,474	-	-	2,474	2,457	-	17	2,47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92)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1031-301)

2) 검토의견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의 규모·대상 재검토 및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은 주체로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의 접근배제(삭제 및 검색 제한)를 대행 및 지원하는 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으로, 2025년 예산현액 6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동 사업을 통한 서비스(지우개 서비스)는 현재 30세 미만 국민이 19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용역사업자)이 게시판 운영 사업자 등에 접근배제를 요청하거나 신청자에게 삭제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사업 운영 절차 〉

<table>
<tr><th>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서비스 신청·접수
(국민→KISA)</td><td>◦ 신청자격: 30세 미만 국민 누구나
◦ 지원대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 '잊힐 권리' 페이지에서 신청</td></tr>
<tr><td>지원여부 및
지원방법 결정
(KISA)</td><td>◦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매칭하여 게시물 유형별 조치방법, 자기게시물 입증에 필요한 보완 필요사항 등 상담·지원
<table>
<tr><th>구분</th><th>게시물 유형</th><th>조치방법</th></tr>
<tr><td>유형1</td><td>• 탈퇴, 계정정보 분실, 게시물 삭제 권한 없음 등으로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어 접근배제 요청</td><td>접근배제</td></tr>
<tr><td>유형2</td><td>• 본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제3자가 작성하거나, 복제한 경우</td><td>상담 지원</td></tr>
<tr><td>유형3</td><td>• 본인 작성한 게시물이나 계정 등을 직접 삭제하기 원하는 경우로 계정(SNS프로필 포함)에 대한 조치 방법(복구, 삭제), 게시물 삭제 방법 등을 상담 및 안내받는 경우</td><td>상담 지원</td></tr>
<tr><td>유형4</td><td>• 본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이 제3자에 의해 불법유통되고 있는 경우</td><td>상담 지원</td></tr>
</table></td></tr>
</table>

절차	주요내용
접근배제 등 요청 (KISA→사업자)	○ 신청인으로부터 접근배제 등의 요청 권한을 위임받은 **KISA가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신청인을 대리하여 접근배제 등 신청** ○ 접근배제 등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접근배제 등 조치 실시**
모니터링 및 결과안내 (KISA→국민)	○ 접근배제 등 요청 이후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완 절차 이행** ○ 신청인이 신청 시 선택한 방법(문자, 이메일 등)으로 **처리결과 통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 처리 및 접근배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사업 도입 당시 인력 29명이 1인당 하루 평균 3건을 처리하여 월 1,740건, 연간 2만 880건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실제 처리(모든 상담 건수 포함) 건수는 2023년(8개월분) 1만 1,487건, 2024년 1만 5,665건, 2025년 1만 701건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우개 서비스의 연도별 처리 내역 〉

(단위: 건, 명)

연도	접근배제 요청	임시조치 상담 (제3자 게시물)	직접 삭제	URL 부존재	개인 정보 미포함	신청 취소	보완 기간 만료	기타 상담	합계
2023년	2,021	875	2,290	298	2,222	192	2,235	1,354	11,487 (3,766)
2024년	4,839	1,080	3,249	94	2,068	288	2,737	1,310	15,665 (4,395)
2025년	1,819	474	2,782	99	2,903	183	1,327	1,114	10,701 (2,597)

주 : ( )는 신청인 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특히 실질적인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접근배제 요청 건수는 2024년 4,839건 대비 2025년 1,819건(△62.4%)으로 감소하였고, 처리완료 건수는 4,231건 대비 1,699건(△59.8%)으로 감소하였음. 2023년에는 8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처리완료 건수가 1,785건으로 2025년보다 많았음.

〈 지우개 서비스의 연도별 조치 결과 〉

(단위: 건)

연도	접근배제 요청	처리완료	처리기각
2023년	2,021	1,785	236
2024년	4,839	4,231	608
2025년	1,819	1,699	12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는 사업 시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과거 게시물에 대한 누적 삭제수요가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수요 추이와 실제 업무량을 토대로 인력 및 사업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가 직접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493]를 작성·배포하여,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즉, 동 사업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접근배제요청권을 부여한다기보다는 기존 권리의 행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상담·대행[494]하는 성격의 사업임.

○ 따라서 직접 권리 행사가 가능한 성인에 대해서까지 아동·청소년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495][496].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에 따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요 플랫폼 사업자(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

49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 2024. 12.
494)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용역사업자)이 신청인에게 위임받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방식 또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안내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함.
49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상대적으로 권리 행사 역량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음.
49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최초 사업 추진 시에는 신청 자격을 24세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나, 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신청 자격을 30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음.

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서비스 신청 및 처리 건수는 16세 1,910건, 15세 1,488건, 14세 1,437건 등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나, 20~29세의 경우에도 2,899건으로 전체 1만 701건의 27.1%를 차지하고 있음.

〈 지우개 서비스의 연령대별 처리 현황 〉

(단위: 건, 명)

연도	11~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이상	계
2023년	146	1,292	1,702	1,232	1,035	925	591	4,564	11,487 (3,766)
2024년	638	2,392	2,494	2,757	2,262	1,328	518	3,276	15,665 (4,395)
2025년	585	1,437	1,488	1,910	1,253	782	347	2,899	10,701 (2,597)

주 : ( )는 신청인 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셋째, 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지원에 집중된 현행 사업 지원 체계를 제3자 게시물 등 정보주체가 직접 조치하기 어려운 분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3자 게시물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의 글·사진·영상 등을 게시하는 셰어런팅,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난·비방 등을 게시하는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되며, 현행 사업에서도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497]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2025년 제3자 게시물 관련 임시조치 상담은 474건이었음.

497) 제3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하여 최대 30일 동안 해당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 도입 당시 향후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배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주체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접근배제 지원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자기게시물은 본인 스스로 플랫폼에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제3자가 게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직접 삭제할 권한 자체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 게시물 중 셰어런팅, 사이버폭력, 자기게시물의 무단 복제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유형을 구분하여 현행 법령상 임시조치 등이 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단순 상담 이상의 임시조치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그 외 유형에 대해서는 플랫폼과의 협력, 제3자와의 협의 대행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접근배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498]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현액 5억 3,100만원 중 4억 9,100만원(92.5%)이 집행되었고, 4,000만원(7.5%)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31	531	-	-	531	491	-	40	1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도 중에 직접수행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499]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출연금 예산이 일반용역비(4억 2,000만원), 일반연구비(7,000만원), 일반수용비(4,100만원)로 변경되어 집행되었음.

498)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1031-304)
499)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과도한 출연사업 비중을 축소할 필요성 제기

〈 2025년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편성		2025년 예산 전용 후				
비목	예산	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내용
사업출연금 (350-02)	531	일반수용비 (210-01)	41	11	30	- 인쇄 및 회의수당
		일반용역비 (210-14)	**420**	**417**	**3**	**-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 용역** - 개인정보보호 기술 전시회 부스 설치
		일반연구비 (260-01)	70	64	6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개선방안 연구
		계	531	491	4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검토의견 :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에 대한 주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이전까지는 동 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 개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직접 지원하였으나, 2025년에는 용역을 통해 기술개발 자문, 컨설팅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8월에 수행기관(서울테크노파크)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 추진 경과 〉

일자	주요 내용
2025. 1. 16.	출연사업의 직접수행 전환 및 예산 내역변경
2025. 6.	**사업계획 확정**
2025. 8. 25.	**수행기관(서울테크노파크)과 계약 체결**
2025. 9. ~ 12.	기술개발 컨설팅 및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상시 운영
2025. 11.	기술개발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지원 기업 선정
2025. 12.	사업 종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과의 계약이 지연되면서 기술개발 자문,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이 미흡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을 통한 월별 기업에 대한 자문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14건 중 81건(71.1%)이 1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10회 이상의 자문을 받은 5개 기업[500]의 경우 11~12월 중 1~3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500) 당초 서울테크노파크의 1, 2차 기업모집 공고에 따르면 기업별 최대 3회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3차 모집 공고(11.20.)부터 기업별 최대 10회까지 지원

〈 2025년 월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성능 평가·검증 자문 실적 〉

(단위: 건)

구분	기술개발	시제품	계	비고
10월	12	-	12	1건당 자문료 : 30만원
11월	21	-	21	
12월	**59**	**22**	**81**	
합계	92	22	114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 2025년 자문 횟수 상위 5개 기업의 자문 기간 〉

(단위: 건)

구분	기술개발	시제품	계	자문 기간
A사	10	3	13	2025. 12. 4. ~ 12. 19.
B사	10	-	10	2025. 11. 20. ~ 12. 8.
C사	10	-	10	2025. 12. 19. ~ 12. 26.
D사	10	-	10	2025. 12. 9. ~ 12. 26.
E시	-	10	10	2025. 12. 11. ~ 12. 24.
계	40	13	53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또한, 컨설팅(기업별 최대 500만원 지원) 및 시제품 실증(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 지원을 위한 기업 선정 통보는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실제 지원이 가능하였던 기간은 12월 말까지 1개월에 불과하였음.

〈 2025년 컨설팅 및 시제품 실증 지원기업 선정 경과 〉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서류접수	9. 19. ~ 10. 15.	10. 21. ~ 11. 5.
서면평가	10. 20. ~ 10. 24.	11. 6. ~ 11. 10.
발표평가	10. 31.	11. 14.
선정통보.	**11. 10.**	**11. 24.**
선정결과	컨설팅 3개사 시제품 실증 2개사 선정	컨설팅 4개사, 시제품 실증 2개사 선정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판로개척 지원의 경우에도 컨설팅 및 실증 지원 기업이 최종 선정된 직후인 12월에 2회의 소규모 단발성 세미나 개최에 그쳤음.

〈 2025년 판로개척 지원 행사 개최 현황 〉

(단위: 건)

행사명	일시	참여인원	행사 내용
판로개척-투자유치 역량강화 세미나	2025. 12. 3. (13:00~17:00)	34명	- 모의 IR 발표 - 상담 (15:00~17:00)
개인정보보호 테크비즈 파트너링	2025. 12. 10. (13:00~17:00)	38명	- 개인정보보호 이슈 및 공공조달 진입 전략 안내 등 - 상담 (15:50~16:50)

(자료: 2025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재구성)

□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자문, 컨설팅 및 실증은 기술적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대안을 검토·반영하여 그 결과를 다시 확인·보완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판로개척 지원도 기업에 대한 단순 투자처 및 수요처 소개에 그치기보다는, 기술개발 자문, 컨설팅 및 실증 지원과 연계하여 일정 수준의 사업화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 및 투자 유치 전략을 충분히 수립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025년에는 사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단기간에 집중·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연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수행기관 선정과 참여기업 지원에 필요한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일정을 수립함으로써 사업화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501].

501) 동 사업 중 일반용역비를 통한 사업화 지원은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유사중복)으로 2026년 예산에는 미반영됨.

3.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502]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감독기관과 협력하고, 해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3억 7,600만원 중 23억 5,500만원(99.1%)이 집행되었고, 2,100만원(0.9%)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2,376	2,376	-	-	2,376	2,355	-	21	1,442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1,746	1,746	-	-	1,746	1,746	-	-	571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315**	**315**	**-**	**-**	**315**	**315**	**-**	**-**	**552**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지원	315	315	-	-	315	294	-	21	319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내역사업 중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동등성 인정 제도[503] 및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502)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1031-305)

503) 동등성 인정 : 역외의 국가(국제기구)가 국내(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두고 있는지 확인·인정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임. 동등성을 인정받은 대상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역내(국내) 이

(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504]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1억 7,9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100만원(0.1%)이 불용되었음.

2) 검토의견: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비의 기본경비성 경비 집행 주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규제 대응' 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505]과 관련된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506]의 운

전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이전 및 처리가 가능함.

504) 국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Global CBPR) :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경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 인증제도(2025년 6월 2일부터 공식 시행)로서,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APEC CBPR을 전 세계로 확장한 제도임.

50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0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영을 지원하고 있음.

○ 국외이전전문위원회[507]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에 대한 평가, ② 동등성 인정을 위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현재는 동등성 인정(EU)을 위한 검토 기능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평가 등에 대하여 검토한 사례는 없음(2026년 7월 말 기준).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관련 예산은 위원 수당 등 회의체(연 12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회의장 임차(연 4회)를 위한 임차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3,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의 연도별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 예산
	예산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	예산	결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체 운영	34	△8	26	22	35	35	25
- 일반수용비	18	-	18	18	19	19	20
- 임차료	16	△8	8	4	16	16	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그런데, 2026년 7월 기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3회, 2025년 2회, 2026년 0회로 총 5회에 불과하며,

507) 2024년 1월 30일 최초 구성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1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학계 2명, 법조계 3명, 산업계 2명, 시민단체 1명, 기타(한국인터넷진흥원) 1명

특히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한 사례는 2025년 12월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결과 공유를 위한 회의 1건(임차료 : 1.9백만원)임.

〈 국외이전전문위원회 2024년 및 2025년 회의 개최 실적 및 장소〉

일시	장소	주요 안건
2024. 1.	**개인정보위 청사**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및 운영세칙 의결
2024. 10.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여부 중간 평가
2024. 11.	**개인정보위 청사**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평가 의결
2025. 7.	**서면**	유럽연합(EU) 동등성 인정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서면 검토
2025. 12.	**더플라자**	-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 결과 공유, - 국외이전 제도개선 방향 검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른 집행잔액 중 대부분을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일반수용비의 경우 외국어 회의 지원 및 AI 서비스 구독 등 국제협력담당관 운영 경비 및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508] 운영계획서 인쇄비 지급 등에 1,270만원이 집행되었고,

508) 2025년 제47차 GPA 서울 총회 개최 (내역사업명: '국제 컨퍼런스 운영'(14억원))

임차료의 경우 12월 국제협력담당관실 워크샵[509] 등에 1,03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 2025년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의 목적 외 집행 사례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집행액	주요 내용
2024	일반수용비	10.4	- 문서 번역, 외국어 회의 지원 및 AI 서비스 구독
2025	일반수용비	8.4	- 외국어 회의 지원 및 AI 서비스 구독
		4.3	- GPA총회 운영계획서 인쇄비 지급
		12.7	합계
	임차료	3.7	- 국외출장 계기 차량 임차
		6.6	- 국제협력담당관실 워크샵
		10.3	합계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 예산을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성이 낮은 기본경비성 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09) 전문가의 GDPR 주요 집행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최신 판례 등 관련 세미나 포함

4.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510]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 가명정보 처리 및 안전성 검증,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6,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3,564	3,564	-	-	3,564	3,564 [3,474]	-	-	6,456
- 가명정보 제도 운영	391	391	-	-	391	391 [371]	-	-	391
- 가명처리 기술 지원	2,137	2,137	-	-	2,137	2,137 [2,102]	-	-	5,665
-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1,036	1,036	-	-	1,036	1,036 [1,001]	-	-	4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① 가명정보 제도 운영, ② 가명처리 기술 지원, ③ 가명정보 활용 지원 시스템 운영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510) 세부사업: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1032-302)

2) 검토의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

□ ‘가명정보 제도 운영’ 내역사업에서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함)의 신규 지정·재지정 심사 및 관리·감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식별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음.[511]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51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51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한된 목적 하에 안전하게 2차

---

51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51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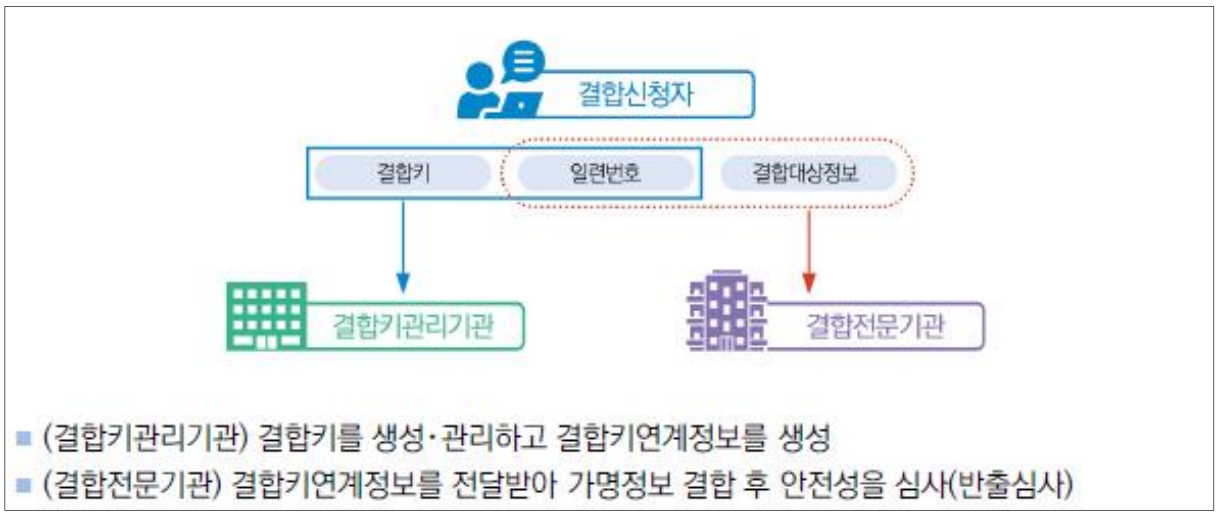
5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생 략)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생 략)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생 략)
제28조의7(적용범위) (생 략)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 가명정보 제도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개인식별 위험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514)515)]

- 가명정보 결합은 일반적으로 동일인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결합키를 안전한 방식으로 생성하고, 해당 결합키를 기반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한 뒤, 결합키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단일 기관이 결합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처리하지 않도록 역할을 분리하여 결합 과정에서 누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설계한 것임.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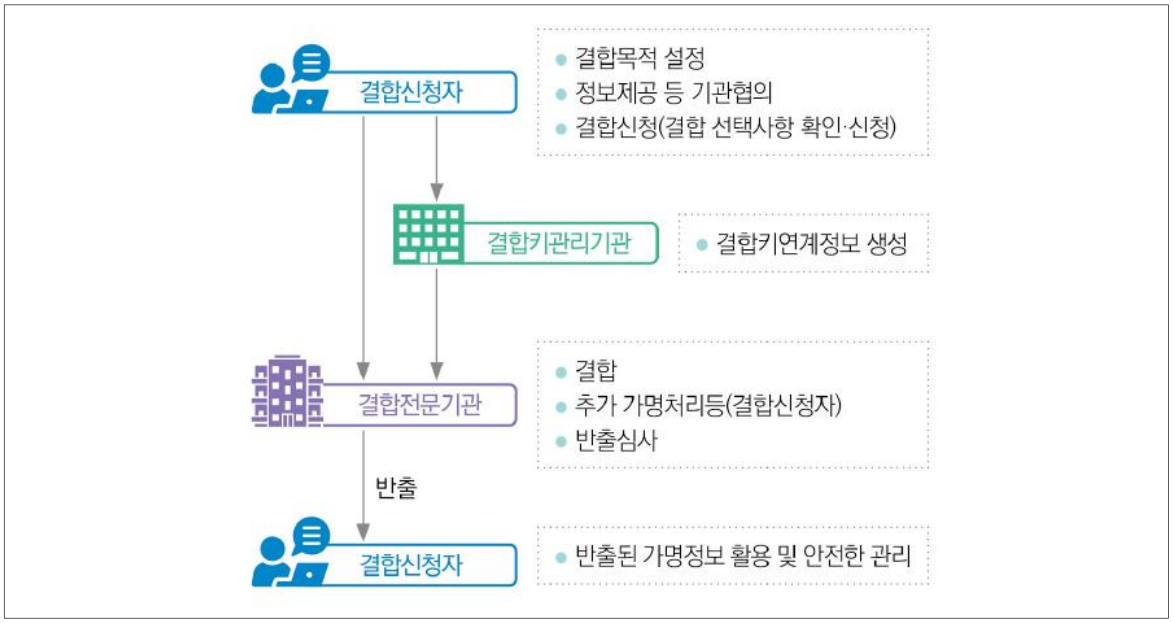
(자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51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515) 단일 기관·기업 내 부서 간 결합 등 동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결합 수행이 가능함.

○ 구체적인 가명정보 결합 절차는 ① 결합신청자의 결합 신청, ② 결합키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③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④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안전한 관리 단계로 진행됨.

<가명정보 결합 절차>



(자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결합키관리기관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지원을 위해 결합키 생성 협의 및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관련 고시[516]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반출심사를 거쳐 결합정보의 반출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관의 상황에 따라 가명처리 컨설팅 및 결합·반출정보의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16)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결합키관리기관"이란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그런데 2020년 8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된 후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23개였던 결합전문기관은 2024년 21개, 2025년 19개, 2026년 6월말 기준 18개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신규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도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현황>

(단위: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말
신규지정	5	14	3	2	1	-	-
재지정	-	-	-	5	10	2	-
지정취소	-	-	-	1	3	2	1
합계	5	19	22	23	21	19	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현재까지 지정이 취소된 결합전문기관은 총 7개로, 이 중 4개 기관은 지정취소 요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었고, 3개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로 지정이 취소되었음.

- 이 중 6개 기관이 민간기관이며, 특히 지정취소를 요청한 4개 기관은 모두 민간기관으로 나타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

연번	지정부처	지정기관	소재지	분류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취소 등 사유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강원 원주	공공기관	2020. 10. 29. (2023. 10. 29.)	-	
2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 원주	공공기관	2020. 10. 29. (2023. 10. 29.)	-	
3		국립암센터	경기 고양	공공기관	2021. 9. 1. (2024. 9. 1.)	-	

연번	지정부처	지정기관	소재지	분류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취소 등 사유
4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공공기관	2020. 11. 24. (2023. 11. 24.)	-	
5		한국국토 정보공사	전북 전주	공공기관	2023. 11. 1.	-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가데이터처 (舊. 통계청)	대전 서구	부처	2020. 11. 27. (2023. 11. 27.)	-	
7		삼성SDS	서울 송파	민간	2020. 11. 27. (2023. 11. 27.)	-	
8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서울 마포	공공기관	2021. 6. 30. (2024. 6. 30.)	-	
9		롯데이노베이트	서울 금천	민간	2021. 6. 30. (2024. 6. 30.)	-	
10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서울 광진	공공기관	2022. 4. 11. (2025. 4. 11.)	-	
11		국세청	서울 종로	부처	2022. 4. 21. (2025. 4. 21.)	-	
12		한국도로 교통공단	강원 원주	공공기관	2024. 2. 29.	-	
13		케이씨에이	서울 서초	민간	2021. 6. 30.	2024. 6. 30.	지정 취소요청
14		한국정보인증	경기 성남	민간	2021. 11. 15.	2024. 6. 30.	지정 취소요청
15		신세계아이앤씨	서울 중구	민간	2021. 12. 13.	2023. 5. 12.	지정 취소요청
16		LG CNS	서울 강서	민간	2022. 7. 5.	2025. 7. 4.	유효기간 만료
17		CJ 주식회사	서울 중구	민간	2023. 2. 2.	2026. 2. 1.	유효기간 만료
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경기 성남	공공기관	2021. 1. 8. (2024. 1. 8.)	-	
19		㈜더존비즈온	강원 춘천	민간	2021. 1. 8. (2024. 1. 8.)	-	
20		SK주식회사	경기 성남	민간	2021. 1. 8. (2024. 1. 8.)	2025.10.28.	지정 취소요청
21		비씨카드 주식회사	서울 중구	민간	2021. 10. 6. (2024. 10. 6.)	-	
22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서울 중구	공공기관	2021. 10. 6. (2024. 10. 6.)	-	
23	교육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대구 동구	공공기관	2021. 6. 1. (2024. 6. 1.)	-	
24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전KDN	전남 나주	공공기관	2021. 9. 6. (2024. 9. 6.)	-	

연번	지정부처	지정기관	소재지	분류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지정 취소일	지정취소 등 사유
25	행정안전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대전 유성	부처	2021. 12. 28.	2024. 12. 27.	유효기간 만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 결합전문기관의 경우 지정 기준 유지를 위해 전담인력·보안시설 및 시스템 운영 등 지속적인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지정기준 유지비 대비 결합업무를 통한 수익·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기관이 결합전문기관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명정보 결합 수요와 참여 유인이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실적은 2021년 13건에서 2022년 24건, 2023년 35건, 2024년 39건, 2025년 44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관별 실적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결합전문기관별 가명정보 결합 실적>

연번	지정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월말	합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2	4	5	6	-	18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5	9	16	17	4	54
3	국립암센터	-	-	3	2	3	1	9
4	한국도로공사	1	2	-	-	2	-	5
5	한국국토정보공사			-	-	-	-	-

연번	지정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월말	합계
6	국가데이터처	2	-	2	3	-	-	7
7	삼성SDS	3	1	-	-	1	-	5
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	-	2	-	2
9	롯데이노베이트	-	1	-	-	-	-	1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4	4	3	-	11
11	국세청		2	2	2	4	-	10
12	한국도로교통공단				-	-	-	-
13	케이씨에이	-	-	-	-			-
14	한국정보인증	-	1	-	-			1
15	신세계아이앤씨	-	-	-				-
16	LG CNS		-	2	1	-		3
17	CJ 주식회사			-	1		-	1
18	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5	4	3	5	-	20
19	㈜더존비즈온	-	-	-	-	-	-	-
20	SK주식회사	-	1	3	-	-	-	4
21	비씨카드 주식회사	-	1	-	-	-	-	1
2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3	1	1	-	-	5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	1	-	1
24	한전KDN	-	-	1	1	-	-	2
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	-	-	-	-
합계		**13**	**24**	**35**	**39**	**44**	**5**	**16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1년부터 2026년 5월말까지 총 160건의 결합 실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이 54건으로 전체의 약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상위 3개 기관의 결합 실적이 총 92건으로 전체의 57.5%에 해당함.

○ 반면, 각 기관의 지정·운영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6개이고, 누적 실적이 1~2건에 불과한 기관이 7개로, 상당수 결합전문기관의 결합 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체 가명정보 결합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결합전문기관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실적도 일부 기관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결합전문기관의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실제 가명정보 결합 수요를 발굴하고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 수의 감소와 기관별 결합 실적 편중의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요기관과 결합전문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결합전문기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517]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고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518]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60억 4,500만원 중 59억 7,800만원(98.9%)이 집행되고, 6,700만원(1.1%)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6,045	6,045	-	-	6,045	5,978 [5,929]	-	67	6,17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었고,[5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17) 세부사업: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1032-304)

518) 정보주체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519)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520]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요구,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철회 등의 권리를 한 곳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공·금융·의료 등 기존 마이데이터 분야와 신규 분야를 연계하고 참여기관의 등록·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0)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으로 동 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전송이력 조회,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탈로그, 사용자 및 참여기관 인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구축되었음.

2) 검토의견: 플랫폼 활용도 제고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동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2024년 1차로 전 분야 전송요구 이력 관리, 참여기관 관리 체계 및 클라우드 인프라 등 기반을 구축하여 2025년 3월 13일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본인다운로드 등 전송요구권 처리 고도화, 전송비용 산정 및 개인맞춤 기능 구현, 신규 분야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는 기능 고도화, 개인정보 부당전송 탐지체계 구축, 플랫폼 운영환경 최적화 등을 수행하고 있음.

<연도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예산 집행현황 및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주요 내용
2024년 (1차)	7,546	7,446	100	- 전 분야 전송요구 이력 관리 - 참여기관 관리 체계 구현 - 클라우드 인프라 등 기반 구현
2025년 (2차)	3,832	3,765	67	- 본인다운로드 등 전송요구권 처리 고도화 - 전송비용 산정 및 개인맞춤 기능 구현 - 신규 분야 연계 확대 및 인프라 추가
2026년 (3차)	2,750	(집행중)		- 본인정보전송요구권 기능 고도화 - 개인정보 부당전송 탐지체계 구축 - 플랫폼 운영환경 최적화
계	1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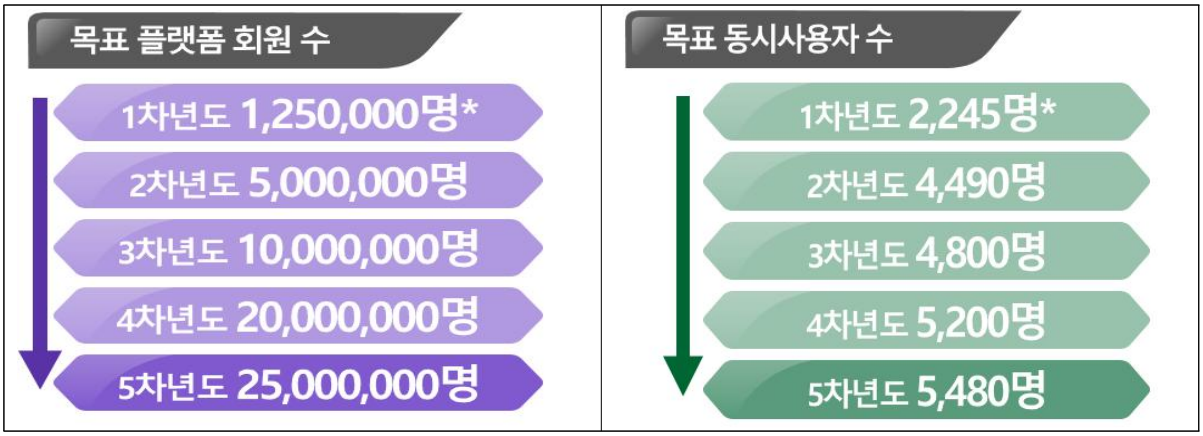
주) 플랫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외하고, 플랫폼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만 작성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3년 수립된 ISP에서는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규모 및 소요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2.5%를 초기 플랫폼 회원 확보율로 가정하여 플랫폼 회원 수를 1차년도 125만명, 2차년도 500만명 등으로 산정하였고, 선행 마이데이터 및 타 분야 사용 예상치를 기반으로 동시 사용자 수를 1차년도 2,245명, 2차년도 4,490명 등으로 산정하였음.

○ 이는 플랫폼의 성과목표라기보다는 시스템 용량 및 소요예산 산정을 위한 수요 추정치로 볼 수 있으나, 당초 상당한 규모의 이용 수요를 전제로 플랫폼 구축이 계획되었음을 보여줌.

〈ISP상 플랫폼 규모 산정을 위한 예상 회원 수 및 동시사용자 수〉



주1) 목표 플랫폼 회원 수: 총 인구수 51,414,281명(2023년 3월 기준) 중 초기 플랫폼 회원 확보율 2.5%로 설정하여 예상 회원수 1,250,000명으로 설정
2) 목표 동시사용자 수: 선행 마이데이터(공공, 금융, 의료) 및 타 분야 사용 예상치 기반 동시 사용자 수 산정

(자료: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23. 7.)

□ 그런데 2025년 3월 13일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연말까지 일반회원 가입자는 1,875명, 기관회원 가입기관은 110개이고, 일반회원 접속자 수는 11만 6,649명, 기관 접속자 수는 2만 2,991명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 운영 초기의 회원가입 및 이용실적이 당초 ISP에서 시스템 규모 산정을 위해 전제한 이용 수요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월별 회원가입 및 접속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5년	회원 가입	일반			98	157	118	85	75	156	194	116	189	687	1,875
		기관			18	17	15	9	8	9	15	6	2	11	110
	접속자 수	일반			3,622	10,852	12,524	10,667	9,168	13,365	16,789	10,788	9,979	18,895	116,649
		기관			-	9,499	2,640	1,890	1,080	2,087	1,795	1,825	976	1,199	22,99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6년	회원가입	일반	358	213	1,586	2,767	3,670	3,901							12,495
		기관	8	6	12	38	28	48							140
	접속자수	일반	12,110	8,496	18,652	53,991	20,723	53,410							167,382
		기관	1,060	1,104	1,609	1,698	1,549	2,266							9,28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플랫폼의 주요 기능별 이용실적을 보면,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57만 2,875건 중 API[521] 전송 건수가 43만 5,426건으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 API 전송은 개인정보의 전송을 지원하는 동 플랫폼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나, 이를 제외한 전송요구 이력조회·정보 재조회·상세조회·금융분야 전송요구 이력조회·철회 등 정보주체가 플랫폼에서 직접 이용하는 기능의 이용실적이 총 13만 7,449건(24%)으로 나타나고 있음.[522]

○ 앞에서 살펴본 회원가입 및 접속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플랫폼 주요 기능 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21)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참여기관 간에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미리 정의된 표준화된 전송규격 및 절차

522)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PI 전송 기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조회, 철회 등의 요구 시 참여기관에서 플랫폼으로 실지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기능별 이용실적 57만 2,875건을 전체 플랫폼 직접 이용건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API 전송 건수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조회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간 전송·처리 실적으로서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이용행위와 1:1로 대응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정보주체의 직접 이용건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월별 이용실적>

(단위: 건)

구분		목록조회	정보 재조회	상세조회	금융	철회	API 전송 건수	소계
'25년	3월	4,326	-	-	809	42		5,177
	4월	27,680	9,197	1,675	18,483	38	82,329	139,402
	5월	9,202	8,040	2,885	1,162	25	79,380	100,694
	6월	4,480	4,145	1,250	335	8	36,297	46,515
	7월	3,050	2,849	1,096	201	33	24,137	31,366
	8월	2,682	2,242	619	440	24	32,818	38,825
	9월	5,446	4,578	1,150	868	38	75,742	87,822
	10월	2,062	1,804	369	258	21	26,320	30,834
	11월	1,898	1,683	487	215	23	26,370	30,676
	12월	4,208	3,730	1,090	478	25	52,033	61,564
	소계	**65,034**	**38,268**	**10,621**	**23,249**	**277**	**435,426**	**572,875**
'26년	1월	2,362	2,169	776	193	26	47,964	53,490
	2월	1,944	1,808	601	136	31	78,723	83,243
	3월	5,730	4,451	815	182	28	72,176	83,382
	4월	31,236	21,566	1,232	179	25	52,457	106,695
	5월	9,914	8,853	1,382	221	12	55,294	75,676
	6월	11,546	8,639	1,714	188	25	63,043	85,155
	소계	**62,732**	**47,486**	**6,520**	**1,099**	**147**	**369,657**	**487,641**

주1) 목록조회: 전송요구 이력조회
2) 정보 재조회: 전송요구 이력조회 내 최신정보 재조회
3) 상세조회: 전송요구 이력 상세 조회
4) 금융: 금융분야 전송요구 이력조회 실행
5) 철회: 전송요구권 철회
6) API 전송건수: 중계시스템(통신, 의료, 금융, 공공)과 API 전송내역(제공/요청) 건수
('25.10~11월은 국자원 화재로 일부 영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편, 2026년 들어 회원가입 및 접속 실적이 증가하고 주요 기능의 이용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용 증가가 정보주체의 실제 전송요구권 행사 및 플랫폼 주요 기능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및 참여기관별 회원가입·접속 실적과 주요 기능별 이용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플랫폼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안내·홍보, 참여기관 확대 및 기술지원 등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